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24-01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Nation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본 보고서를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2.

연구수행기관	코뮤니타스
연구책임자	우영민(코뮤니타스)
선임연구원	김아영(코뮤니타스)
선임연구원	김민경(코뮤니타스)
선임연구원	신동호(코뮤니타스)
선임연구원	조이슬(코뮤니타스)
연구원	이슬기(코뮤니타스)
연구원	이승연(코뮤니타스)
연구원	정희진(코뮤니타스)
연구원	곽혜진(코뮤니타스)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 개요

I. 연구 배경 및 목적	03
II. 연구 범위	06
III. 연구 방법	08

제1부 | 인권체험관 운영환경 및 현황분석

I. 국가인권위원회	15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배경	15
2.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목적 및 성격	18
3. 국가인권위원회 비전과 정책(2021~2025년)	22
4.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및 조직구성	24
5.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40
II. 인권사무소	43
1. 인권사무소 설립 배경	42
2. 인권사무소 설립 목적 및 역할	44

III. 인권교육원	47
1. 인권교육원 설립 개요	47
2. 인권교육원 비전 및 전략	48
3. 인권교육원 교육체계	49
IV. 인권체험관 현황 분석	53
1. 인권체험관 설립 배경 및 과정	53
2. 인권체험관 운영조직 및 인력	56
3. 인권체험관 운영 예산	57
4. 인권체험관 위치 및 시설	61
5. 인권체험관 프로그램	69
6. 인권체험관 방문 현황	80

제2부 | 인권체험관 인접 환경 검토

I. 이론적 검토	93
1. 인권교육의 개념	93
2. 인권체험의 개념	96
3. 인권체험의 대상과 내용	99
II. 관련 법률 검토	105
1. 인권체험관 운영 근거	105
2. 체험관 건축에 관계되는 법	109
3.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110

III. 국내외 유사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114
1. 국내 유사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114
2. 국외 유사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162

제3부 | 인권체험관 종합 진단

I. 인권체험관 담당자 의견수렴	195
1. 입지 및 공간	195
2. 예산 및 인력	199
3. 프로그램 개발·진행	202
4. 실적	203
5. 인권체험관 위상 및 역할	204
II. 전문가 워킹그룹 의견수렴	208
1. 인권체험관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 관련	208
2. 인권체험관의 역할과 기능 관련	211
3. 인권체험관 프로그램 기본 방향 관련	212
III. 인권체험관 운영환경 분석	215
1. 운영환경 분석 시사점	216
2. 내부 환경	219
3. 시장 환경	222

4. 규제 환경	225
5. 경쟁 환경	227
6. 거시 환경	228
IV. 인권체험관 종합적 진단	230
1. 진단결과 요지	230
2. 개선 방향	231
V. 인권체험관 필요성·타당성	236
1. 법규적·정책적 측면	236
2. 사회적 측면	240
3.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시설·조직 여건 측면	242
4. 인권체험관의 영향 및 기대효과	244

제4부 | 인권체험관 부문별 기본 계획

I. 인권체험관 비전과 미션	249
1. 인권체험관 비전	249
2. 인권체험관 미션	251
II.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전략	255
1. 인권체험 허브로서의 전략	255
2. 시민 일상으로서의 세밀한 접근 전략	257

III. 인권체험관의 기능 및 역할	262
IV. 인권체험관 부문별 계획	265
1. 설치 및 입지	265
2. 프로그램	273
3. 조직 및 인력	305
4. 공간	318
5. 사업비 선정	329
V.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로드맵	336
1. 기대효과	336
2. 종합 발전 로드맵	339

부록 |

참고문헌	iii
------------	-----

[별책] 인권체험 프로그램 워크북

연구개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인권체험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현황 진단과 분석·개선과제 제시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인권체험 및 인권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5개 인권사무소별로(광주,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인권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 각 지역에 설치된 인권체험관은 위치, 장소, 규모, 시설, 콘텐츠 등이 미흡하여 체험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체험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5개 인권체험관의 운영현황을 진단·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인권 담론의 확장에 따라, 변화한 인권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체험 공간으로 역할 확대 필요**
 - 주로 법, 정책, 행정 등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인권의 개념은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 왔음. 바삭(K.Vasak)의 ‘인권의 3세대 개념’에 따르면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제1세대 인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제2세대 인권)’,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권리(제3세대 인권)’로 실전 영역을 확대해나감.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역량 이론’(capability theory)에서도 인권 담론은 ‘반자유의 주요 원천을 제거하는 일’-‘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상호 의존성에 근거한 돌봄의 가치’로 확장됨
 - 인권 담론의 확장에 따라 인권의 교육영역도 확장되고 있음. UN인권교육훈련 선언문에서도 ‘지식으로서의 인권(인권에 관한 교육)’을 넘어, ‘기능으로서의 인권

(인권을 통한 교육)과 '태도로서의 인권(인권을 위한 교육)'을 인권 교육 훈련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권체험관은 확장·전환된 인권교육, 나아가 체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내 공간으로 역할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인권교육·체험의 기존 통념이 '단순한 지식 암기', '일회적 경험', '교훈적 계몽적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앞으로의 인권체험관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지혜를 획득하는 방향'을 바탕으로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인권 감수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이자 '공감과 실천으로서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장소'로 기능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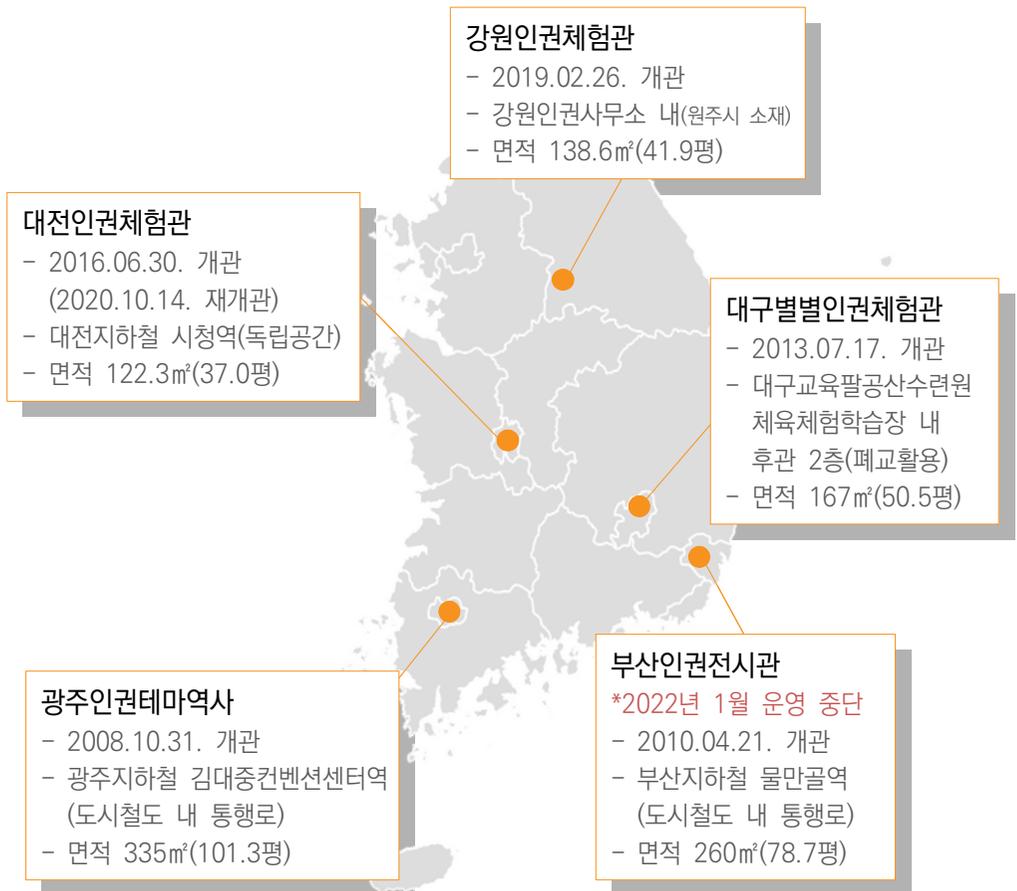
2 연구 목적

- 인권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인권체험관의 운영 효과를 제고하고 변화하는 인권(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전과 위상을 재설정하는 종합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 될 필요가 있음
 - 도출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권의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체험관을 통해 인권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II.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 5개 인권사무소별 인권체험관(광주, 부산, 대구, 대전, 강원)
 - 2008년 가장 먼저 개관한 광주인권테마역사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5개 인권 체험관(광주인권테마역사, 부산인권전시관, 대구별별인권체험관, 대전인권체험관, 강원인권체험관)을 대상으로 함
 - 부산인권전시관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분석·진단하고자 함



② 시간적 범위

- 분석의 범위는 광주인권테마역사 개관 연도인 2008년부터 2022년 현재로 설정함
- 계획의 범위는 2023년부터 약 5년 정도로 설정함

③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인권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체험·학습하기 위한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함
 - 5개 인권체험관 운영현황을 진단·분석하고, 개선점(인권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개선과제 제시) 및 한계점을 도출함
 - 국내외 체험교육 시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 및 환경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인권체험시설의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진단하고, 시설 및 공간 구성, 예산 규모, 필요 인력, 인력 운용 방안 등을 도출함
 - 체험형 인권교육의 수요를 예측하고, 접근성 보장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인권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 인권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함
 - 국내외 유사 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함
 - 종합 발전 기본계획에 근거해, 인권체험시설에서 활용할 대상별·주제별·유형별 인권체험관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함
 - 인권교육원, 인권체험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작, 운용 시나리오를 제시함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향 및 전략

- 인권체험관의 위상 및 역할, 입지·공간적 측면,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인권체험관의 위상과 역할’, ‘입지·공간적 측면’, ‘프로그램 방향성’별로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인권체험관의 위상과 역할
 - 지역 내 인권 담론을 선도하고 활발한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 지역 내 이슈 당사자와 교류하고 연대하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을까?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간이 될 수 있을까?
- 인권체험관의 입지·공간적 측면
 - 수요자와의 심리적·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이 있을까?
 - 지역 내 여러 장소로 발신하고 확장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 효과적인 체험교육을 담보하는 공간 전략은 무엇일까?
- 인권체험관 프로그램 방향
 - 계몽적, 일방적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당사자 수요에 맞춘 생애주기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 학습자와 교육자가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까?
- 시의성 있는 지역적·국제적 인권 이슈를 다룰 수 있을까?

2 연구 프로세스

● 현황 및 여건 분석

1. 운영현황 및 성과 분석

- 5개 인권체험관 현황조사 및 분석 : 일반현황, 인력, 예산, 프로그램 현황, 특별 및 상설 기획, 지역 연계 이벤트, 방문자 현황 등
- 인권체험관 담당자 인터뷰 : 인권체험관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 파악

2. 킥오프 워크숍

- 참여 주체별 역할 정립 : 과업 진행 프로세스 유의점 점검, 연구 진행 관점 점검, 참여 전문가 자문단 역할 논의 등

3. 참여자·기관 조사 및 분석

- 인권체험관 참여자 방문 현황 분석 : 방문자 수, 특성, 방문실태 등 기초현황 분석
- 인권체험관 참여자 및 기관 설문조사 : 체험 및 교육 만족도, 추천·재방문 의사, 체험 욕구 등

4. 당사자·유관기관 FGI

- 지역별 인권이슈 당사자/전문가 인터뷰
- 지역 내 유관기관 인터뷰 : 교육 및 문화 등

- 기본계획 수립

- 1.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상위계획/법 및 연계 가능 사업 검토 :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법, 유엔인권교육 훈련선언, 교육 관련 법령, 문체부 및 교육부 소관 사업 등
- 전국 및 해외의 다양한 기관/시설, 체험관 사례 연구
- 유사한 규모의 체험관 사례 검토 : 규모, 예산, 인력, 프로그램, 체험 참여자, 파급효과 등 분석
- 전문가 워킹그룹과 함께 통섭적 연구 진행 : 분야별 전문가 결합, 지속적인 피드백 구조 확보
- 공간 활용 구상 도출 및 타당성 분석 : 유연한 공간활용 방안, 배리어프리 관점 적용, 체험관 신설 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 2. 협력 워크숍

- 각 인권사무소·체험관 이슈 공유 : 사무소별 이슈 공유, 체험관별 유의사항 공유, 지역 인권현황 및 이슈 공유
- 연구단계별 진행상황 공유 : 도출된 키워드 공감대 형성, 지역사무소 및 자문 위원 의견수렴, 향후 프로세스 논의

- 3. 지역현장회의

- 인권체험관 공간 현장답사 및 실무 미팅 : 운영현황 질의, 중점사항 논의, 공간 실측 및 기록 등
- 참여자 및 기관 의견수렴 결과 공유 : 지역별 핵심 이슈 및 구상 방향을 지역 주체와 확인
-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 연구결과의 공유 및 제안된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 프로그램 개발

1. 체험프로그램 개발

- 5개 체험관 네트워킹 프로그램 :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 인권체험관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 공통 학습 모듈 개발 : 보편적 인권교육·체험을 위한 5개 인권체험관 공통 프로그램 구상
-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인권 현안과 관련한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2. 교구 및 프로그램 파일럿

- 개발된 프로그램 파일럿 운영¹⁾
- 체험관 담당자 피드백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

1) 프로그램의 정규화 전, 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단발적으로 실행하는 베타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타 분야 기관과의 연계 지점을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모듈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인권체험관 운영환경 및 현황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인권교육원

인권체험관 현황분석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국가인권위원회

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배경

-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본준칙인 파리원칙에 근거
 - 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Local Human Rights Committees)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며 국제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NI)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을 제정하며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
 - 이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주화와 인권 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남
 - 1991년 파리에서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 개최되고, 일명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제정됨
 -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운영 방식·지위에 관한 추가원칙 등 구체적인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 틀을 각 나라에 제시했으며,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거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으로 자리 잡음

***파리원칙의 주요 내용**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의 권한을 부여받아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직무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권한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정해져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예산적 자원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는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 방식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청문하고 심리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 **국제 인권관련 논의와 더불어 국내 민간단체의 요구로 제정·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빈에서 열린 세계 인권대회에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함
- 민간단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결의안 1992/54)와 파리원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 보호와 향상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함
- 이후 1994년 7월 제3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 워크숍과 1995년 11월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고(서울), 1996년 11월에는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대회에 참가하는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약하였고, 당선 후인 1998년 3월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함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8년 4월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인 인권 수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고, 1998년 9월에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 추진위원회(공추위)를 결성하는 등 논의가 급격히 진전됨

-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약 3년간 법무부와 민간단체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 공포되고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발효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함

표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

일자	내용
1993. 06. 10.	빈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한국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
1997. 11. 18.	김대중 대통령 대선공약 발표 :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1998. 03. 10.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제시
1999. 03. 30.	인권법안 국무회의 통과
1999. 12. 20.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인권단체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수 없다"며 인권법 제정 연기 선언
2000. 01. 03.	김대중 대통령, 인권법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사 표명
2000. 08. 21.	법무부 공고 제2000-31호, 인권법 입법예고(인권위원회를 민간 기구로 설립하는 내용)
2001. 01. 19.	민주당 7인 소위원회 최종회의,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는 인권법 시안 확정
2001. 02. 01.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는 방안 잠정 결정
2001. 02. 09.	민주당, 당정합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 확정
2001. 04. 30.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동 법안 통과
2001. 05. 24.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법률 제 6481호)

2002. 02. 04.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2002. 02. 09.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표 2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와 출범

일자	내용
2001. 10. 0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2001. 10. 24.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준비단 발대식
2001.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002. 04. 01.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입주 및 사무처 발족

②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목적 및 성격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독립적 인권 전담 기구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²⁾」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 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님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
 - 1조*에 명시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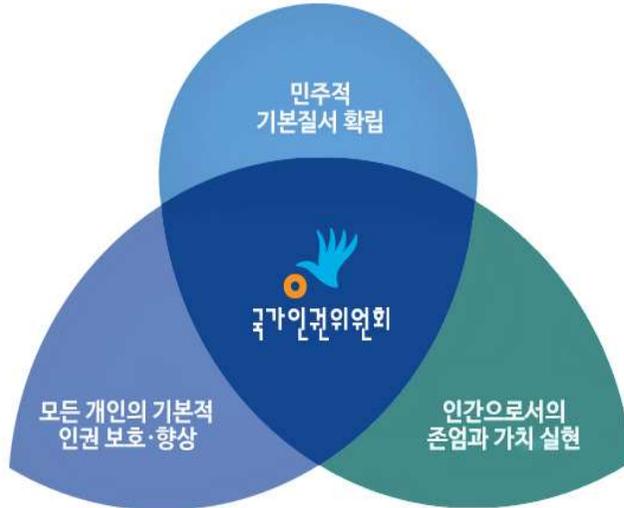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권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법률은 현행 헌법서부터 많은 법률에 들어 있으나 인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는 건 한국의 법률 중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유일무이한 법률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법안 및 조례에서 인권의 범위는 보통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를 따르는 조항들이 삽입됨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및 지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조에 명시돼 있음

〈그림 1-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목적



1.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적인 인권 전담 국가기구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1항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독립기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 독립기구로 업무수행 및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받음
- 이는 국가인권기구가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임을 밝히는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이 반영된 내용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2항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준사법기구

-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및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제도·관행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절차는 기존의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와 서로 보완기능을 하는 일종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라고 할 수 있음

4. 준국제기구

-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식상 국내법을 따르지만 내용상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해 활동함
- 국내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일부로 구성되어 활동한다는 점에서 국내법상의 기구라는 형태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인권법을 토대로 성립되고 그 이행을 담당하는 기구로서의 국제적인 성격 또한 갖고 있음
-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이나 조사·정책 연구를 통해 권고하고, 유엔 및 해외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함

〈그림 1-2〉 국가인권위원회 성격



③ 국가인권위원회 비전과 정책(2021~2025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전략(5개년)에 따라 비전과 사명, 전략과 성과목표 제시
 - 2006~2008년(3개년), 2012~2014년(3개년), 2015~2017년(3개년), 2018~2020년(3개년) 계획에 이어 현재의 5개년 계획이 발표·시행됨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1.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 인권평가제도 도입

2.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3.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 인권교육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4.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화

-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5.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

6. 기획사업 :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7. 추진기반 (국가인권위원회 역량 강화)

- 위원회 독립성 강화
-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 2022년 업무 추진 방향

1. 인권환경

-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지구적 재난·위기상황 지속
- 차별과 혐오문제의 심화, 평등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증대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확산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1) 변화하는 인권 환경에 대응한 선제적 인권보호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주요한 사회변화 및 사회현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
-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계획기의 첫 해였던 올해 업무 성과를 검토 하여, 위원회의 전략목표·성과목표를 연속성 있게 추구

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확산 적극추진

- 2022년 예정된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인권 규범의 확산을 담당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우리 사회의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수준을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

3) 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

- 2022년은 위원회 설립 20년 이후 새로운 20년을 맞이하는 첫 해.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평등법」 입법, 「인권정책기본법」 입법 등을 통해 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와 권한을 확보하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
- 조사구제, 교육과 협력 등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자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업무 개선, 본부와 인권사무소 간 연계 강화, 교육·홍보·협력 업무의 통합적 접근 등을 추진

④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및 조직구성

- 인권 관련 정책 개선/조사·구제/교육·홍보/국내외 협력 등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와 의무, 업무, 권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립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법령과 국제조약에 대한 의견표명 및 검토,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와 같이 인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함

1. 인권 관련 정책 개선

-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함
-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함
- 호주제 폐지,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권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옴
-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주요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 사례

- 호주제 폐지 의견 표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련 의견 표명
-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필요 의견 표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발표
-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권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법률」개선 권고
- 군내 불온서적 지정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 및 정책 권고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불심검문관련) 의견 표명 등

2. 조사·구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함
-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조사·구제함
- 특히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방문조사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등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차별과 연령차별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함

*주요 조사·구제 사례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시정
-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사건 →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인권 개선

-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 권고
- 불법체류자 강제 퇴거 개선 권고
- 장애인 발산역 사망 사건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고
- 입사지원서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차별적 항목 개선
-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연령 차별 개선 권고
- 공무원 채용 시험 나이 제한 개선
- 촛불집회 과잉 진압 개선 권고
- 경찰관 고문 사건 → 관련 경찰관 고발 등

3. 교육·홍보

-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함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주요한 평가 및 교육의 기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음
- 출판,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의식 확산에 노력하며, 인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권 전문 도서관인 인권자료실을 운영함

*주요 교육·홍보 사례

- 검·경 교도관 등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정신장애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 인권교육강사단 구성 및 인권교육센터 설치 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 초·중·고교용 등 각종 인권교육 교재 프로그램 개발
- 〈시선 1318〉 등 인권 영화 및 〈별별이야기〉 애니메이션 제작 보급
- 격월간 〈인권〉 발행, 뉴스레터(인권소식) 서비스
- 교과서 모니터단 운영 등

4. 국내외 협력

- 국내 인권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인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받으며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실태 조사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함
 - 각국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권기구를 운영해 온 나라들의 경험을 습득하는 등 국제 교류에 힘씀
- 정책교육국 내 인권교육기획과와 인권교육운영과가 존재, 인권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집합·의무 교육을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에 따라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법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과 공무원 채용·승진·연수·교육훈련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간접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
 - 이와 더불어 인권위원회 자체적으로 인권직무 역량과정·인권리더십 향상과정·교육전문가 과정·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인권강사 양성과정이 포함된 인권 연수 과정(집합교육)을 운영 중임. 또한 공무원·교사·보건복지 종사자·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시민 대상 사이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인권 의무교육

- 관련법에 따라 수강의무자들은 인권을 비롯한 각 교육기관을 통해 인권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인권교육)에 따라 정해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의무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함(「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에 따름)

〈그림 1-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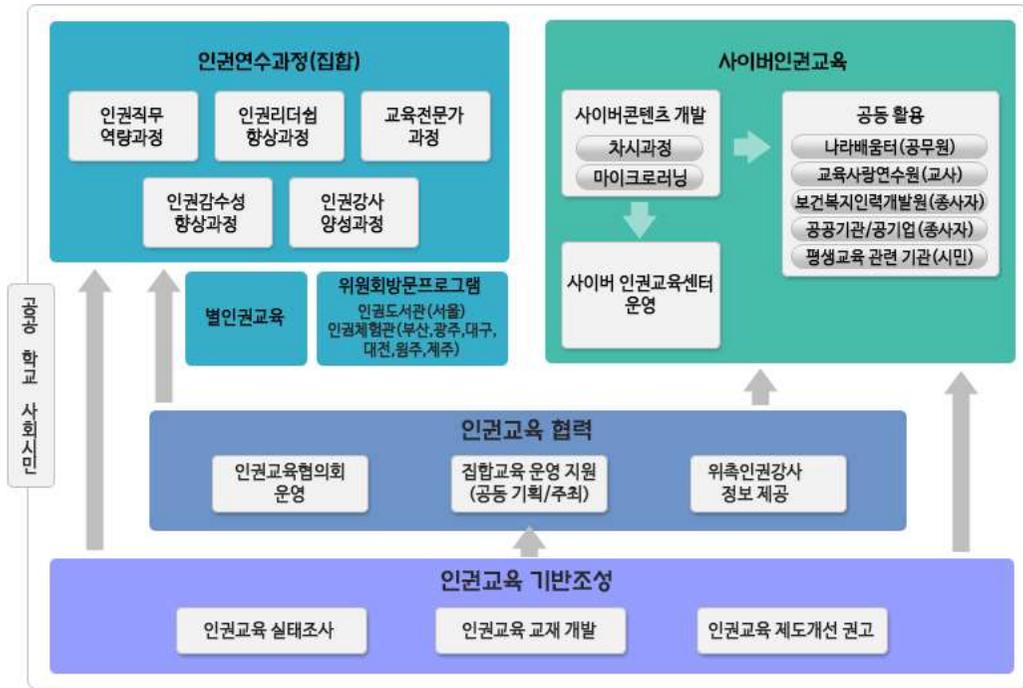


표 3 인권의무교육의 대상자, 근거법령, 교육기관

제목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 시설평가 인권교육)	인권 조례 인권 교육
내용	수강의 무자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종사자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장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	노인복지 시설/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권조례 제정지자체 관련분야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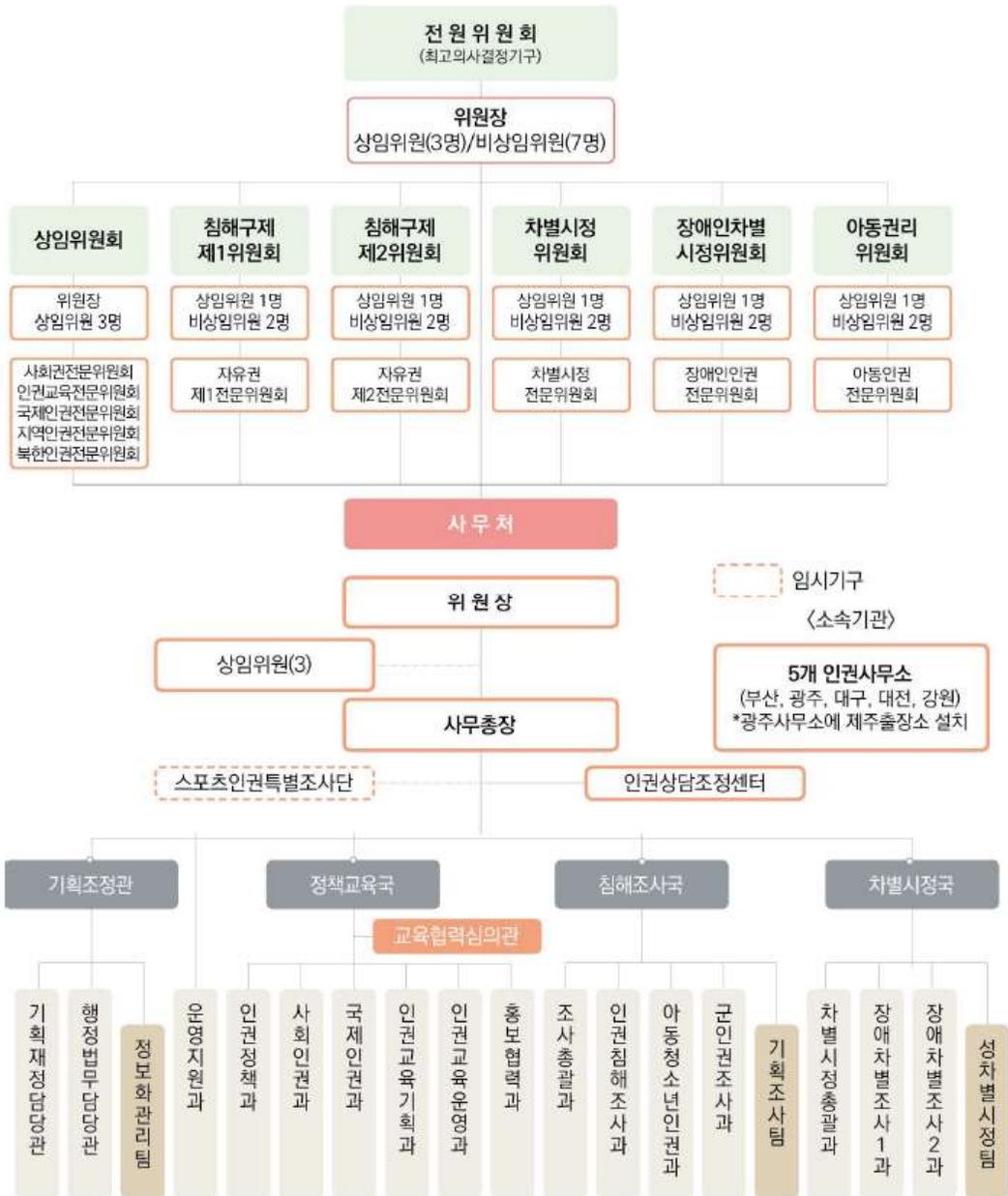
제목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 시설평가 인권교육)	인권 조례 인권 교육
근거 법령								
	「노숙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사회복지 사업법」	「노숙인 복지법」	
교육 기관	국가인권 위원회	한국 장애인 개발원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한국보건 복지 인력 개발원	한국보건 복지인력 개발원,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	
교 육 내 容	사 이 버 교 육	-	한국장애인 개발원 장애인식 개선 이러닝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한국보건 복지인력 개발원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
	집 합 교 육	국가인권 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한국장애인 개발원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	-	-

● 인권위원회는 총 11명(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

- 인권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함.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 총리에게 의안(대통령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주요 업무의 수행 및 의사결정을 위해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 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로서 침해구제제1위원회(검·경·군·국정원·입법부·사법부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 단체, 구금·보호시설, 기타 인권침해 분야), 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 분야),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장애차별, 장애인·정신건강증진시설 분야), 아동권리 위원회(만 19세 미만 아동, 아동보호시설·소년원 분야)가 설치됨
-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함

- 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전원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 법 제19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
-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금,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그림 1-4〉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도(2021년 12월 기준)



출처 :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 위원회 조직은 정무직 4명과 사무총장, 2관 3국 17과 3팀 5사무소 1출장소와 임시 조직 1단으로 구성
- 위원회 정원은 총 234명이고 본부 190명, 소속기관인 인권사무소 44명(지역별 인권사무소 10명, 제주출장소 4명)으로 구성 *2021년 12월 기준

표 4 위원회 정원(2021년 12월 기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 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연구사	경감
계	234	4	6	3	19	14	57	57	44	8	20	1	1
본부	190	4	6	3	14	14	47	48	34	3	15	1	1
소속	44	-	-	-	5	-	10	9	10	5	5	-	-

출처 :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1. 기획조정관

1) 기획재정담당관

-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위원회 중장기전략 수립·종합 및 연간업무계획 수립
-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 연간보고서 발간
- 위원회 업무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 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 및 기획
-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조직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 주요 예산사업의 심사·분석·평가

-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위원장 및 사무총장 지시사항 관리
- 인사청문회 관련 업무 총괄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의 검토, 입안 및 협의
-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계획 수립 및 집행
-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2) 행정법무담당관

- 법과 시행령안의 검토·입안 및 협의
- 다른 국·과·팀에서 입안한 위원회 관련 법령안 및 규칙·훈령·예규안의 심사
- 위원회 규정의 전반적 관리 및 법규집 발간
- 소송(고소·고발 등 포함),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
- 법령 질의에 대한 화신 및 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법률자문 등
-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소속 직원의 비위방지계획의 수립·집행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 인권위원·소속 직원의 재산등록 및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및 결정례집 발간
-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 위원회 행정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위원회 웹사이트의 기획·개발·관리 및 지원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과 정보통신 보안활동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기록물 생산·이관·평가·보존 등에 관한 관리 및 지도
- 기록물의 대출·열람 등 기록관 및 보존서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상담조정센터

- 진정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진정에 대한 안내 및 상담
- 구금·보호시설(인권사무소 관할지역 및 정신보건시설 제외) 수용자의 면전 진정 접수 및 이와 관련한 조사
- 진정서 등의 접수·분류 및 소관 과에 대한 송부
- 진정 및 상담 내용에 관한 통계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 상담기법의 개발 및 개선
- 전문상담위원 위촉 및 전문상담원(전문상담위원 포함) 교육·관리
- 구금·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운영실태 조사
- 민원업무 처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 정책교육국

1) 인권정책과

- 인권정책 중장기전략 수립·종합
-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인권 관련(여성·장애·아동·군 관련을 제외한다)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총괄
- 인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태조사의 기획·총괄·지원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총괄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인권백서 발간
- 고문, 인증, 이주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및 의견 표명
-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 인권 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국내 다른 과 및 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와 그 밖에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기획과

-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조사·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 인권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존
- 인권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발간자료의 등록 및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인권관련 자료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과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3) 홍보협력과

- 위원회 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위원회 홍보자료 제작·배포
- 인권 관련 언론보도 분석
- 대 언론 홍보 관련 업무
- 위원회 활동사진 및 영상 기록 관련 업무
- 인권 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기관협력
- 인권 관련 단체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온라인 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및 이행 실태점검·평가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주관

4) 국제인권과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국제인권조약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현황관리
- 민간부문 국제인권활동의 지원
- 주요 국제회의 참가 조정에 관한 사항
- 아셈(ASEM) 노인인권증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돌봄서비스 인권기반 구축사업
- 국제인권조약(여성, 장애인, 아동, 고문, 인종, 이주 관련 제외) 등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및 의견 표명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운영과

-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평가
-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양성과정의 운영 및 관리
- 대상별·주제별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연수과정 운영
-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인권과

7) 교육협력심의관

3. 침해조사국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 및 조정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및 군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다음 사항

-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의견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 제4호에 따른 조사 대상 기관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구제

및 실태조사, 그와 관련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호에 따른 조사 대상 기관 관련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 군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
- 침해구제제1위원회 운영 및 총괄
-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차별시정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도개선 업무 등을 수행
- 차별시정국 산하에 '성차별시정팀'을 두어 성희롱과 성별, 임신·출산, 성적(性的) 지향 등을 사유로 한 차별 시정 업무를 수행

5. 인권상담조정센터

-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 진정사항의 접수·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 진정 외의 민원 처리
- 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 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6.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
-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스포츠 분야 인권 관련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정비 및 실행지침 수립

5]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평균은 34,397백만 원이었으며, 주요 사업비는 연평균 9,181백만 원
-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연평균 6.9%씩, 주요 사업비는 연평균 11.4%씩 증가하는 추세
 - 예산 규모로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 부문에 5년간 평균 2,233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였으며 단일 비목으로는 ‘인권교육 운영 및 기획’ 비목에 연 평균 1,479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됨
 -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비목이 2020년에 사라지고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비목이 2021년에 새롭게 편성되어 연 305백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문제를 해결,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세부 예산 현황(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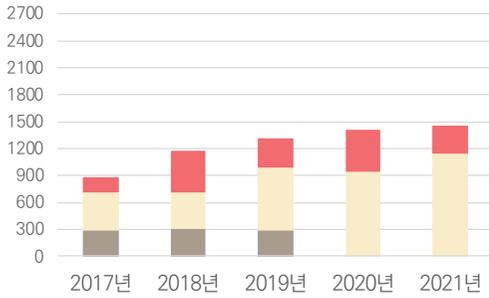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9,289	31,412	36,683	36,669	37,931
인건비	14,147	15,674	17,936	17,885	19,002
기본경비	8,102	8,077	8,152	8,587	8,519
주요사업비	7,040	7,661	10,595	10,197	10,410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887	1,183	1,321	1,415	1,453
① 인권의식 향상	422	392	692	947	1,138
⑥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295	315	295	-	-
② 지역 인권문화 확산	170	476	334	468	315
인권교육 활성화	1,544	1,236	1,236	1,707	1,672
③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544	1,236	1,236	1,707	1,67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1,828	2,046	2,461	2,459	2,372
④ 상담 서비스 접근성 제고	165	232	176	218	160
⑤ 취약 분야 인권개선	1,168	1,266	1,637	1,593	1,270
⑥ 장애인 인권증진	495	548	648	648	637
⑦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	-	-	-	305
인권제도 선진화	813	737	1,337	1,438	1,542
⑧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642	584	1,184	1,215	1,380
⑨ 북한인권 개선	171	153	153	223	162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008	1,465	1,621	1,384	1,577
⑩ 국제교류협력	884	1,156	1,312	1,094	1,288
⑪ 국내교류협력(인권단체 공동협력)	124	309	309	290	289
인권위 정보화	960	994	2,619	1,794	1,794
⑫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960	994	994	1,102	1,047
⑬ e-진정시스템 구축 운영	-	-	1,625	692	747

- 주요사업비 중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내 '지역 인권문화 확산' 부문은 인권체험관 운영비(하드웨어, 휴먼웨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인권사무소 운영비 중 일부임
- 이는 연 평균 352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함

〈그림 1-5〉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현황(2017~2021년)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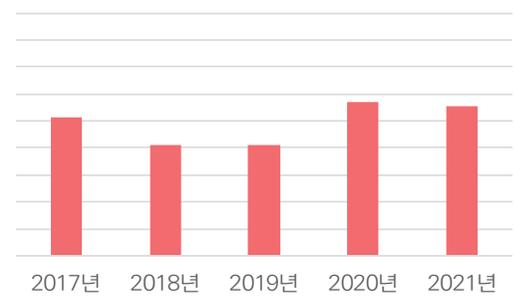
|인권 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 ④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 ① 인권의식 향상
- ② 지역 인권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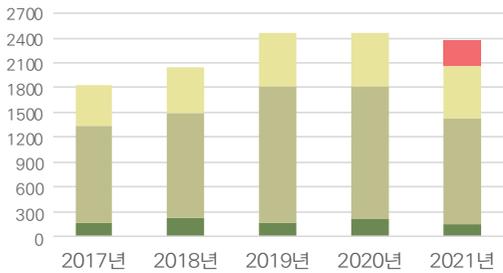
|인권교육 활성화

- ③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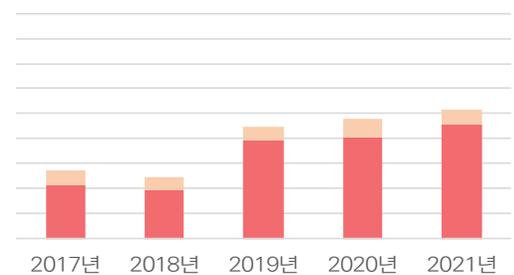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 ④ 상담 서비스 접근성 제고
- ⑤ 취약분야 인권개선
- ⑥ 장애인 인권증진
- ⑦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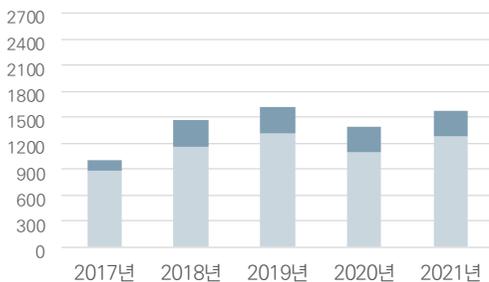
|인권제도 선진화

- ⑧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⑨ 북한인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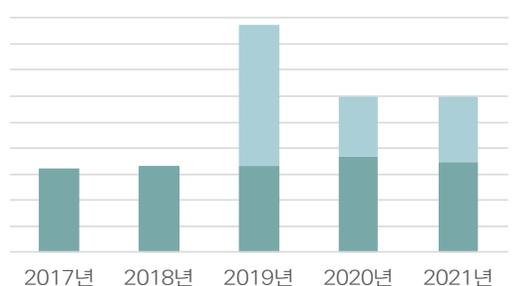
|국내외 인권 협력 강화

- ⑩ 국제교류협력
- ⑪ 국내교류협력(인권단체 공동협력)



|인권위 정보화

- ⑫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⑬ e-진정시스템 구축



II. 인권사무소

1 인권사무소 설립 배경

-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지역순회 인권상담을 통해, 시민과 인권단체의 요구 청취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후, 지역순회 인권상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증진 방안을 모색함
 - 교통 여건,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의 인권사무소 방문, 상담 또는 권리 구제를 위한 인권위 조사관의 현장 방문 등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지역주민의 요구와 인권교육 수요 증가를 반영해 인권사무소 설립
 - 2005년 10월 부산, 광주 인권사무소가 처음으로 개소함
 - 이어 2007년 7월에는 대구인권사무소, 2014년 10월에는 대전인권사무소, 2017년 6월에는 강원인권사무소, 2019년 10월에는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 출장소가 개소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됨
1.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및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
 -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해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시 제한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신속한 조사구제
 - 사건 처리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조사구제를 가능케 함
 3. 급증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대응

- 인권사무소 내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인권교육 의무화로 인해 늘어나는 지역주민의 인권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4. 지역특성에 맞는 인권업무 추진

-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직유관단체 증가, 군 내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상담 및 진정 수요 확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표 6 인권사무소와 출장소 개소 시기 및 관할구역

명칭	개소 시기	위치	관할구역
광주인권사무소	2005년 10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인권사무소	2007년 7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인권사무소	2014년 10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인권사무소	2017년 6월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제주출장소	2019년 10월	제주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2 인권사무소 설립 목적 및 역할

● 지역주민의 접근성 강화 및 지역 사회 내 인권가치의 확산

- 지역별 인권사무소는 지역주민의 인권 옹호 및 인권 신장, 소외계층의 인권 접근성 향상, 신속·효율적인 인권상담 및 구제 등 인권 서비스의 지역 균형 제고를 위해 역할함
- 인권사무소는 관할구역 내 ▲인권상담 ▲경찰,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 군 제외),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구금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 조사·구제 ▲인권교육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인권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구금·보호시설 등의 면전진정 업무
-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제7조제1항제4호가 정한 대상 이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7조제6항제3호의 각급 학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시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및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조사·조정·구제 (단,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중요 사건 등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 위원회의 조사 지원
-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상담·민원 등

2. 지역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 인권교육 활성화

- 2015년 4월부터는 부산·광주·대구·대전인권사무소를 우선으로 지역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강원인권사무소의 경우 개소와 함께 설치됨)
- 각 지역 인권사무소는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인권강사양성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방문교육, 인권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음

3. 지역 인권문화 확산-홍보

- 지역사회 인권문화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인권 관련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인권선언기념식·인권문화제·인권특강 등의 행사를 개최함

4. 지역 인권문화 확산-인권체험관(인권전시관) 운영

5. 지역 인권문화 확산-기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과 협의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함
- 인권 관련 공청회,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등을 지원 또는 공동 개최함으로써 인권·시민사회단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함
- 실무협의회, 간담회, 워크숍을 통해 지역 지역의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모색함
-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자 역량강화 과정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권교육 확대에 기여함

III. 인권교육원

1 인권교육원 설립 개요

- **인권의식 확대·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규모 교육 훈련 시설 설립 추진 중**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권 교육 훈련 전문기관인 '인권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임
 - 2020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7-7번지로 입지가 결정됐으며, 2021년 기본설계 완료,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 예정임
 - 조성 후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간 7만 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원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6〉 인권교육원 대상지 입지 및 입면 계획(안)



2 인권교육원 비전 및 전략

- 인권교육원 비전 :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권교육실현
- 인권교육원 미션 : 인권교육 체계 및 기반 구축과 인권전문가 양성
- 인권교육원 운영 전략

1. 인권교육과정 구축

- 인권교육과정 기획, 개발, 보급
- 인권교육용 표준교재 개발, 보급
- 인권교육방법 및 콘텐츠 기획, 개발, 보급

2. 인권 가치 확산 및 인권전문가 양성

- 인권기본교육 운영
- 인권직무 및 인권리더십교육 운영
-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및 역량 향상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역량 교육

3. 인권교육 성과 환류

- 인권교육 수요 조사
- 인권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4. 인권교육협력 허브 구축

- 인권교육 사례 발굴 및 보급
- 각급 기관 공유 체계 구축 및 운영
-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5. 미래 인권교육 환경(인프라) 구축

- IT기반 인권교육콘텐츠 개발
- 온·오프·혼합형 교육 인프라 구축
- 교육자원관리시스템 구축

③ 인권교육원 교육체계

- 3개 영역, 6개 교육편성체계
- 총 133개 교육과정(집합교육 110개, 사이버교육 23개)

표 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교육과정 인권교육 분야 및 대상

		학교 영역	공공 영역	사회 영역
교육체계	교육대상	유치원 초중등 대학 교육자치단체	입법사법행정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 보호시설 노동·경제 시민·사회
	인권 기본 교육	인권 영역 종사자	교원인권 감수성과정 총 5개 과정	행정기관 인권감수성과정 총 5개 과정
인권 직무 교육	인권 담당	대학인권역량과정 총 6개 과정	군인권역량과정 총 9개 과정	청소년인권역량과정 총 17개 과정
인권 리더십 교육	인권 관련 관리자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총 5개 과정	지자체 인권권리더십과정 총 12개 과정	노인 인권리더십과정 총 15개 과정
인권 강사 교육	위원회 위촉 강사	교원인권강사양성과정 총 4개 과정	군인권교관양성과정 총 2개 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 총 13개 과정
	범 인권 강사	학교영역 범인권강사역량과정 총 2개 과정	공공영역분야 범인권강사역량과정 총 1개 과정	사회복지분야 범인권강사역량과정 총 2개 과정
인권 전문가 교육	위원회 직원		차별시정조사관 역량향상과정 총 4개 과정	
국제 인권 교육	국제 협력		국제인권 정책전문가과정 총 1개 과정	
사이버 인권 교육	공통	총 23개 차시 과정		

● 교육 대상

1. 학교영역

-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 각급 학교 교사, 교육자 및 관리자
- 광역 및 기초 교육자치단체 담당자 및 관리자

2. 공공영역

- 검찰, 경찰 군인, 교도관, 출입국공무원 등 법집행공무원
-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원
- 지자체 공무원 및 인권 분야 담당 공무원 및 관리자, 지자체 인권위원
-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인권 담당 및 관리자

3. 사회영역

- 아동, 노인, 장애, 여성, 이주 등 관련 시설 종사자 및 관리자
- 언론, 의료, 법률, 인권단체 등 전문집단, 기업분야 인권 담당자 및 관리자

● 교육 편성

1. 인권기본교육

- 학교, 공공, 사회 영역별 실무자 대상 교육
- 각급 학교 교사, 군 장교 및 부사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 주요 내용은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 이해와 훈련, 국가의 인권 책무성, 나의 일상과 인권 등으로 구성

2. 인권직무교육

- 학교, 공공, 사회 영역별 직무 관련 인권실천이 요구되는 직무수행자 대상
- 대학인권센터 관계자, 경찰 청문감사관실 직원, 청소년시설 인권 담당 등

- 주요 내용은 인권의 이해 및 국가의 인권 책무성, 직무별 인권 현황과 사례, 직무별 인권실천 방향 등으로 구성

3. 인권리더십교육

- 학교, 공공, 사회 영역별 기관·시설 등의 관리자급 대상 교육
- 각급 학교 교장,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등
- 주요 내용은 인권의 이해 및 국가의 인권책무성, 사회 각계 인권 현안의 이해, 인권리더십의 이해 및 현장 적용 등으로 구성

4. 인권강사교육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과정 희망자 및 역량향상과정을 수료해야 하는 국가인권위 위촉강사 대상
- 장애분야 인권강사, 아동분야 인권강사, 노인분야 위촉 인권강사 등
- 국가인권위원회 외 기관에서 양성한 각 영역별 범인권강사 대상
- 주요 내용은 인권의 이해, 분야·대상별 인권 이슈 이해,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인권교육 기획법 등으로 구성

5. 인권전문가교육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대상
- 진정사건 조사관, 자유권 및 사회권 정책 담당자, 인권교육 담당자 등
- 주요 내용은 인권침해 사건 판단 및 보고서 작성법, 인권정책 판단 및 보고서 작성법, 인권교육의 이해 및 인권교육 운영법 등으로 구성

6. 국제인권교육

- 해외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인권단체, 정부 공무원 등 대상
- 진정사건 조사관, 자유권 및 사회권 정책 담당자, 인권교육 담당자 등
-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이해, 한국사회의 인권, 인권현장 탐방 등

IV. 인권체험관 현황분석

1 인권체험관 설립 배경 및 과정

- 인권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체험 활동 제공을 목적으로 광주·부산·대구·대전·강원 5개의 인권사무소별로 인권체험관을 조성, 운영 중
 - 2008년 광주인권테마역사 설립 이후 5개 지역 인권사무소에서 운영해온 인권 체험관은 아래와 같음
 - 지역적 특성과 입지적 조건, 공간의 형태와 크기,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 등이 각기 다른 공간들로 구성됨

표 8 지역별 인권체험관 운영 개요(개관 일자순)

구분	개관 일자	위치	면적
광주인권 테마역사	2008.10.31. 개관	광주지하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도시철도 내 통행로)	335㎡ (101.3평)
부산인권 전시관	2010.04.21. 개관 *2022년 1월 운영 중단	부산지하철 물만골역 (도시철도 내 통행로)	260㎡ (78.7평)
대구별별 인권 체험관	2013.07.17. 개관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학습장 내 후관 2층 (폐교활용)	167㎡ (50.5평)
대전인권 체험관	2016.06.30. 개관 (2020.10.14. 재개관) *옛 충남도청 부지 리모델링에 따라 대전시의 이전 요구	대전지하철 시청역 (독립공간)	122.3㎡ (37.0평)
강원인권 체험관	2019.02.26. 개관	강원인권사무소 내 (원주시 소재)	138.6㎡ (41.9평)

- 본래 시민들의 관심 환기와 사무소 활동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
 - 도서, 그림, 사진 등 전시 콘텐츠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무소 활동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광주인권테마역사가 들어섬
 - 광주인권테마역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부산인권전시관이 설립됨

표 9 지역별 인권체험관 설립 배경 및 내용(1)

구분	내용	사진
광주인권 테마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현대적 개념의 다양한 인권 콘텐츠 개발 필요성 제기 -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권을 접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발굴 	
부산인권 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교통공사와 MOU 체결 - 인권과 관련된 도서, 영화, 그림, 사진과 포스터 등을 볼 수 있는 공간을 표방 - 일상 속에서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를 기획함 	

- 각 지역으로 확대되며, 전시뿐 아닌 교육체험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설로 기능 확장
 - 연이어 대구(2013년), 대전(2016년), 강원(2019년)에서도 비슷한 시설이 조성되었으나, 전시뿐 아닌 교육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을 확장하고, 명칭도 ‘체험관’으로 명명함

표 10 지역별 인권체험관 설립 배경 및 내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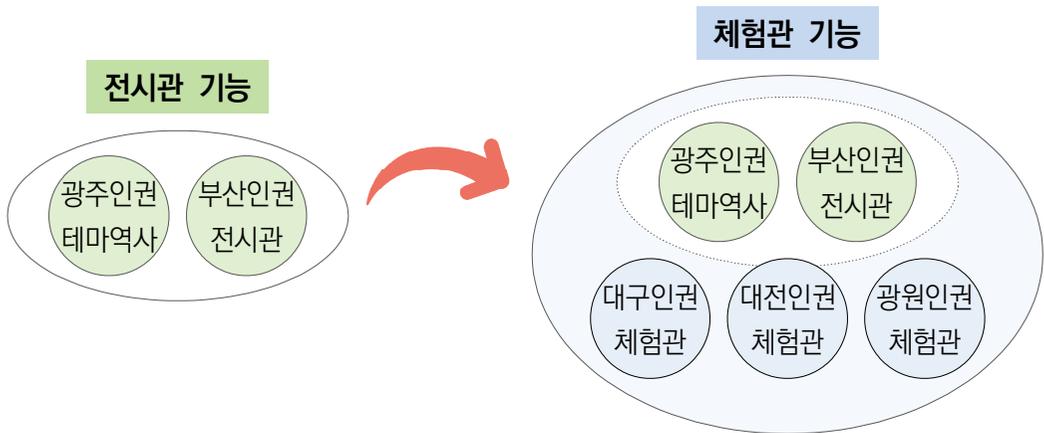
구분	내용	사진
<p>대구 별별 인권체험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교육청과 MOU 체결 - 폐교를 활용한 체육학습장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 - 전국 최초의 체험형 인권학습장을 표방 - 단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계획됨 	
<p>대전 인권체험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MOU 체결 - 전시실과 체험공간으로 구성 - 충남도청 부지 리모델링에 따른 대전시의 이전요구로 2020년 10월 재개관 - 대전도시철도공사와 MOU - 대전시청역에 위치 	
<p>강원 인권체험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인권사무소 건물에 개관 - 영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위원회 위촉강사 및 외부 전문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단 구성, 연구모임 진행 	

- 전시관(광주·부산)에서 체험관으로의 역할 변화·확장 과정에서 기본계획 부재, 체계화 과정 부족
 - 인권체험관 조성 과정이 기존의 전시관에 기능을 추가하는 확대 운영이었기에 세부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음

● **인권테마역사, 인권전시관이 ‘인권체험관’으로 통일돼 운영**

- 대구-대전-강원에서 인권체험관이 설립된 후, 광주인권테마역사와 부산인권전시관도 인권체험관의 범주로 묶이고 ‘인권교육 기반 구축’,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인권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됨
- 동일한 명칭으로 인해 동일한 운영 체계가 적용되고, 동일한 성과를 요구받고 있음

〈그림 1-7〉 인권체험관 설립 배경



〈그림 1-8〉 인권체험관 목적 및 역할



② **인권체험관 운영조직 및 인력**

- 각 지역 인권사무소 내 1명이 인권체험관 담당자로 역할
- 인권체험관 운영과 함께 인권도서관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

표 11 지역별 인권체험관 운영 인력 현황

구분	인력	업무내용
광주인권 테마역사	1명	인권체험관 운영, 도서관 업무, 교육운영 (교장교감 리더십과정)
부산인권 전시관	1명	인권체험관 운영, 인권교육(시민사회, 인권강사단, 노숙인, 인권특강), 인권상담, 면전관리, 홍보, 공과금 *현재 운영 중단으로, 2021년 현황 반영
대구별별인권 체험관	1명	인권체험관 운영
대전인권 체험관	1명	인권체험관 운영
강원인권 체험관	1명	인권체험관 운영, 인권도서관 운영, 지역행사 교류형 홍보, 찾아가는 혐오차별 예방교육, 방문프로그램 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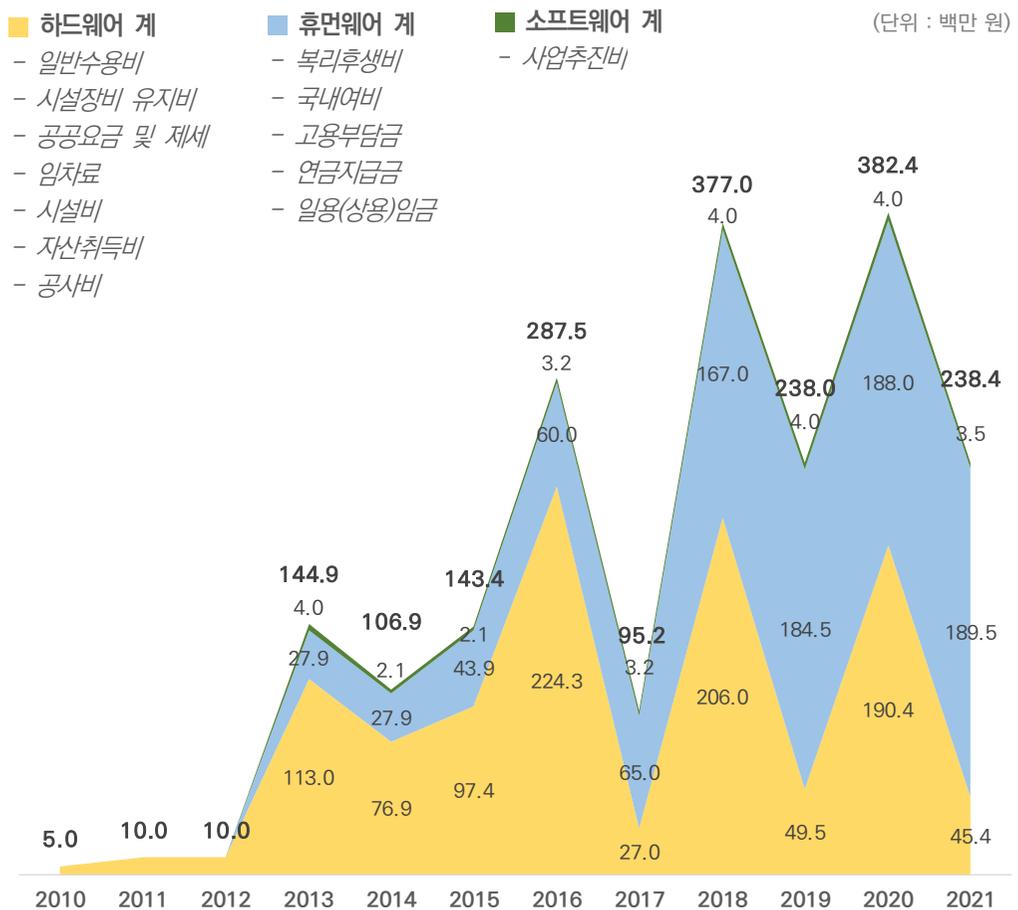
3 인권체험관 운영 예산

- 국가인권위원회 전체 예산 중 인권체험관 운영을 위한 예산은 0.63% 수준
 - 인권체험관 운영 예산은 국가인권위원회 주요사업비 내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지역 인권문화 확산’ 부문에 편성돼 있으며 전체 예산(2021년 기준 37,931백만 원)의 약 0.63%에 해당함
- 2018년 (강원인권체험관 설립) 이후 인권체험관 예산 평균은 연 309백만 원
 - 인권체험관 운영 예산은 2018년 377.0백만 원, 2019년 238.0백만 원, 2020년 382.4백만 원, 2021년 238.4백만 원으로 나타남

참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직업체험시설) 1개소 운영 예산은 2018년 19,253백만 원, 2019년 21,180백만 원, 2020년 25,449백만 원 연 평균 21,960백만 원임

- 최근 4년간 전체 예산 중 휴먼웨어(인건비) 평균은 182.3백만 원, 하드웨어 평균은 122.8백만 원, 소프트웨어 평균은 3.9백만 원
 - 1개 체험관 기준으로 보면, 1년간 휴먼웨어(인건비) 평균은 45.6백만 원, 하드웨어 평균은 30.7백만 원, 소프트웨어 평균은 1.0백만 원임

〈그림 1-9〉 인권체험관 세부 예산 현황(2010~2021년)



- 분석의 편의를 위해, 매년 변동이 큰 하드웨어 부문의 예산을 제외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음
- 2013년 이래로 매년 예산 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사업추진비) 부문은 매년 소폭 증가·비슷한 수준임

〈그림 1-10〉 인권체험관 세부 예산 현황(하드웨어 제외) (2010~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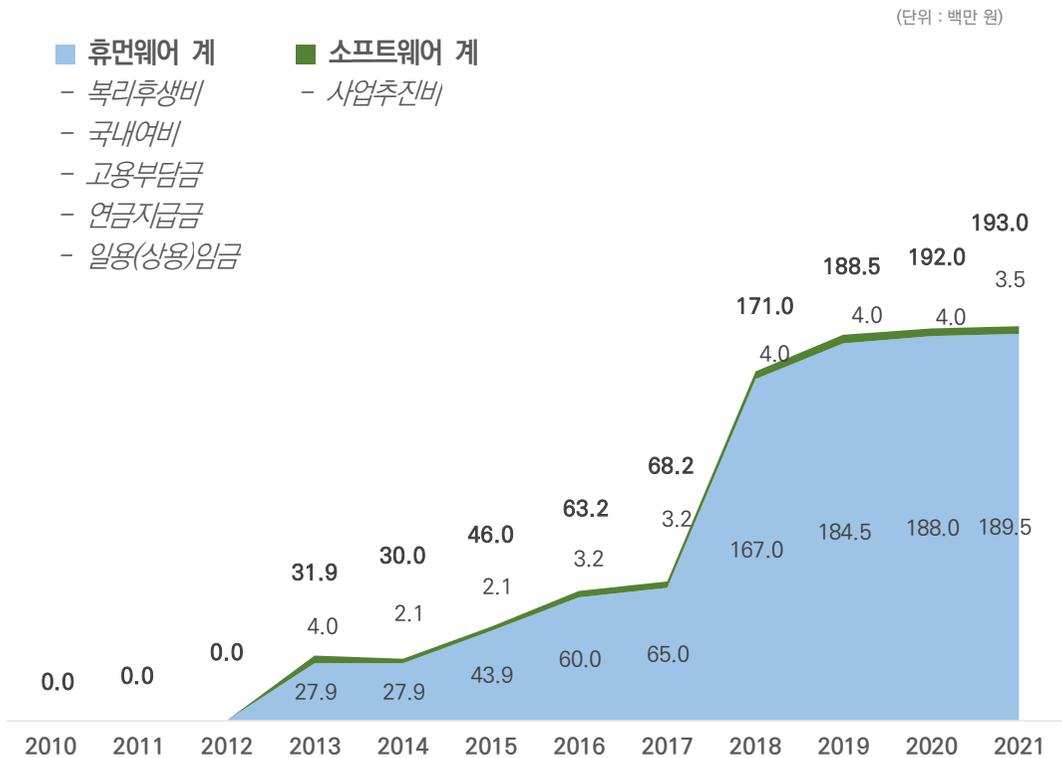


표 12 인권체험관 세부 예산 현황(2010~2021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5.0 (100.0)	10.0 (100.0)	10.0 (100.0)	144.9 (100.0)	106.9 (100.0)	143.4 (100.0)	287.5 (100.0)	95.2 (100.0)	377.0 (100.0)	238.0 (100.0)	382.4 (100.0)	238.4 (100.0)
일반 수용비	5.0 (100.0)	10.0 (100.0)	10.0 (100.0)	48.0 (33.1)	27.9 (26.1)	44.1 (30.8)	39.2 (13.6)	11.0 (11.6)	34.0 (9.0)	33.0 (13.9)	33.0 (8.6)	32.0 (13.4)
시설장비 유지비	-	-	-	2.0 (1.4)	6.0 (5.6)	5.1 (3.6)	5.1 (1.8)	5.0 (5.3)	6.0 (1.6)	6.5 (2.7)	6.0 (1.6)	3.0 (1.3)
공공요금 및 체세	-	-	-	-	-	8.1 (5.6)	10.0 (3.5)	9.0 (9.5)	8.0 (2.1)	8.0 (3.4)	8.4 (2.2)	8.4 (3.5)
임차료	-	-	-	2.0 (1.4)	2.0 (1.9)	2.0 (1.4)	2.0 (0.7)	2.0 (2.1)	2.0 (0.5)	2.0 (0.8)	2.0 (0.5)	2.0 (0.8)
시설비	-	-	-	61.0 (42.1)	21.0 (19.6)	24.0 (16.7)	150.0 (52.2)	-	-	-	-	-
자산 취득비	-	-	-	-	20.0 (18.7)	14.1 (9.8)	18.0 (6.3)	-	76.0 (20.2)	-	61.0 (16.0)	-
공사비	-	-	-	-	-	-	-	-	80.0 (21.2)	-	80.0 (20.9)	-
하드웨어 계	5.0 (100.0)	10.0 (100.0)	10.0 (100.0)	113.0 (78.0)	76.9 (71.9)	97.4 (67.9)	224.3 (78.0)	27.0 (28.4)	206.0 (54.6)	49.5 (20.8)	190.4 (49.8)	45.4 (19.0)
복리 후생비	-	-	-	-	-	-	-	-	2.0 (0.5)	2.5 (1.1)	3.0 (0.8)	3.0 (1.3)
국내여비	-	-	-	-	-	-	-	2.0 (2.1)	3.0 (0.8)	5.0 (2.1)	5.0 (1.3)	3.5 (1.5)
고용 부담금	-	-	-	-	-	-	-	6.0 (6.3)	25.0 (6.6)	28.0 (11.8)	29.0 (7.6)	29.0 (12.2)
연금 지급금	-	-	-	3.0 (2.1)	3.0 (2.8)	4.0 (2.8)	6.0 (2.1)	-	-	-	-	-
일용임금	-	-	-	24.9 (17.2)	24.9 (23.3)	39.9 (27.8)	54.0 (18.8)	57.0 (59.9)	137.0 (36.3)	149.0 (62.6)	151.0 (39.5)	154.0 (64.6)
휴먼웨어 계	-	-	-	27.9 (19.3)	27.9 (26.1)	43.9 (30.6)	60.0 (20.9)	65.0 (68.3)	167.0 (44.3)	184.5 (77.5)	188.0 (49.2)	189.5 (79.5)
사업 추진비	-	-	-	4.0 (2.8)	2.1 (2.0)	2.1 (1.5)	3.2 (1.1)	3.2 (3.4)	4.0 (1.1)	4.0 (1.7)	4.0 (1.0)	3.5 (1.5)
소프트웨어 계	-	-	-	4.0 (2.8)	2.1 (2.0)	2.1 (1.5)	3.2 (1.1)	3.2 (3.4)	4.0 (1.1)	4.0 (1.7)	4.0 (1.0)	3.5 (1.5)

4 인권체험관 위치 및 시설

- 지역별로 상이한 입지 조건, 공간 형태, 면적
 - 광주인권테마역사, 부산인권전시관, 대전인권체험관(독립공간)의 경우 지하철 역사 내에 위치함
 - 대구별별인권체험관은 폐교를 활용해 조성되었으며, 강원인권체험관은 강원 인권사무소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함
 - 122.3㎡(36.9평)에서 335㎡(101.3평)까지 상이한 규모를 가짐 (광주인권 테마역사, 부산인권전시관은 지하철 역사의 면적으로 계산됨)

표 13 지역별 인권체험관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주소	면적
광주인권 테마역사	광주지하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71-33	335㎡ (101.3평)
부산인권 전시관	부산지하철 물만골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23	260㎡ (78.7평)
대구별별인권 체험관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학습장 내 후관 2층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	167㎡ (50.5평)
대전인권 체험관	대전지하철 시청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5	122.3㎡ (37.0평)
강원인권 체험관	강원인권사무소 내	강원 원주시 능라동길 73 대원신탁 4층	138.6㎡ (41.9평)

- 지하철 역사, 폐교를 활용한 체험학습장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유휴·저이용 공간을 활용
 - 인권위원회는 각 지역 내 기관과 함께 인권체험관 조성을 포함한 지역 내 인권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옴 (강원 지역 제외)

- 업무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내 유휴·저이용 공간을 인권체험관으로 조성하고 활용함

표 14 인권체험관 조성을 위한 인권위원회-지역 내 기관 MOU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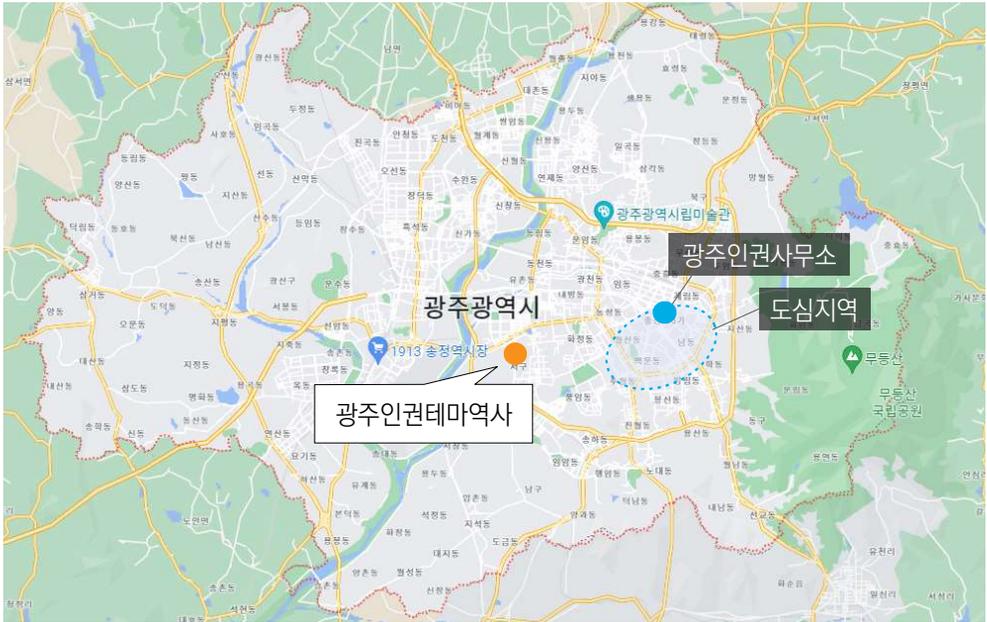
구분	일자	업무협약명	내용
광주	2008. 10. 31.	‘인권위-광주광역시’ 인권교류협력증진 및 지역사회 인권신장을 위한 양해각서	인권테마역사 조성 등 인권친화적 도심 조성을 위한 인권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부산	2009. 12. 18.	‘인권위-부산교통공사’ 인권신장 및 인권 테마역 조성을 위한 협약서	인권교류 협력증진 및 지역사회 인권신장을 위해 상호협력하며 인권테마역을 조성 및 운영한다.
대구	2013. 3. 6.	‘인권위-대구교육청’ 인권교류협력 증진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정서	지역 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인권체험관 조성 등에 협력하고 상호 지원한다.
대전	2016. 6. 30.	‘인권위-대전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	인권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및 공동활동,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증진사업 등에 대해 상호협력한다.
	2020. 9. 4.	‘인권위-대전시-대전도시철도공사’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역사내 체험관을 운영할 공간을 제공하고 대전지역 인권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등

● 지역별 인권체험관 위치·시설 세부 현황

1. 광주인권테마역사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71-33 광주지하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내 통행로에 위치함
- 광주인권테마역사가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역과 광주인권사무소는 7.1km 떨어져 있으며, 도심 지역(금남로4가역 기준)과는 7.4km 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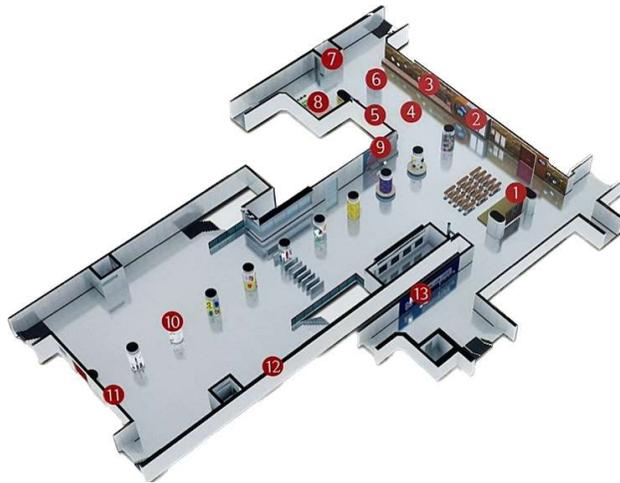
〈그림 1-11〉 광주인권테마역사 위치



- 전체 면적은 335㎡(101.3평)으로, 인권 관련 작품 ‘무등의 벽’을 포함해 세계 인권선언문, 역대 인권 수상자와 같은 자료들이 벽면에 부착돼 있음
- 인권도서관과 우체통, 인권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통로 내 배치돼 있음

〈그림1-12〉 광주인권테마역사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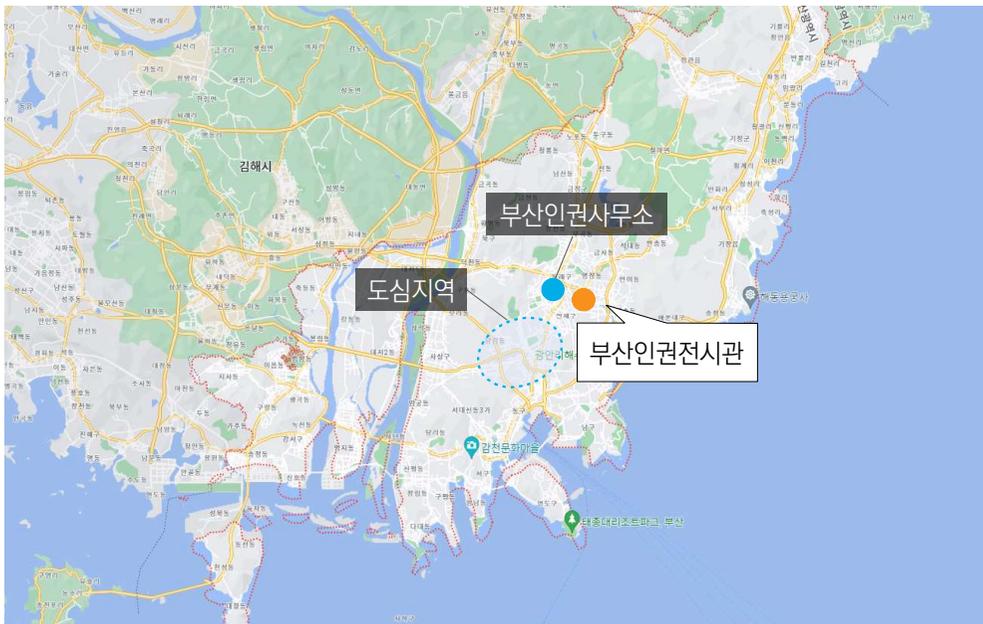
1. 인권나무
2. 세계인권선언문
3. 무등의 벽
4. 인권도서관/우체통
5. 인권홍보관
6. 역대 인권상 수상자
7. 더불어 숲
8. 사무실
9. 안내데스크
10. 인권 작품전시
11. 인권 방명록
12. 인권 자료실
13. 무언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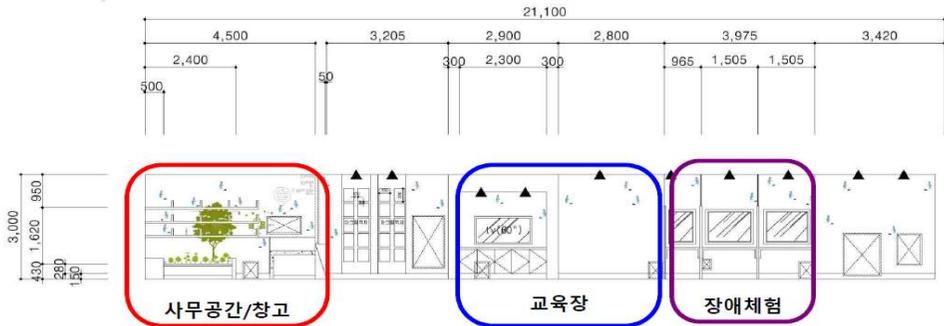
2. 부산인권전시관 *2022년 1월 운영 중단

〈그림 1-13〉 부산인권전시관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23 부산지하철 물만골역 내 통행로에 위치함
- 부산인권전시관이 위치한 물만골역과 부산인권사무소는 1.8km 떨어져 있으며, 도심 지역(서면역 기준)과는 3.7km 떨어져 있음
- 전체 면적은 260㎡(78.7평)으로 역사 내 기둥과 벽면을 활용해 인권 캠페인 문구가 부착돼 있음. 통로에 전시 공간과 작은공연장이 마련돼 있으나 사용 중지됨

〈그림 1-14〉 부산인권전시관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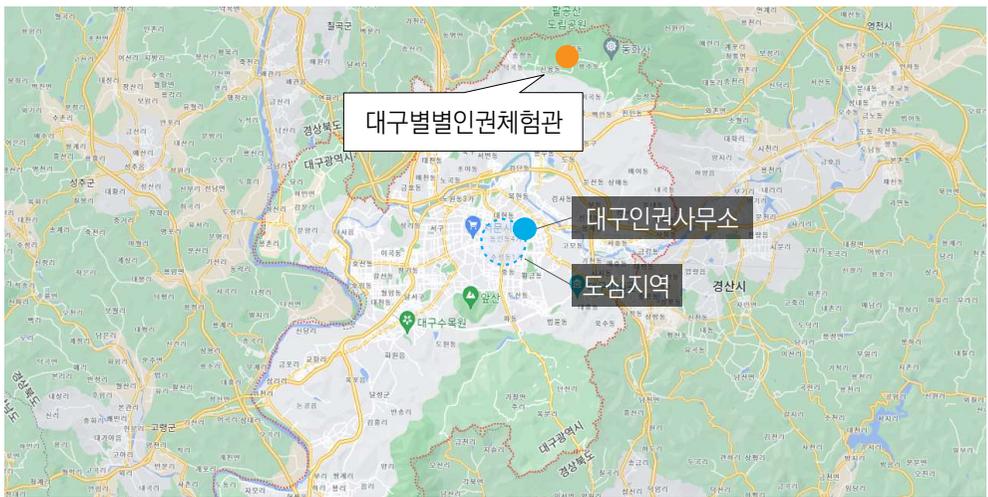


입구	내부 전시공간	내부 전시공간
전시물(운영 당시)	전시물(운영 당시)	전시물(운영 당시)

3. 대구별별인권체험관

-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학습장 내 후관 2층에 위치함
- 대구별별인권체험관이 위치한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과 대구인권사무소는 24km 떨어져 있으며, 도심 지역(중앙로역 기준)과는 27km 떨어져 있음

〈그림 1-16〉 대구인권체험관 위치



- 전체 면적은 167㎡(50.5평)으로, 내부에 가벽을 세워 인권 관련 자료를 부착해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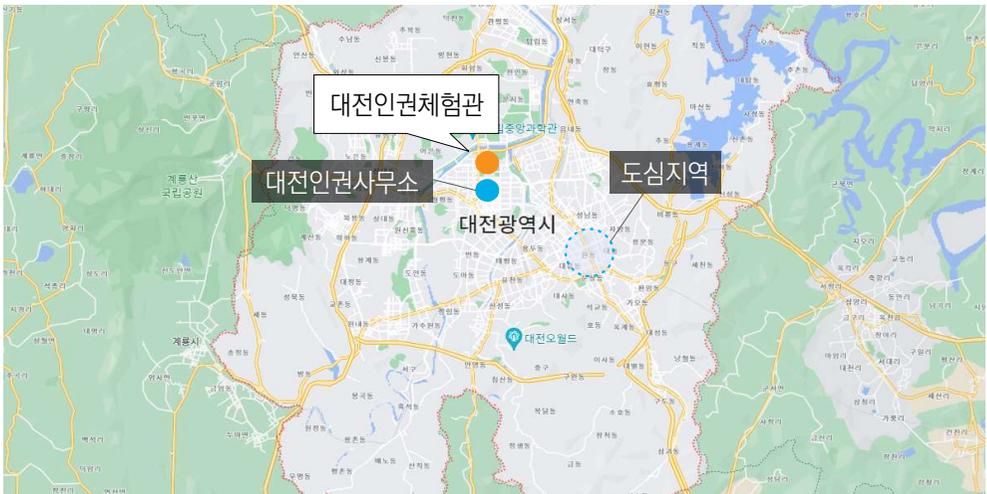
〈그림 1-16〉 대구별별인권체험관 공간 구성



4. 대전인권체험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5 시청역 내 위치함
- 대전인권체험관이 위치한 대전지하철 시청역과 대전인권사무소는 1.4km 떨어져 있으며, 도심 지역(중앙로역 기준)과는 4.9km 떨어져 있음

〈그림 1-17〉 대전인권체험관 위치



- 전체 면적은 122.3㎡(37.0평)으로, 가벽을 설치해 학습체험공간, VR체험존, OX 퀴즈존, 게임존 등 체험별 공간을 분리해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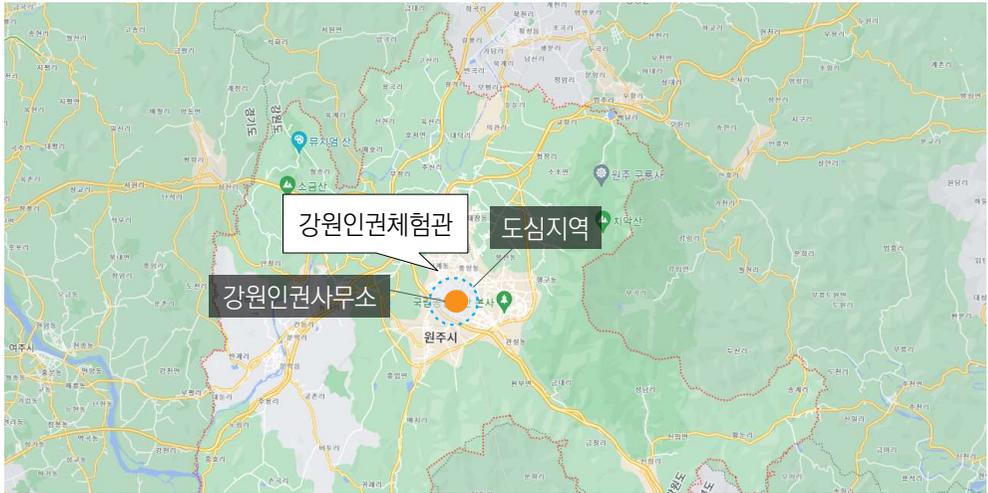
〈그림 1-18〉 대전인권체험관 공간 구성



5. 강원인권체험관

- 강원 원주시 능라동길 73 대원신평 4층, 강원인권사무소(2층)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함

〈그림 1-18〉 강원인권체험관 위치



- 전체 면적은 138.6㎡(41.9평)으로, 벽면을 따라 체험 관련 콘텐츠가 전시/부착돼 있으며 체험 활동을 위한 테이블이 중앙에 배치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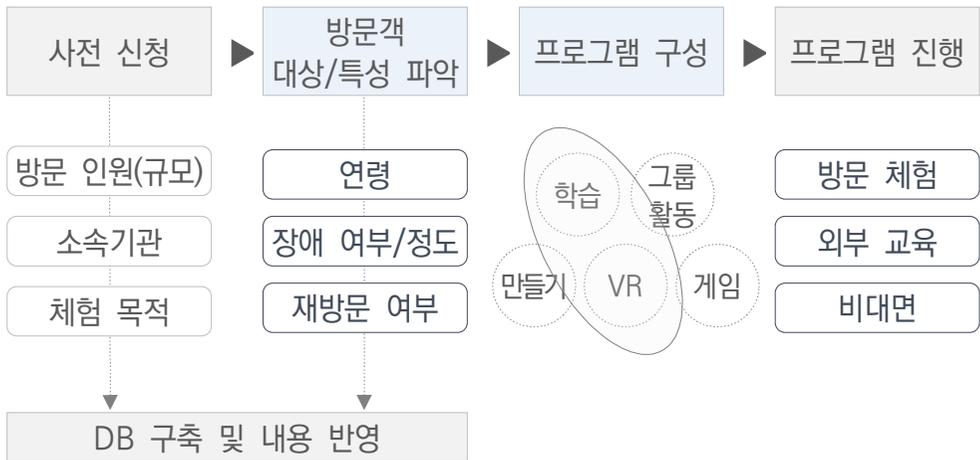
〈그림 1-20〉 강원인권체험관 공간 구성



5 인권체험관 프로그램

- 방문객 DB 수집과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현황과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
 - 각 인권체험관에선 5~20명 내외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60~120분 정도의 체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 중임
 - 방문객들의 필요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 체험관 담당자가 2주 전 사전 신청 접수를 받아 연령, 장애여부, 재방문여부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함
 - 사전 신청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와, 강의 일자 및 시간, 신청기관, 교육대상, 영역, 인원, 참여 강사 등 진행 내용을 DB로 구축함
 - 방문객 DB를 바탕으로 체험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함

〈그림1-21〉 인권체험관 프로그램 제공 과정



- 인권과 관련한 개념·사례를 학습하기 위해 ‘사건과 문제’를 ‘지식과 정보’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전시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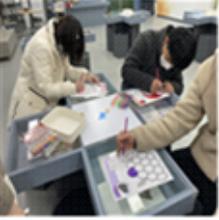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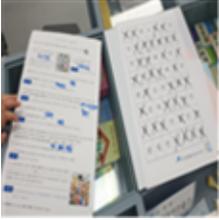
- 체험 프로그램은 방문객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정보에 따라 인권 관련 정보 학습, 놀이, 그룹 미션 활동 등으로 비슷하게 구성돼 있음
- 프로그램 내용은 세계인권선언문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19가지 차별 사유, 유엔아동권리협약, 일상 속 혐오·차별과 관련된 언어, 인권 차별 상황 등 인권과 관련한 개념과 사례를 학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전인권체험관에서는 체험관 내 배치된 VR 기기를 통해 저시력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체험을 진행함

표 15 인권체험관 프로그램 내용(강원인권체험관)

프로그램명	내용	사진
대상	영유아	
인권 알 옮기기	알을 인권에 비유하여 직접 알(인권) 옮기기 체험을 통해 알을 소중하게 지켜내도록 함.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손수건에 알을 넣고 모서리를 잡아 알을 옮겨 보며 서로 협동을 통해 알을 소중히 지켜내는 활동. 인권 또한 알처럼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깨지기 쉽다는 것(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움)을 느끼게 함	
권리 이름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와 있는 아동 권리가 담긴 이름표 양식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권리 이름표를 만들어 봄. 또는 아동의 발달 및 성장에 필요한 권리가 담긴 색칠 그림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직접 꾸미고 색칠해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함	
나의 모습 표현하기	자신의 모습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표현해 보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 서로 다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함.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존중해주고 소중히 생각해야 함을 이야기하며, 모두 다르지만 똑같이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줌	
대상	아동·청소년	

프로그램명	내용	사진
인권 나무 만들기	<p>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인권의 꽃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꾸미면서 인권 나무를 완성시킴. 같은 반 친구여도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자세를 기르게 함</p>	
권리 보물찾기	<p>아동의 4대 기본권(보호, 발달, 참여, 생존) 등 우리가 가진 권리에 대해 적힌 카드를 찾아보고, 나의 권리와 내가 지켜야 하는 권리에 대해 알아봄. 4대 기본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분류해보는 활동에도 활용하여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나의 권리도 소중한 만큼 친구들의 권리도 잘 지켜줘야 하는 것을 인식시킴</p>	
편견 스케치	<p>우리가 가진 편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떠오르는 내용이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함. 조별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하며 우리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편견이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함. 활동을 통해 편향된 시각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깨우치고, 다양한 방식의 열린 생각을 가지며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을 줄여 나가야 함을 일깨워 줌</p>	
차별 스티커	<p>각자 다른 내용의 미션(차별 상황)을 받아 내용을 보지 않고 자신의 이마에 붙인 후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과 소통하며 상대의 이마에 적힌 내용대로 미션을 수행함.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본인이 어떤 내용을 부여받았는지 유추해보고, 이러한 차별을 겪게 된다면 어떤 기분인지 간접적으로 느껴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실제 해당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보며 차별을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됨</p>	
인권 단편시 짓기	<p>대상별 주제를 선정하여 내가 느끼는 인권 상황에 대한 단편시 및 N행시를 직접 작가가 되어 작성해보는 활동. 다른 참여자들과 결과물을 함께 공유해보며, 동일 주제 속 다양한 생각과 관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음</p>	

프로그램명	내용	사진
대상	성인(공공기관 등)	
인권 이구동성	인권과 관련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제시하여 한 단어씩 동시에 외치도록 하여, 인권 관련 키워드와 해당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 (예. 세.계.인.권.선.언 - 6명이 한 단어씩 동시에 외치도록 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해당 키워드에 대해 맞추도록 함)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만화 그리기	모둠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세 컷의 그림으로 제시함. 그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둠끼리 상의하여 괴롭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 컷의 만화로 그려보고, 다른 모둠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갑질 근절 초성 포스트잇	갑질(라떼는 말이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갑질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모둠끼리 논의하도록 함. 모둠별 14개의 초성을 제시하여, 그 초성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여 대응 방안을 함께 적어보도록 함. 각자 모둠에서 나온 사례들을 모든 참여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가장 공감되는 내용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여, 갑질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공유하고 학습하도록 함	
대상	장애	
권리 밥상 차리기	내가 가진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림(혹은 아이클레이)으로 표현해 봄. (예. 건강할 권리 - 영양가 있는 음식, 적당한 수면 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지 생각해보면서, 나의 권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	
우리 동네 불편한 진실 (장애인 차별)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황을 그림 카드로 제시하여 직접 찾아보도록 함. 쉽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중 어떠한 상황이 차별에 해당되는지 찾아보면서 인권적인 시각을 키워나가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함을 이야기해 봄	

프로그램명	내용	사진
나를 소개해요 (서로의 장점 칭찬)	나(A)는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장점이 무엇인지 직접 생각해보며 나에 대해 적어보도록 함.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B)에게 종이를 넘겨서 B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A의 모습, 장점, 칭찬할 만한 내용 등을 적게 함. 모두 내 구성원(A-B-C-D)에게 차례대로 돌려서 내용을 채워나가며, 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동시에 상대에게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	
인권 Great & Stupid	여러 가지 상황이 표현된 그림 카드를 찾아 어떤 상황이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이 침해되는지 직접 분류해 보고, 인권 실천&침해(차별) 상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인권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활동	
소중한 나의 건강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그림을 활용하여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좋아하는 과일을 직접 선택하여 표현해보거나,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행동(적정한 수면, 영양가 있는 음식 먹기, 잘 씻기, 아플 때 치료받기 등)을 그림으로 알아보며, 이러한 활동들이 건강권 등 인권과 연결됨을 이해함	
대상	공통	
글자 없애기	체험관 내에 전시된 인권 콘텐츠를 활용하여 퀴즈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글자판에 있는 해당 글자를 지워나가는 활동. 마지막에 지워지지 않고 남은 글자를 조합하여 메시지(2가지 버전 - 인권상담 1331, 인권 소중해)를 파악하도록 함. 직접 체험관을 둘러보며 인권 관련된 자료(세계인권선언문, 룰렛 퀴즈, 인권 작품 등)들을 찾아 문제의 답을 풀어나가면서 흥미를 유도하는 동시에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별별 스탬프투어	별별인권체험관(대구)에서 개발한 웹기반 체험프로그램. 스마트폰에 '별별스탬프투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프로그램명	내용	사진
(웹기반 체험 프로그램)	<p>실행한 후 체험관 곳곳에 있는 QR 코드를 찾아 인권 콘텐츠를 감상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총 18문제 중 일정 이상(10개 이상)의 스탬프를 확보한 참여자에게 인권 뽑기 게임에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을 보상으로 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p>	
차별 빙고	<p>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19가지의 차별 사유를 제시하고, 16칸(4*4)의 빙고 판을 완성하도록 함. 빙고 게임을 통해 어떠한 사유들이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p>	
혐오·차별 대응 메시지	<p>일상에서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상황이나 언어를 알아보고,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언어나 혐오·차별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다짐을 적어보기</p>	
인권 영화 감상	<p>참여 대상별 관련된 인권 영화 및 웹 드라마, 인권위 결정례 영상 등을 감상하고, 인권적인 관점에서 느낀 점에 대해 질문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p>	

- 전시 콘텐츠의 경우 각 인권체험관의 공간 특성에 따라 전시 방식과 규모, 내용에서 차이를 보임
- 광주인권테마역사, 부산인권전시관은 일상적으로 방문·통과하는 역사 특성을 활용해 상설/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인권전시관에서는 설립 목적에 따라 매년 6~7회의 특별 전시를 개최해왔음
- 광주인권테마역사에선 개관 당시 설치된 인권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상설 전시를

진행 중이며, 타지역 인권체험관에서는 외부 전시 공간과 체험관 안팎의 가벽을 활용해 체험 프로그램의 일부로 전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

- 전시를 통해 지역별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기도 하고, 개최 시기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기도 함
*부산인권전시관-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사진전, 세월호 사진전(2018년 3~5월), 제주 4.3 수형인 사진전(2020년 4~5월) 진행
- 국가인권위원/지역 내 인권기관의 활동(캠페인)과 연계해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함
- 도서관, 경찰서, 공기업 등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도 전시를 개최해왔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전시를 진행함

표 16 인권체험관 전시 내용(광주인권테마역사, 부산인권전시관)

지역	구분/기간	내용	사진
광주 인권 테마 역사	상시설치 (2008년~)	광주인권현장과 함께 광주의 인권 이야기를 담 고 있는 <무등의 벽>	
		인간의 가치, 존엄, 평등, 평화에 대한 의미를 제시 하고자 설치된 작품 <무언의 대화>	
		역사 내 전시된 <광주 인권상 역대수상자>, <인종차별 위원회 권고사항>, <성차별 이슈> 등	

지역	구분/기간	내용	사진
부산 인권 전시관	특별전시 (2017년)	반(反) 차별 광고 전시회	
	특별전시 (2019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사진 전시전	
	특별전시 (2020년)	프랑스 비영리단체 제작 인권 포스터 전시전	

● 인권체험관 담당자들이 직접 프로그램과 체험/교육 키트를 개발

- 2019년부터 5개 인권체험관 담당자들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체험/교육 키트를 개발해 활용해오고 있음
- 제작된 교보재는 모든 프로그램(방문 체험/외부 교육/비대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음

1. 별별스탬프투어(2019년 온라인/2020년 오프라인 개발)

- 대구별별인권체험관에서 2019년에 온라인 QR코드를 활용, 미션을 수행하며 스탬프를 모으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함
- 지역별 인권체험관 담당자들이 함께 주기적으로 콘텐츠 회의를 진행하며 내용을 보완하고 있음

표 17 체험 키트-별별스탬프투어 구성 및 내용

활동 미션	미션 수행을 통한 스탬프 수집
	
태블릿 PC 활용 모습	오프라인 활동지
	

2. 인권꾸러미-세계인권선언편(2021년 개발)

- 5개 인권체험관 담당자가 업무협약(7차)을 통해 주제, 대상, 내용구성, 활용 방법 등을 기획하여 제작함
- 인권상자, 세계인권선언 리플릿(세계인권선언문 이해, 30개 조항 컬러링), 활동 스티커, 2행시 카드(2행시 짓기 활동), 소개 카드(인권체험관 이용 안내)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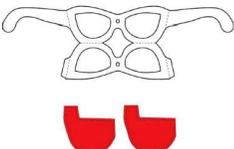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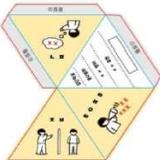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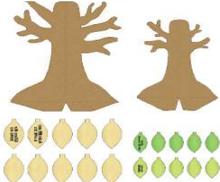
표 18 체험 키트-인권꾸러미 세계인권선언편 구성 및 내용

인권상자	세계인권선언 리플릿
	

3. 인권꾸러미-편견편(2022년 개발)

- 5개 인권체험관 담당자와 전문 업체 '만드는 재미'가 함께 교육콘텐츠 기획회의 (11차)를 통해 제작함
- 활동책자(편견 및 차이·차별, 혐오에 대한 책자), 차이·차별 퀴즈카드, 인권나무, 색안경, 혐오피라미드(편견-혐오표현-차별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 설명)로 구성됨

표 19 체험 키트-인권꾸러미 편견편 구성 및 내용

인권책		인권퀴즈	
			
색안경	혐오피라미드	인권나무	
			

4. 숨은 인권찾기-장애편(2019년 개발)

-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시선과 출입 통제, 승차 거부, 발달장애 어린이의 입학 거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어려움 등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지와 정답지로 구성돼 있음
- 일상 속 풍경에서 장애인 인권 이슈(문제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함

5. 숨은 인권찾기-일상편(2022년 개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속도 제한,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 버스 확대, CCTV 설치·운영의 최소화,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대기오염과 건강권/생명권 등 일상 풍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문제지와 정답지로 제시하고 있음

표 20 체험 키트-숨은 인권찾기 장애편, 일상편 구성 및 내용

장애편 문제	일상편 문제
	

6 인권체험관 방문 현황

- 연도별 방문자 수, 방문 횟수 집계를 통한 성과 도출
 - 현재 5개 지역별 인권체험관에서는 방문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연도별 방문자 수와 방문 횟수를 집계하고 있음
 - 체험관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즉각적인 체험 효과를 체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특성과 설문 문항 설계/분석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고려했을 때 실효적인 성과로 보기가 어려움

- 연구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구축한 DB를 바탕으로, 학령별/직군(영역)별 분포, 장애/비장애인의 비중, 방문 시간대별 분포, 체류시간 등을 추가로 분석

1. 최근 5년간 연도별 방문자 수(2017~2021년, 34,261명)

*2022년 전체 데이터의 부재로 2021년까지의 방문자 수를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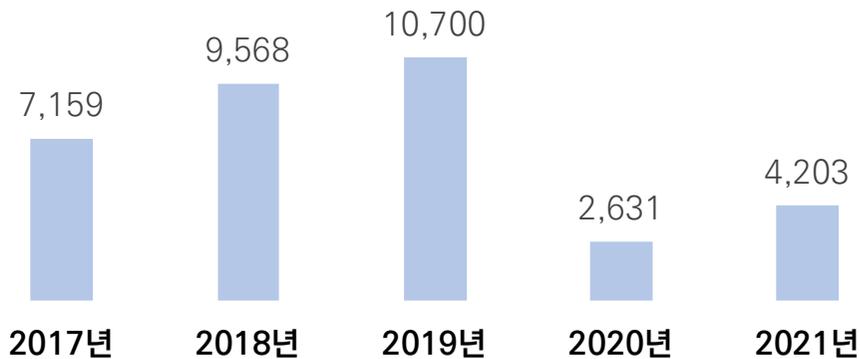
- '2017년'에는 7,159명이었던 방문자 수가 차츰 증가해 '2019년'에는 10,700명 까지 증가함
- '2020년'(2,631명)과 '2021년'(4,203명)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체험관 방문자 수가 급감함

〈그림 1-22〉 최근 5년간 연도별 방문자 수(2017~2021년)

Ⅰ 최근 5년간 연도별 방문자 수(2017~2021년) Ⅰ

단위 : 명

평균 방문자 수 5,944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방문횟수(회)	89	174	195	53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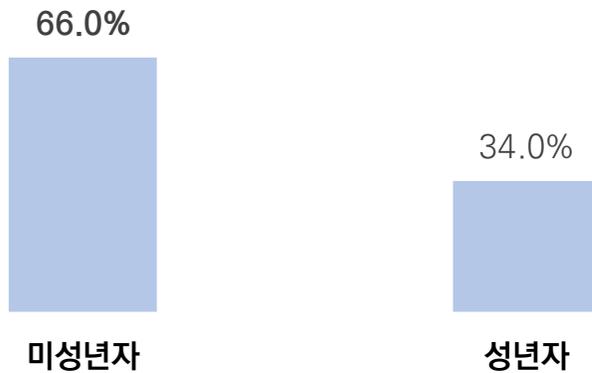
2. 방문자 미성년자/성년자 비중

- 방문자 중 66.0%(13,143명)가 ‘미성년자’로, 인권체험관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미취학 아동~고등학생까지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음
- ‘성년자’의 경우 34.0%(6,775명)을 차지함

〈그림 1-23〉 방문자 미성년자/성년자 비중

Ⅰ 방문자 미성년자/성년자 비중 Ⅰ

단위 : %



	미성년자	성년자
방문인원(명)	13,143	6,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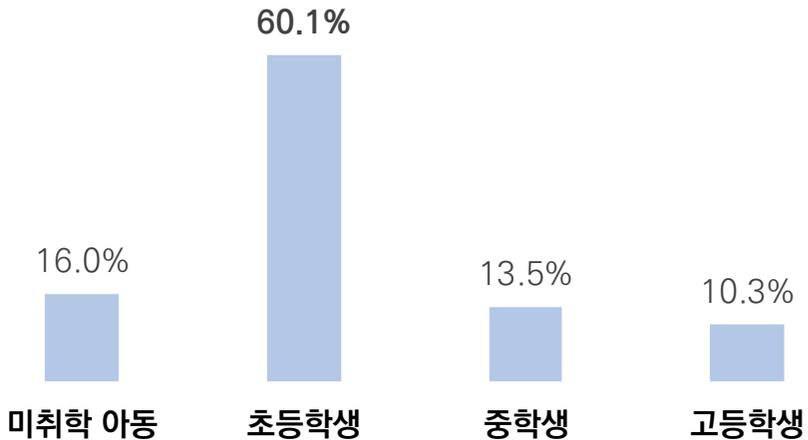
3. 미성년 방문자 학령별 분포

- 미성년 방문자의 학령별 분포를 살펴볼 때, '초등학생'의 비중이 60.1%(7,90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이어 '미취학 아동'(16.0%, 2,103명), '중학생'(13.5%, 1,780명), '고등학생'(10.3%, 1,357명) 순으로 높았음

〈그림 1-24〉 미성년 방문자 학령별 분포

미성년 방문자 학령별 분포

단위 :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방문인원(명)	2,103	7,903	1,780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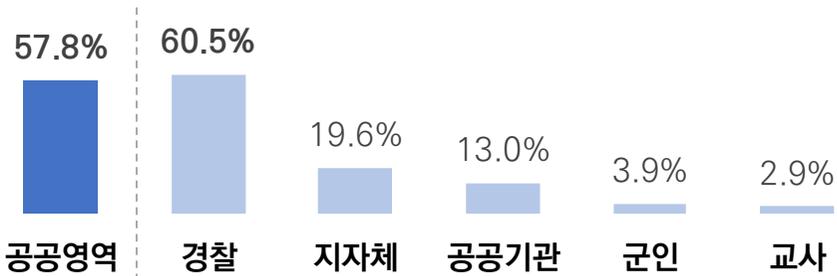
4. 성년 방문자 직군(영역)별 분포

- 방문자 중 성년자의 절반 이상(57.8%, 3,914명)이 ‘공공영역’에 소속돼 있었으며, 직군별로는 ‘경찰’(60.5%, 2,368명), ‘지자체’(19.6%, 768명), ‘공공기관’(13.0%, 510명), ‘군인’(3.9%, 153명), ‘교사’(2.9%, 115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방문자의 42.2%(2,861명)이 ‘민간영역’에 소속돼 있었으며, 직군별로는 ‘복지 시설’(90.0%, 2,575명)이 대다수를 차지함

〈그림 1-25〉 성년 방문자 영역(직군)별 분포

I 성년 방문자 직군별 분포-공공영역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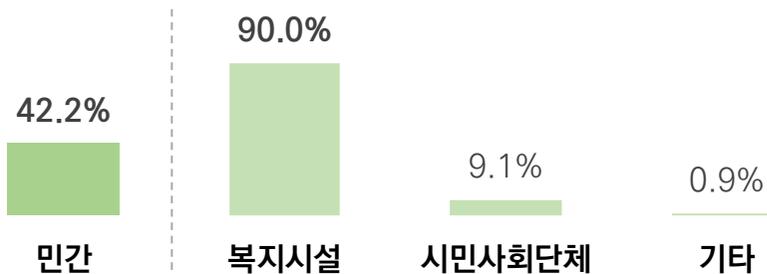
단위 : %



	공공영역	경찰	지자체	공공기관	군인	교사
방문인원(명)	3,914	2,368	768	510	153	115

I 성년 방문자 직군별 분포-민간영역 I

단위 : %



	민간영역	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기타
방문인원(명)	2,861	2,575	26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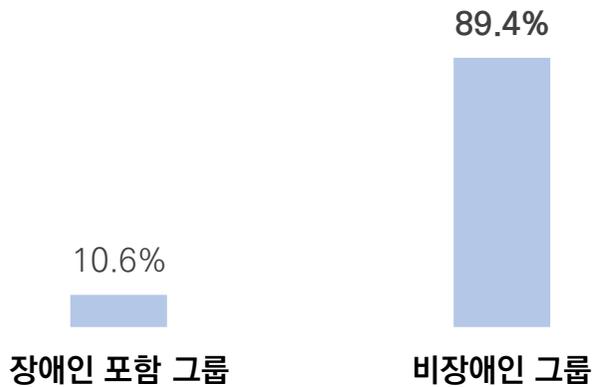
5. 방문자 그룹 내 장애인 포함 여부

- 방문 그룹 중 89.4%(그룹 내 인원 17,798명)가 비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그룹 ('비장애인 그룹')임
- '장애인 포함 그룹'은 10.6%(그룹 내 인원 2,120명)를 차지함

〈그림 1-26〉 방문 그룹 내 장애인 포함 여부

I 방문 그룹 내 장애인 포함 여부 I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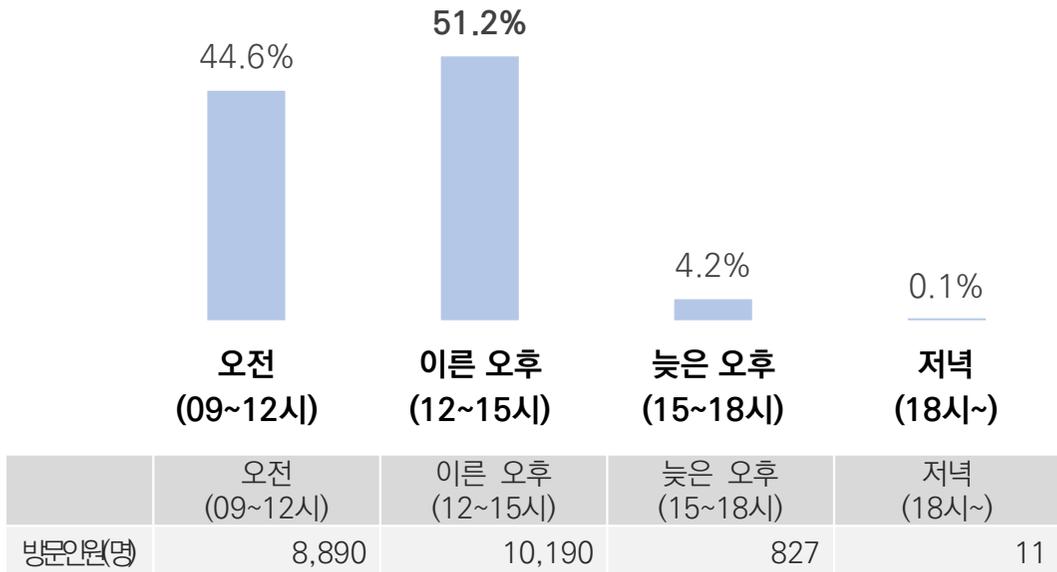
	장애인 포함 그룹	비장애인 그룹
그룹인원(명)	2,120	17,798

6. 방문 시간대별 분포

- 방문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른 오후(12~15시)’가 절반 이상(51.2%, 10,190명)을 차지함
- 이어 ‘오전(09~12시)’(44.6%, 8,890명), ‘늦은 오후(15~18시)’(4.2%, 827명), ‘저녁(18시~)’(0.1%, 11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그림 1-27〉 방문 시간대별 분포

I 방문 시간대별 분포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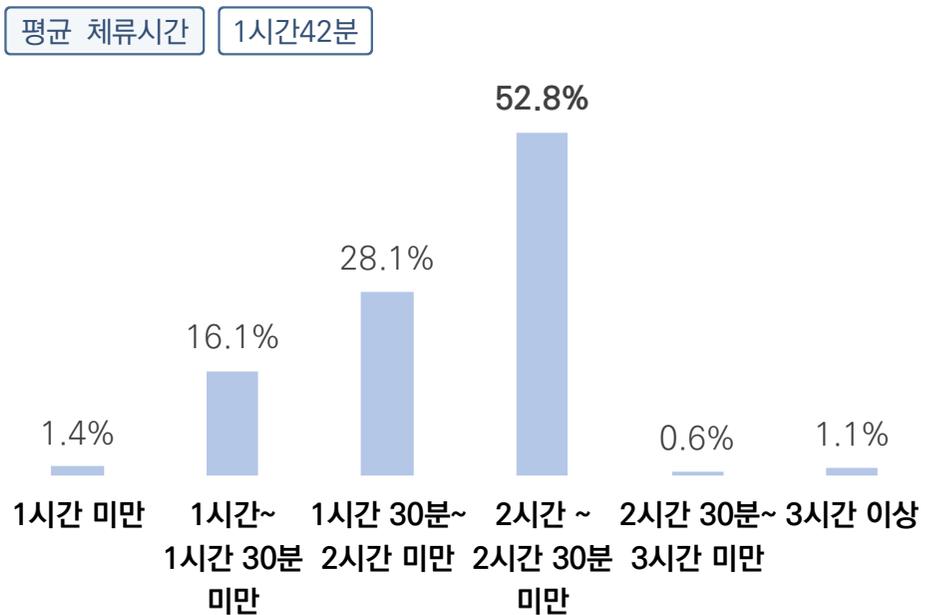
7. 방문자 체류시간

- 평균 체류시간은 1시간 42분이며, '2시간~2시간 30분미만'이 절반 이상 (52.8%, 6,041명)을 차지함
- 이어 '1시간 30분~2시간 미만'(28.1%, 3,220명), '1시간~1시간 30분 미만'(16.1%, 1,845명), '1시간 미만'(1.4%, 155명), '3시간 이상'(1.1%, 124명), '2시간 30분~3시간 미만'(0.6%, 66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그림 1-28〉 방문자 체류시간

I 방문자 체류시간 I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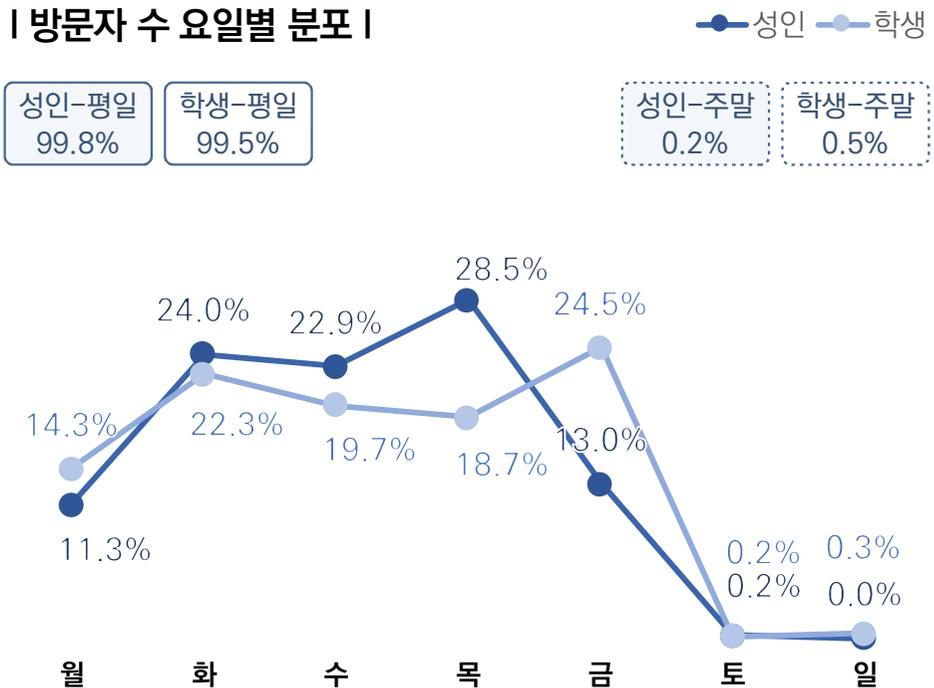
	1시간 미만	1시간~1시간30분 미만	1시간 30분~2시간미만	2시간 ~ 2시간30분 미만	2시간 30분~3시간미만	3시간 이상
방문 인원(명)	155	1,845	3,220	6,041	66	124

8. 방문자 수 요일별 분포

- 성인은 '목요일'(28.5%, 1,934명)에 가장 많이 방문했으며, 이어 '화요일'(24.0%, 1,627명), '수요일'(22.9%, 1,554명), '금요일'(13.0%, 884명), '월요일'(11.3%, 763명), '토요일'(0.2%, 13명) 순으로 방문함
- 학생은 '금요일'(24.5%, 3,225명)에 가장 많이 방문했으며, 이어 '화요일'(22.3%, 2,927명), '수요일'(19.7%, 2,590명), '목요일'(18.7%, 2,453명), '월요일'(14.3%, 1,881명), '일요일'(0.3%, 46명), '토요일'(0.2%, 21명) 순으로 방문함

〈그림 1-29〉 방문자 수 요일별 분포

I 방문자 수 요일별 분포 I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성인(명)	763	1,627	1,554	1,934	884	13	-
학생(명)	1,881	2,927	2,590	2,453	3,225	21	46

9. 방문자 그룹 내 인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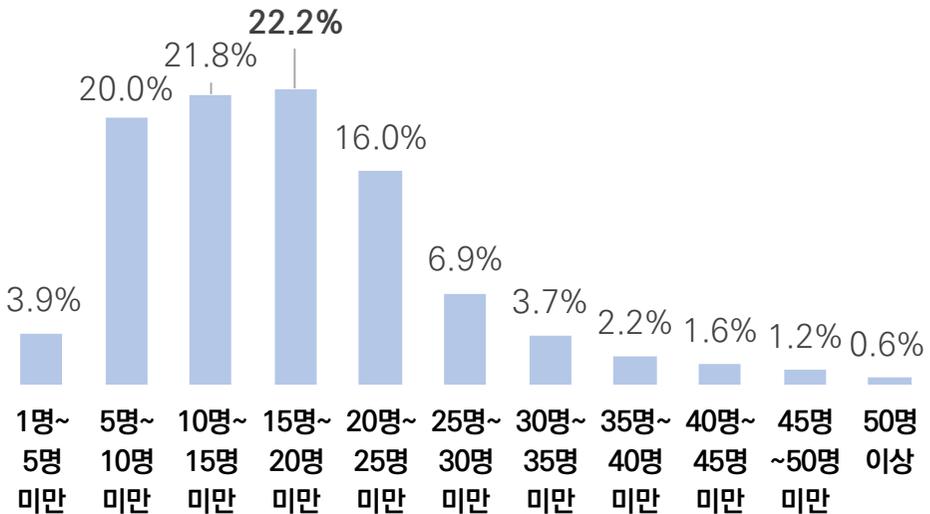
- 방문 그룹 내 인원수는 '15명~20명 미만'(22.2%, 누적 방문 회수 154회)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10명~15명 미만'(21.8%, 151회), '5명~10명 미만'(20.0%, 139회), '20명~25명 미만'(16.0%, 111회), '25명~30명 미만'(6.9%, 48회), '1명~5명 미만'(3.9%, 27회), '30명~35명 미만'(3.7%, 26회), '35명~40명 미만'(2.2%, 15회), '40명~45명 미만'(1.6%, 11회), '45명~50명 미만'(1.2%, 8회), '50명 이상'(0.6%, 4회) 순으로 방문함

<그림 1-30> 방문자 그룹 내 인원수 분포

I 방문 그룹 내 인원수 분포 I

단위 : %

평균 그룹 내 인원수 16.6명



방문 회수(회)	1명 ~ 5명 미만	5명 ~ 10명 미만	10명 ~ 15명 미만	15명 ~ 20명 미만	20명 ~ 25명 미만	25명 ~ 30명 미만	30명 ~ 35명 미만	35명 ~ 40명 미만	40명 ~ 45명 미만	45명 ~ 50명 미만	50명 이상
방문 회수(회)	27	139	151	154	111	48	26	15	11	8	4

인권체험관 인접 환경 검토

이론적 검토

관련 법률 검토

국내외 유사시설 분석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이론적 검토

1] 인권교육의 개념

UN에서는 인권교육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유엔인권교육 10년,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DHRE)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1항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함”이라고 인권교육을 정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375 호)에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서 인권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5호에서 인권교육의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제도화, 인권 강사 양성 및 위촉,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인권교육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인권교육을 위한 기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인권사무소 내 인권교육센터 등을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공공 분야 인권교육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부터 인권교육을 통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 이후 공무원 인권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공동 운영 방식으로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2015년부터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 인권 교관양성과정과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업무종사자 과정을 운영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대상 인권 리더십 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지자체 인권역량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 건강권과 노동권 향상을 위한 지자체 인권역량 과정을 실시함

● 학교 분야 인권교육

-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고등교육법」제19조의 제3 호)로 전국적으로 확산한 대학인권센터를 대상으로 인권사무소와 공동 역량 강화 워크숍과 인권역량 과정을 기획하여 운영 중임
- 전국 7개 권역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대상 인권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고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정 운영 중임
- 이밖에 교육청 학생인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교 인권역량과정을 운영함

●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 「노숙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2013년부터 노숙인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함
- 사회복지 분야 인권 연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인권 담당자, 언론인, 스포츠 인권교육 전문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별로 인권교육을 시행함

● 인권사무소 인권교육

- 인권사무소는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인권 강사양성과정,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방문교육, 인권특강을 실시함
- 교원, 경찰, 상담교사, 아동 보호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 인권교육 센터에서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을 운영함. 일부 과정은 인권체험관에서 진행함

표 21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교육과정 인권교육 분야 및 대상

구분	대상	
공공 분야 인권교육	군 종사자	각 군 인권 교관 및 인권 교관 임명 예정자 군 인권업무 종사자
	입법관계자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인권 위원 지방공무원 6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기타	보건의로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교 분야 인권교육	교원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초·중등학교 노동 인권교육 교사
	고등교육 기관	대학인권센터 및 위원회 담당자
	기타	교육청 학생 인권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전문집단	언론인, 의료전문인, 변호사 등 법률인
	기업인	공공기관 임직원(처장급 이하)
	사회적 약자 집단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사회복지 인권 담당자 사회복지 등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인권활동가	인권단체·기구 상담가
	사회적 영향력 집단	사회단체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어 정신보건 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정신보건법」),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소속 아동,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아동복지법」),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의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청소년기본법」),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영유아보육법」), 장애인 관련 국가기관·지자체·어린이집·초중등학교·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특수법인 소속 직원 및 학생,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장애인복지법」), 군인 및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소집된 군 복무 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군무원(「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및 시설 이용 노인(「노인복지법」),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기 요양기관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다.

2 인권체험의 개념

사전적 의미의 체험(體驗)이란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을 말한다. 일상 생활에서 체험은 경험(經驗)과 큰 차이가 없으나 철학적 의미로 체험과 경험은 다소간 차이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체험(erlebnis)이란 원자화되고 불연속적인 일련의 순간을 말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겪어내는 수많은 순간적 자극들의 집합이라고 한다. 즉 일회적이며 개인적인 특성이 있으며 충격적인 정보를 접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잊히고 다시 새로운 정보로 채워지는 자극과 같다. 그는 반면 경험(erfahrung)이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하나로 합쳐지는 기억의 산물이며 각각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주관적으로 기억되는 내용이라고 한다. 경험은 이러한 특성으로 세대와 시간을 거쳐 축적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달 가능한 형태로 전수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체험과 경험의 의미론적 차이는 교육 및 학습의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체험교육이라는 용어는 체험학습, 경험학습,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등 다양한 용어와 얽혀있다. 일반적으로 체험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때, 현장 체험학습과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지지된 용어이다. 하지만 성인교육의 관점에서는 영어식 표현으로 experiential learning을

쓰지만, 체험교육이라는 용어 대신에 경험학습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체험교육의 일반적 정의는 ‘체험하면서 배운다’라는 뜻으로 “체험을 통한 학습 과정”, “경험의 변화를 통해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본다. 이처럼 체험교육은 경험을 통한 학습 과정으로 정의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의는 반추(reflection)와 실행(doing)을 통해 지식과 믿음, 가치와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체험교육은 체험자가 학습한 경험을 각각의 자기 자신에 적절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맥락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습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피드백과 반추(reflection)를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와 기술(skill)을 수정(debriefing)하거나 견고(consolidation)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체험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먼저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체험을 표현하고 표현을 이해한다. 즉 체험-표현-이해의 순환과정을 통해 체험의 의미에 접근하고 삶의 이해에 다가간다. 체험을 통해 고차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현된 체험을 서로 연결해서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체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지나간 자기의 체험 혹은 타인의 생소한 체험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체험하게 된다.

학교 교육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체험은 주로 학교 밖으로 나가는 현장 체험과 감각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행동하는 일로 간주하고 일회성의 산발적인 행사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이는 이미 사회, 과학 등의 교과나 창의 체험과 관련하여 체험학습의 의미를 고찰하고 활성화 조건을 탐색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체험 자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체험이 주로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체험 활동으로 다루어져 온 점이 비판의 대상이었다.

체험은 그것을 하는 것 못지않게 체험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체험 기회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체험의 의미를 자기 삶과 연관을 지어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험을

통한 삶의 이해를 추구하면서 그 방법으로 '추체험'의 개념이 교육 및 해석학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딜타이(W. Dilthey)에 의하면 추체험은 생소한 타인의 체험을 소급하여 재구성하고 그 안에 자기를 투입해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추체험은 표현을 매개로 과거의 체험을 다시 체험하며 이를 위해 상상과 현재화가 필요하다. 추체험을 통해 타인의 체험들로부터 의미, 가치, 목적 같은 삶의 범주들을 발견하고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서로 간에 공통성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인권영역에서의 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권적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 신체적 경험을 넘어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성찰하고 실행함으로써 인권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하도록 경험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체험은 체험자가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영역의 인권적 문제를 인권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험적 요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강사 중심의 주입식 인권 교육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체험에는 체험교육의 개념, 체험교육의 과정, 기존 지식이나 이론의 진단과 성찰을 포함하는 일련의 환류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인권체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개별적 체험을 통한 총체적 경험으로 귀결된다. 인권체험은 프로세스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며 공동체에 기반을 둔 성격을 포함하고 있을 때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므로 잠재적으로 더 강화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인권영역에서 추체험을 활용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적 체험을 표현하고 연결하게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흥미와 상상력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특히 추체험을 연습하고 익힐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추체험 과정을 인내하고 촉진할 체험 제공자(기관)의 안목과 모범이 필요하다. 참여자는 추체험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서 나아가 추체험 과정 자체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 참여자들 사이에 인권적 체험에 대한 소통과 교류가 늘어날수록 인권체험의 실질적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하자면 체험교육이자 추체험으로서 인권체험은 체험자에게 ▲ 인권적 상황과

문제에 개인적·연대적으로 대처하는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역사적·일상적 정보를 제공하고 ▲ 새로운 정보가 기존 인권적 지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지식을 진단하고 성찰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 인권적 체험을 다양한 방식과 매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돕거나 기회를 제공하고 ▲ 각자 삶의 영역에서의 인권적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 인권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높이고 응용 능력을 강화하는 체험자 중심의 학습 방법을 말한다.

3 인권체험의 대상과 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교육은 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학교·시민사회 분야에 걸쳐 교육과정으로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인권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공공·학교·시민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주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조직·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인권교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행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효율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리더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의 내용은 교육 대상의 실무와 대민활동에서 필요한 개념적·법적·절차적 지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2 공공영역 인권교육과정의 중점 교육내용

공공영역 인권교육과정	중점 교육내용
지방의회의원 인권리더십과정	인권의 이해 지자체 인권침해 차별사례 인권조례 재개정 사례공유 기후위기와 인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 인권리더십과정	
행정분야 국가공무원 인권리더십과정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 인권역량과정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인권역량과정	

공공영역 인권교육과정	중점 교육내용
사회서비스 정책관계자 인권리더십과정	돌봄 현장의 인권 이슈 지자체 돌봄 체계와 인권 정책 돌봄 노동자의 노동인권 돌봄 노동인권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 아동인권 인권리더십과정	아동 인권의 이해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아동 인권 보호의 원칙 아동 학대의 이해 아동보호 실천 사례
지방경찰 인권역량과정(지방경찰청 공동)	경찰 인권침해사례 인권친화 직무실천방안 연도별 인권이슈 등
군 인권교관 인권역량과정(국방부 공동)	인권의 개념 및 최근 인권 이슈에 대한 이해 인권과 지휘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장병에게 보장되는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침해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감수성과정	인권과 인권감수성의 이해 지자체 인권행정의 현황과 사례 소개 등
군 인권감수성과정(국방부 공동)	인권의 이해 차별금지와 혐오표현 군대내 인권침해사례

표 23 학교영역 인권교육과정의 중점 교육내용

학교영역 인권교육과정	중점 교육내용
리더십교육	인권의 이해 및 학생인권 침해 사례 다양성 존중 및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학생인권, 교권에 대한 이해 교육현장 인권이슈에 대한 인권적 관점을 적용한 실행계획 등

학교영역 인권교육과정	중점 교육내용
직무역량교육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사건 처리를 위한 법제도의 이해 인권사건의 상담 및 조사 기법 조사보고서 작성 실습
	교육과정 설계 시 필요한 관점 및 사례 학생인권의 이해 및 인권침해 사례 문화콘텐츠를 통한 인권의 이해
교육전문가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의 이해 및 인권침해 사례 인권, 노동인권 및 교육현장 인권침해 사례 대응방안 등
인권감수성 교육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권감수성과정, 스포츠분야(학교운동부) 인권감수성과정)	유치원교원 및 관리자 인권감수성 향상 유아성인지 감수성 등 유아인권 존중되는 교육환경 조성
	인권의 이해 차별금지과 혐오표현 스포츠 인권의 이해 스포츠 인권 관련 인권위 결정례

표 24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과정의 중점 교육내용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과정	중점 교육내용
리더십교육 사회복지 인권리더십과정 인권상담가 인권리더십과정	인권의 기본개념 이해 참여를 통한 인권친화 모범사례 및 실천방안 사회복지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리더십의 이해
직무교육 사회복지 인권역량과정 기업과 인권 인권역량과정 인권활동가 인권역량과정 인권상담가 인권역량과정	분야별 인권친화적 실천사례 인권위 권고 사례 분야별 인권 등 실무에 적용가능한 인권학습 인권실사 실습 및 영향평가 혐오차별 한국사회 인권이슈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과정	중점 교육내용
이주민 인권상담가 인권역량과정	인권위 결정례 해설 지역 인권현안 상담실무의 이해·실습
교육전문가교육 사회복지 인권교육가과정 정신건강 인권교육가과정 노인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교육단체 인권교육가과정	인권의 기본개념 이해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인권 강사로서의 인권전문성 강화 분야별 인권 지식 및 결정례 등 사례 인권교육 기획·운영에 필요한 기술·태도
인권감수성교육 보건의료분야 노인인권 인권감수성과정 노숙인분야 인권감수성과정 기업과 인권 직무기초 인권감수성과정 스포츠분야(스포츠지도사) 인권감수성과정 언론 인권감수성과정 (의무) 노숙인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인권 및 건강권의 이해 한국 사회 의료 구조와 인권 보장 노인 환자의 돌봄 및 인권 이슈 인권침해 사례별 대응방안 등 실무교육 기업 내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사례별 대응방안 결정례 및 구제방안 분야별 인권친화적 언론보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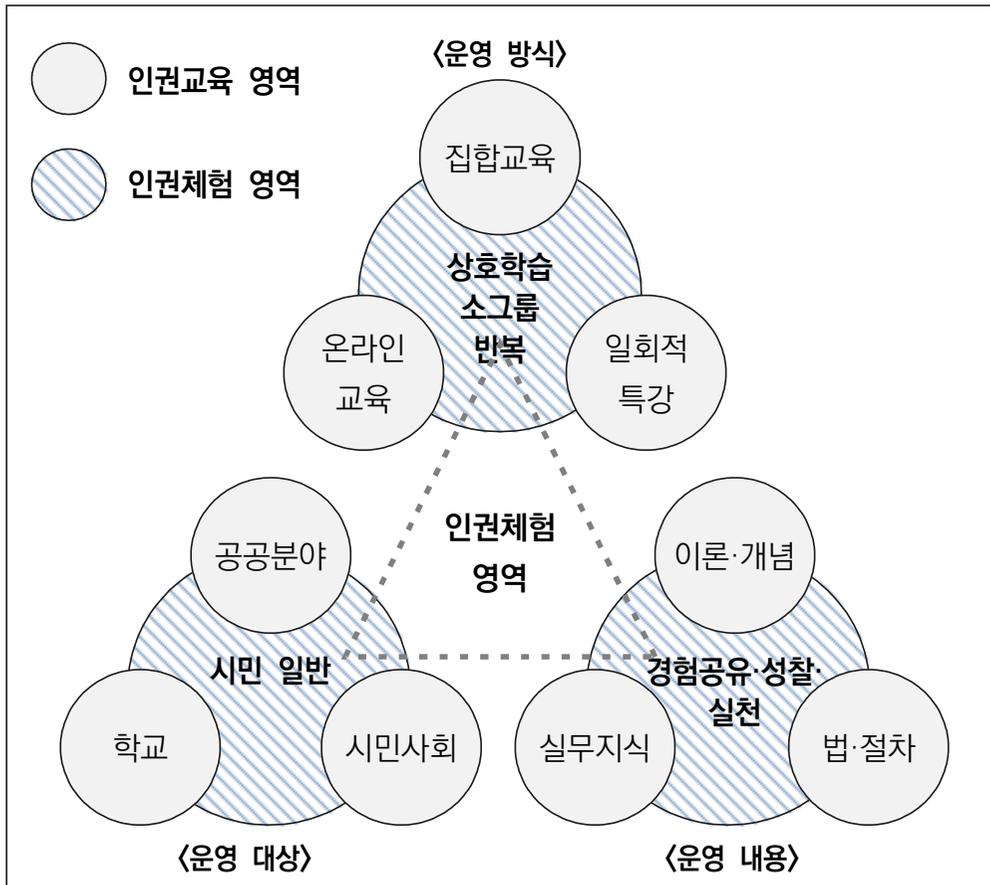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인권교육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 이상의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필연적으로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7년 이후 사이버 인권교육을 통해 진행되는 인권교육의 횟수와 인원이 대폭 증가했으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는바, 집합교육이라는 큰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권뿐만 아니라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위주 교육과 주지주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체험을 강조해왔다. 체험이 참여자들의 교육내용을 내면화하고 실천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2013년 개관한 대구 별별인권체험관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인권체험 기회는 꾸준히 확대되고 그 내용도 다양해졌다.

기존 인권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체험은 인권교육과 대상·내용·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상적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공공·학교·시민사회 영역에서 리더 혹은 중간관리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반면, 인권체험은 개인 체험자가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영역의 인권적 문제가 주제로 다루어지므로 개개 대상으로 상정된다. 내용적 측면에서 이론과 개념·실무적 사항을 다루는 인권교육과 달리 인권 체험 영역에서는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성찰하고 실행함으로써 인권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반성과 성찰·실천 위주의 내용이 다루어진다. 또한 방법적 측면에서 온라인·특강을 통한 집합교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과는 달리 인권 체험은 소수 그룹·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고, 피교육자(그룹) 내·교육자-피교육자 사이의 상호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권체험이 인권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하도록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인권체험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아 1998년 채택된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 이른바 ‘인권옹호자 선언’에서 분류하고 제시한 인권옹호자와 뜻이 맞닿아 있다. 인권옹호자는 인권단체 등에 소속된 소위 인권활동가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며 직업 및 기타 경력과는 상관이 없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권옹호자이며, 인권옹호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 역시 ‘행동’이다.

〈그림 2-1〉 인권체험 영역



일회적 체험으로 인권옹호자나 인권적 시민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나 인권체험의 대상이 인권교육의 대상과 달리 인권과 관련된 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시민이라고 상정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법제화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학교·직장·가정·보육·요양시설 등 생애주기에 걸쳐 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비록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보완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의 인권교육 발전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인권체험은 인권교육의 보완으로서의 습득된 지식을 성찰하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험적 요소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인권교육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II. 관련 법률 검토

1 인권체험관 운영 근거

인권체험관의 운영 근거는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되어 2001년 11월 25일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과 홍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 사업이며 UN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인권교육이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 인권교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의 의무가 있다. 인권교육과 상호보완의 개념으로 설정된 인권체험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볼 수 있다. 비교할 만한 다른 국내 시설 현황의 경우 각 시설의 설치와 건립·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긴 관계법이 있으나 인권체험 및 인권체험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33068 호)’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용 규정(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361 호)’ [별표] 팀 설치 현황 및 소관 업무에서 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 소관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비교할 만한 다른 국내 시설과 관계법·시행령·시행규칙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 국내 주요 인권관련 기념관·역사관 등 시설과 관계법 및 조항

시설	시설 설립·운영 관련 관계법 및 조항
4·3평화공원 (제주4·3 평화재단)	<p>「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평화공원 설립 당시 근거한 2014. 1. 7, 일부개정 내용)</p> <p>제8조(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慰靈祭禮)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제주4·3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
국립일제강제 동원역사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p>「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p> <p>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시설	시설 설립·운영 관련 관계법 및 조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p>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p>	<p>「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2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립 5·18민주묘지 경내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p>
<p>민주인권기념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23년 개관예정)</p>	<p>「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표 26 국내 주요 체험시설과 관계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항

시설(소관부처)	관계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항
법체험시설 (법무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전체험관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안전체험관)
안전체험시설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소방체험관 (소방청)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안전체험교육시설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교통안전체험시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② 체험관 건축에 관계되는 법

인권체험을 위한 시설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12.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기타 법제도 상 체험관에 적용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표 27 국내 주요 체험시설과 관계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항

대상	법제도 및 조항	기준 내용
공개공지 또는 공간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 시설은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유효 너비 3m 이상)를 설치해야 함

대상	법제도 및 조항	기준 내용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바닥 면적 1,000㎡마다 방화구획(스프링클러 설치시는 3,000㎡ 이내), 또한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층간 방화구획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함
마감 재료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함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 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야 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2023년까지는 32%, 2025년까지는 34%, 2027년까지는 36%

③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권체험관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정의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매뉴얼 연구」(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2013. 12.)에 따르면 바닥 면적 50㎡ 이상인 박물관·미술관(체험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비지침은 다음과 같다.

표 28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과 비치 용품

구분	대상 시설	바닥 면적	비치 용품	
			의무 용품	권장 용품
문화 및 집회 시설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00㎡ 이상	보청기기	점자 공연 안내 책자

표 29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이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편의시설		대상 시설	전시장 (체험관)
매개 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의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의무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의무
내부시설	출입문		의무
	복도		의무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의무
		소변기	권장
		세면대	권장
안내시설	점자블록		의무
	유도 및 안내 설비		권장
	경보 및 피난설비		권장
기타시설	매표소·판매기·음료대		권장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권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한국장애인개발원, 2019.12)에 따르면, 전시관에 설치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은 다음과 같음

표 30 전시관(체험관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구분	기본 지침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도로나 보도에 연결 • 회전문을 제외한 형식의 문 설치 • 출입구 전면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형 유도 블록 설치
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하며 건물의 주요 복도의 유효 폭은 1.8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도의 바닥 면은 단차가 없는 경사로로 계획 • 승강기 앞, 화장실 입구 등 시각 장애인 유도용 바닥재 부설 • 복도의 손잡이는 양쪽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높이는 80cm에서 85cm 이내로 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가장 유효한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 내부에서 조작판, 호출 버튼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도록 설치 •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을 0.8m 이상 확보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막이 규격은 휠체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0×1.8m 이상 • 대변기 및 소변기 양 옆에는 장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수직 및 수평 손잡이 설치 • 세정장치, 휴지 걸이 및 비상 호출 버튼 등 휠체어에서 한 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세면기 하부에 무릎이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 세면기 급수전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광감지식이 바람직함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가 자동차에 옮겨 타기에 충분하도록 3.3×5.0m 이상 • 단차가 없어야 하며 바닥 변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또는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 시각 장애인용 유도장치 및 표시하여야 함

구분	기본 지침
매표소 및 판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표소 및 접수대의 높이는 1.1m 이하로 계획 •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1.5m 이상의 바닥 유효면적 확보 • 조작 버튼에는 품목 및 금액을 점자로 표시
안내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안내 표지 부착 또는 설치

Ⅲ. 국내외 유사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① 국내 유사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사 시설의 종류, 규모 등을 검토해본다.

● 국내 유사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 국내에는 각 인권사무소에 설치된 인권체험관 외에 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일 체험관은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국내의 주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거나 진상규명·희생자 명예 회복,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에서 사건과 관련한 인권, 특히 평등권, 사회권, 생명권을 주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을 주제로 한 박물관, 역사관, 기념관, 기록관 등에서 각 시설 일부를 할애하여 전시, 체험교육, 어린이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 인권을 주제로 공간을 운영하는 **4·3평화기념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2023년 12월 개관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을 검토한다. 시설을 설립한 모(母) 조직과 시설의 관계, 운영 주체 및 체계, 시설 및 공간 현황, 인력 현황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했다. 단, 민주인권기념관은 2022년 12월 현재 설립 중인 바,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운영계획·전시 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분석했다.

표 31 국내 인권 주제 유사 시설 분석 요약

시설 명칭	4·3평화기념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민주인권기념관
모 조직	제주4·3평화재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5·18기념재단	민주인권 기념사업회
시설 종류	공원과 기념관	역사관	기록관	공원과 기념관

시설 명칭	4·3평화기념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민주인권기념관
설립 시기	2001~2015	2007~2015	2012~2015	2019~2024(예정)
위치	제주 제주시 봉개동	부산 남구 대연동	광주 동구 금남로	서울 용산구 갈월동
건축물 구조	지하1층, 지상 4층	지상 3층, 지하 4층	지상 7층, 지하 1층	지상 7층, 지하 3층(2동)
대지면적	219,031㎡	75,465㎡	1,500㎡	6,391㎡
건축연면적	11,455㎡ /100.0%	12,062㎡ /100.0%	5,450㎡ /100.0%	9,697㎡ /100.0%
전시실	3,082㎡ /26.9%	3,671㎡ /30.4%	1,616㎡ /29.7%	3,276㎡ /33.8%
수장고	507㎡ /4.4%	153㎡ /1.3%	582㎡ /10.7%	-
기록관리	528㎡ /4.6%	1,630㎡ /13.5%	527㎡ /9.7%	-
연구 및 교육·관리	593㎡ /5.2%	2,838㎡ /23.5%	100㎡ /1.8%	-
공용시설	6,745㎡ /58.9%	3,770㎡ /31.3%	2,625㎡ /48.2%	729㎡ /7.5%
관계 법령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제주도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운영비	2021년 11.1억 원	2021년 23.2억 원	2021년 56.7억	-
인력	재단 사무처 41명	재단 사무처 52명 역사관 29명	기록관 28명	-
홈페이지	jeju43peace.or.kr	fomo.or.kr	518archives.go.kr	dhrm.or.kr

1. 4·3평화기념관

〈그림 2-2〉 4·3평화기념관 전경



- 4·3평화기념관은 해방공간의 제주도에서 자존을 위해 불의에 맞섰던 제주도민의 저항과 그에 뒤이은 민간인 학살과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을 기념·추념하는 공간이다. 제주도민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으로서, 국가권력의 시각에서 일반 주민의 시각으로, 중앙사의 시점에서 지방사의 시점으로,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제주도민의 역사를 기념·추모하는 기념관이다. 또한 4·3사건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생존자의 기억과 증언, 유가족들의 기록, 역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시·발굴·수집·연구·평가하는 아카이브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역사교육의 공간이다.³⁾
- 2000년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4·3사건법) 제8조(위령사업)에 근거하여 2001년 제주 제주시 봉개동 237-2에 제주4·3평화공원을 기공하여 2003년 1단계 개원했다. 이후 2004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2단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08년 3월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현재 4·3평화기념관이 신축되었고 전시시설 및 조경시설,

3) 4·3평화기념관 홈페이지

위패봉안실이 설립되었다. 국비 확보 등 과정을 거쳐 2011년 1월 3단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4·3평화교육센터, 4·3고난극복전시관 등의 시설이 2015년 설립되었다. 4·3평화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4·3사건의 역사를 담은 그릇의 형태를 빌려 설립되었다.

표 32 제주4·3평화기념관 단계별 시설 설립 현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2001~2003	2004~2008	2011~2025
사업비	112억 원	480억 원	378억 원
주요 시설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4·3평화기념관 전시시설 조경시설 기반 시설	4·3평화교육센터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 제주4·3평화공원이 개관한 2008년 11월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하여 4·3 평화기념관을 비롯한 제주4·3평화공원을 수탁 운영 중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2022년 현재 사무처 41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기념사업팀(9명)과 공원관리팀(10명)에서 4·3평화기념관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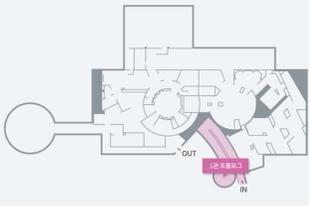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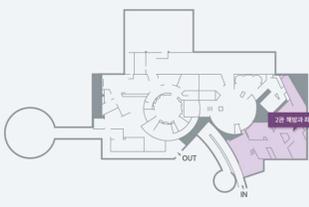
표 33 4·3기념관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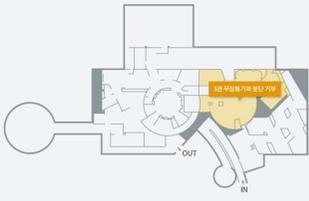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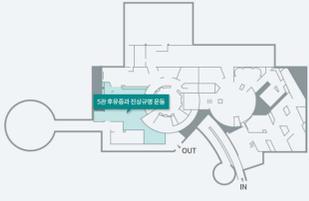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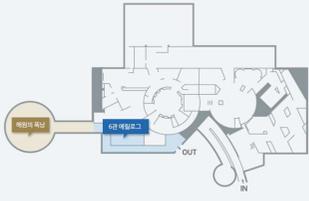
공간	시설 수	총면적
4·3기념관 (건축면적)		6,206.00㎡
상설전시실	3실	2,392.00㎡
기획전시실	2실	689.69㎡
수장고	2실	506.74㎡
교육실	5실	942.53㎡

공간	시설 수	총면적
도서 자료실	3실	527.57㎡
사무실	2실	641.77㎡
문화상품점	1실	69.39㎡
매점	1실	69.00㎡
식당	1실	107.00㎡
주차장	310대/버스 12대	-

- 4·3평화기념관은 역사적 진실을 기록한 상설전시실과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 개가 자료실, 영상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 보고서를 토대로 전시가 연출되어 있으며 상설전시실은 총 6개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4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배치도 및 전시 내용

구분	배치도	전시 내용
제1관		<p>[프롤로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굴을 모티브로 전시관으로 통하는 긴 터널을 통해 4·3의 역사를 찾아가는 관문을 표현함 - 원형의 천장 아래 놓인 백비(비문 없는 비석)를 통해 아직도 정명 되지 못한 역사를 상기함
제2관		<p>[흔들리는 섬 (해방과 좌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해방-자치-미군정-3·1 발포 사건-탄압’ 순서로 전개됨 - 제주도민과 미군정의 갈등과 대립이 본격화된 계기를 보여주며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상황까지의 전개를 보여줌

구분	배치도	전시 내용
제3관		<p>[바람타는 섬 (무장봉기와 분단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4월 3일 새벽에 일어난 무장봉기의 발생 과정과 배경을 보여줌 - 오름을 상징하는 중앙부와 오름 위의 상황을 묘사한 강요배 화백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음
제4관		<p>[불타는 섬 (초토화와 학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토화 작전과 민간인 대량 학살, 그 이후 한국전쟁 기간 교도소 재소자 학살까지의 내용을 다룸 - 원통형의 하얀 방과 벽에는 죽음의 다양한 형상들을 표현한 부조물이 전시되어 있음
제5관		<p>[평화의 섬 (후유증과 진상규명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와 정착 그리고 후유증, 진상규명 운동으로 나누어 4·3의 상처와 아픔, 그 회복 과정을 다룸 - 4·3진상규명을 위한 역사적 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제6관		<p>[에필로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 끝의 출구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을 전시하여 희생자를 기리는 한편, 다시 재생으로 나오는 공간이 연출됨
특별관		<p>[다량수 특별전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명의 민간인이 토벌대에 의해 질식사한 동굴 현장을 발굴 당시 그대로 재현함

〈그림 2-3〉 제주4·3평화기념관이 위치한 4·3평화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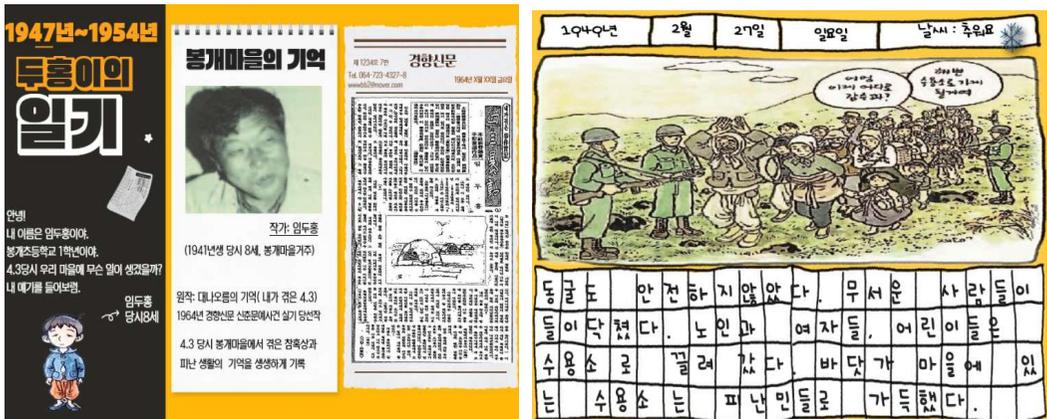
-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는 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평화교육센터 공간(어린이 체험관과 평화의 숲 포함, 전체 면적 2,737㎡)을 활용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도 쉽게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영상과 그림일기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총 5개의 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5 4·3평화기념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명	내용
1	4·3으로의 초대	-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주 4·3을 표현한 모래 애니메이션이 상영됨
2	꼭 알아야 해 4·3	- 당시 8살 소년 임두홍 어린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대나오름으로 피난 갔던 기억과 4·3의 참혹상을 '12장면'의 그림일기로 소개함
3	평화의 의미	- 평화란 무엇일까? 알 모양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안에서 영상물을 보며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열어보기 패널과 벽면에 설치된 불을 돌려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함
4	화해와 상생	- 4·3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4·3 당시 어린이들에게 추모 편지를 쓰며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함
5	친구들을 기억해요	- 친구에게 쓴 손 편지를 스크린을 통해 풍등을 날려 추모함

〈그림 2-4〉 제주4·3평화기념관 운영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꼭알아야해 4·3’ 자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4·3평화기념관은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건립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비록 국비 확보 및 기념공원 설립을 둘러싼 국내 갈등 등으로 인해 계획이 일부 지연된 바 있었으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4·3평화기념관의 근간이 된 제주4·3평화공원의 조성을 명시한 바 있고, 2002년 기본계획을 통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조성 방식을 확정한 바 있다. 조성 과정에서 많은 부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던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민간인에 대한 국가적 폭력을 성찰하고 추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방식의 기념시설을 조성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4·3평화기념관이 위치한 제주4·3평화공원은 대지면적 395,380㎡(약 12만 평)에 이르며 조성

면적은 219,031㎡이다. 여유로운 공간적 활용을 활용한 위령제단, 위패봉안실, 봉안관, 각명비원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지식 학습과 더불어 사색과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연출을 이루었다.

2.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그림 2-5〉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경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성숙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국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부산항이 대부분의 강제동원 출발지였고, 강제동원자의 22%가량이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역사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2008년 9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56-18에 건립했다.⁴⁾
- 2010년 3월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강제동원조사법)이 제정되기 이전, 2007년에

4)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페이지

추도공간 기념 및 기념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08년 현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을 거쳤다. 2010년 착공하여 2014년 5월 준공까지 522억 원(시비 91억 원, 국비 4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5년 12월 개관했다. 강제동원조사법이 제정되고, 2014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을 위탁했다. 2016년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 국립박물관으로 운영 중이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건립 부지 75,465㎡, 건축연면적 12,062㎡의 규모로 부산광역시 남구 당곡공원 부지 내에 조성되어 있다. 총 7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실 3개소 3,671.12㎡, 수장고 152.76㎡, 연구·교육시설 2,838㎡, 공공편의시설 3,770㎡로 구성되어 있다.

표 36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시설 주요 현황

구분	실명	층별	면적	용도
전시 및 기록 관리	전시실	B1~지상 2층	3,670.12㎡	체험전시 등 유물 사료 전시
	수장고	B3층	152.76㎡	각종 유물 보관
	인수실·창고·정리실	2층	100.77㎡	
	울림의 방	B4층	184.83㎡	대기 공간
연구 및 교육	어린이체험관·도서관	3층	331.38㎡	
	서고	지상 1~2층	2,174.82㎡	
	연구실·기록관리실	3층	154.99㎡	
	회의실	1층, 3층	54.43㎡	
	세미나실	3층	16.91㎡	
	강의실	3층	22.55㎡	

구분	실명	층별	면적	용도
공공 편의	도슨트실·유아실	B1층	68.61㎡	
	카페테리아	지상 3층	366.97㎡	
	로비	B4층	292.68㎡	
	옥내주차장	B3층	293.15㎡	4대
	외부주차장	-	-	146대
유지 관리	행정실	1층	16.68㎡	
	관장실	1층	101.53㎡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7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조직 및 인력 현황

구분	인원	담당업무
역사관장	1명	역사관 운영 총괄
1팀	8명	<전시·역사관 소식지 기획 및 운영> -시민강좌, 비대면 교육 운영 -회계·예산·지출·사업계획 -전산·영상 장비 관리·안전·보안 관리 -스마트박물관 조성사업 -어린이·청소년 교육 운영 -어린이체험관 운영 -전시기획·운영지원
2팀	3명	<유물·자료·도서 수집 관리> -역사관 홍보 -수장고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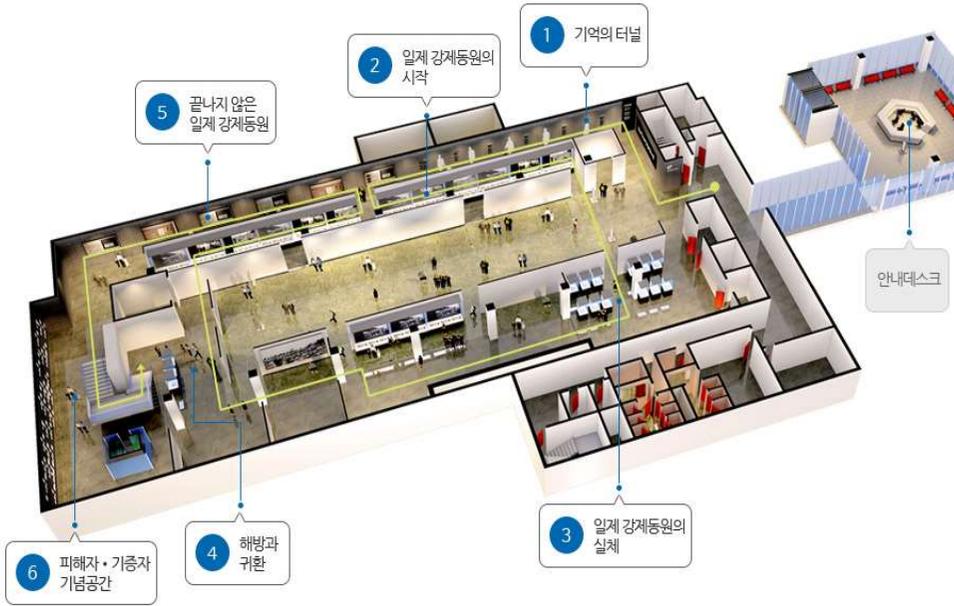
구분	인원	담당업무
3팀	17명	<시설사업 관리> -대관 업무 -접수대 운영 -도슨트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경비·미화 -기계·전기·소방설비 및 시설물 보수·점검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시실은 유물이나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일제강제동원의 기록과 사실을 전달하는 상설전시실 I 과 공간재현 및 모형 등 현장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체험형 연출기법을 활용하여 복합전시를 구성한 상설전시실 II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6>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부



표 38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상설전시실 | 배치도·동선 및 구성



순서	구분	구성
1	기억의 터널	- 어디론가 끝없이 걸어가는 실루엣 그림과 함께 <남양군도 아리랑>의 가사가 전시됨
2	일제 강제동원의 시작	[강제동원의 배경, 피해 상황 증언] - 일본이 정리한 통계자료, 연합군이 작성한 명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신고받거나 조사한 통계자료 등 일제 강제동원의 규모로 본 피해 현황을 제시함
3	일제 강제동원의 실체	[강제동원 유형·지역별 현황, 강제동원 과정과 저항] - 국가총동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범위로 발생한 인력과 물자의 징발 현황을 제시함 - 노무 동원, 군인·군무원, 포로 감시원 등으로 배치한 현황자료와 사료를 제시함
4	해방과 귀환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과정] - 해방 직후 무정부 상태의 조국으로 아무런 지원

		없이 스스로 귀환 길에 오른 강제동원자의 기록과 증언을 제시함
5	끝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 한일회담과 청구권 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양국의 논의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제시함
6	피해자·기증자 기념 공간	- 피해자·기증자가 기증한 일제 강제동원 당대의 기록을 담은 사진이 전시됨

표 39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상설전시실 II 배치도·동선 및 구성



순서	구분	구성
1	강제동원 과정	- 감금시설에 갇혀 문어처럼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구타당했다는 일명 타코베야(문어방)라고 불린 노무자 숙소를 비롯해, 탄광 사고를 재현한 모형 전시품,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장소인
2	조선인 노무자 숙소	
3	탄광	

4	중·서부 태평양 전선	위안소를 재현한 모형 등을 전시하여 당대의 비참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함
5	일본군 위안소	
6	귀환	- 해방 후 반겨주고 챙겨주는 이 없이 귀환 길을 찾아 나선 강제동원자의 모습을 배 모형과 등신 패널 모형으로 제시함
7	시대의 거울	- 거울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를 산다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을 제시함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는 시민강좌와 인문학 강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자유학기(년)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일반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일반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전시 내용을 바탕으로 작문, 만들기, 그룹 활동을 진행하며 모두 교과 과정과 연계해 구성돼 있다.

표 4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교육(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일반 체험) 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명	내용	구분(연관교과)
1	우리는 결의형제! [자유학기(년)제]	- 역사관 1호 기증유물인 『결의 형제서약서』의 기증과정을 확인하며 박물관 업계 종사자의 직업에 대해 알아봄	자유학기(년)제 진로 체험
2	출발! 역사관 탐험대 [자유학기(년)제]	- 일제강제동원에 대해 알아보고, 박물관 직업군의 특성을 이해하여 직업 가치관을 형성함	자유학기(년)제 진로 체험
3	다시 쓰는 방구 아저씨	- ‘방구 아저씨’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 사건 등을 재창작해보며 나만의 팝업북을 만들	초등 사회 6-1, 초등 국어 6-2
4	내 책상 위의 소녀상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바로 알고 소녀상 종이 인형을	초등 사회 6-1, 중등 역사 2

순서	프로그램명	내용	구분(연관교과)
		만들어봄	
5	FoMo Break	- 역사관 전시실에서 여러 미션들을 수행하며 일제강제동원역사에 대해 이해함	초등 사회 6-1, 중등 역사 2, 중등 사회 2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별법이 제정됨(2010년)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설립(2014년)되고 이후 건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과 공간을 갖춘 역사관이 건립(2015년)되었던 점에서 ‘근거 법 마련-운영기관 설립-공간 조성-위탁 운영’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단계를 통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운영되고 있다. 역사관에 전시할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었고 지역 내의 자원 투자 등을 끌어낼 수 있었던 점은 시민사회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그림 2-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경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옛 광주가톨릭센터 자리인 금남로3가 3-5에 위치한다. 광주가 겪은 이야기를 수집·연구·전시하는 시설을 표방하여 2015년 설립되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보존하며 방문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그동안 수집한 기록물을 DB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위해 유관기관과 교류·협력하여 지속적인 수집과 조사·연구 활동을 벌이고 왜곡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⁵⁾
- 1994년 설립인가를 받은 5·18기념재단의 활동을 통해 1995년 12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5·18민주화운동법) 및 2002년 1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5·18유공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2011년 5월 유네스코에 의해 5·18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기록관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12년 5·18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국내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한 조례가 2013년 만들어지게 되었다.

표 41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설립 과정

일시	내용
2011년 5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2011년 6월	- '아카이브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내 '5·18기록물DB화 실무분과위원회'와 '5·18아카이브 설치 공간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 첫 이사회에서 명칭을 '유네스코 5·18평화센터'로 지정 - 장소를 광주가톨릭센터로 정하고 리모델링 추진

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일시	내용
2012년 5월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12년 9월	- '5·18아카이브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3년 7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조례 제정
2013년 10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추진기획단 구성
2014년 5월	- 기공식
2014년 9월	- 건축공사 준공
2014년 12월	- 전시 분야 준공
2015년 5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개관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조직과 인력은 다음과 같다

표 42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조직 및 인력 현황

구분	인원	담당업무
관장	1명	5·18기록관 업무 총괄
관리과	12명	-주요 업무계획, 성과관리 -건축시설물 보수, 기계시설 유지관리 및 보안 -미화 및 청사 방호 -기록관 및 전시실 안내
5·18 연구실	15명	-전시실 운영, 학술 연구, 콘텐츠 제작 -기록물 보존 및 관리, 보존서고 관리 -기록물 조사·연구, 학술조사

- 1980년대 전남대 정문을 시작으로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광주 가톨릭 센터를 리모델링해 대지 1,500.5㎡, 연면적 5,450.19㎡(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운영 중이다. 세부 층별 활용은 다음과 같다.

표 4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층별 공간 배치 및 활용 내용

구분	배치	활용 내용
1층	로비, 애도·추모 공간, 상설전시실 1	-희생자 추모 야외공간 마련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위주의 전시실 운영
2층	상설전시실 2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과 미등재 기록물, 유품 등을 활용한 전시 운영
3층	상설전시실 3, 기획전시실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 등에 대한 전시실 운영 -영상, 동화책 등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 운영
4층	안내데스크, 열람실, 서가, 수유실	-도서 대출 및 반납, 자료검색, 도서열람 등 도서관 서비스 운영
5층	보존처리실, 1~3수장고, 영점수장고	-기록물 분류·정리, 보존을 위한 공간 운영
6층	윤공희 대주교실, 기록물 전시실	-1980년 당시 윤공희 대주교 집무실 복원 공간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 전시 및 상영
7층	다목적 강당 및 세미나실	-5·18 관련 세미나, 학술행사 등 진행

- 전시는 상설전시실의 운영과 기획전시, 순회전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관 교류 및 자료 수집 활동을 통해 기획전시 및 교류·순회 전시를 추진 중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3개의 상설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을 운영 중이며 각각의 전시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4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시실 운영현황 및 전시 주제

구분	위치	전시 주제 및 내용
상설 전시실 1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1층	- 5·18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5·18을 세 시기로 구분함 - 주요 사건을 관련 이미지·사진·실물을 배치함
상설 전시실 2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2층	- 5·18 전후와 5·18 기간에 생성된 자료를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과 비등재기록물로 분류하여 전시함 - 공문서·연구자료·보도자료·증언·문학·예술 등 주제별로 기록물을 배치함
상설 전시실 3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3층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개요와 각 기록 유산의 간단한 내용을 소개함
기획 전시실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3층	- 지역 내 문화예술행사(광주비엔날레 등) 및 타 민주 항쟁 기념조직 등과 연계를 통한 특별전시 개최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인권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인권을 주제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세미나실을 활용하여 운영한 바 있다. 2018년 8월 여름방학 특강을 시작으로 2019년 8월까지 정기적으로 약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인권토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나의 생각 정립 ▲사소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보고 스스로 반성을 통해 개선점 모색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을 통해 나의 가치관 정립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인권의 소중함 인식 등을 기대효과로 설정했다. 초등학생의 흥미와 이해 수준에 맞춘 4컷 만화 그리기 / 인권 카드 만들기 / 1분 스피치 / 놀이를 통한 인권 지킴이 등 프로그램이 계획 및 실행되었다.

표 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어린이 인권체험 프로그램(2018~2019년)

제목	주제	프로그램 내용
2018년 8월 1일 여름방학 특강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인권	-UN 아동 권리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권리별 권리 카드 만들기 -학생들이 만드는 동영상 노래 -5·18민주화 오르골 만들기
2018년 8월 25일 여름방학 특강	엄마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인권 선언	-우리 가족 인권 선언 만들기 -캘리그래피로 우리 가족 인권선언문 액자 만들기
2018년 8월 여름 독서 교실	마음의 소리 시로 도란도란	-내 마음의 시 써보기 -압화로 아크릴 자 만들기 -동시 따라 쓰고 꾸며보기 -퀴즈대결, 보물찾기
2018년 10월 인권 가족 수업	부모와 함께 똑딱똑딱 행복한 인권 세상 만들기	-아동 인권과 부모의 권리 수업 -인권 독서대 만들기
2018년 11월 인권 어린이 교실	나의 인권, 너의 인권, 우리의 인권	-단군·손오공·홍길동 관련 인권 이야기 -가위바위보·풍선·김밥 놀이 -지구촌 마을과 함께 시계 만들기
2018년 11월 학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인권 교실	소중한 우리 인권 지키기	-인권 풍선 지키기 -희망 동전 탑 쌓기 -공기정화식물 천연 이끼 액자 만들기
2018년 12월	인권은 하늘에서	-평등·노예제도·인권의 역사 강의

제목	주제	프로그램 내용
초등학생 인권강의	뚝 떨어졌을까?	-가위바위보·비빔밥 놀이 -크리스마스 리스, 카드 만들기
2019년 3월 어린이 인권 교실	고문과 인권	-유관순·김대중 등 고문 관련 인물 조명 -독립선언서 낭독 -독방 만들어서 체험하기 -유관순 열사에게 보내는 손 편지
2019년 4월 인권 어린이 교실	여성과 인권	-(시집·장가 등) 언어 속 차별 인지하기 -허난설헌·신사임당의 시와 그림으로 나만의 인권 캘리그래피 액자 만들기 -신나는 몸놀이
2019년 5월 어린이 인권 교실	교육과 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방정환 · 식민지 아동 · 전쟁과 아동· 아동 노동 · 아동교육 강의 -어린이 목소리를 담은 바람개비
2019년 6월 인권 어린이 교실	난민과 인권	-시리아 난민·일제강점기 난민 강의 -난민을 위한 기부 저금통 만들기 -비빔밥 만들기
2019년 7월 인권 어린이 교실	생활 속의 인권	-생활 속의 인권 : 4컷 만화 그리기 -인권 피자·인권 카드 만들기 -인권토론 및 1분 스피치
2019년 8월 인권 어린이 교실		-생활 속의 인권 : 모둠 토론 -부모와 놀이를 통한 인권개념 이해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역과 시민사회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5·18민주화운동법, 5·18유공자법 등 법적 근거가 만들어짐과는 별개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신

속하게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기념관을 기대하고 그에 따른 움직임에 호응하는 지역사회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히 기록관이 조성되고 운영될 수 있었다. 둘째,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설립 입지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위치에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위치인 금남로 221 부지는 과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전남대 정문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던 광주가톨릭센터가 위치하던 장소이다. 광주가톨릭대학교 유공희 대주교는 인권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교계 내외에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더 큰 호응을 끌어낼 수 있었고 입지 선정에 있어 반대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셋째는 광주의 지역 현안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기록물의 보관·전시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인권이라고 하는 보다 큰 범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다른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운영에 있어서 지역 내 어린이 및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

4. 민주인권기념관

〈그림 2-8〉 민주인권기념관 조감도



〈그림 2-9〉 민주인권기념관 우측 단면계획



- 민주인권기념관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소재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을 부지로 활용하여 2018년부터 임시로 개관, 2024년 정식 개관 예정인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1976년 10월 당시 치안본부 산하 대간첩 수사 업무를 위해 건립되었던 건물이나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던 많은 인사들을 취조, 고문 하던 곳으로 특히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⁶⁾ 2005년 경찰청 인권센터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 박종철실을 개관하여 일반인 관람을 허용하였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변경한다는 공약을 발표, 경찰청 관리에서 행정안전부로 관리 권한이 이양되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2019년 1월부터 민주인권기념관 운영을 시작했으며 민주인권기념관 해설사 양성과정을 거쳤다.
- 2019년 기념관 건립을 위한 건립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시설물 기초조사를 지나며 기념관 부지 활용방안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100명이 참여하는 숙의형 집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9년 9월

6) 경찰청 인권센터 홈페이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12월 설계 공모를 통해 현재 설계가 당선되었고, 2020년 4월 전시 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시행한 바 있다. 2021년 6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현재 공간 조성 중이며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총사업비 약 420억 원(전액 국비, 행정안전부 직접 수행)을 투입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 내에 약 6,391㎡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과거의 유물을 잘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감성적·체험적 접근으로서 관객과의 다양한 소통 방식(큐레이터의 전시 연계 토크 프로그램, 관객과 일대일 퍼포먼스 등)을 활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했다.

표 46 민주인권기념관 전시조성안

위치	공간 활용	전시 주제	전시키워드
대공분실			
1층	상설전시	민주주의자들(victims) -시작과 끝	민주화운동의 상징성
2층	상설전시	민주주의 정신(Spirits) 현대의 기억, 자라나는 힘 (Blooming Memories)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견된 시민의 힘과 공동체의 기반들, 민주인권에 대한 현재적 함의
3층	보존 및 다용공간	소통의 공간	특수조사실 보존 및 소통의 공간
4층	상설전시	관계자 (Relations and Relatives)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및 가족, 유족의 기록
5층	보존 공간	저항의 당사자(Resistants, Victims and Others)	15개의 조사실 보존
6층	상설전시	국가폭력의 수행자들 (Agents)	독재정권의 국가폭력 체계

위치	공간 활용	전시 주제	전시키워드
7층	다용공간	사색의 공간	사색의 공간 및 외부 전시 대여 공간
신관			
지상 1층	상설전시	기념관 정보 및 역사	민주인권기념관 추진의 과정과 노력
지하 1층	상설전시	한국 민주화 운동사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
지하 2층	참여 및 교육 공간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 확장, 발견되지 않은 혹은 잊혀진 의미 발굴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청소년 학습프로그램,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연계되는 민주주의 이슈 (여성운동, 계급운동, 노동운동, 도시빈민운동 등)
야외			
자유 광장	프로젝트 공간	공공예술 (상설 및 프로젝트)	공공예술 프로젝트

- 민주인권기념관에서는 전시 프로그램과 더불어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안)을 수립했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지향 중 ‘아카이브 기반 아날로그 체험학습 기념관’에 따라 민주화운동의 역사·토론·체험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현장 관람객, 학생단체 관람객, 온라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와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이다. 또한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로 하여금 민주인권 가치실현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전시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안)은 다음과 같다.

표 47 민주인권기념관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구분	형식	대상	내용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 그램 방안	전시연계 프로그램	현장 관람객	-관람객이 사진을 찍어 현장에서 출력하거나 관람객의 의견과 생각을 작성·수집하여 전시관을 시민들의 콘텐츠로 채워가는 방식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 추모가 아니라,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로 기억하는 프로그램 으로, 관람객이 그들 중 한 명이 되어 같이 촬영, 사진을 개인이 소장하는 방식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학생 단체 관람객	-전시해설사를 통해 전시관람 후, 라키비움에서 사료와 도서들을 통해 심화된 자료 열람 -별도 학습공간에서 생각을 교환하는 방식
	VR 전시관람을 통한 소통	온라인 관람객	-온라인 전시-3D웹을 통한 전시관람 -관람자가 전시 후기 및 질문 등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 분기별로 아카이브로 취합
전시 교과 연계 프로 그램 방안	이론중심 프로그램	학생과 교사	-강연, 강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symposium)
	감상중심 프로그램	학생	-전시실 안내 및 설명(Study Tour), 갤러리 대담(GalleryTalk), 학교 방문 교육, 셀프 가이드 -학생용 워크시트, 전시 체험, 비디오상영
		교사	-사전 감상의 제공, 갤러리 안내(Guide Tour), 교수 및 감상 자료의 제공, 교사연수 프로그램(Teachers Workshop)
	체험활동 중심 프로그램	학생	-워크숍(workshop), 특별 체험 프로그램, 체험교실, 현장 관찰 학습
이론·감상·	학생	-감상 및 참여수업, 개방교실, 기념관 학교,	

구분	형식	대상	내용
	참여 병행 프로그램		가상 갤러리 전시 프로그램
	기타	학생과 교사	-교사실 및 교육 자료실 운영, 온라인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 대여 프로그램, 찾아가는 기념관

- 민주인권기념관 운영 및 전시 계획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활용하여 민주인권기념관의 상징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제주4·3평화공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부지 선정에 있어 각 시설이 기념하는 인권 관련 사건이 발생한 장소적 연관성이 낮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로 입지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참고할 만하다. 둘째, 기념관 설립 계획이 구체화 되기 전, 건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슈파이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셋째, 기념관을 채우는 콘텐츠를 기획할 때 단순한 전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상했다는 점이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는 전시 내용을 기반으로 방문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교과 연계 과정을 구상 중이다.

● **국내 체험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 국내를 범위로 한정했을 때 인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으나, 체험적 요소를 강하게 지향하는 사례로서 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법무부)**, **한국잡월드(고용노동부)**, **울산국민안전체험관(소방청)**, **대구어린이교통랜드(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사례를 검토한다. 네 시설은 정부 기관에서 직접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험 위주의 운영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 교육 테마공원으로 어린이·청소년과 국민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법과 정의의 배움터로 운영 중이다. 모의재판, 법짱마을 등 법 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 법 탐험 캠프, 교사 직무 연수 등 다양한 법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⁷⁾

〈그림 2-10〉 대전솔로몬로파크 전경



7) 대전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

- 2005년 2월 법무부에서 ‘법 교육 강화 추진 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법 교육 추진 종합계획’ 수립 후 법 교육 출장 강연 제도, 모의재판 경연대회, 생활법 경시대회,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등 다양한 법 교육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07년 1월 솔로몬로파크 설치방침이 확정됐다. 솔로몬로파크 설립준비 T/F가 가동되었으며 솔로몬로파크(Law Park) 설립계획이 수립되었다. 2008년 법연수관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대전솔로몬로파크가 개청했으며 2009년부터 법체험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2013년 대전솔로몬로파크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타 광역권 도시에 신규 시설 건립이 논의된 결과 2016년 7월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이 개청되었다.

〈그림 2-11〉 대전솔로몬로파크 주요시설 전경



- 법무부는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2016년 개관), 광주(2023년 개관 예정)에 로파크를 건립함으로써 충남권은 물론 수도권, 영·호남권의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법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솔로몬로파크를 법 교육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

표 48 솔로몬로파크 개요

구분	위치	면적	설립비용
대전 솔로몬 로파크	대전 유성구 원촌동 (구. 대전소년원 부지 리모델링 후 활용)	비공개 (소년원 부지)	비공개
부산 솔로몬 로파크	부산 북구 구포동	대지면적 14,925㎡ 연면적 4,642㎡	총 253억 원 (국비 135억 원, 시비 118억 원)
광주 솔로몬 로파크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구.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 활용)	연면적 18,976㎡	총 187억 원 (국·시비 매칭)

- 솔로몬로파크는 법 체험관, 법 연수관, 법 놀이터, 법 도서관, 법 영상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설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9 솔로몬로파크 시설 개요

구분	시설	활용
대전 솔로몬 로파크	해돌이 해순이	솔로몬로파크의 상징물로, 법과 관련된 전설의 동물인 해태를 친근하게 표현한 조성물임
	솔로몬의 성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한 솔로몬 왕의 이름을 딴 솔로몬로파크의 정문임
	법연수관	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연수생 숙소, 주제별 강의실, 휴게실, 정보 검색실, 체육관 등을 갖춘

구분	시설	활용
대전 솔로몬 로파크	법 체험관	Justice Hall(3D입체영상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법쟁마을, 동·서양 법역사관, 입법·과학 수사·모의재판·법의 집행 등 사법절차 진행을 체험하는 법치세상관으로 이루어진 공간임
	헌법광장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의 모든 법의 기초이자 최고 법인 헌법을 소개하여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공간임
	후생관	연수생을 위한 식당 및 매점 등 후생복지 시설 등이 있음
부산 솔로몬 로파크	법 체험관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모의국회 등 체험이 준비됨
	법 놀이터	7세 이하 어린이들이 뛰어 놀며 법과 친해짐
	법 도서관	법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음
	법 영상관	법과 관련된 영상 및 영화를 상영함
	디지털 방명록	사진을 찍고 방문 소감을 남김
	법 광장	정의의 여신 부조물 앞에서 사진을 찍음
	정의의 여신상	정의의 여신상은 대표적인 법 상징물이며, 솔로몬로파크의 헌법광장에 위치하고 있음
	해돌이 해순이	솔로몬로파크의 남성캐릭터는 '해돌이' 여성캐릭터는 '해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해돌이는 해태(해치)를 모티브로 하여 개발된 캐릭터로 솔로몬로파크의 이념이 반영됨
	야외 놀이터/ 잔디광장	어린이 체험객들이 넓은 장소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마련됨
	수유실/유아 휴게실 카페테리아/ 전망데크	체험관 이용객을 위한 편의 시설 구비
전통사법체험장	체험관 이용객들을 위한 전통사법 체험장	

- 솔로몬로파크의 법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한 초, 중, 고등학생과 일반인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30분) 시간을 포함해 총 90분으로 배정돼 있으며, 체험 코스 중 당일 체험 일정에 따라 2개(각 30분)의 프로그램이 임의로 배정된다.
- 아래는 부산솔로몬로파크의 체험 프로그램이며, ‘선거와 국회’, ‘법과 과학’, ‘모의법정’으로 진행되던 대전솔로몬로파크의 프로그램 내용을 세분화해 제공한다. (대전 ‘선거와 국회’ → 부산 ‘선거체험관’, ‘모의국회’, ‘모의 국무회의’ / 대전 ‘법과 과학’ → 부산 ‘과학수사’ 등)

표 50 솔로몬로파크 체험 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명	내용
1	헌법배움터	- 우리 헌법이 왜 중요하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체험지 활동을 통해 알아봄
2	선거체험관	- 직접 대통령 후보도 되어보고 투표도 해보며 선거의 중요성을 알아봄
3	모의국회	-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어 봄
4	모의국무회의	- 직접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되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봄
5	과학수사	- 과학수사란 무엇인지, 과학수사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봄
6	모의법정	- 직접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등 역할을 나누어 재판을 진행해봄

2. 한국잡월드

〈그림 2-12〉 한국잡월드 전경



- 한국잡월드는 2012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내 유일의 국립직업체험관으로서, 다양한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에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다.⁸⁾ 2004년 한국잡월드 설립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현 부지가 선정되었다. 「고용정책 기본법」이 2011년 7월 개정되면서 제18조의 2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법인으로서 설립·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2011년 11월 한국잡월드 법인이 설립되면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순천만잡월드(호남권 잡월드)가 2021년 10월 전라남도 순천시에 개관하였으나, 한국잡월드와 달리 순천시청 산하기관 성격으로 조례를 제정, 업체 위탁운영 구조를 취하고 있다.

8) 한국잡월드 홈페이지

-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모두를 위한 완결형 종합직업체험관을 표방하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직업에 대한 편견 없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잡월드는 현대자동차와 제휴,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파트너사의 지원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등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교육포털 에듀팡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한국잡월드의 다양한 직업체험 콘텐츠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한국잡월드의 주차장 등 부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은 80,000㎡, 본관 15,973㎡, 숙련 기술 체험관 2,584㎡ 규모이다. 본관의 주요 전시 및 체험 공간은 2층의 진로 설계관, 3층의 청소년체험관과 어린이체험관, 4~5층의 메카이브다.
- 한국잡월드는 2022년 12월 현재 휴직자 제외 66명이 종사 중이며, 조직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51 한국 잡월드 조직 및 인력 현황

구분	팀	인원	담당업무
	이사장	1명	이사회 총괄
	감사팀	1명	
경영본부 (25명)	경영관리팀	10명	예산기획·통제·결산, 기획, 경영·부서평가 등
	운영지원팀	8명	구매·자산, 급여·복지후생, 인사·노무, 회계 등
	인프라관리팀	7명	건축·안전, 소방·설비, 정보화, 전기·통신 등

구분	팀	인원	담당업무
운영본부 (27명)	서비스혁신팀	7명	서비스품질, 출자회사, 고객센터, 운영수입관리 등
	체험1팀	9명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 운영 및 기획
	체험2팀	6명	숙련기술관, 진로설계관 운영 및 기획
	청년콘텐츠팀	5명	메카이브 운영, 청년사업 운영, F&B 운영
홍보협력 본부 (18명)	홍보마케팅팀	12명	마케팅전략, 홈페이지·웹진, 언론홍보, 사회공헌 등
	대외협력팀	6명	대외협찬, 공연·대관·식음료 등

- 한국잡월드는 방문객을 어린이(만 4세~초등 4학년 이하, 보호자 동반 필수), 청소년(초등 5학년~고등 3학년), 보호자(만 19세 이상 성인)로 구분하여 이용 요금을 징수한다. 요금은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에 따라, 당일 이용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다. 일부 역사관 등 상설전시를 제외한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잔여석만 당일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표 52 한국잡월드 이용요금

시설	대상	이용요금	비고
어린이체험관	(반일) 어린이	18,000원	종일권 33,000원
	(반일) 보호자	9,000원	종일권 14,000원
	(반일) 단체인솔자	4,000원	종일권 4,000원
청소년체험관	1회 이용 시	9,000원	
	당일 1개 체험실 추가 이용 시	6,000원	
진로설계관	전체	3,000원	청소년체험관 이용 시 무료
숙련기술체험관	전체	5,000원	

시설	대상	이용요금	비고
메카이브	90분 이용	15,000원	재료별·클래스별 상이
	50분 이용	10,000원	

〈그림 2-13〉 한국잡월드 본관 및 숙련기술체험관 층별 안내



- 한국잡월드의 공간별 프로그램 배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3 한국잡월드 공간 배치 및 프로그램 내용

시설	대상	프로그램 내용
본관		
진로설계관	초5~ 고3	- 놀이형 검사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진로설계 - 자기검사존, 상담설계존, 직업정보존으로 구성됨
청소년체험관		- 실제 직무 체험 및 심층적 직업정보 제공 - 공공서비스, 경영금융, 문화예술, 과학기술, 기획 체험으로 구성됨
어린이체험관	5세~ 초4	- 실제 도시를 축소 재현, 52개의 직업을 체험 - 직업현장전문가의 자문과 교육 전문가의 연구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을 체험함 - 조이(화폐)로 급어를 받고 저축 및 물품 구입을 할 수 있어 경제흐름을 이해할 수 있음
메카이브	어린이~ 성인	- Makers Archive의 합성어로 창작 공간 - 300여 가지의 다양한 재료와 도구, 장비를 이용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창작 능력을 기를 수 있음
숙련기술체험관 (별관)		
숙련기술체험관	초5~ 고3	- 전문적인 직업 기술 체험을 제공함 - 첨단기술, 기초기술, 전통기술 등 테마로 현실감 있는 산업기술 체험을 통해 적성과 재능을 발견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잡월드는 주관부처(고용노동부) 직영 혹은 기존의 단체 및 조직에서 운영하지 않고, 직업체험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한 점이

참고할 만하다. 또한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단순히 일회적 이벤트로서의 체험을 넘어서 실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대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역시 시사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용요금 징수 등으로 수익모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단체 방문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지차 보전제도 적용 기관으로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단체 방문 등이 점차 기피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국잡월드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책 수립 등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3. 울산국민안전체험관

〈그림 2-14〉 울산국민안전체험관 전경



- 울산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설립하고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국민안전체험관 중 하나로,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 역량을 갖추기 위한 일반

체험관과 달리, 전문적이면서 특성화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체험 종목을 중심으로 구비하고 있는 특성화 체험관에 속한다. 울산국민안전체험관은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폭발, 대형화재,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의 위험이 큰 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원자력·화학 안전 체험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 2018년 9월에 개관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재난 현장을 재현하고 전문 교관을 배치해 체험자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재난 사고를 예방에서 대응까지 행동하는 안전지킴이를 양성하고자 한다.
- 운영 조직은 운영지원팀에 소속된 2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래와 같다.

표 54 울산국민안전체험관 조직 및 인력 현황

구분	팀	인원	담당업무
울산안전체험관장		1	울산안전체험관 업무 총괄
운영지원팀장		1	운영지원팀 업무 총괄
소방경		1	기타
소방위		5	- 인사, 징계, 감찰(1명) - 화학, 지진 등 안전체험관 교관 업무 수행(1명) - 운영지원팀 복무(1명) - 경리(1명) - 기타(1명)
소방장		7	- 안전체험관 교관(6명) - 서무(1명)
소방교		4	- 안전체험관 교관(4명)
소방사		2	- 구급(1명) - 기타(1명)
실무관		5	- 기타(5명)

- 울산국민안전체험관은 울산시 강동 관광지구 내에 위치하며 건물 연면적은 7,610㎡(지상 3층, 지하 1층), 전체 부지는 108,984㎡의 규모로 조성돼 있다. 체험관은 5개의 체험존, 15개의 체험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1일 최대 500명까지의 체험이 가능하다.
- 시설 1층은 재난극복관, 어린이 안전마을 등 '기초안전', 2층은 화재 안전 훈련관, 응급처치 실습관,交通安全훈련관 등 '생활안전', 3층은 화학 재난 체험관, 원자력 재난 체험관, 지진재난체험관 등 '재난 안전(지역특화)'을 주제로 구성돼 있다.

〈그림 2-15〉 울산국민안전체험관 층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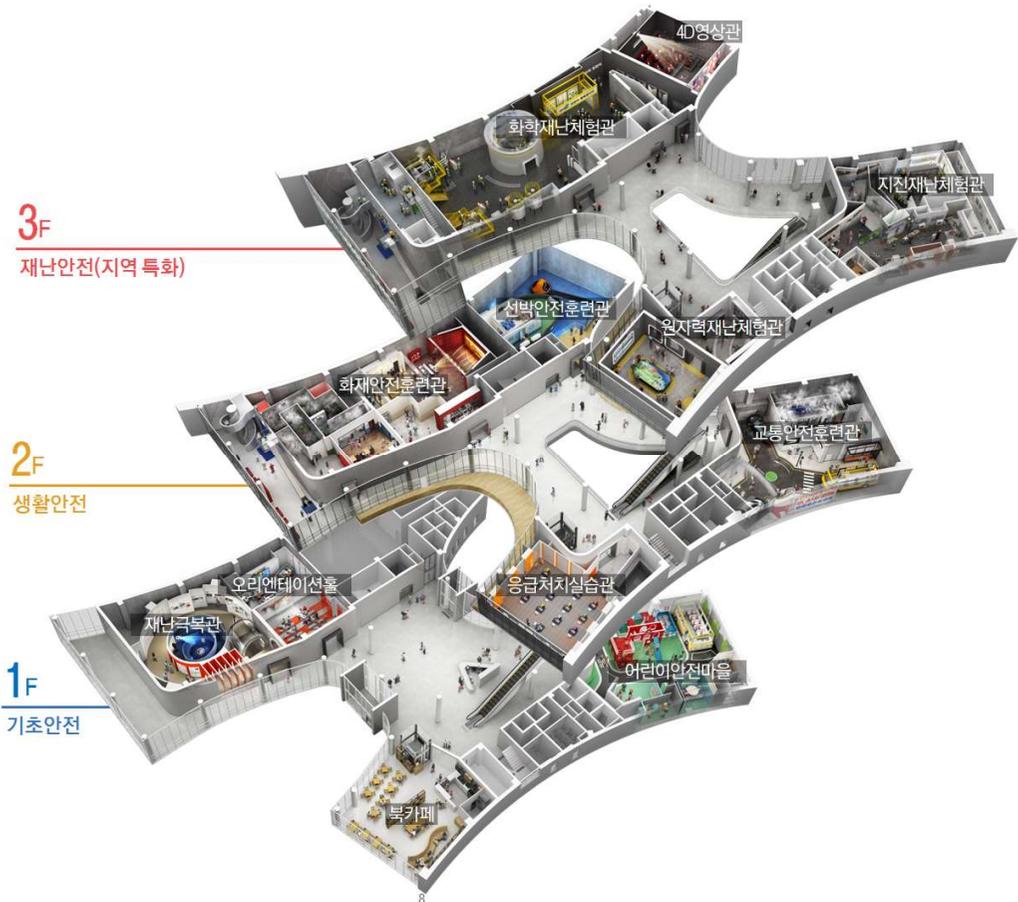


표 55 울산국민안전체험관 시설 개요

구분	시설	내용
기초안전	재난극복관	- 재난의 역사와 대책을 학습하고, 우리 주변의 안전영웅을 알아봄
	어린이안전마을	-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문화와 생활습관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행동교정형 종합 체험존 - 놀이터, 물놀이, 교통, 승강기, 화재 등 실제와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학습 환경 제공
생활안전	화재안전훈련관	- 화재원인, 초기진압, 연기대피, 피난설비를 활용한 고층탈출을 체험
	응급처치실습관	-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화상, 골절 등 생활 속 응급상황에서의 처치방법을 실습
	교통안전훈련관	- 인명피해가 심각한 교통사고의 상황별 대응과정을 체험
지역특화 안전	화학재난체험관	- 석유화학 공정과정을 맵핑영상으로 이해하고 아찔한 안전보호구 체험과 화학단지 안전점검에 참여
	원자력재난체험관	- 지진으로 위험해진 원자력발전소 내부에서 구조소로 탈출하는 과정을 이색적인 공간VR로 체험
	지진재난체험관	- 지진의 진도체험과 안전한 곳으로의 탈출과정을 실제상황에서 체험
	4D영상관	- 4D영상관에서 안전영상을 관람하며 체험을 리뷰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

- 울산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부터 근로자 교육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대상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다음과 같다.

표 56 울산안전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내용

시설	대상	프로그램 내용
1층		
기초안전 (어린이 안전마을)	5~7세	- 미취학아동을 위한 종합체험존 - 놀이터, 물놀이, 교통 등 야외 안전과 승강기, 지진, 화재 등 실내 안전을 학습함
2층		
교통안전 (교통, 선박)	공동 (미취학 아동 보호자 동반)	-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통안전훈련 - 대중교통을 비롯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올바른 습관과 안전수칙을 훈련 - 해상에서의 긴급상황에 대비한 실제상황을 연출한 선박안전을 훈련
화재안전 (화재, 고층탈출)	5세 이상 (미취학 아동 보호자 동반)	- 화재예방부터 대응까지 훈련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스스로 이겨내는 역량을 키우는 곳 - 화재로부터의 안전하고 신속한 탈출을 학습, 다양한 피난설비를 체험 훈련함
응급처치 (CPR, 기도폐쇄)	공동 (미취학 아동 보호자 동반)	- 심장이 멈췄을 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심폐 소생술을 훈련함 - 일상생활 속 다양한 응급상황의 정확한 대응 요령을 실습으로 훈련 - 중학생 이상 '일반인 심폐소생술 이수증 과정' 신청 가능
3층		
화학안전 (지진, 화학)	초등학생 이상 (초등학생 보호자 동반)	- 벽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피해의 예방 방법과 올바른 대응 요령을 체험 - 지진재난 예방 및 대처요령, 진도 체험, 복도 및 도심 탈출, 여진 체험 - 석유화학공정 맵핑영상,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체험,

		반응기 배관교체, 밀폐공간 입조작업, 사일로 용접 체험
원자력 안전 (지진, 원자력)	초등학생 이상 (초등학생 보호자 동반)	- 지진 시 원자력 재난 대처요령, 도심 탈출 체험 -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와 지진 속 원자력발전소의 탈출 과정을 공간VR로 체험
전층 활용		
산업안전 (근로자 교육)	산업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 근로자·관리감독자 체험 및 실습형 안전·보건 교육 - 안전모 충격 체험, 개구부 추락 체험, 안전벨트 체험 - 사일로 화기작업, 밀폐공간 입조작업, 반응기 배관 교체 작업, 압력 용기 폭발 체험, 종합전기체험, 4D 영상체험, 응급처치법 실습
어린이시설 종사자안전교육 (응급처치, 기초안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 학교, 아동복지 시설 등 종사자	-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된 안전 교육 - 응급처치 : 소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기도 폐쇄 및 생활응급 처치 - 기초안전 : 놀이터, 물놀이, 교통 등 야외안전 영역, 승강기, 지진, 화재 등 실내안전 영역

- 울산국민안전체험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IT 기술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체험관은 인터랙티브 4D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소화기 체험, 화재 대피 훈련, 비상 대응 훈련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 체험 프로그램을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4.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그림 2-16〉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전경



- 대구어린이교통랜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설립된 교육형 테마파크로, 2004년 조성계획 수립, 2006년 1월 위탁운영자 선정(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과정을 거쳐 2006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이 소장으로 역할하며, 전임교사와 시설관리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실내 체험관과 전시관이 포함된 본관 규모는 1,504㎡이며, 실외 교육장 등 부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은 4,958㎡이다. 본관은 1층 실내교육장과 시뮬레이션실, 2층 영상교육실로 구성돼 있으며, 실외 교육장은 어린이들의 신체에 맞춘 작은 마을 형태로 설계돼 있다.

표 57 대구어린이교통공원 개요

구분	위치	면적	설립비용
대구어린이 교통공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76(황금동 어린이회관내)	4,958㎡(부지) 1,504㎡(건물)	48억 원

〈그림 2-17〉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야외 체험장



-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체험 프로그램은 5~8세 어린이들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대 12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실내 체험관(50분)과 실외 교육장(40분)의 시설을 활용한 총 90분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실내 체험관에서는 교통사고 사례모형과 동영상을 통해 자동차의 위험함을 알려주며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체험자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고, 게임과 퀴즈를 통해 안전 수칙을 익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실외 교육장에서는 실제 도로와 같은 공간에서 횡단보도, 육교 등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알아보고, 운전자가 되어 페달 자전거를 직접 운전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표 58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시설	대상	프로그램 내용
실내 교육장		
자동차의 두 얼굴	5~8세 어린이 단체 (최대 120명)	- 교통사고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자동차 사고의 위험성과 인간에게 주는 편리함을 교육
교통표지판을 찾아라		- 교통표지판 교육을 통해 표지판에 따른 올바른 보행방법을 교육하며, 우리 동네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이 가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 10대 교통사고 모형		-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주요 교통사고 사례를 축소 작동 모형과 교육을 통해 재현하여 교통사고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학습하도록 함
스쿨존 안전수칙		- 어린이보호구역의 의미를 알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봄
안전하게 타야돼요!		-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해 교육
시뮬레이션 교육		- 자전거 운전의 안전 수칙(자전거 고르는 방법, 적절한 의상 등)을 교육하고, 자전거 타기 시뮬레이션게임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함 - 어린이가 직접 운전자가 되어 도로주행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도로 위에서의 위험한 사항들에 대해 인지하고 안전운전의 중요성 교육 - 교통안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교육하고, 게임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예방
영상 교육실	-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다양한 안전사고를, 3D 고화질 영상으로 생생하고 입체감 있게 교육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실외 교육장		
신호등 있는	5~8세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널 수 있는

시설	대상	프로그램 내용
횡단보도 건너기 / 육교 건너기	어린이 단체 (최대 120명)	5가지 원칙에 대해 교육하고, 5가지 원칙에 따라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볼 수 있도록 함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위에 설치한 육교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육교를 건너볼 수 있도록 함
버스 탈 때의 약속 / 교통수칙 지키며 운전하기		- 버스 승·하차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방법과 버스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교육하고, 직접 실천해봄 - 페달자전거를 타고 도로주행을 하며 도로교통신호와 보행신호, 터널안전 등의 교육내용을 기억해 운전해 봄으로써 교통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책을 스스로 깨닫는 체험을 제공

- 현장 프로그램과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별 대처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표 59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

시설	대상	프로그램 내용
교통안전교육 영상시청	5~8세	- 교통안전 애니메이션 시청으로 안전교육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교육 이론수업		- 보행 안전, 안전한 옷차림, 교통표지판 알기, 안전한 놀이 장소, 버스 승하차 방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별 대처방법을 교육
횡단보도 5원칙 실습		- 횡단보도 5원칙을 알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보는 체험학습 제공

② 국외 유사시설 분석

● 국외 유사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 본 장에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헝가리, 일본,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박물관, 인권센터, 기념관, 공원 등의 시설을 조명한다. 국외 유사 시설 또한 대다수가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내용과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보편적인 인권을 이야기하는 **(미국) 국립 인권 박물관과 애틀랜타 시민인권센터, (캐나다) 인권 박물관**의 사례를 우선 검토하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거나 특수한 인권영역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프랑스) 쇼아 기념관, (이스라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헝가리) 부다페스트 테러하우스,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 (대만) 국가 인권박물관**을 살피고자 한다.

표 60 국외 인권 주제 유사시설 목록

순번	국가	시설명	성격(주제)
1	미국	국립 인권 박물관	보편성
2		애틀랜타 시민인권센터	보편성
3	캐나다	인권 박물관	보편성
4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	특수성
5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특수성
6	프랑스	쇼아 기념관	특수성
7	이스라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특수성
8	헝가리	부다페스트 테러하우스	특수성
9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	특수성
10	대만	국가 인권박물관	특수성

표 61 국가별 경제력·인권지수 비교

구분	경제력		인권 지수		
	명목GDP (단위:백만USD) /순위	1인당 명목GDP /순위	프리덤하우스 (FH) 참정권 및 시민자유권 종합 지수 (2022)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순위 (2022)	언론자유지수 /순위 (RWB) (2022)
대한민국	1,734,207 (13위)	\$33,591 (30위)	83점	8.01점 (23위)	72.11점 (43위)
미국	25,035,164 (1위)	\$75,179 (7위)	83점	7.92점 (25위)	72.74점 (42위)
캐나다	2,200,352 (8위)	\$56,794 (11위)	98점	9.24점 (5위)	81.74점 (19위)
독일	4,230,172 (4위)	\$48,397 (18위)	94점	8.67점 (4위)	82.04점 (16위)
프랑스	2,778,090 (7위)	\$42,330 (24위)	90점	7.99점 (24위)	78.53점 (26위)
이스라엘	527,179 (27위)	\$55,358 (14위)	76점	7.84점 (27위)	59.62점 (86위)
헝가리	184,651 (56위)	\$18,982 (53위)	69점	6.56점 (55위)	59.80점 (85위)
일본	4,300,621 (3위)	\$ 34,358 (28위)	96점	8.13점 (21위)	64.37점 (71위)
대만	785,589 (21위)	\$35,513 (27위)	94점	8.94점 (11위)	74.08점 (38위)

표 62 국외 유사시설 분석 요약

국가	시설명	운영기관	종류	설립 시기	위치	규모	공간	인력/조직
미국	국립 인권 박물관	로레인 시민권 박물관 재단	박물관	2014년	미국 테네시 주 멤피스	약 16,800㎡, 지상 2층	전시실	로레인 시민권 박물관 재단 직원 52명
	애틀랜타 시민인권센터	국가	전시관	2014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약 3,901㎡, 지상 3층	전시 갤러리, 이벤트 공간, 리셉션	인권센터 직원 58명
캐나다	인권 박물관	국가	박물관	2014년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	약 24,155㎡, 지상 7층	전시시설, 컨퍼런스홀, 리서치센터, 기념품 상점, 레스토랑	박물관 직원 16명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비 재단	공원과 기념관	2005년	독일 베를린 코라 베를리너 슈트라세	약 19,000㎡ 지하 1층, 지상 1층	홀로코스트 기념비 지하 방문자센터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비 재단 직원 31명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재단	박물관	2001년	독일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약 3,500㎡ 지하 1층, 지상 4층	상설전(신관), 기획전(본관)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재단 직원 55명
프랑스	쇼아 기념관	국가	기념관	2005년	프랑스 파리 4구	약 5,000㎡ 지하 1층, 지상 4층	전시실, 포어코트, 이름의 벽, 지하실	기념관 직원 51명
이스라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드바셈 재단	박물관	2005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약 4,200㎡ (총 면적 : 55,000㎡)	역사박물관, 어린이기념관, 기억의전당	야드바셈 재단 직원 20명
헝가리	부다페스트 테러하우스	중·동유럽역사 연구재단	전시관	200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안드라쉬	약 1,000㎡ 지하 1층, 지상 3층	전시관, 소비에트 군의 집무실, 고문실	-
일본	국립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재단	공원과 기념관	1956년	일본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동관) 지하 1층, 지상 3층 (본관) 지상 1층	원폭돔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히로시마평화기념 재단 직원 10명
대만	국가 인권 박물관	법인	공원과 박물관	2018년	대만 쿼다오	(총 면적 : 320,000㎡)	신생훈도처, 국방부쿼다오감훈감옥	감독, 부이사, 연구원, 종합기획실, 전시교육청, 연구 및 아카이브센터, 징메이/쿼다오 운영센터
					대만 징메이	약 6,667㎡	징메이간수소	

1. (미국) 국립 인권 박물관(National Civil Rights Museum)

〈그림 2-18〉 국립 인권 박물관 전경 및 시설



- 미국의 2022년 명목 GDP는 25.035조 USD로 1위이고 1인당 명목 GDP는 75,179달러 (인구 : 33,600만 명), 7위이다.

**[한국] GDP 1,734,207달러(13위), 1인당 명목 GDP 33,591달러 (인구 :5,182만 명), 30위*

- 인권 지수로 본다면, 프리덤하우스(FH) 참정권 및 시민 자유권 지수(2022) 기준으로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60점 만점에 51점,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아 총 83점으로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자유로운 국가(free)'에 분류되어 있다.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2022)에서는 7.92점으로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는 언론자유지수(RWB)(2022)에서 미국은 '만족스러운 상황'에 해당되는 72.74점을 받아 42위를 차지했다.

**[한국] 프리덤하우스(FH) 참정권 및 시민 자유권 지수(2022)는 시민적 권리 60점 만점에 50점, 정치적 권리는 40점 만점에 33점을 받아 총 83점으로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자유로운 국가(free)'에 분류되어 있다.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2022)에서는 8.01점으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경 없는기자회가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는 언론자유지수(RWB) (2022)에서 한국은 '만족스러운 상황'에 해당하는 72.11점을 받아 43위(아시아 중 4위)를 차지했다.*

- 미국 내 여러 주(州)에 설립된 인권 박물관 중 가장 유명한 곳으로,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하고 있다. 1968년 4월 4일 흑인 인권 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터킹이 암살당한 로레인 모텔(Lorraine Motel)을 리모델링 해 2014년에 개장했다. 흑인 인권 운동뿐 아닌 여성, 이민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투쟁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 공간 규모는 1만 6,800㎡이며, 역사, 문화, 커뮤니티 등 총 1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예제도에 대한 저항, 남북 전쟁의 평화 등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배치해두고 있으며, 전시 내용은 노동권, 아동권, 환경권, 성적 결정권 등 폭넓은 인권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표 63 국립 인권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구분	유형	전시 내용
상설 전시	역사	- 노예와 자유, 자유의 승리
	문화	- 언어와 예술, 전통
	커뮤니티	- 스포츠, 공동체
전시 섹션		- Lorraine building - A culture of resistance - The rise of Jim Crow 외 12개 (총 15개)

- 국립 인권 박물관에서는 방문객들이 인권의 역사적 이정표를 학습하고, 오늘

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과 교육자를 대상으로 대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룹별 토론, 토크 콘서트, 포럼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4 국립 인권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운영 시간
VIRTUAL EDUCATION EXPERIENCES	시민권 운동과 400년 흑인 자유 투쟁을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오늘날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 대화, 토론함	교사 및 학생 50~1,000명	45~90분
BOOK AND AUTHOR	인권 운동에 대해 글을 쓴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함	일반	회차별 상이
CATALYST FOR CHANGE	인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 온 작가, 저명인사, 교육자 등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사회적 행동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일반	회차별 상이

- 국립 인권 박물관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장소성을 효과적으로 살리는 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 마틴 루터킹이 암살되기 전까지 머물렀던 호텔의 306호실과 저격당한 장소인 객실 발코니를 그대로 살려두었으며, 마틴 루터킹의 진품 오브제 전시에서 인터랙티브(interactive) 전시로 범위와 내용을 상승적으로 확대해왔다. 전시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노예선에 탑승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 재떨이까지 고스란히 보존된 306호실에서 마무리되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인종, 계급, 성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게끔 한다.

2. (미국) 애틀랜타 시민인권센터(National Center for Civil and Human Rights)

〈그림 2-19〉 애틀랜타 시민인권센터 전경



- 2014년에 문을 연 시민인권센터는 마틴 루터킹의 고향이자 현대 시민권 운동의 발상지인 애틀랜타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설립됐다. 시민권 투쟁이 어떻게 인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는지를 다루고, 인권의 역사를 오늘날 글로벌 인권 운동과 연결한다.
- 애틀랜타 시민인권센터에서는 학생과 교육자, 가족 단위의 그룹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해 참여형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월별로 인권과 관련한 시사회, 콘서트,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일반적인 방문은 약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표 65 애틀랜타 시민인권센터 전시 프로그램

구분	전시 내용
상설	-무성의 목소리: 모어하우스 대학 마틴루터킹 주니어 컬렉션

구분	전시 내용
전시	-물처럼 흐릅니다. ‘미국 시민권 운동’
상설 전시	-확신의 불꽃: ‘글로벌 인권 운동’ - 조지아퍼시픽 갤러리 플라자 ‘Out Down South: Voices & Portraits of LGBTQ+ 애틀랜타’ (도시의 문화적, 정치적, 창의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애틀랜타 LGBTQ+ 커뮤니티 구성원의 구전 역사를 소개함)

〈그림 2-20〉 애틀랜타 시민인권센터 체험 프로그램 ‘sit-ins’



- 애틀랜타 시민인권센터에서는 전시 해설 과정에서 비폭력 시위와 관련된 훈련에 대해 배운 후, Sit-ins(연좌시위)⁹⁾를 3D로 체험하며 비폭력 시위자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어려움, 불편함을 일시적

9) 1960년 2월부터 7월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시작된 비폭력 시위로, 유색 인종이 백인 전용 간이식당에 앉으며 미국 남부의 인종 분리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이다. 시위는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미국 13개 주 55개 도시로 확산되었으며, 1964년 공공시설에서의 인종차별 철폐를 의무화하는 민권법(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과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이 제정되는데 기여했다.

으로 체험하며 타자를 대상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대와 실천의 어려움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3. (캐나다) 인권 박물관(Canadian Museum for Human Rights)

〈그림 2-21〉 인권 박물관 전경



- 캐나다의 2022년 명목 GDP는 2.200조 USD로 8위이고 1인당 명목 GDP는 56,794달러 (인구 : 3,839만 명), 11위이다.
- 인권 지수로 본다면, 프리덤하우스(FH) 참정권 및 시민 자유권 지수(2022) 기준으로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60점 만점에 58점,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아 총 98점으로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자유로운 국가(free)'에 분류되어 있다.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2022)에서는 9.24점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는 언론자유지수(RWB)(2022)에서 캐나다는 '만족스러운 상황'에 해당되는 81.74점을 받아 19위를 차지했다.

- 캐나다 인권박물관은 2014년 위니펙에 조성되었다. 캐나다뿐 아닌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에 대한 존중 의식과 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 박물관의 규모는 2만 4,155㎡이며 공간 구성은 ‘여정’을 건축의 테마로 삼아 층별 구분이 없는 램프를 통해 메인 로비에서 희망의 탑까지 이어지는 긴 동선을 따라가며 관람하는 구조이다. 전시의 경우 층마다 다른 주제를 선보여 과거 인종 차별이 심하던 캐나다가 인권발전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단계별로 보여준다.

표 66 인권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유형	전시 내용
상설전시	-인권발전의 계기가 된 사건, 변천사 -캐나다 원주민, 흑인(Black), 여성 인권발전 역사 -유대인, 캄보디아 등 대량 학살,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 자료
기획전시	-인권개념, 선주민 인권에 대한 견해, 인간성 회복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시를 진행함

- 인권 박물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화형 전시, 창작 활동, 인권 옹호 활동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67 국립 인권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운영 시간
My Rights, Our Rights	인권에 대해 학습하는 대화형 프로그램	유치원생~ 4학년	45분
Be an Upstander	인권 운동가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자들이 직접 본인의 이름과 대응하고자 하는 인권 이슈, 지지 방법 등을 적고	5~8학년	45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운영 시간
	공유함. 추후 인권 박물관에서 선언된 내용을 모아 프로젝트로 제작하며, 참여자들이 단순 관람객을 넘어 인권 옹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Expressing Rights Through Art	예술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표현하도록 영감을 주는 예술 저널링 활동에 참여함	5~8학년	45분
Museum Highlights Tour	Viola Desmond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인권에 대한 선주민의 관점을 탐구하여 캐나다의 인권 여정에 대해 알아봄. 인권의 개념이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시 내용과 연계해 학습함	5~8학년 (기본), 9~12학년 (심화)	45분
Deliberating Charter rights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과 캐나다 대법원에 대해 알아봄. 캐나다에서 '권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제한되는지 알아보고 토론함	9~12학년	45분
Dignity and Rights	존엄성과 권리를 부정하는 데 있어 "타자화"의 역할에 대해 알아봄. 세 가지 사례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학생들은 집단 학살을 포함한 많은 인권침해의 출발점으로서 타자화의 역할을 인식함	9~12학년	60분

- 인권 박물관은 특정 장소나 역사적 사건과 무관한 곳에 지어졌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이 중심이 된 서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험/교육 시설의 경우, 주제와 연관성이 낮은 관광객에게는 관심을 끌기 어렵고 체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박물관이 장소성을 없애므로써 주제의 특수성을 낮추고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그림 2-22〉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 전경



- 독일의 2022년 명목 GDP는 4.223조 달러, 4위이고 1인당 명목 GDP는 48,397달러 (인구 : 8,431만 명), 18위이다.
- 인권 지수로 본다면, 프리덤하우스(FH) 참정권 및 시민 자유권 지수(2022) 기준으로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60점 만점에 55점,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39점을 받아 총 94점으로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자유로운 국가(free)'에 분류되어 있다.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2022)에서는 8.67점으로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는 언론자유지수(RWB) (2022)에서 독일은 '만족스러운 상황'에 해당하는 82.04점을 받아 16위를 차지했다.

- 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을 맞아 미국 건축가 피터 아이젠먼이 설계하였으며 2005년 개관하였다.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위치는 독일 수도 베를린

한복판에 있는 브란덴부르크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유대인 추모시설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는 홀로코스트(Holocaust)와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추모비’의 뜻을 가졌다. 1만 9,000m² 면적의 홀로코스트 내부에는 2,711개의 콘크리트 조각이 놓여있으며, 매년 평균 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고 있다.

〈그림 2-23〉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 방문자센터 입구



-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물 사이에는 지하로 통하는 입구가 있다. ‘방문자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지상의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온 방문객에게 보다 심화 된 과정을 제시하기 위한 지하의 전시 공간이다. 방문자센터에서는 일기, 사진, 그림 등 실제 피해자의 흔적을 함께 전시해두었다.
- 930m²의 면적에 「차원의 방(room of dimensions)」, 「가족의 방(room of families)」, 「이름들의 방(room of names)」, 「현장들의 방(room of sites)」, 「기념 공간 포털(commemoration site portal)」이라는 이름의 다섯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33~1945년에 걸친 나치즘의 테러 정치 개관 순으로 시작되어 유럽 유대인의 박해와 말살의 과정이 시간대 순으로 전시돼 있다.

표 68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 방문자센터 전시 프로그램

구분	전시 내용
차원의 방 (room of dimensions)	- 유대인 희생자들의 편지, 일기, 메모 등을 전시하는 공간
가족의 방 (room of families)	- 15명의 가족을 예시로 과거 유대인의 삶을 가족사진, 기록물들을 통해 홀로코스트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
이름들의 방 (room of names)	- 4개의 벽을 통해 학살당한 유대인의 정보를 음원으로 관람자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공간
현장들의 방 (room of sites)	- 약 220개의 홀로코스트 현장들을 지도를 통해 재구성한 장소와 관련 영화, 사진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
기념 공간 포털 (commemoration site portal)	- 세계 곳곳에 있는 박물관, 기념관 등을 소개하는 공간

- 별도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예술로 역사적 사건을 가공하고 도시의 심볼이자 관광 스팟을 조성해 도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전시물로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뒤,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 방문자 센터에서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 배치해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5. (독일)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Jüdisches Museum Berlin)

〈그림 2-23〉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전경



- 베를린에서 추방된 유대인을 기념하기 위해 2001년에 문을 연 박물관이다.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구상에 관한 25년간의 논쟁 끝에 다니엘 리베스킨트(D. Liebeskind)가 1988~1989년 진행된 국제 건축 공모를 통해 신관을 건축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박물관보다는 교육학적 목적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유럽에서 유대인의 대규모 학살에 대한 학습장으로 인식되는 것이 목적이다.
- 공간적인 특징으로는 강렬한 해체주의 건축, 지상 전시, 지하 전시, 지하의 X축 전시 가운데 ‘망명의 길’이 옥외의 조형물로 이어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는 “A museum you need to experience”의 주제로 13개의 섹션을 통해 유대인의 문화와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 상설전(신관)에서는 ‘독일의 유대인 생활: 과거와 현재’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기획전(본관)에서는 현대미술 분야에서 유대인을 주제로 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표 69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유형	위치	전시 내용
상설 전시	신관	- 독일의 유대인 생활: 과거와 현재
기획 전시	본관	-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2017~2019) - Cherchez la femme (2017) - 의식 할례에 관한 입장(2014~2015) 외 다수

-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는 전시 프로그램에 상세 해설을 제공하는 가이드 투어를 포함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전시 내용과 연계해 유대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 또한 3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유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겁고 어려운 개념과 사건을 다루는 대신, 유대인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의 운영 목적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가치를 반영한 콘텐츠를 놀이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표 70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운영시간
ANOHA (a visit to the story of Noah's Ark)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조성된 시설을 활용해 자유롭게 놀고, 연령별로 조성된 심화 토의 과정에 참여함	전 연령 (연령별 프로그램 제공)	90분
theater play 'mittendabei'	연극으로 폭풍우가 치는 동안 배에 구조된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있음을 학습함	3세 이상 어린이	35분
building the ark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주제와 참여자 사이의 관련성을 찾음.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더 좋고 정의로운 미래상을 설계해봄	초등학생 이상	2일

6. (프랑스) 쇼아 기념관(Mémorial de la Shoah)

〈그림 2-24〉 쇼아 기념관 전경



- 프랑스의 2022년 명목 GDP는 2.778조 USD로 7위이고 1인당 명목 GDP는 42,330달러 (인구 : 6,542만 명), 24위이다.
- 인권 지수로 본다면, 프리덤하우스(FH) 참정권 및 시민 자유권 지수(2022) 기준으로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60점 만점에 52점,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38점을 받아 총 90점으로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자유로운 국가(free)'에 분류되어 있다.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 (2022)에서는 7.99점으로 24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는 언론자유지수(RWB)(2022)에서 프랑스는 '만족스러운 상황'에 해당되는 78.53점을 받아 26위를 차지했다.

- 프랑스 파리에 조성된 쇼아 기념관은 1956년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무명의 유대인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관이었으나 이후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기 위한 장소로 리모델링되었다.

- 쇼아 기념관에는 7만 6,000명의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이름의 벽이 있으며, 홀로코스트에 관한 사진 및 정보가 전시되어 있다. 지하 납골당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유대인의 상징인 다윗의 별이 놓여있으며 나치에게 희생된 600만 유대인의 묘지를 상징한다. 전시로는 유대인의 역사를 묘사하는 12개의 시퀀스로 구성된 연대, 주제별 기획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표 71 쇼아 기념관 전시 프로그램

유형	전시 내용
상설 전시	-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던 상황, 홀로코스트 관련 문건, 사진 유물 전시 <hr/> 시퀀스 1 : 프랑스 내 유대인 역사 소개 시퀀스 2 : 나치즘의 발흥 시퀀스 3 : 프랑스에서 고립에서 제1수용소까지/게토화에서 학살까지 시퀀스 4 : 1942년 유럽에서 계획된 대량 학살: 프랑스 유대인 추방 시퀀스 5 : 학살 수용소: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시퀀스 6 : 프랑스에서 유대인 약탈 시퀀스 7 : 시민 사회와 유대인 박해 시퀀스 8 : 생존 시퀀스 9 : 저항 시퀀스 10 :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박해받는 시퀀스 11 : 해방 시퀀스 12 :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구축하다
기획 전시	- 역사, 예술 및 문학 주제를 기반으로 하며 프랑스 유대인의 상황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다른 유럽 국가의 유대인들의 상황 조명

- 전시 프로그램 외에는 강연, 영화 상영, 패널토론과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타 기념관과 차별성을 가지는 지점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홀로코스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학적 방법을 세미나와 여름 학교를 통해 공유하며, 수업 자료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념관 밖에서의 학습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

7. (이스라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Yad Vashem Holocaust History Museum)

〈그림 2-25〉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전경



- 이스라엘의 2022년 명목 GDP는 5,271억USD로 27위이고 1인당 명목 GDP는 55,358달러 (인구 : 934만 명), 14위이다.
- 인권 지수로 본다면, 프리덤하우스(FH) 참정권 및 시민 자유권 지수 (2022) 기준으로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60점 만점에 42점,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34점을 받아 총 76점으로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자유로운 국가(free)'에 분류되어 있다.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지수 (2022) 에서는 7.84점으로 27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는 언론자유지수(RWB)(2022)에서 이스라엘은 '가시적인(noticeable) 문제'에 해당되는 59.62점을 받아 86위를 차지했다.

- 2005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설립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국립 현충기념관(National Hall for Israel's Fallen), 헤르츨 산(Mount Herzl)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 추모시설 삼각축(트라이앵글)을 구성하며, 도시 내 상징자산 간 실질적 연계 코스를 마련해 연간 2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점이다.
- 10년의 공사 끝에 2005년 3월 15일 재개관하였는데 당시 5,600만 달러를 들여 새로 개관하여 확장된 박물관의 면적은 4,200㎡이다. 내부는 역사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학습센터, 영상센터, 교회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 박물관은 180m의 길이에 선형 모서리와 뾰족한 지붕을 가진 프리즘 형태의 외형 건물이다.
- 9개로 나누어진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전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으며, 나치의 권력 부상, 유대인 추적, 유대인 거주 지역(ghetto)으로의 추방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치의 유대인 학살 계획인 'The Final Solution'과 대량 학살로 끝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대인 공동체 이야기와 연계시킨다.

표 72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유형/위치	전시 내용
상설 전시	-가해자의 박해, 희생자의 고난 그 자체가 아닌 '유대인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유대인 학살 기록과 사진, 증언, 유물의 절묘한 조화로 사실감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전시하고 있음
별 관	-당시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 박물관 끝에 있는 '이름의 전당(Hall of Names)'은 둥근 벽면 전체에 가족과 친척들에 의해 제출된 홀로코스트 희생자 300만 명 이상의 얼굴이 채워진 원뿔형 탑이다. 모든 희생자에겐 이름이 있다는 점을 기본개념으로 삼아 인적 사항과 사진을 전시한다.

〈그림 2-26〉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전시(아카이브) 내용



- 야드바셈 박물관에서는 별도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홀로코스트에 관한 증언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해 아카이브 내용을 전시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8. (헝가리) 부다페스트 테러하우스

〈그림 2-27〉 헝가리 부다페스트 테러하우스 전경



- 헝가리의 2022년 명목 GDP는 1,846억 USD로 56위이고 1인당 명목 GDP는 18,982달러 (인구 : 960만 명), 53위이다.
- 인권 지수로 본다면, 프리덤하우스(FH) 참정권 및 시민 자유권 지수(2022) 기준으로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60점 만점에 43점,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아 총 69점으로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자유 수준을 누리는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에 분류되어 있다.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2022) 에서는 6.56점으로 55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는 언론자유지수(RWB)(2022)에서 헝가리는 ‘가시적인(noticeable) 문제’에 해당되는 59.80점을 받아 85위를 차지했다.

- 2002년 개관한 부다페스트 테러하우스는 제2차 세계대전과 공산 체제에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 당시 실제 나치가 사용하던 건물에 세워졌다. 이 건물은 1880년 최초 아파트로 세워졌으나 훗날 헝가리 나치가 유대인 탄압을 위해 이곳에 지하 감옥을 만들어 공산 정권하에서도 1956년까지 헝가리 비밀경찰 본부로 사용됐다.
- 국가폭력의 현장을 역사적 장소성을 갖춘 기억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나치에 부역한 화살십자가당과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 정권 치하의 범죄라는 이중의 과거사를 기억하기 위한 성찰적 장소로서, 안드라시 거리의 메인로드에 위치한다. 리모델링 시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다.
- 부다페스트 테러하우스 1층 로비에는 헝가리 자유화 봉기를 진압한 T-54 소련군 전차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벽에는 수많은 희생자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 공간은 현악 오케스트라 연주를 활용하여 사건을 청각과 시각으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거대한 오브제가 전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

표 73 부다페스트 테러하우스 전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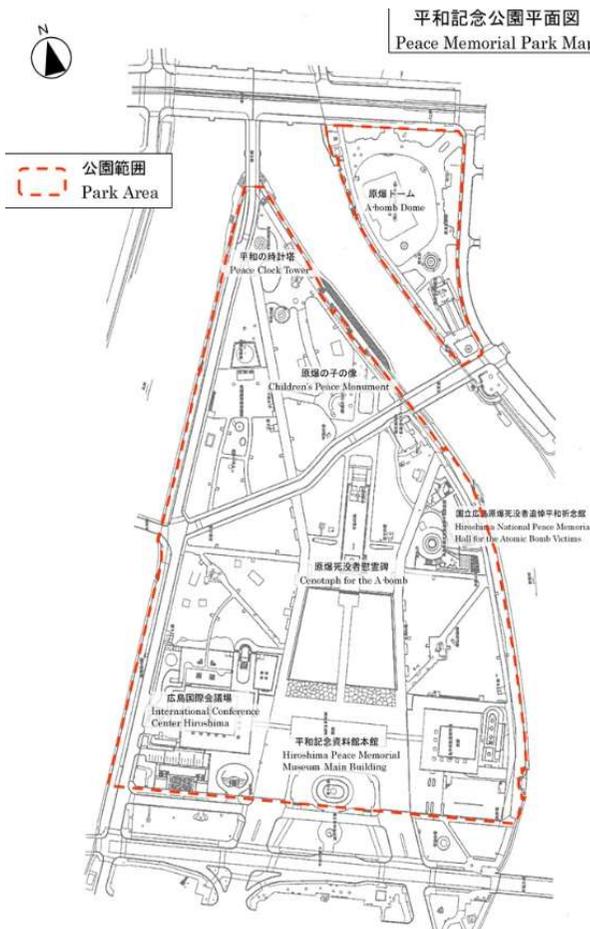
유형	위치	활동 내용
상설전시	3층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 - 굴라그와 소련 강제 노동자 수용소 홀 - 공산주의에 대한 헝가리의 저항
	2층	총 12개의 섹션으로 구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취조당한 취조실 - 헝가리 정치 경찰 연대사 - 국가보호당국의 무서운 지도자 가보르 페테르의 방
	1층(로비)	- 전시실
	지하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 - 재건된 교도소 감방 - 희생자 갤러리
임시전시		- THE MOST MODERN OF HUNGARIAN WOMEN - MARGIT SLACHTA

9. (일본) 국립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国立広島原爆死没者追悼平和祈念館)

〈그림 2-28〉 국립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 전경



- 일본의 2022년 명목 GDP는 4.300조 USD로 3위이고 1인당 명목 GDP는 34,358 달러 (인구 : 12,536만 명), 28위이다.
- 인권 지수로 본다면, 프리덤하우스(FH) 참정권 및 시민자유권 지수(2022) 기준으로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60점 만점에 56점,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아 총 96점으로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자유로운 국가(free)'에 분류되어 있다.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 (2022)에서는 8.13점으로 21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는 언론자유지수(RWB)(2022)에서 일본은 '가시적인 (noticeable) 문제'에 해당하는 64.37점을 받아 71위를 차지했다.



- 1956년에 설립된 일본 히로시마에 위치한 국립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은 1945년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공격을 받은 도시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배경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평화를 키워드로 평화의 샘, 평화의 시계탑 등 평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념물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공간 조성은 과거 건물의 흔적은 그대로 보존한 채 기념물로 유지하며 신축 건물로 활용한 방식으로 지어졌다.

- 원자폭탄 공격 후, 남은 잔해를 그대로 보존한 원자폭탄 돔과 평화의 등불과 같은 기념물 등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원폭 돔, 평화기념관이 내부에 있다. 평화기념 공원은 동관과 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관에서 관람을 시작하면 본관 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림 2-29〉 국립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공원 내 본관(평화기념관) 전경



표 74 국립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전시 프로그램

유형	위치	전시 내용
동관	지하	- 히로시마 시민, 어린이가 그린 원자폭탄 그림 - 원자폭탄 관련 피폭자 사연, 옷가지 등 기획전시
	1층	- 매표소 위치
	2~3층 전시장	-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후, 재건 과정을 사진, 모형, 수기 등을 통해 연표로 보여주고 있음
본관	1층	- 히로시마의 현장 사진과 피해 입은 물건 전시 (사람의 그림자가 새겨진 돌, 화상과 부상에 신음하는 피폭자 사진, 피폭된 세 발 자전거, 피폭 여파로 머리털이 빠진 남매)

- 국립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는 기념관 내 일부 시설을 할애해, 사망자를 추모하고 참화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며, 체험을 후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관람객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아카이브/콘텐츠화 작업을 통해 이야기를 모으고 기록하며 당사자(피해자)에게도 실효성 있는/의미 있는 공간이 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표 75 국립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지원사업

사업명	내용
원폭 사망자 등록	- 원폭 사망자를 추모하고 원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 원폭 사망자의 이름과 유영(사진)을 등록해, 기념관에서 공개·영구 보존함
피폭 체험기 수집	- 체험기를 수집하고 관내의 열람 장치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
피폭 체험기 낭독회	- 피폭자의 기억이나 생각을 공유해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피폭 체험기나 원폭 시의 낭독회를 개최함
피폭 체험 전승자 파견 사업	- 피폭자의 체험이나 평화에 대한 생각을 차세대에 이어 받기 위해 피폭 체험 증언자(피폭자 본인), 피폭 체험 전승자(히로시마시에서 양성), 낭독 자원봉사를 파견함
피폭 체험기 작성 지원사업	- 피폭자의 기억을 체험기로 남기고 싶지만 문장 작성이 어려운 피폭자를 대상으로 체험기 정리를 지원함
피폭 증언 영상 제작	- 피폭자의 체험담을 비디오로 수록해 자료로 보존하고 관내외에 공개함
외국어 번역 지원	- 피해자들이 혼자서도 많은 사람에게 피폭의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체험기, 리플릿을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평화 학습 세미나	- 학교 관계자, 여행자(교육 여행 부문) 등을 대상으로 히로시마에서의 평화 학습과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영화 제작 및 상영	- 국립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 제작, 소개하는 「기억과의 만남」(약 9분)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10. (대만) 국가인권박물관(國家人權博物館)

〈그림 2-30〉 국가인권박물관(뤼다오 기념구역) 전경



〈그림 2-31〉 국가인권박물관(징메이 기념구역) 입구



- 대만의 2022년 명목 GDP는 7,855억 USD로 21위이고 1인당 명목 GDP는 35,513 달러 (인구 : 2,345만 명), 27위이다.
- 인권 지수로 본다면, 프리덤하우스(FH) 참정권 및 시민자 유권 지수(2022) 기준으로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60점 만점에 56점,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38점을 받아 총 94점으로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자유로운 국가(free)'에 분류되어 있다.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 (2022)에서는 8.94점으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는 언론자유지수(RWB)(2022)에서 대만은 '가시적인 (noticeable) 문제'에 해당하는 74.08점을 받아 38위를 차지했다.

- 대만에는 국민당의 백색공포 통치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 박물관이 2018년 3월 15일 정식 출범하여 '뤼다오 기념구역'과 '징메이 기념 구역' 두 군데 설립되어 있다. 대만에 대한 인권침해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박물관이다.
- 뤼다오는 타이둥에서 동쪽으로 약 33km 떨어진 섬으로 부지 면적은 약 320,000㎡ 크기이며, 백색공포 시기 정치범들의 징역형이 집행된 주요 교도소다. 징메이 기념구역은 원래 군법 학교의 학사 부지였던 곳이었으며 백색공포 시기 정치범을 잡아들이고 심판하고 교도소 업무를 수행했던 곳이다. 당시 정치범들이 생활했던 수용소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놓고 있다.
- 기존 시설 개축 시 국가와 지방정부의 주관하에 피해자, 사건 전문가, 건축가 등 전문가들이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원칙과 방향(기념, 교육, 문화)을 정해 운영과 전시 내용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전시는 당대 이슈와 연관돼 있거나 특정 인권영역을 조명하기 위한 특별전시로 진행되며, 호평을 받은 일부 전시회의 경우 모바일로 제공된다.

표 76 국가인권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전시 명	전시 내용	전시 기간
백성을 치유하고 세상을 지배한 일루미나티 - 백색테러 시대 의사들의 집단초상화 특별전	- 대만의 백색 테러 기간 동안 의료 윤리로 세계를 도운 병원, 의과대학, 공중 보건 분야에 존재했던 지식인들을 조명함	2022.05.01.~ 2023.03.26.
자유로운 영혼 대 독재자: 대만의 표현의 자유로 가는 길	- 언론탐압체제의 형성부터 1991년 내란죄 처벌법의 폐지와, 1992년 형법 100조의 개정을 포함해 대만의 언론 자유 과정에 초점을 맞춤	2022.04.07.~ 2024.04.07.
백색 테러 역사 현장: 백색 테러 징메이 기념 공원 테마 전시회	- 백색 테러의 복잡한 역사에 대해 체계적이고 맥락적인 소개를 제공, 권위주의 통치의 인권유린을 이해한 후 현재와 연관성을 성찰하도록 안내함	2021.07.26.~ 2025.12.31.

- 이 외에도 국립인권박물관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건조사, 배상, 기념사업, 명예 회복 사업, 기념관 운영 등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만국제인권영화제와 인권예술생활축제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영화제와 축제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과, 모든 사업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법인이 맡아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표 77 국가인권박물관 주최 인권예술생활축제(2022) 전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진행 기간
개막공연 '메모리 내비게이션'	- 오랫동안 인권과 공익 문제에 고민하고 헌신해온 'Memory Navigator'가 시대를 반영하는 연주를 진행함	2022.11.19.
친자극장 '파라다이스 동물원 :	- 민족 집단의 통합을 탐구하는 현대 사회의 우화로 다양한 관계에서의	2022.11.19.~ 2022.11.20.

프로그램명	내용	진행 기간
진주밀크티 사건	관용, 배려, 이해를 풀어냄	
전시 '조화와 영광- 황국채의 저항 미술전'	- 2019년 홍콩 '송환 반대 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 시위 소품 등을 전시함	2022.11.19.~ 2022.12.10.
토론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전시 내용과 연계해 예술가가 홍콩의 사회 및 정치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액션아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도전을 설명하고, 축적된 수년간의 저항 예술 이론 경험을 공유함	2022.11.20.
댄스 공연 '릴리, 유리- 그녀는 어디로 갈까'	- 안무가 임준위의 가족사와 여성의 부족 이야기를 미니어처로 결합해 개인의 삶의 경험과 자본화된 지역사를 엮은 공연을 선보임	2022.11.26.~ 2022.11.27.
뮤직비디오 '레퀴엠'	- 상실과 이별에 대한 기억과 희망,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감정을 가상의 장례식으로 승화시키며 인권 문제와 연계한 뮤직비디오를 소개함	2022.11.27., 2022.12.10
진면극장 '황홀경' 낭독공연	- 네 명의 귀신에게 빙의된 주인공 샤오화를 통해 대만에서 억압받는 소수 민족의 역사적 파편을 해석함	2022.12.03.~ 2022.12.04
소설전 '빈 기억'	- 백색테러 시대 관련 소재를 창작의 기본 자양분으로 선별하기 위해 강연, 현장 탐방, 북클럽 형식으로 정리함	2022.12.10.
인권 바자회	-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입증하고 세대 간 대화와 현지 경험 공유의 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도서 및 문화 창의 상품을 판매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제공함	2022.12.10.

인권체험관 종합진단

인권체험관 담당자 의견수렴

전문가 워킹그룹 의견수렴

인권체험관 운영환경 분석

인권체험관 종합적 진단

인권체험관 필요성·타당성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1. 인권체험관 담당자 의견수렴

현황 및 성과 분석 과정에서 서면으로 확인하기 힘든 인권체험관의 시설과 운영 현황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다섯 개 인권체험관을 방문해 현장 답사와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권체험관 담당자 및 인권사무소 팀장 등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권체험관과 관련한 이슈와 개선지점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체험관의 역할 및 방향성, 종합 발전을 위한 단계적 전략, 인권체험관 운영 프로그램에 참고할 만한 타 부처 사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회의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과정과 회의에서 도출된 이슈는 아래와 같다.

1] 입지 및 공간

- 넓은 대상 지역과 낮은 접근성. 인근 기관·시설과의 연계 불가능
 - 인권체험관의 대상지가 지역별 인권사무소의 관할구역과 일치함. 현재 인권체험관이 조성돼 있지 않은 수도권은 대전인권체험관이나 강원인권체험관에, 제주 지역은 광주인권테마역사까지 가야 할 수밖에 없음
 - 강원 지역의 경우 넓은 면적이 고려되지 않고 한 개의 체험관만이 운영되고 있음 (속초나 철원으로부터 강원인권체험관이 위치한 원주까지의 거리는 약 170km로, 자동차로 약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됨)
 - 또한 대부분의 체험관이 유동 인구가 적고 도심으로부터 떨어진 그곳에 있어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지역 내부에서도 방문이 어려움
 - 인권체험관 방문 후 체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관련 시설이나 역사적 장소에 방문하는 경로가 고려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로 인해 동선 설계가 어려움
 - 광주인권테마역사에는 광주 내 위치한 인권 관련 유적지의 정보를 담은 안내문과 지도를 전시해두고 있으나 인권체험관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 연계 방문이 어려움 (안내된 인권유적지까지의 거리는 7~18km, 차량 이동 시 20분~30분 소요됨)

- 대전인권체험관의 경우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기 전 옛 충남도청 자리에 위치해, 인접한 대전근현대사전시관과 (구) 충남도지사 집무실로 이어지는 활동 경로를 설계할 수 있었음. 현재 인근에 인권 관련/체험시설이 부재한 시청역 지하로 이동하며 외부와의 연계 활동 경로를 설계하기 어려워짐

〈그림 3-2〉 광주인권테마역사 내 인권유적지 안내문과 인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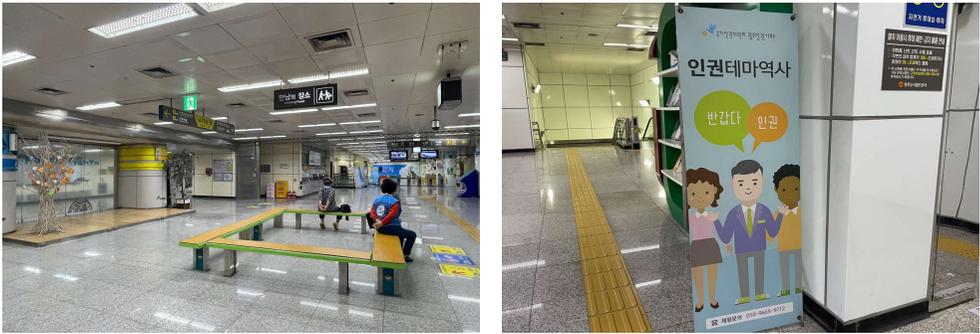


- 좁은 면적, 냉난방 및 온도 문제, 미세먼지, 습기 등 프로그램 진행과 전시에 열악한 환경
 - 인권체험관의 면적은 37~50.5평으로, 다른 체험시설에 비해 협소함. 광주인권테마역사와 부산인권전시관의 경우 각 101.3평, 78.7평으로 계산되나, 이는 역사 내 전체 면적 값에 해당하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음
 - 지하철역 지하 1층 개찰구 인근에 있는 광주인권테마역사와 지하철역 지하 2층 중층 통로에 있는 부산인권전시관의 경우 타 인권체험관과 달리 보행 통로 및 지하철 이용 공간과 분리돼 있지 않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 장소로 활용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존재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지하 공간이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으로 지상부와 연결돼 있어 실질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기는 1년 중 5개월(4, 5, 6, 9, 10월)에 불과하며, 역사 내 통로를 활용하다 보니 교구는 물론이고 책걸상의 배치도 어려움. 또한 역사 내 안내방송 및 지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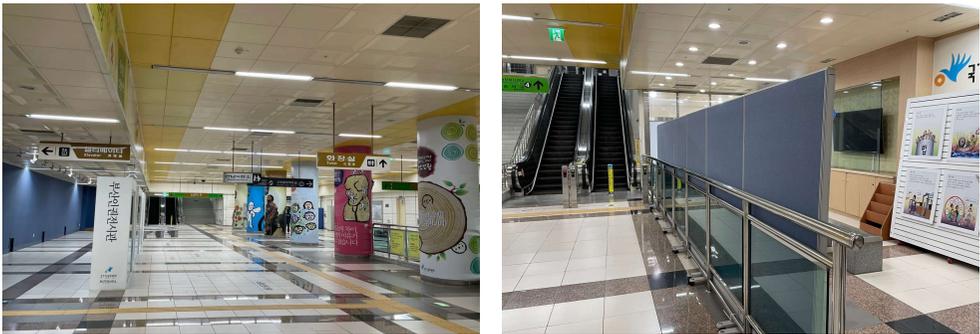
이용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체험에 몰입하기가 힘든 환경임

- 지하 공간 특성상 미세먼지와 습기로 인해 체험 및 전시용으로 비치된 시설물과 자료, 작품 등의 자연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 전시도 조형물 설치가 불가능해 사진·인쇄 자료만을 전시해옴

〈그림 3-3〉 광주인권테마역사 체험 공간 및 보행자 통로



〈그림 3-4〉 부산인권전시관 체험 공간 및 보행자 통로



〈그림 3-5〉 광주인권테마역사 내 전시품 손상 상태



-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접근권을 고려하지 못한 공간과 시설

- 방문객 중 장애인이 존재하지만, 인권체험관 조성 시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하드웨어가 구축되지 못함. 광주인권테마역사와 부산인권전시관의 경우 역사 내 엘리베이터와 시각 장애인용 유도 블록이 설치돼 있으나, 체험을 돕는 점자 안내도나 점자 안내판, 음성 유도장치 등은 설치돼 있지 않음. 대전인권체험관과 대구별별인권체험관, 강원인권체험관도 마찬가지임
- 공간과 시설의 한계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함
- ‘인권’ 체험관의 운영 목적과 방문 현황을 고려했을 때 배리어프리를 넘어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그림 3-6〉 대전인권체험관 내부



〈그림 3-7〉 대구별별인권체험관 내부



- 프로그램 진행/업무 환경이 확보된 인권사무소로 이동하며 부담 발생

- 대구별별인권체험관을 제외하고는 체험관에서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음. 역사 또는 체험관 내 PC가 마련돼 있으나, 인터넷 연결과 내부망 접속이 어려움. 일례로 강원인권사무소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강원인권체험관에서는 PC로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받을 수 없어 담당자가 사무소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해야 함

- 광주인권테마역사와 부산인권전시관에서는 90분가량의 체험 프로그램을 역사 내에서만 진행하기가 어려워 인권사무소로 이동해 활동을 이어감. 긴 이동 시간 동안(광주인권테마역사의 경우 인권사무소와 7.6km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20분 이상 소요됨) 체험의 몰입도가 떨어짐은 물론이고, 이동 시 안전상의 문제가 고려됨
- 임대 공간과 적은 예산으로 구조물 변경·전시물 갱신이 불가능
 - 체험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시, 교육청, 도시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임대한 공간이기에 독단적으로 구조물이나 시설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임
 - 광주인권테마역사의 경우 2008년에 설치된 전시물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광주인권사무소-도시철도공사-광주시청 등 이해당사자가 얽혀있고, 작품의 변경·철거 시 작가로부터의 동의도 필요해 논의도 어려운 실정임
 - 또한 하드웨어 정비에 쓸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해 인권체험관을 관리하고 수선하기가 어려움. 대구별별인권체험관의 경우 매년 예산이 들어올 때마다 외벽을 바꾸는 등 소규모의 공사로 리모델링을 진행해옴
- 공간의 추가 확보 불가
 - 부산인권전시관은 전시관이 위치한 물만골역 인근 공간을 추가로 임대해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 사용하려 했으나, 조건에 맞는 공간의 부재, 예산 부족, 인권사무소 내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됨

② 예산 및 인력

- 인권체험관 사업 예산 내 담당자 인건비 포함, 프로그램 운영 가용 예산은 5~700만 원에 불과

-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인권체험관 운영 예산 중 대부분이 하드웨어 조성 비용과 담당자 인건비였음. 겉으로 보기엔 비용이 많아 보이지만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함
 - 인권체험관 운영 예산 중 업무추진비, 시설유지비, 통신비 등을 제외한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는 연간 5~700만 원에 불과함. 적은 비용으로 프로그램 개발, 물품 구매, 강사 섭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담당자 한 명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인권사무소 업무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
 - 현재 지역별 체험관 담당자는 한 명씩 배치돼 있으나, 혼자서 인권체험관 운영 과정에 대응하기는 어려움. 일례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철 역사에 위치하는 광주인권테마역사와 부산인권전시관, 대전인권체험관의 경우 담당자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땐 다른 방문객을 응대할 수 없어 본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움
 - 사업 추진비가 부족해 각 체험관 담당자들은 혼자서 체험관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뿐 아닌 프로그램 기획과 교보재 제작, 홍보 업무, 시설 정비와 청소 등을 전담해옴. 유사 시설의 경우 행정·프로그램 기획자·운영자·홍보 담당자가 별개로 존재하나 체험관은 담당자 혼자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옴
 - 또한 담당자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고용불안정으로 (체험관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담당자가 조사 및 진정, 홍보, 도서관 운영과 같은 인권사무소 업무를 병행해옴
- **대체인력의 부재와 협업파트너(강사) 확보의 어려움**
 - 체험관마다 담당자가 한 명뿐이어서, 부재 시 모든 업무 대응이 불가능해짐
 - 대전인권체험관과 강원인권체험관에서는 사회복지무요원이 체험관 시설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교보재 제작·홍보 업무의 경우

여전히 체험관 담당자 혼자서 전담하고 있음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성된 지역 인권 강사들을 대상으로 인권체험관 강사단이 꾸려졌고 이들이 인권체험관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2년간 협업파트너로 활동해왔으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접 교육이 축소되며 협업 파트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 내 청소년·장애인 단체/기관을 통해 강사 인력을 연계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진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하지만, 사례비로 줄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해 인력을 상시 확보하기는 어려움 (현재 강사에게도 자원 봉사비 명목으로 일급 5만 원이 지급됨)
 - 인권 강사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별도의 교육과 피드백이 필요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과정의 부재, 담당자 간 소통에 의존해 정보 공유**
 - 담당자의 책임이 과중한 것에 비해, 전문성을 쌓기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등의 과정이 부재함. 입사 초기 워크숍이 진행되긴 했으나 체험관 운영을 위한 내용의 강의는 아니었음
 -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사무소에서도 체험관 업무를 담당해 본 사람이 없어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상황임. 결국 지역별 체험관 담당자끼리 연계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음
 - 체험관 방문자의 연령층과 특성이 다양하고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프로세스가 없어 오직 담당자의 판단 아래 모든 프로그램이 짜이고 있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담당자끼리 견학을 다니기도 했지만, 보다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역량 강화 과정이 필요함

③ 프로그램 개발·진행

- 각 체험관에서 비용을 각출, 담당자들이 직접 프로그램과 체험 키트를 개발
 - 사업 추진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임에도, 운영 실적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활동이 계속해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임. 각 체험관이 비용을 각출해 프로그램과 교보재를 개발해옴
 -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연장될 것을 고려해 별별인권스텝투어(온라인)와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고, 각 체험관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 키트를 제작함. 구성과 내용부터 디자인까지 담당자들이 전담하고, 인쇄만 외부 업체에 맡기며 제작 비용을 줄였음
- ‘실효적’(참여자들의 공감)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 지점이 존재
 - ‘인권’도 모호한 개념인데,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이 어려움
 -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체험이라기보단, 체험의 요소가 가미된 강의와 교육에 가깝다고 판단됨. 어디에서 체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가 고민임
 - 실효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참여자들이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당장 연대·투쟁을 이야기하기엔 괴리감이 생김. 결국 일상에서의 인권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다음으로 실천, 행동, 연대, 투쟁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하지만, 방법이 부재함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 솔로몬로파크 등 다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 또한 실정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의 역사나 이슈와 연계한 프로그램 필요
 - 지역의 역사적·상징적 이슈들을 활용하며 지역의 인권 거점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대전에서 대전 교도소 터, 노근리 학살사건 등 국가폭력에 관한 역사를 바탕으로 기념시설이 조성됐을 때, 인권체험관이 이와 연계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역의 특화 콘텐츠나 자원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음
- 지역 내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홍보·협조 요청 정도에 그치는 수준
 - 5개 인권체험관은 지역 내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청·학교, 지역아동센터, 인권 관련 활동단체(기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방문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해옴. 지역별 인권사무소를 통해 MOU를 체결한 곳도 있지만, 실질적인 연계 활동은 홍보 협조 정도에 그치고 있음
 - 부산인권전시관에서는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부산문화재단·지역장애인단체와 함께 공동 전시회를 개최하고, 강원인권사무소에서는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해 결정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10편의 웹툰을 제작하기도 했으나 체험관 단위에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일회적 행사로 마무리됨

4 실적

- 체험 프로그램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방문자 수만 집계되고 있는 상황
 - 통상적으로 체험이 교육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교육은 몇 명이 몇 번의 강의를 들었는지 비교적 쉽게 결과를 산출할 수 있지만, 체험은 그 효과를 바로 이야기할 수 없음. 그런데도 실질적인 아웃풋을 즉시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성과를 내야 함
 - 현재 방문자 수를 집계해 정량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이만으로는 체험 활동의 효능을 보여주기 어렵다 판단됨
- 예산 및 인력, 지역 특성 등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 기준

- 인권체험관은 타 체험관에 비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체험관으로 분류돼 비슷한 성과를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배후 인구수,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 기준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강원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가 적고, 물리적 거리도 있기에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 수치로만 비교되는 문제가 있음
- 정성적 성과 도출을 위해 방문객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실효적이지 못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요구로 자체적인 응답 체험 후기 조사가 시행되었으나, 설문 설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현황 진단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움
 - 체험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방문객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조사가 시행됨.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로 방문자 수도 줄었고, 지역별로 샘플 수도 상이해 결과 값을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실적 압박으로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지만 인권사무소 내 교육센터 프로그램과 기능이 중복
 - 운영 실적을 채우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관(혐오차별 교육)과 같은 방안을 만들고 있으나, 인권사무소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인권 교육과정(대상 특화 교육, 강의 및 토론으로 진행)과 중복됨

5 인권체험관 위상 및 역할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사무소 내 전담 부서와 운영 규정의 부재
 - 인권위원회에 기획과나 운영과가 있지만, 체험관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관할 부서)와 관련 규정이 부재함

- 지역 인권사무소에서도 교육·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돼, 주요 업무가 아닌 체험관에 대한 관심이 적음. 소장을 포함한 책임자가 로테이션하는 과정에서, 본인 임기 동안 체험관을 건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인권체험관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담당자들의 고용 구조(계약직)로 인해 예산 확대나 존폐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존재했음
 - 인권사무소 내 작은 규모의 도서관도 규정이 있는데,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권체험관은 업무 내용과 역할이 명시된 규정이 부재해 업무 대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본계획 없이 하드웨어가 조성되고 ‘체험관’으로 명칭, 실제 운영 내용과의 괴리가 존재
 - 광주인권사무소와 부산인권사무소는 인권사무소의 활동을 홍보하고 인권과 관련한 예술작품·자료 등을 전시할 목적으로 각각 현 위치에 2008년 10월 광주 인권테마역사와 2010년 4월 부산인권전시관을 개관함. 이후 2013년 대구별별 인권체험관, 2016년 대전인권체험관, 2019년 강원인권체험관이 개관함에 따라 ‘인권체험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돼 운영 예산이 수립됨
 - 설립 목적과 이에 따른 공간·타겟·프로그램 진행 여부 및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명칭으로 인해 동일한 운영 체계가 적용·동일한 성과를 요구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례로 광주인권테마역사와 부산인권전시관은 시설 측면에서 인권체험을 위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체험관의 실적을 동일하게 요구받으며 인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
 - 모든 체험관이 사전 연구나 운영계획 없이 공간부터 조성됨. 완성된 하드웨어에 담당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 내용을 채워넣다보니 한계가 발생함

- **교육의 보완이나 대안 과정으로 지역별 체험관의 운영 필요성은 절감**
 - 체험관의 운영현황과 프로그램이 열악하더라도,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체험관 운영은 필수적임.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인권교육의 보완이나 대안을 위한 공간으로 체험관이 역할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 운영의 한계와 시민적 공감대가 낮음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권 체험관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인권 자체가 국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함. 예약 방문자를 제외한 일 방문자 수를 봤을 때에도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점별로, 지역별로 반드시 필요함
- **다른 체험관과 내용·규모에 차이가 존재하기에 인권체험관만의 전략 도출 필요**
 - 인권체험관이 다른 체험관과는 내용이나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어, 사례를 참고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별도의 진단과 전략이 필요함
 - 현실적인 예산과 운영현황을 고려해 한 개의 체험관에 예산과 인력을 몰아 상징적인 성공 사례를 남기고 이를 추후 지역별 체험관으로 흩어지게 하는 등의 단계별 전략이 고려될 수 있음
- **인권체험관의 현황과 역할에 맞지 않는 명칭 수정 필요**
 - 현재 운영현황을 살폈을 때 체험관이란 이름은 너무 거창함. 체험실, 센터 등 역할과 규모에 맞는 명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명칭에 따라 보다 낮은 단계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명칭에 맞는 최소한의 인력과 규모가 보장되는 등 정비 과정이 필요함
- **인권을 일상에 접목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 할 필요**

- 인권체험관은 교육 과정에서 텍스트로만 배워온 인권을, 삶에 접목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 해야 함. 초등 4,5학년 교과서에 인권 관련 챕터가 있고 인권이 어떤 것인지도 정의 내려져 있지만, 삶에 접목시키는 꾸준한 방법이 없음. 교육에서 인권을 접하고 그 이상 못하는 것들을 체험관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가 인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나와 떨어진, 분리된 것으로 인권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음. 인권을 나와 '연결'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미술관·박물관과 같이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II. 전문가 워킹그룹 의견수렴

인권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도출된 가장 큰 쟁점은 인권체험관의 위상과 역할이었다. 따라서 전문가 워킹그룹 집중 워크숍과 수시 논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도 인권체험관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 이를테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적 지지, 시민들이 인권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감각, 인권이 다루어지는 정책과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1] 인권체험관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 관련

●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내 인권체험관을 관할하는 부서와 규정이 부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3부에 독립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체험관이 운영된 지 1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체험관의 조직 구조, 규모,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명확히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인권위가 더 광범위하게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얻는 방법을 놓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인권체험관을 만든 목적이 더 많은 국민이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보편적으로 합의하기 위함이라면, 보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인권 수요자를 바라봐야 함
- 인권체험관이 다루고 있는 영역은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운동가, 기관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낮은 차원의 개개인인바, 개인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권위 차원에서 정부 부처,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인권체험 수요자와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함

● **인권적 문제의 방관자에서 직접적인 관계자로 시민들을 호명하는 인권체험**

- 인권체험관 방문자 중 66.0%가 미성년자, 34.0%가 성인자임
- 성인 방문자 중 57.8%가 경찰, 지자체, 공공기관, 군인, 교사 등 공공영역 종사자임
-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교육, 정보 제공에서는 시민들을 인권 문제의 방관자 혹은 수동적인 존재로 호명함. 인권에 대한 이슈를 맞닥뜨리면 죄책감을 들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 인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나’에 대입하게 하는 것이 인권체험의 중요한 과제임. 내 문제, 가족 문제, 친구 문제, 동네 문제 등 이러한 관계 안에서의 문제들로 해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인권위에서도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거나 이슈화하는 활동을 지속해 온 바,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짐. 인권 이슈와 관계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인권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체험의 고유성임

● **인권체험관의 지역과 일상에서의 역할**

- 교육을 넘어, 실효적인 체험을 제공하고자 인권을 일상·지역과 연결하기 위한 담당자들의 고민이 존재함
-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적 트렌드에서 광역 단위의 사업적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인권위 차원에서 지자체 및 광역교육청 등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인권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함. 문체부(생활문화센터) 등 타 부처의 사례를 참고하여 광역-기초 단위에서 인권체험관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임
- 인권이란 말이 굉장히 사건적인 느낌을 들게 함. 차별, 배제, 이슈, 의제, 사건

이라는 말과 이미지가 몽뚱그려져 있다는 게 어려운 지점임. 인권에 대한 문제를 표면적, 계몽적 문제로부터 가져와 개별적·직접적·일상적·구체적인 영역에서 보편적 사실이 되게 하려면, 보편적인 상식으로 느껴지게 해야 함. 그게 인권 체험에 있어서 인권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인권체험에서 사건과 이슈 당사자, 법리와 절차 중심의 인권을 다룬다면, 일상적 영역에서 인권을 만나거나 다룰 일이 없어져 버림. 인권 이슈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나로부터 인권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일상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함. 상식과 태도가 쌓여야 법리적 구조 안에서도 인권을 판단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음
- 이슈 대응, 가해자·피해자, 당사자 중심의 구조로 가다 보니 훨씬 더 많은 방관자와 무뎠던 자들은 만들어냈던 것 같음. 이제는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감수성 교육부터 시작해, 일상의 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에 있어야 한국 사회에 성숙한 인권 감수성이 작동될 것임
- 궁극적으로 인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녹아들어 공기 같은 것이 되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함. 인권을 일상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자는 이야기고, 커뮤니티 안에서 분해, 썩어 거름이 되게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야기임
- 존엄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종에 대한 존엄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모든 환경의 주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 맺게 할 것 이냐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듦. 나의 일상과 인권으로 오도록 존엄한 경계를 들여다 보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인권체험을 통해 공동체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서 인권체험을 고민 해야 함. 개인적인 삶의 질 영역에서 확장돼 공동체의 품격으로 접근하는 게 옳은 방식임

② 인권체험관의 역할과 기능 관련

● 지역 인권의 허브로서 역할 정립 필요

- 지역 내 기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 있었으나, 홍보·참여 협조 요청 외 지속적인 연계 내용은 부재함

- 인권체험을 위한 거점 공간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인권과 관련된 기억의 장소,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만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음.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 문제의 당사자들이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고 시민들과 더불어 미래 인권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당사자들과 함께 인권 문제에 접근하여 인권이 가진 법적, 행정적, 정치적 힘을 체험할 때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음
- 인권체험 제공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이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지역의 인권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해서 기관을 구성하는 공간과 내용에 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역량을 높여야 함
- 지역 인권의 허브로서 인권과 관련한 공간, 인력, 프로그램, 운영 체계 등 모든 영역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함 (예를 들어 문턱 없애기, 우회로 안내, 외국어 통 번역 서비스 제공, 성 중립 화장실 등)

● 인권체험관의 역할과 위상을 뒷받침할 규모와 지역적 범위 설정 필요

- 넓은 대상 지역, 낮은 접근성, 좁은 면적, 냉난방 및 온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이동이나 구조 변경이 불가능함

- <광역 단위> 현재 광역별로 존재하는 인권체험관은 인권체험이 갖는 필요성과 그 가치에 비해 규모와 환경적으로 열악함. 협소한 공간,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와 맞물려 인권체험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임.

광역별로 하나씩 존재하는 인권체험관이라면, 지역 내에서 갖는 대표적인 인권 기구라는 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장된 공간과 새로운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 강원 지역의 경우 속초나 철원에서 인권체험관이 위치한 원주까지 오기 위해 170km, 자동차로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됨

- <중/남부 단위> 현재 인권사무소에서 광역 단위를 관할하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인권체험 업무 역시 각 인권사무소에서 인력을 배정하여 수행하고 있는바, 인력과 예산의 분산이 발생함. 경기(수도권), 강원, 충청 권역을 범위로 하는 중부권, 경상, 전라, 제주 권역을 범위로 하는 남부권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인권체험 기능을 통합한 규모의 시설을 운영함을 고려할 필요 있음. 다만 적지 않은 예산과 건립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점진적인 구축이 필요함
- <기초·생활권 범위> 광역마다 1개소씩 운영되는 인권체험관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입지, 공간, 운영인력 차원에서 지역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기 힘들. 광역 단위의 인권체험관 운영과 더불어, 광역보다 더 작은 지역단위에서 역사적 공간,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단순히 기초 자치단체라는 행정적인 구분을 넘어선 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하이퍼로컬, 2~3개의 기초 단위를 묶는 생활권 범위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인권체험관 프로그램 기본 방향 관련

● 지식·절차·법리적 관점의 인권교육과 차별화된 방식의 체험 필요

- 현재 인권체험관의 프로그램은 보다 체험의 요소가 가미된 강의로, 지역별 인권사무소 내 인권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 중임

-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이 절차적

인권과 지식으로서의 인권을 강조했다면 실질적 민주주의로서 인권체험이 이루어져야 함. 체험 참여자를 인권체험의 당사자로 호명하며 삶에 스며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인권체험관을 상정해야 함

- 인권을 통한 삶의 변화는 서로 다른 인권적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인정을 통해서 가능함. 경험의 방식은 개개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롤플레잉(role-playing)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바, 인권체험을 통한 개개인의 인권적 삶 영위를 위해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상대성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상대성 관점에서 진행되는 인권 체험은 인권을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문화적인 접근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인권침해 사례 아카이브 활용 및 공유 방안으로서 인권체험

- 모든 체험 프로그램과 교보재를 체험관 담당자가 별도의 역량 강화 과정 없이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활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정도임. 첫 번째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과 구제 사례를 통한 학습이고 두 번째는 인권의 범주별로 묶어서 개념화된 사례를 활용하는 방식임. 두 가지 사례 활용 모두 인권 문제의 당사자를 타자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점, 관찰자와 외부자적 입장에서 인권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짐. 또한 당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동의 없이 관련 사례를 체험 및 교육 목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자칫 또 다른 2차 가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파편화된 사건의 장면이 아니라 인권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당사자로서 인권 체험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소수의 문제를 체험자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인권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음

- 현재 결정례 등에서 다룬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권침해 사례와 이를 위해 투쟁한 주체들과의 연대 등이 체험 프로그램에 녹여질 수 있음

III. 인권체험관 운영환경 분석

인권체험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험관의 운영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닐 코틀러와 필립 코틀러가 『박물관 전략과 마케팅(Museum Strategy and Marketing)』(Jossey-Bass Publishers, 1998)에서 제시한 전략적 시장 계획 시스템(strategic market planning system) 에 기반을 둔 것이다.

표 78 인권체험관 운영환경의 범주 구분

구분	정의
내부 환경 (internal environment)	국가인권위원회·인권사무소 등 조직의 성격과 역할, 인권체험관의 인력 및 예산, 국가인권위원회 내 타 조직
시장 환경 (market environment)	인권체험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대상이 되는 단체와 조직들 (방문객, 지역 주민, 활동가·단체, 정부기관)
규제 환경 (regulatory environment)	인권체험관이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단체와 조직들
경쟁 환경 (competitive environment)	방문객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인권체험관과 경쟁하는 단체와 조직들
거시 환경 (macro environment)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제공하나, 대체로 통제할 수 없는 인구 통계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과 조건들

1 운영환경 분석 시사점

표 79 인권체험관의 기회요인과 위기 요인

구분	기회요인	위기 요인
내부 환경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의 설립 배경 -체험 프로그램 원천소스	-전문 인력 부족 -조직 미정비 -시설 열악 -운영 예산의 부족 -타 기구 조직과 역할 중복
시장 환경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 및 체험교육 수요 증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구심적 역할 -국가·지자체 운영 체험 시설의 사례 확보	-수동적인 여가태도 -인권체험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선호
규제 환경	-초광역권의 법적 근거 마련	-예산 및 조직 확대의 어려움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경쟁 환경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체험기능을 포함한 인권영역의 기존 시설
거시 환경	-인권 이슈의 사회적 확산 -새로운 인권적 환경의 조성	-코로나19로 인한 체험형 시설 방문 감소

- 기회요인과 위기 요인은 인권체험관에 각기 다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
- 기회요인의 경우, 성공의 가능성과 잠재적 유인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경중을 구분할 수 있으며, 위기 요인은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경중을 구분할 수 있음

● 기회의인의 경중 분석

- 인권체험관이 갖는 기회의인 중에서 성공 가능성과 잠재적 유인력에 따라 경중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80 기회의인의 경중 분석

구분		성공 가능성 (probability of success)	
		높음	낮음
잠재적 유인력 (potential attractive-ness)	높음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의 건립 배경 -체험 프로그램 원천소스 -인권 이슈의 사회적 확산 -새로운 인권적 환경의 조성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낮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 및 체험교육 수요 증가 -국가 지자체 운영 체험시설의 사례 확보 -초광역권의 법적 근거 마련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구심적 역할

-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유인력이 높은 부문의 요소를 검토함
- 성공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유인력도 높은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의 설립 배경, 체험 프로그램 원천소스, 인권 이슈의 사회적 확산, 새로운 인권적 환경의 조성을 들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의 설립 배경으로 작용한 지역사회와 인권·시민사회 단체의 응원과 지지는 인권체험관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전망이다. 체험 프로그램의 원천소스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그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아카이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생태계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인권 이슈의 사회적 확산을 비롯한 새로운

인권적 환경의 조성은 새로운 시민들로 하여금 인권체험에 관한 니즈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됨

● 위기 요인의 경중 분석

표 81 위기 요인의 경중 분석

구분		발생 가능성(probability of occurrence)	
		높음	낮음
잠재적 강도 (potential severity)	높음	- 열악한 시설 - 인권체험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선호	
	낮음	- 전문 인력 부족 - 운영 예산의 부족 - 예산 및 조직 확대의 어려움 - 조직 미정비 -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 체험기능을 포함한 인권영역의 기존 시설	-타 기구 조직과 역할 중복 -수동적인 여가태도 -코로나19로 인한 체험형 시설 방문 감소

-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서 발생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강도가 높은 부문의 요소를 검토함
- 발생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강도도 높은 경우로 열악한 시설, 인권체험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선호를 들 수 있음
- 열악한 시설과 인권체험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선호는 인권체험관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요인임. 인권체험관 중 일부는 인권체험관에 기대되는 역할의 수행에 있어서 물리적·환경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인권체험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선호는 인권체험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한 발전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한계를 주고 있음

2 내부 환경

인권체험관의 내부 환경 요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의 설립 배경, 전문 인력 부족, 조직 미정비, 운영 예산 부족, 타 기구 조직과 역할 중복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의 설립 배경

- 인권체험관은 민간·지역·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의 배경에서 국제 인권관련 논의와 더불어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1년 설립되었음. 인권사무소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지역순회 인권상담을 통해 시민과 지역 인권단체의 필요와 요구로 설립되었음. 인권체험관이 소속된 인권사무소와 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배경을 감안했을 때 이전보다 전폭적인 시민사회영역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함. 만일 인권체험관의 종합 발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사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이슈 파이팅이 이루어져서 인권체험관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불러일으킨다면 가장 좋은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체험프로그램 원천소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간보고서와 통계·법규집·결정례집·시정권고 사례집·실태조사·인권상황보고서·노인인권종합보고서·혐오표현리포트·인권소식 〈휴먼레터〉 등을 발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소식과 활동 내용을 아카이브 하고 있음. 또한 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담은 격월간지 〈인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잡지와 웹드라마·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도 함. 그 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18가지 차별요소를 주제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영화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5편이 발표되고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화’ 부산국제영화제 ‘KBS 독립영화상’, ‘시민평론가상’ 등을 수상하며 호평을 받아옴. 국가인권위원회의 풍부한 아카이빙 자료와 콘텐츠는 체험 프로그램의 소스로 활용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전문 인력의 부족

- 지역별 인권체험관 운영을 위해 배치된 인력은 1명에 불과하며, 대체인력이나 협업 파트너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1명이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다양한 연령/소속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인권체험관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능력이 요구되나, 체험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역량강화 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담당자들이 국내 체험관을 답사하기도 했으나, 인권체험관의 규모·인력·예산과 상이해 참고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체험관 담당자들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홍보, 교보재 제작, 시설 정비와 청소 등 과중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인권사무소의 업무를 병행해야 해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인력 배치나 역량 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직 미정비

-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인권사무소에는 인권체험관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현재 체험관 담당자는 각 인권사무소 교육 협력 부서 등에 소속돼 교육·홍보의 일환으로 혼자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체험관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조직적 대응이 불가능하며, 업무 내용과 역할이 명시된 규정이 부재해 업무 대응에서도 한계가 존재함. 이러한 현황을 고려했을 때, 조직을 정비해 인권체험관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열악한 시설

- 체험관 설립 당시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게 들고,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저이용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짐.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 외곽에 존재해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지역 내부에서도 방문이 어려우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하드웨어가 구축됨. 인권체험관의 면적은

37~101.3평(광주인권테마역사가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지하 플랫폼 전체 면적으로 계산됨)에 불과해, 타 체험관에 비해 매우 협소한 편임. 지하철 역사 통로에 위치한 광주인권테마역사와 부산인권전시관의 경우 지상과 연결돼 있어 1년 중 체험이 가능한 시기는 5개월에 불과하며 책걸상의 배치도 어려운 상황임. 냉난방 및 온도 문제, 미세먼지, 습기, 지하철과 승객의 소음 등을 고려했을 때 체험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함. 체험시설이 프로그램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참여자의 만족도와 참여 의사를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운영 예산의 부족

-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700만 원에 불과함. 적은 비용으로 프로그램 개발, 물품 구매, 강사 섭외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해, 인권체험관 담당자가 교육·연수 과정 없이 직접 프로그램과 교구를 만들고 혼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부족한 예산으로 체험 프로그램의 양과 질이 낮아져, 이 또한 참여자의 만족도와 참여 의사를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타 기구 조직과의 역할 중복 (인권교육센터)

- 인권체험관은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서도 인권체험의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험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과의 명확한 구분 없이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음.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찾아가는 체험관의 경우, 인권사무소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과정과 유사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체험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인권교육센터의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을 때, 체험관 운영의 당위성이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③ 시장 환경

인권체험관의 시장 환경 요인은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 및 체험교육 수요 증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구심점 역할, 국가·지자체 운영 체험시설의 사례 확보이다.

●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될 당시 한국은 격변의 시간을 겪고 있었지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인권에 있어 많은 부분이 진일보해왔고, 국제사회에서도 다수 영역에서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서 지역인권 문화 확산 측면에서 홍보 활동과 더불어 기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이 증가하고 있음
-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소 인권이란 용어에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거의 매일, 비교적 자주, 가끔)의 비율은 80.7%로 2020년 대비 0.8%p 증가하였음.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자신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82.9%였음. 이 수치는 2018년 Ipsos Public Affairs에서 진행한 국제 조사 ‘Human Rights in 2018’의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부문 조사국가 평균인 43.0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치임
-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는 인권체험관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요소일 것임. 다만 통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 추세가 단기간에 대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됨

●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 및 체험교육 수요 증가

- 2018년 공공기관 및 공기업,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도입됨. 고용노동부가 2021년 11월 성인

1,3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및 기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52시간제로 인해 여가시간이 “변화가 거의 없다”(64.4%)는 의견이 많았으나, “감소했다”(3.6%)보다는 “늘어났다”(31.2%)는 의견이 많았음.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한 경우에는 늘어난 여가시간을 주로 “가족과 함께”(48.1%) 보내거나 “건강/휴식”(24.4%)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조사 결과는 여가 활용방식을 묻는데 있어 누구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것인가와 무엇을 하며 여가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구분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권체험관이 일차적으로 가족 단위 체험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수동적인 여가태도

-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47분(평일 4시간 19분, 토요일 5시간 41분, 일요일 6시간 13분)임. 이를 구체적인 활동 내용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미디어 이용 시간’이 가장 많았음. 특히 40대 이상은 미디어 이용 시간의 70% 이상을 실시간 방송 시청이 차지함
-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5세 이상 국민 10,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국민 여가 활동 조사’에 따르면 주 여가활동 1순위는 ‘TV 시청’이며, ‘모바일 콘텐츠, 동영상, VOD 시청’이 2순위였음
- 이 조사 결과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여가시간을 TV 시청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임. 이는 여가활동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방식에 치중해 있으며 적극적 여가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함.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가 많은 부분에서 정착 단계에 놓인 시점이지만, 이러한 여가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여가시간의 증대가 곧바로 체험관 방문객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사료됨

●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구심적 역할

- 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주요 전략과 사업계획에 인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음. 매년 상반기 예산 및 업무계획 수립과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차년도 업무계획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일상적 협력을 이루고 있음. 또한 2003년부터 매년 다양한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운동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는 등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¹⁰⁾ 인권체험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82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 현황

구분	신청	선정 (예비 선정)	구분	신청	선정 (예비 선정)
장애	7	-	북한인권	2	-
여성	5	2	성 소수자	2	1
이주·난민	5	-	인권경영	1	(1)
인권 일반·인권교육	4	1	스포츠	1	1
아동·청소년	3	1	미디어	1	1
지자체 인권	3	1	노인	1	1
의료·보건	3	1	해외입양인	1	1
차별 일반	2	(1)			
소계	32	6(1)	소계	9	5(1)

10) 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 국가·지자체 운영 체험시설의 사례 확보

- 법무부에서는 2008년 대전솔로몬로파크 개청을 시작으로 2016년 부산솔로몬로파크를 순차적으로 법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2022년 광주솔로몬로파크 개청 예정)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한국잡월드를 운영 중이며, 호남권 잡월드로서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잡월드를 자체 운영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이 선례로서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를 획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권체험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선호

-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84.4%로 2020년 92.6%에 비해 8.2%p 감소함. 또한 응답자 중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3.1%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록 실태조사의 문항이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확히 대응하지는 않겠으나 인권체험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응답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인권체험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동시에 선호되는 활동으로서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4 규제 환경

인권체험관의 규제 환경 요인은 예산 및 조직 확대의 어려움,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초광역권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 예산 및 조직 확대의 어려움

- 지난 1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증가율 평균 1.4%)이나, 정권에 따라 축소(2009년 -21.2%, 2015~2016년 각각 -0.5%)됨.

최근 2년간 예산 중 주요사업비는 2020년에 전년 대비 2.5% 줄어들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6% 줄어들면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예산 편성 및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에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수성이 예산과 인력 배치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옴

●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 사례 분석에서 살펴본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타 체험시설 및 인권 관련 시설의 경우와 달리, 인권체험관 설치와 운영에 관해 명시된 법률이 부재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1항(인권교육과 홍보)과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361 호)’에서 간접적으로만 다루어짐. 이러한 점은 기본계획에 따른 인권체험관 운영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인권체험관의 개선을 통한 본격적인 운영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반드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정책적 이슈 파이팅 과정이 필요한바, 해당 기간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조속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개선될 여지가 큰 환경인 것으로 사료됨

● 초광역권의 법적 근거 마련

- 일반적으로 초광역권이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집적체’를 의미함. 2022년 2월 3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기본법」이 모두 개정되면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초광역권의 개념 및 구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초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적 행정적 수요에 대하여 지역 간에 자율적으로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게 됨. 최근 들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발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시도

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광역단위로 하나씩 존재하는 인권사무소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해당 (초광역)지자체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바, 보다 효과적인 인권체험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사료됨

표 8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의 주요 내용

구분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22.2.3	2022.8.4	- 초광역권 정의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국토기본법」	2022.2.3	2022.8.4	- 초광역권 정의 - 초광역권 계획 수립

5 경쟁 환경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중

-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과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민주인권기념관이 건립 중이고 2023년 6월 완공 예정임. 의미론적으로 국내 민주주의 및 인권과 관련하여 상당히 가치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 오랜 기간 공론화 토론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사회의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점, 그리고 공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험적 요소가 상당히 포함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경쟁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음. 다만 인권체험관의 경우 현재 인권사무소가 소재하는 5개 지역에 분포하며,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운영하였을 때 지리적으로 겹치지는 않아 직접적 위기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체험기능을 포함한 인권영역의 기존 시설

- 사례 분석에서 살펴보았듯 제주4·3평화공원 내 4·3평화기념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등 인권과 관련된 영역의 시설 중 체험기능을 포함한 시설들이 국내 각 지역에 존재함. 특히나 각 지역에서 발생한 구체적이고 규모가 큰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활용함으로 인해 시민들로 하여금 큰 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바, 인권 전반을 주제로 운영되는 인권체험관에 있어 경쟁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인권체험이라는 상위 범주로서 이러한 지역 내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모색을 통해 인권체험관 운영에 오히려 시너지 발휘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는바, 직접적인 위기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⑥ 거시 환경

● 코로나19로 인한 체험형 시설 방문 감소

- 2019년 2학기와 2020년 1학기 사이에 학생의 사회 정서적 경험과 학습패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 성균관대학교 교육과미래연구소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학생 경험과 정서 변화」에 따르면, 코로나 전과 후 학생들의 ‘활동 지향성’은 초·중·고등학생 모두 크게 감소함
-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 운영 시 지침을 마련함
-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 2월 공개한 ‘한국 관광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체험형 레저스포츠 소비는 직전 연도에 비해 6%p 감소함
- 교육 및 관광의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체험 프로그램 방문의 위축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바, 위기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이고 많은 영역에서 방역의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중대한 위기 요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인권 이슈의 사회적 확산

- 인권이 정치적 자유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에서 인간의 잠재적 역량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 발전했듯, 국내의 인권 이슈도 민주화 과정에서의 국가적 폭력으로부터 시작해 현재 보다 넓은 대상과 내용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투쟁을 말미암아 장애인 이동권이 재조명 받았고, 2020년 부서관 성전환 사건으로 성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담론이 제기됨.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8년 이후의 미투 운동으로 여성 인권과 젠더 이슈가 주목받음. 이렇듯 거대 담론으로부터 시작된 인권 이야기가 그동안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영역으로 확대돼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새로운 인권적 환경의 조성

-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으로 범죄 예측, 채용 면접, 자율주행 등 개인의 삶과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됨. 반면, 유럽의회(EP)가 인공지능법안을 발표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2021>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규제 장치 마련을 강조함¹¹⁾
-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11월 28일 전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기본권이 기후위기로 침해됐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발표하는 등 기후 위기가 인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의견 표명이 이루어짐. 기후 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정보처리 신기술, 초고령사회,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환경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논의되고 있음

11) 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Ⅳ. 인권체험관 종합적 진단

1 진단 결과 요지

- 2008년 광주인권테마역사를 시작으로 인권체험관은 약 14년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인권체험관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체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권사무소 소속 인권체험관 담당자들의 네트워킹 및 코워킹(co-working), 공동학습구조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여 인권체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냈으며 각종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인권체험관의 활동은 인권교육 방문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수많은 방문자에게 인권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고 흥미를 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악한 시설, 운영 예산의 부족, 예산 및 조직 확대의 어려움,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명확한 기본계획의 부재 등 인권체험관을 둘러싼 내적·외적 위기 요인의 상황에 놓여있음
- 또한 체험교육 트렌드의 변화, 인권 이슈의 사회적 확산, 새로운 인권적 환경의 조성, 코로나19로 인한 체험형 시설 방문 감소 등 인권체험관과 관련한 거시적 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임
- 이에 이번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모멘텀을 통해 기존의 인권 체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권체험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공간·입지, 프로그램·운영 측면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개선 방향

- 상기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인권체험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함
- 새로운 인권체험관의 패러다임은 인접 환경 검토, 종합진단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여자 주체성에 근거, 일상을 기반으로 한 활동과 실천, 지역의 생태계 동력에 기반, 인권체험의 고유성과 차별성, 공급자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확장, 분권과 자치의 가치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이르기까지를 포괄해야 함

〈그림 3-7〉 인권체험관 개선방안 도출

개선영역	기존 운영방식	분석과 진단	개선 방향
인권교육·학습	지식·이론의 전달	가치와 태도의 형성	인권적 주체 형성
교육 체험 방식	집체교육·일방적 교육	일상의 경험 속 활동과 실천	일상 속 상호학습
행정 편의적 설치	시설의 낮은 접근성	시설과 입지의 개선	광역과 생활권으로의 접근
인권체험의 개념	인권교육과의 개념 모호	인권적 관점에 따른 판단력 제고	인권 감수성 획득·향상
인권체험 접근방식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수요자·지역당사자 욕구 반영
인권체험의 성과	방문자 수 집계	사업효과 평가	인권 감수성 기반 평가
행정지원 방식	하향식 전달체계	상향식·지역 거버넌스 구축	플랫폼으로서 지역 기관·조직 협력

● 개선 방향의 전제

-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종합 발전 기본계획이 향후 인권체험관에 실제로 적용되어서 인권체험관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주도의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의 설립과정을 돌이켜보았을 때 각 시점에는 민간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존재했음
- 인권체험관이 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의 설립 시기와 같이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권·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시민 일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권체험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 ‘인권·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시민 라운드테이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공론화 과정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프로세스를 참고할 수 있음.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8년 6월 6.10민주항쟁 33주년 대통령 기념사에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이 발표된 후 건립위원회를 설립, 수시 전체회의, 전문가 연석토론회, 공론화 토론회, 6회의 외부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표 84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프로세스

구분	민주인권 기념관 건립발표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실태 조사연구	민주인권 기념관 임시 운영	전문가 위원회 12인 연석 토론회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민주인권 기념관 설계를 위한 공론화 토론회
일시	2018.6	2018.9	2019.1	2019.3	2019.5	2019.7
비고	문재인 대통령	외부용역	기념 사업회	3차례 연석토론	외부용역	시민사회 단체 100명

구분	민주인권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수립연구	민주인권기념관 설계	민주인권 기념관 전시 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옛 남영동 대공분실 구조 안전진단	민주인권 기념관 실시설계	착공
일시	2019.9	2019.10	2020.4	2020.5	2021.4	2021.6
비고	외부용역	설계공모	외부용역	외부용역	외부용역	-

● 개선 방향

- 앞서 살펴본 인권체험관 인접 환경 검토를 중심으로 인권체험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음
 1. 비전·미션 재정립 : 시민들의 인권이 공유되는 플랫폼으로서 인권체험관
 2. 입지 및 공간 : 인권체험의 거점으로서의 입지 및 공간 구성
 3. 프로그램 :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으로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체험
 4. 운영 : 인권체험관의 미션 수행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의 운영
- 이 연구는 ‘인권체험관’의 및 ‘프로그램 구성 방향’이 핵심 주제이므로 이하에서는 상기 개선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인권체험관의 위상과 정의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논리를 이어가기로 함

1. 비전·미션 재정립 : 시민들의 인권이 공유되는 플랫폼으로서 인권체험관

-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보았듯, 인권교육과 구별되는 인권체험의 가치는 ‘운영 대상’으로 각 영역의 리더가 아니라 시민 일반이라는 점, ‘운영 내용’으로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경험 공유·성찰·실천이라는 점, ‘운영 방식’으로 일방적 내용의 전달이 아니라 상호학습·소그룹·반복이라는 점임
- 인권체험관 담당자 인터뷰에서도 파악되는 것처럼, 현재 인권체험관의 작동 방식은 체험형 요소가 가미된 강의와 교육에 가까움
- 인권체험관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 시민과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응원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 존재함
- 비록 개별 인권체험관은 그동안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를 강화하려 노력하였으나, 현재 인권체험관의 모호하고 정해지지 않은 목적과 역할로 인해 연계 지점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체험관의 비전과 미션으로서 인권 교육과의 차별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시민 일반’, ‘인권·시민

사회단체’, ‘지역 내 기관’을 인권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쌍방향으로 연결’하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입지 및 공간 : 인권체험의 거점으로서의 입지 및 공간 구성

- 인권체험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여 인권교육원, 인권사무소(인권교육센터) 등 산하 기구 및 조직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체험과 관련한 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함
- 현재 인권체험관은 각 인권사무소가 위치한 도시 내에 입지하며 적어도 광역 이상의 규모를 아우르는 범위 설정 필요함
- 그러나 운영환경 및 현황분석, 종합진단에서 살펴보았듯 현재의 운영되는 각 인권체험관의 규모와 시설로는 해당 광역 내의 인권체험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됨
- 다만, 국내외 유사 시설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설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역사적 맥락, 상징성을 고려해야 함
- 이와 동시에 지역 내 지리적 입지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바, 신설을 염두에 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다섯 개의 인권체험관 개선에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바, 순차적·점진적인 접근 필요함
- 인권체험관은 지역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권체험관의 기능을 일시에 중단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므로 일부 인권체험관을 우선 개선하여 운영 후 검토, 확대해 나가는 과정 필요함

3. 프로그램 :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으로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체험

- 인권체험관의 프로그램은 인권교육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해야 하나 인권교육의 내용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함

- 인권교육의 내용은 이론·개념, 실무지식, 법·절차 등을 다루는 반면 인권체험은 경험 공유·성찰·실천의 내용을 다루어야 하므로 지역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인권체험이 이루어지는 지역마다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지역 내의 인권과 관련한 역사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체험관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시민사회영역의 인권교육은 리더십·직무·교육전 문가·복지·언론·스포츠지도사 등 교육내용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반면, 인권 체험은 당사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일상속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인권체험은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장면과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상성을 계획에 반영해야 함
- 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년간 활동함으로써 확보한 유·무형적 기록, 아카이브 자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4. 운영 : 인권체험관의 미션 수행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의 운영

- 인권체험관의 종합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따라 논의되고 제시된 미션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지금까지 인권체험관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대부분 하드웨어 및 인력 운용에 활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권체험관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실효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향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설계 및 투입이 필요함
- 또한 인력 및 조직의 측면에서 인권체험관의 미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 구성과 인력 투입에 대한 계획이 도출되어야 함
- 다만, 단기간에 급격한 예산·인력의 증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예산과 인력의 확보에 필요한 시민사회 및 관계부처의 지지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타당한 규모의 운영 방안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V. 인권체험관 필요성·타당성

1 법규적·정책적 측면

- 인권체험을 위한 인권체험시설 필요성에 대해 법규적·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동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됨
- 이 규정에 따라 공공영역(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경찰, 군), 학교 영역(영유아, 초·중등), 시민 영역(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 이주, 아동·청소년, 북한 이탈 주민, 기업, 언론, 사회복지)의 인권교육 분야가 설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분야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인권 교육과정을 운영함

표 85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교육과정 인권교육 분야 및 대상

구분	대상	
공공분야 인권교육	군 종사자	각 군 인권 교관 및 인권 교관 임명 예정자 군 인권업무 종사자

구분	대상	
	입법관계자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인권 위원 지방공무원 6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기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교 분야 인권교육	교원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초·중등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사
	고등교육 기관	대학인권센터 및 위원회 담당자
	기타	교육청 학생인권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전문집단	언론인, 의료전문인, 변호사 등 법률인
	기업인	공공기관 임직원(처장급 이하)
	사회적 약자집단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사회복지인권담당자 사회복지 등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인권활동가	인권단체·기구 상담가
	사회적 영향력 집단	사회단체 지도자, 종교 지도자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권교육 대상을 살펴보면 각 분야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만나며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러한 분야 및 대상에 실시하는 인권교육 정책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으나, '일반 시민·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이나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

- 등 소기의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보편성은 획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체험은 대상으로서 개개인의 모든 시민을 상정함. 즉, 인권교육에서 정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바, 인권체험은 인권교육의 상호보완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체험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제10항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여전히 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장해야할 업무로 볼 수 있는바, 인권 체험관의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86 정책에서 제시하는 인권체험관 설치 근거

구분	명칭	주요 내용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조(정의)	1. ‘인권교육’이라 함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 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 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 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 을 길러냄으로써

구분	명칭	주요 내용
		<p>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p> <p>2. '인권교육 분야'라 함은 공공 영역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분야, 경찰 분야, 군 분야, 학교 영역인 영유아, 분야 초·중등 분야, 시민 영역인 장애인 분야, 정신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이주 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북한이탈주민 분야, 기업 분야, 언론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을 말한다.</p>
계획	<p>국가인권위원회 2022년도 업무계획 전략목표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p>	<p>⑩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교육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2.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5. 시민사회영역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및 전문성 제고

2 사회적 측면

- 인권체험을 위한 인권체험시설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소 인권이란 용어에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 (거의 매일, 비교적 자주, 가끔)의 비율은 80.7%에 육박함에도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3.1%에 그침
-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낮았던 인구 사회학적 계층을 본다면, ‘여성(11.6%), 60대 이상(96.3%), 고졸 이하(94.5%), 비경제활동인구 (94.1), 농림생산직(91.6%)’이었음

표 87 '국가인권실태조사(2021)'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 받은 경험

(단위 : %)

구분	없다	있다	$\chi^2(df)$
전체	86.9	13.1	
성별			36.557(1)***
남자	58.3	14.7	
여자	88.4	11.6	
연령			620.075(2)***
20~30대	80.3	19.7	
40~50대	85.6	14.4	
60대 이상	96.3	3.7	
학력			855.156(1)***
고졸 이하	94.5	5.5	
대재 이상	79.6	20.4	
직업			1,158.007(3)***
관리전문직	65.7	34.3	
사무판매서비스	83.6	16.4	
농림생산직	91.6	8.4	
비경제활동인구	94.1	5.9	
종교			14.702(1)***

구분	없다	있다	$\chi^2(df)$
없음	87.7	12.3	
있음	85.6	14.4	
정치성향			147.718(3)***
보수	90.2	9.8	
중도	84.3	15.7	
진보	83.0	17.0	
무관심	89.9	10.1	
국가 목표			48.575(2)***
물질주의	88.6	11.4	
탈물질주의	81.5	18.5	
혼합형	86.5	13.5	
공동체 이익			16.484(2)***
공동체 이익 중요	88.5	11.5	
개인 이익 중요	89.0	11.0	
둘 다 중요	86.3	13.7	

- 이를 해석해본다면, 인권교육의 효과가 미치는 총 연장이 국민 전체 구석구석에 닿지 못하는 것이며 인권교육에서 정한 분야 및 영역이 감싸는 면적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곳을 덮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함
-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 인권교육의 질적 문제와 관련해 인권교육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인권 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주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그 의의에 공감 없이 규정상 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것은 교육이 형식화하 흐를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임
- 교육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지식 위주 교육과 주지주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바, 지식 전달 위주·법제적·절차적·실무적

내용을 다루는 인권교육의 대안으로서 인권체험의 시행이 필요함

- 다만 일회적 이벤트로서 산발적 행사 위주의 체험에서 벗어나 체험을 통한 삶의 이해를 추구하면서 인권과 관련된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한바, 이러한 인권체험을 적절한 규모와 조직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인권체험의 전문적 공간으로서 인권체험관의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시설·조직 여건 측면

- 2023년 준공 예정인 인권교육원의 비전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권 교육 실현’이며, 미션은 ‘인권교육 체계 및 기반 구축과 인권 전문가 양성’임
- 5개 운영 전략(1. 인권 교육 과정 구축, 2. 인권 가치 확산 및 인권 전문가 양성, 3. 인권교육 성과 환류, 4. 인권 교육 58협력 허브 구축, 5.미래 인권교육 환경(인프라) 구축)에 따른 교육 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며 ‘인권영역 종사자, 인권 담당자, 인권 관련 관리자, 위원회 위촉 강사, 범인권 강사, 위원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133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임
-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인권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5조 (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따라 인권연수과정 등 인권교육 운영의 안정성 및 인권교육의 대중화·지역화를 위해 인권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인권교육센터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 연수 과정 운영 및 협력 일환인 인권교육 운영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며, 위원회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음
- 실제로도 각 인권교육센터는 인권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권교육 현황에서 살펴보았듯 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리더 혹은 중간관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인권도서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당시 인권 자료실)부터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 도서관으로 인권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인권사무소에서는 지역민에게 인권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권도서관 분관을 운영 중임
- ‘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자료 대출(도서, 비도서)은 총 792명 (2,861권)이 이용하였으며 총 도서관 이용자는 18,361명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권교육기획과장이 도서관장이 되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2.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 서비스 제공 3.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등의 도서관 정보화 4.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간행물 번호부여 및 관리 6.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은 각 고유의 기능이 있으며 기존의 조직에서 자발적인 체험, 대국민 인권 감수성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간의 기능, 역할, 추후 인권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인권체험관의 운영은 필요하며 타당한 것으로 진단됨

표 88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 및 역할

구분	인권교육원	인권교육센터	인권도서관
목적 (미션)	인권교육 체계 및 기반 구축과 인권전문가 양성	인권연수과정 등 인권교육 운영의 안정성 및 인권교육의 대중화·지역화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 도서관
위치	경기도 용인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업무 (기능)	- 인권교육과정 구축 - 인권 가치 확산 및 인권전문가 양성	- 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 연수과정 운영 및 협력 일환인 인권교육 운영에	-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 분석 및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성과 환류 - 인권교육협력 허브 구축 - 미래 인권교육 환경 (인프라) 구축 	<p>우선적으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의 장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 -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등의 도서관 정보화 -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간행물 번호부여 및 관리 -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담당 부서	인권교육기획과	인권사무소	인권교육기획과

4 인권체험관의 영향 및 기대효과

● 인권교육과의 상호보완 기능 마련

- 인권체험관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운영의 방식, 대상, 내용적 측면의 한계를 보완 마련할 수 있음
- 교육 방식 측면에서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일회적 특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학습구조, 소그룹을 통한 반복적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육 대상 측면에서 공공분야, 학교 분야, 시민사회 분야에서 한정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도 이론·개념, 실무지식, 법·절차적 내용에서 인권과 관련한 세부적인 경험의 공유·성찰과 실천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음

● 범국민적 인권 관심 확대를 통한 사회적 효과와 변화

- 직접적인 인권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권적인 가치와 태도를 내재화 할

-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의 제공, 경험의 공유와 필요한 연계가 이루어짐
- 프로그램의 운영 역시 수동적인 일회성 체험이 아닌 참여자 주도적 체험을 통해 인권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 전달을 활용한 일반적 인권교육에 비해 인권에 관한 관심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음
- 지역 인권적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을 통해 참여자의 삶과 밀접한 인권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 할 수 있음
- 아울러, 지역 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 구축을 통해 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역사회·민간 영역의 지지와 응원을 이끌어 냄

●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서 전문성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년간 활동하면서 획득한 노하우와 기록, 아카이브·연구 결과 등을 활용해 전문적 인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들 수 있음
- 타 부처 소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권과 관련한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권체험관은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인권체험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함

인권체험관 부문별 기본계획

인권체험관 비전과 미션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전략

인권체험관의 기능 및 역할

인권체험관 부문별 계획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로드맵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인권체험관 비전과 미션

1 인권체험관 비전

- 나·나·우리의 인권이 공유되는 플랫폼, 인권체험관

- 플랫폼이란 ‘plat-평평하다’와 ‘form-형태’가 합쳐진 중세 프랑스어 plate-forme에서 유래한 단어로 과거 프랑스에서 적진의 형태에 따라 대포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요새 위에 깔아둔 평평한 판을 지칭함
- 오늘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을 연결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돕는 매개체를 뜻함
- 플랫폼은 비트로 이루어진 정보재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유통, 교통, 숙박 등 물리적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음. 특히나 다면 플랫폼(MSPs)은 기술 기반 아래 공급자와 사용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함
- 비즈니스 모델로서 플랫폼의 구성요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¹²⁾: ① 하드웨어(hardware) ② 소프트웨어(software) ③ 서비스 모듈(service module) ④ 아키텍처(architecture) ⑤ 규칙(rule)

12) 〈Opening Platforms: How, When and Why?〉 Thomas R. Eisenmann, Geoffrey Parker, Marshall Van Alstyne. *SSRN Electronic Journal*, 2008.

표 89 플랫폼으로서 인권체험관의 구성요소

구분		정보기술에서 플랫폼	플랫폼으로서 인권체험관
컴 포 넌 트	하드웨어	단말기 등 물리적 요소	인권적 경험 및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및 도구
	소프트웨어	앱,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등 무형적 요소	인권체험관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
	서비스 모듈	운영체제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체험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
아키텍처		프로세스와 전체적인 구조와 논리적 요소	인권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직과 시스템
규칙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를 조율·조정하는 규칙	공급자와 사용자의 쌍방향적·상호학습적 구조

- 인권체험을 위해 지역 내 기관·조직, 개인·커뮤니티 방문자가 참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인권체험관을 제시함
- 플랫폼으로서 인권체험관은 인권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방문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사회단체, 지역 내 기관, 시민 모두 네트워크의 참여자로서 프로그램을 매개로 인권과 관련한 쌍방향 소통과 상호학습이 발생케 하는 공유지로서 플랫폼이 되어야 함
- 인권체험관이 플랫폼이라고 지칭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 공급자는 공급만 받고 향유자 또는 사용자는 공급된 것을 수용하기만 하는 체계로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없음
- 플랫폼은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성장하게 되는데, 플랫폼 참여자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플랫폼의 미션이자 핵심 과업임

〈그림 4-1〉 인권체험관 생태계 구조도



2 인권체험관 미션

플랫폼으로서 인권체험관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미션을 수행한다.

- 국가적 인권 이슈와 일상의 인권적 상황이 만나는 플랫폼
 - 국내외 역사적 사건을 과거의 사실로서 머물게 하지 않고 현재화함으로써 인권적 관점에서 각 사건을 재해석함
 - 국가적 권리 쟁취, 민주화운동, 국가적 폭력·학살, 쿠데타·독재·용공 조작, 장애인·아동 학대, 구조적 성범죄 등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및 의견 표명 또는 조사·구제한 국내 사건들뿐만 아니라 영국·프랑스·미국 혁명, 파시즘과 나치즘에 대한 저항, 노예제 폐지, 빈민·여성·흑인·장애인 참정권 운동, 노동운동, 제3세계 민주화운동과 같은 세계적인 인권사건과 관련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현재적 의미를 부여함

- 나아가 AI, 빅데이터, 팬데믹, 기후 위기, 초고령사회, 플랫폼 노동 등 오늘날 새롭게 인권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슈들에 관한 담론을 활용하여 각 이슈를 다수 시민의 인권적 삶에 연결시키는 미션을 수행함

● **개개인의 작은 인권이 다른 개인과 공유되는 플랫폼**

-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공동체에서 인권적 삶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조우하는 개개인의 작은 인권적 상황이 공유됨
- 가정, 학교, 직장, 군대, 지역, 또래 집단, 이웃 등 굉장히 다양한 ‘나’의 영역에서 존엄에 대한 이야기가 스스럼없이 논의되는 공간임
-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시의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개개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이 끊임없이 들끓고 보여지고 다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미션을 수행함
- 이를 통해 법령과 제도, 인권 관련 국제 선언 등에서 규정한 인권 목록이 지역공동체 내의 일상생활에서 실행되도록 미션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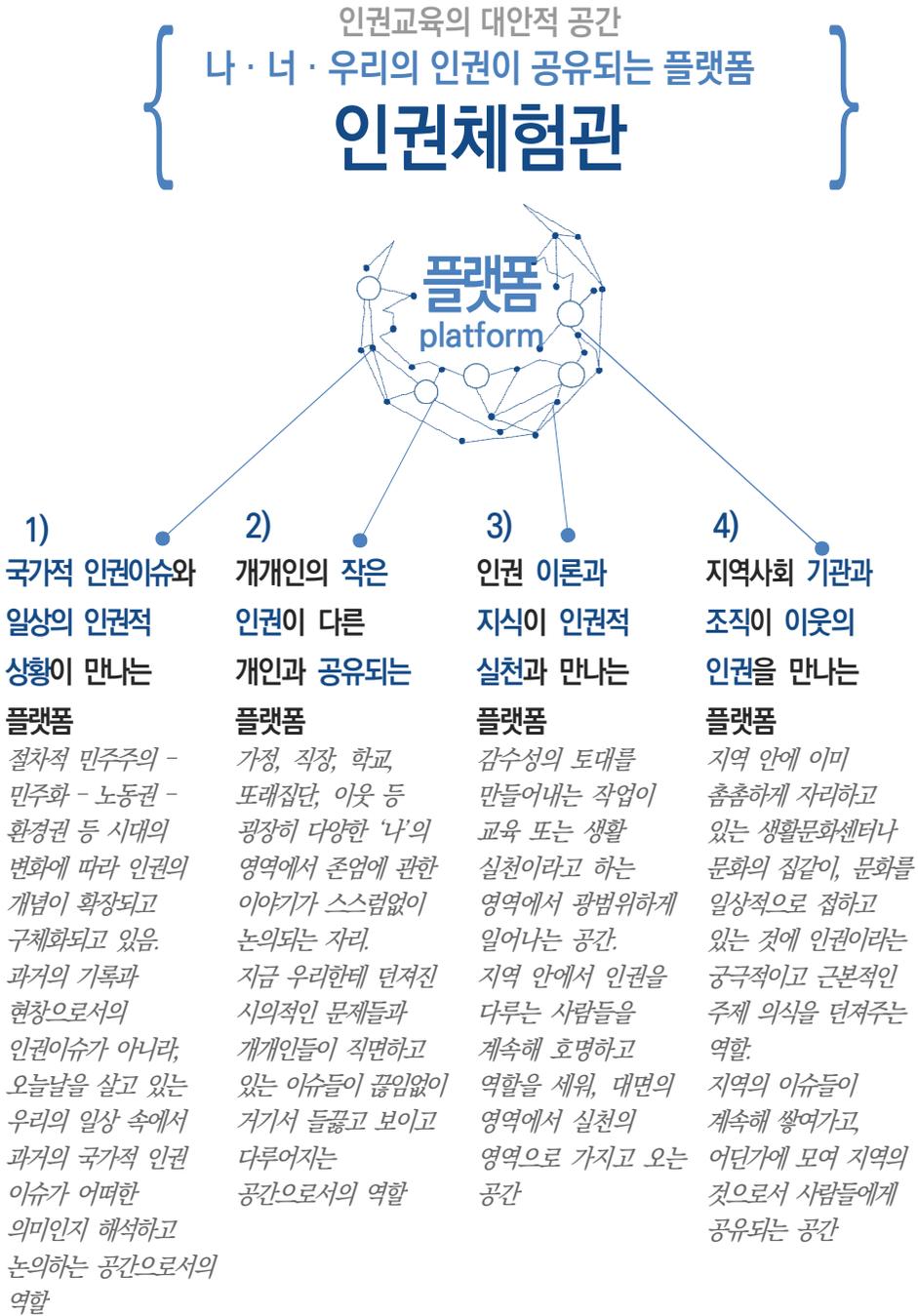
● **인권과 관련한 이론과 지식이 지역의 인권적 실천과 만나는 플랫폼**

- 그동안 인권의 관찰자·방관자로서 개개인이 놓여진 일상과 지역에서 인권적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체화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이자, 수동적인 교육 대상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인권옹호자로 호명함
- 일회성의 산발적인 행사 위주의 체험에서 벗어나 체험을 통한 삶의 이해를 추구하면서 신체적 경험을 넘어 인권과 관련된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발생됨
- 인권 관련 제도와 법의 이해, 인권선언문의 이해, 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의 실무지식, 구제의 절차 등 인권교육으로 획득된 지식을 피드백과 반추의 과정을 통해 수정하거나 견고하게 하는 기존 인권교육의 보완으로서의 미션을 수행함

● 지역사회의 기관과 조직이 이웃의 인권을 만나는 플랫폼

- 이미 시민들의 삶 곳곳에 뻗어 있는 기관과 단체를 인권이라는 가치 범주에서 인권체험 생태계로 초대하여 각 기관·단체의 사업이 인권 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 문화예술, 교육, 복지, 군(軍) 등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을 총괄하지 않더라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친화적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체험 프로그램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연락처 전략을 수립함
- 인권 그 자체만을 위한 인권체험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고 활용하는 사회 각 분야의 사업과 정책에 인권체험의 요소가 녹아 스며들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과 일상속에서 인권과의 접점을 넓히는 역할을 수행함

〈그림 4-2〉 인권체험관 비전 및 미션



II.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전략

인권체험관이 상기의 비전과 미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체험관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기에 앞서 ① 인권체험의 허브로서의 전략 ② 시민 일상으로의 세밀한 접근 전략을 종합 발전 전략으로서 수립해야 한다.

① 인권체험 허브로서의 전략

● <초광역협력 시대 인권체험관>의 개념

- 플랫폼으로서 인권체험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사무소)를 포함한 여러 주체가 한 데 모여 인권체험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이용 주체인 일반 시민들이 지역사회 내의 인권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권적 활동의 흔적이 축적 및 기록되어 체험관 공간이 시민과 인권 간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음
- 인권체험관은 해당 지역의 주민과 커뮤니티,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 방문 주체의 활발한 인권체험과 자유로운 협업,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역 및 초광역협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생활권의 거점에 위치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을,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전남·전북을,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경북을,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강원인권사무소는 강원을,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함
- 2022년 2월 3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초광역권의 개념 및 구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초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적 행정적 수요에 대하여 지역 간에 자율적으로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게 됨

- 최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발적으로 연대와 협력이 가시화 되고 있음.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등)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광역 단위로 하나씩 존재하는 인권체험관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해당 지자체의 초광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를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체험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임

표 9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의 주요 내용

구분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22.2.3	2022.8.4	- 초광역권 정의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국토기본법」	2022.2.3	2022.8.4	- 초광역권 정의 - 초광역권 계획 수립

● 인권체험관 조성의 프로세스

- 앞서 개선 방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체험관은 지역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권체험관의 기능을 일시에 중단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님
- 현재 인권체험관을 기본계획과 향후 수립되는 계획 및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운영 후 검토, 확대 해나가는 과정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인권체험관 중 한 곳을 시범적으로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로서 시민적 지지를 확인하고 인권체험관의 비전과 미션을 실험해보는 시기를 확보함

② 시민 일상으로의 세밀한 접근 전략

● <생활권 단위 인권체험>의 개념

-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인권체험관을 방문케 하여 인권체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이 생활하는 장소인 생활권 단위에서 일상 속의 인권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접근한다면 인권체험관의 미션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생활권은 본래 삶을 영위하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가리키나, 훨씬 더 세밀한 단위의 지역성을 일컫는 범위로서 최근 비즈니스 영역, 부동산 업계 등에서 시작된 ‘하이퍼로컬(hyper-local)’, ‘슬세권(슬리퍼 차림과 같은 편한 복장으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이 논의되고 있음. 동(洞) 단위를 서비스나 활동의 기본 단위로 하면서 이웃 간 연결과 만남을 촉진하고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하이퍼로컬 비즈니스가 펼쳐지고 있음
-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통해 구현되는 인권체험관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인권을 체험하고 삶이 영위되는 반경 속으로 인권을 접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역 생활권 내의 하이퍼로컬의 거점으로서 기능하는 기존의 시설과 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임
- 생활권의 범위는 인보구, ‘슬세권’과 같은 좁은 영역일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몇 개의 시·군·구를 포함한 넓은 범위일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생활권 특성 및 인권체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설정하여야 함

표 91 도시기본계획 상 생활권 설정 기준

구분		설정 기준	인구 규모	고려사항	관련 시설
근린 생활권	인보구	-	2~8 백 명	- 유아놀이터 기준	- 유아놀이터, 공동세탁장
	근린 분구	-	3~5 천 명	- 유치원·어린이집·작업장 - 근린상점 포함	- 잡화, 음식점 - 공중목욕탕, 약국, 미용실

구분	설정 기준	인구 규모	고려사항	관련 시설
				- 파출소, 공중전화
근린 주구	2~4개 근린분구	5천~1만 명	- 초등학교, 근린상가 포함 - 간선도로, 녹지 등에 의해 다른 지역과 구분	- 초등학교, 도서관
소생활권 (근린지구 중심)	행정동 기준	2~3만 명	- 초·중학교 학군 - 전통적 시장권역 - 역세권역 - 지형적, 인위적 제약성 - 지역적 특수성	- 동사무소, 우체국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복지센터, 동네의원 - 근린중심 쇼핑센터, 은행 -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중생활권 (지역·커뮤니티)	2~4개 소생활권	10만 명	- 중·고등학교 학군 - 시설배치기준의 고려 - 계획 의도적 구분 - 산세, 하천 등의 자연적 환경	- 경찰서, 소방서 - 지구공원 - 종합복지센터, 보건소, 종합병원 - 지구중심 쇼핑센터
대생활권 (부도심권 중심)	시·군·구 단위 기준	20~30만 명	- 도로, 철도 등 인문적 환경 - 부도심권 형성 및 도심기능 분산을 유도한 계획성	- 시청, 구청 - 종합운동장 - 대학병원 등 3차 의료시설 - 백화점, 대형 유통단지 -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국토연구원 국토용어해설을 참고하여 추가 보완함

- 문화예술 영역, 교육 영역, 복지 영역, 경제 영역, 기초자치단체 등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들 사이로 뿌리내리고 있는 곳으로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방문하고 활용하는 생활권 거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권체험을 통해 시민의 일상으로 세밀한 접근이 가능할 것임
- 인권체험관(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권체험 공간으로서 인증된 생활권 거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권체험과 관련한 활동을 ‘생활권 단위 인권체험’이라고 볼 수 있음

● <생활권 단위 인권체험>의 방법

- 해당 시설에서 당초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본래의 기능(예: 문화예술교육·생활 문화 등 문화예술 기능, 주민 자치 활동, 돌봄·보육 등 복지 기능, 학교 교육·평생학습 등 교육 기능 등)과 관련한 활동과 더불어 인권체험이 진행됨
- 인권체험관에서 운영되는 인권체험 프로그램이 인증된 ‘인권체험 공간’에서 운영 될 수 있도록 공유하며 이를 운영할 인력으로서 인권교육원에서 양성된 인권 강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생활권 내 시설을 ‘인권체험 공간’으로서 인증하는 곳은 인권체험관이며, 인권 체험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체험 공간이 각 생활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따라서 인권체험관에서는 지역 생활권 내에 ‘인권체험 공간’을 발굴-인증하고 이곳에서 활발한 인권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두어야 함
- 후술할 부문별 기본계획은 ‘인권체험 공간’을 인증하고 프로세스로서 인권체험관의 부문별 계획을 다룸

표 92 지역 시설·공간 인증 및 활용 사례

사업	여가 친화 기업	독서동아리 공간 나눔	행복 배움터
소관부처 (수행기관)	문체부 (지역문화진흥원)	문체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대전광역시 서구
사업 내용	- 일과 여가생활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 하는 기업 선정·인증 지원	- 참여 공간 모집 - 지속적인 공간 발굴 및 공간과 독서동아리 연결 - 독서프로그램 기획·수행	- 마을 내 공동시설을 학 습공간으로 활용 -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 램 운영
대상	- 기업 및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보유 법인 또는 단체	-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 - 10인 이상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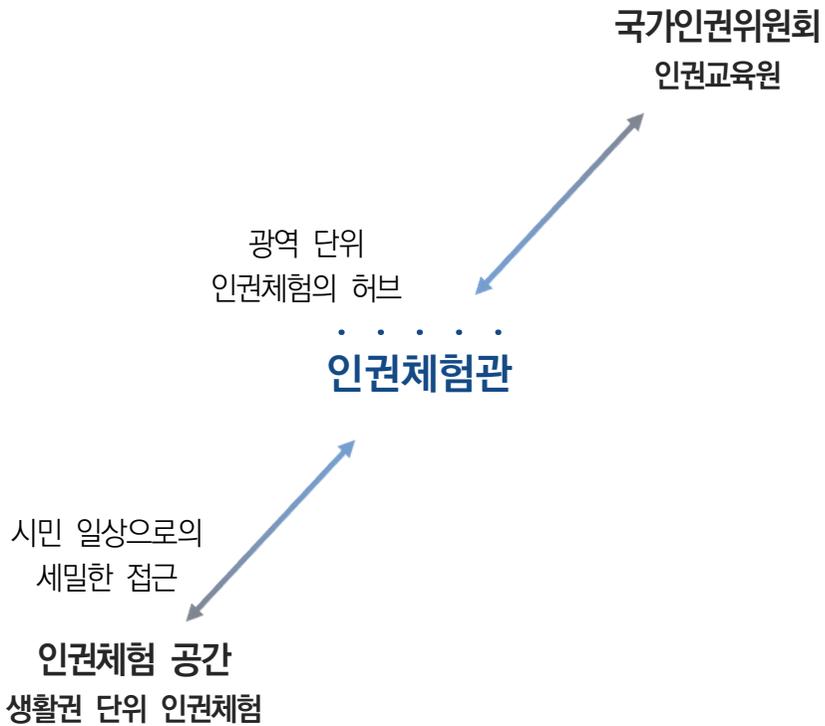
사업	여가 친화 기업	독서동아리 공간 나눔	행복 배움터
			강의실 확보 시설
지원 규모	- 2021년 113개 업체 - 총 378개 사 인증	- 법인(단체)당 3천만원 씩 - 매년 5개소	- 매년 20개소 내외
지원 내용	- 포상 및 홍보 - 문화예술전문단체 프로그램 지원, 인문학 강연 등 문체부 산하 기관 문화프로그램 지원 - 고용부·중기부 사업 우대 지원·가산점 부여	- 공간나눔 운영비(3만원/회, 15만원/공간) - 독서동아리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업 홍보비 지원 (포스터, 리플렛 제작) - 정산보조 단기 보조용역비 및 회계검사비용	- 행복배움터 지정·현판 수여 - 주민 대상 무료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 지원 -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 지원

● <생활권 단위 인권체험>의 기대효과

- 광역마다 설치·운영되는 인권체험관이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닿지 못하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세부 일상 단위에서 지역과 밀착한 인권체험이 가능케 함으로써 **인권체험관**의 미션 수행에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생활권 단위 인권체험에 참여하는 ‘인권체험 공간’을 **운영하는 기관** 고유의 사업을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공간을 보다 인권적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인권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인권체험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광역마다 하나씩 설치되는 인권체험관을 방문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음
- **인권사무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권 단위 인권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록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인권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업무수행의 기초적 데이터로 활용 가능 함
- 생활권 인권체험을 통한 시민들의 인권체험 현황 및 수요, 만족도 등을 조사·

활용하여 **인권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인권 교육 과정이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설계·진행될 수 있으며, 아울러 인권교육원에서 양성되는 인권 강사 및 인권 전문가의 실효적인 활동 공간으로서 활용 될 수 있음

〈그림 4-3〉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전략



Ⅲ. 인권체험관의 기능 및 역할

● 인권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및 실행

- 인권체험관의 근본적인 역할은 인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고, 시민사회로부터의 응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임
- 인권체험관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성찰·실천하도록 돕는 쌍방향·상호학습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인권교육 이상의 체험은 쌍방향으로 수행됨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일상과 밀접해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당대의 인권 이슈는 물론이고 체험자의 삶과 밀접한 체험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야 함

● 연구·아카이브 기능

- 인권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프로그램 연구·개발 과정이 필수적임. 이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축적해 온 아카이브 자료(조사보고서, 소식지, 잡지, 웹드라마, 영화 등)를 소스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권체험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현재성과 지역성·일상성을 띤 하나의 기록으로서 아카이빙 되고, 또 다른 소스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

● 대(對)시민 인권홍보·의견수렴

- 인권체험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된 기관이지만 활동의 타깃(방문객)이 일반 시민 개개인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짐.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도 인권 체험관과 같은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상이 분야별 리더나 중간 관리자,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됨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 중 인권체험관은, 일반시민의 방문과 활용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임
- 이에 인권체험관은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는 장소로서 역할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인권 이슈를 알리고(강연), 의견을 청취하고(콜로키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상의 질의(토론회, 포럼)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함

● **생활권 단위 인권체험 공간 인증 및 지원**

- 자치와 분권의 시대, 중앙의 획일적·일방적인 정책 설계·구현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실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움직임이 일고 있음
- 이는 정책의 영역뿐 아닌 인권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지역 내 인권적 상황을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해선 더 작은 범위의 활동에 주목해, 고유의 인권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에서 스스로 확산되도록 돕는 전략이 필요함
- 따라서 인권체험관은 지역사회 각 분야(사업)에 인권 요소를 결합하거나, 물리적으로 인권 친화적인 공간이 생활권 내에 생겨날 수 있도록 돕는 등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다 인권적으로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존 공간과 시설을 인권체험 공간으로 인증하고 인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지원활동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지역 단체 활동가 네트워크·연대**

- 인권체험관의 운영 목적은 인권체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있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반 시민을 비롯해, 인권 관련(인접) 분야, 지역 내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인권체험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인권체험관은 인권영역의 유관 단체뿐 아닌 각 생태계별 참여자와 지역

내 기관들이 상호작용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지역 내 인권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주도하는 주체로 진화하며 연대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 해야 함

표 93 인권체험관 기능 및 역할

구분	인권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실행	연구·아카이브 기능	대(對)시민 인권 홍보·의견수렴	생활권 단위 인권체험 공간 인증 및 지원	지역 단체 활동가 네트워크·연대
기존 담당 조직	인권체험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 연합
방법	생활권인권체험 프로그램	연구 아카이브 기능 담당 조직 운영	포럼, 콜로키움 ¹³⁾ 등	인권체험 공간 인증,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생태계 참여 프로그램

13) 특정 주제를 놓고 발표나 토론을 통해 해당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모임 방식으로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초빙해 논평과 문답을 진행한다. 발표자의 발표 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형태를 취하며,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에 속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두산백과 두피디아)

Ⅳ. 인권체험관 부문별 계획

1 설치 및 입지

- 인권사무소가 관할하는 구역의 거점이 되는 도시에 인권체험관을 설치·운영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1.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2.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
3. 대구인권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4. 대전인권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5. 강원인권사무소	강원도	강원도
6.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 중인 인권체험관 5개소에 모두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인권체험관 개선 방향에 따라 비전 및 미션을 적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선 방향에서 논의하였듯 1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효과 검토, 나머지 인권체험관에도 적용함

● 인권체험관 개선 적용의 우선순위

- 시범 적용되는 체험관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 ① [입지] 인권교육원이 수도권(경기도 용인시)에 설치되는 바,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남부지방을 우선 검토함 ② [연혁] 인권체험관 설립이 먼저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 검토함 ③ [노후도] 현재 운영 중인 인권체험관의 기능을 고려, 노후 정도 검토하여 시설·환경 면에서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 검토함 ④ [세력권] 해당 도시의 세력권 검토를 통해 광역 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을 우선 검토함 ⑤ [접근성] 현재 인권체험관의 접근성을 검토하여 인권사무소와의 거리, 지역 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 검토함

표 94 시범 적용 인권체험관 우선순위 검토

구분	광주 인권테마역사	부산 인권전시관	대구별별 인권체험관	대전 인권체험관	강원 인권체험관
소재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원주시
관할	광주·전남· 전북·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 충남·충북	강원
지역	남부지방(호남)	남부지방(영남)	남부지방(영남)	중부지방(충청)	중부지방 (강원-영서)
연혁	2008.10 개관	2010.04 개관	2013.07 개관	2016.06 개관 2020.10 재개관	2019.02 개관
위치	광주지하철 김대중컨벤션 센터역 지하 1층 (335㎡)	부산지하철 물만골역 지하 1층 (260㎡)	대구교육팔공산 수련원 체육체험 학습장 후관 2층 (167㎡)	대전지하철 시청역 지하 1층 (122㎡)	강원인권사무소 소재 무실동 건물 2층 (138㎡)
입지	○	○	△	×	×
연혁	○	○	△	×	×

구분	광주 인권테마역사	부산 인권전시관	대구별별 인권체험관	대전 인권체험관	강권 인권체험관
노후도	○	○	△	×	×
세력권	○	○	○	○	×
접근성	○	○	○	△	×
대상지 고려	●	●			

○ : 우선순위 높음, △ : 우선순위 보통, × : 우선순위 낮음

● 시범 적용 검토 대상 1. 광주광역시 (광주인권테마역사)

1) 인구 사회학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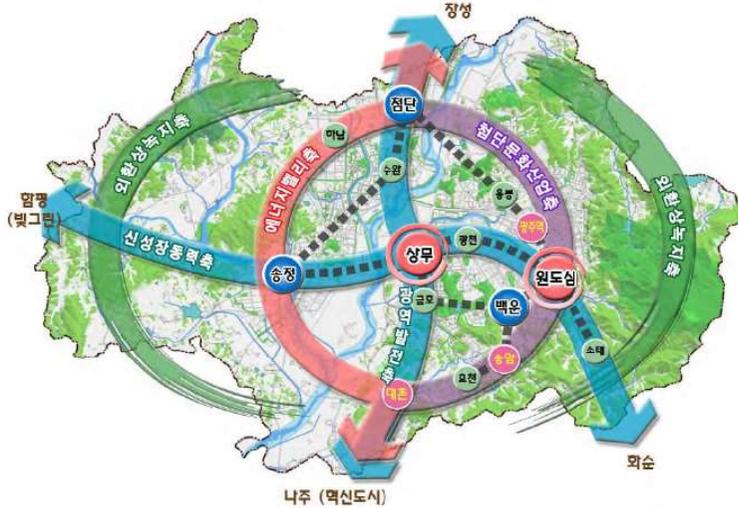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1,462,545명
- 2021년 기준지역 내 총생산은 43.5조 원이고 전국 총생산의 2.1%임
- 2019년 현재 사업체 수는 123,706개며, 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631,876명임

2) 도시세력권

- 한반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전남지역 전체와 전북의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등을 포함한 넓은 지역의 중심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시의 경제권으로 출퇴근 고용인구, 공급 원료, 소비상품, 시장이용권 등 광주시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큰 직접 영향 지역은 광주를 중심으로 반경 30~50km권내에 입지하고 있는 나주시, 담양, 장성, 곡성, 영광, 함평군 등이 해당됨
- 도시의 사회권으로 학교·병원·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영향 권역은 광주광역시가 광주·전남지역의 중추 관리기능과 국토의 서남부지역의 중심지위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남 전 지역과 전북 일부 지역이 해당함

3) 도시 공간 구조

〈그림 4-4〉 광주광역시 중심지 체계 및 공간구상 종합도



- 도시공간구조로는 총장동 일대의 기존도심과 상무신도심을 도심으로 하고, 송정과 첨단을 2부 도심으로 하며, 백운, 본촌, 광천, 수완, 금호, 효천, 하남, 용봉, 소태를 9개 지역 중심과 각화, 서창을 특화 핵으로 하는 2도심, 2부 도심, 9지역 중심, 2특화핵의 도시 공간구조로 설정함
- 아시아 문화가 교류·집적되고 연구, 교육, 창조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도시”이며 국제적 문화공동체 도시
- 아시아 예술가들의 창작·연구·교류를 통하여 세계 문화예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문화를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하여 고부가가치 감성 경제를 구현하는 차세대 문화 경제도시로 성장

4) 인권적 측면

- 광주에서 인권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주요 국면과 그 속에 담긴 상징적 사건을 가치론적 측면에서 재해석하면서 부상함

-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종합기본계획’(2003)을 통해서 ‘인권 도시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장기 실천과제들을 제시함
-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개소됨
- 2007년 5월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 도시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됨
- 기초 구로 보자면,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남구는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2010년 민선 제5기가 출범하면서 ‘세계 속의 인권·평화공동체 건설’을 시정방침으로 확정 (인권전담부서, 인권조례, 인권 도시기본계획, 인권 헌장, 인권지표, 인권단체 협력사업, 인권옴부즈맨 등)

- 인권전담부서 : 민주인권평화국
- 광주인권헌장 : 아시아 최초 제정 및 선포
- 인권지표수립 및 인권영향평가: 실질적 인권화 도모
- 인권단체 협력사업 : 시민 공모로 진행 및 인권문화 확산
- 인권옴부즈맨 운영 : 시민 인권 보호
- 인권마을사업 : 주민 주도로 진행 및 인권문화공동체 형성
- 광주인(人)꽃지기 운영 : 시민의 자발적 인권실천활동 전개
- 시민 대상 인권교육 진행 : 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년노동상담소 등
-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 지방정부의 인권경험과 가치 공유 및 인권증진방안 모색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가 2011년 10월 제정됨
-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2012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도시로서 ‘공감과 창조의 인권 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설정, 제2기 인권도시기본계획(2018)에서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를 선언함

● 시범 적용 검토 대상 2. 부산광역시 (부산인권전시관)

1) 인구 사회학적 측면

- 2021년 12월 기준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3,396,109명
- 2021년 기준지역 내 총생산은 98.7조 원으로 전국 총생산의 4.8%임
- 2022년 현재 사업체 수는 290,357개며, 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465,433명임

2) 도시세력권

- 한반도 남동단에 자리잡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유통·통근기능 측면에서 부산광역시에 대한 의존성이 큰 도시로서 울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를 포괄함
-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르면 도시의 경제권은 유통·통근 기능 측면에서 부산광역시에 대한 의존성이 큰 도시로서 울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를 포괄함

표 95 부산광역시의 경제권

구분	권역	구분	권역
도시경제권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초광역경제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역경제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국제경제권	일본 후쿠오카시 및 동북아시아 일원

- 사회·문화권은 도시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의료·문화·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권측면에서 울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를 포괄한 남·동해안권에 해당되며 광역교통체계에 의해 대경권과 호남권 및 수도권을 연결하며 크게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권역에 해당함

3) 도시 공간 구조

- 도시공간구조로는 광복, 서면, 해운대, 강서를 4도심으로 하고, 하단, 사상, 신공항, 덕천, 동래, 기장을 6부 도심으로 하며, 가덕, 녹산, 금정, 정관, 장안을 5지역 특화핵으로 하는 4도심, 6부 도심, 5지역 특화핵의 도시공간구조로 설정됨

〈그림 4-5〉 부산광역시 도시공간 구조



4) 인권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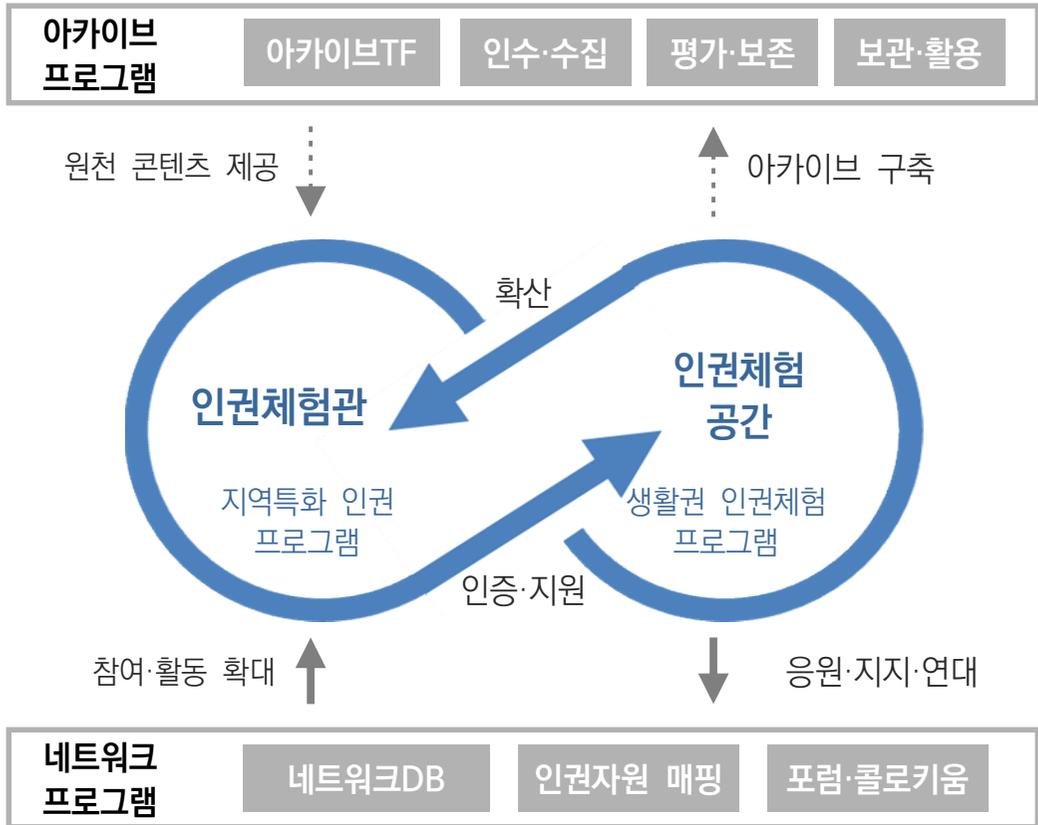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2년 2월에 제정됨
- 기초구로 보자면, 서구 금정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서 인권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서구는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정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만 제정됨
- 2019년 1월 부산광역시 인권전담부서가 신설됨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2020년 9월 부산광역시 2차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됨 (2020~2024)

● 인권체험관 개선 적용의 우선순위 검토 결과

- 변화하는 국내외 인권적 상황과 정세, 인권체험의 여건 및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인권체험관 전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개선과 운용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개선 대상 인권체험관을 선정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 진단 기반의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광주인권테마역사와 부산인권전시관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도출함
- 두 인권체험관이 소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인권적 측면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인권과 관련한 도시의 역사성, 인권정책, 광역 및 기초의 인권조례 제정 현황, 인권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광주광역시 소재 인권체험관(현 광주인권테마역사)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인권체험관 개선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연관 생태계와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함. 민주인권기념관 사례 검토에서 살펴보았듯 오랜 기간의 의견수렴을 통한 기존 생태계와의 연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특히나 인권체험관이 미션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응원과 지지, 환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인권체험관이 설립 및 운영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지역 내 세부적인 입지 선정, 부지 확정의 경우 지역 내 의견수렴 과정과 부지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

2 프로그램

〈그림 4-6〉 프로그램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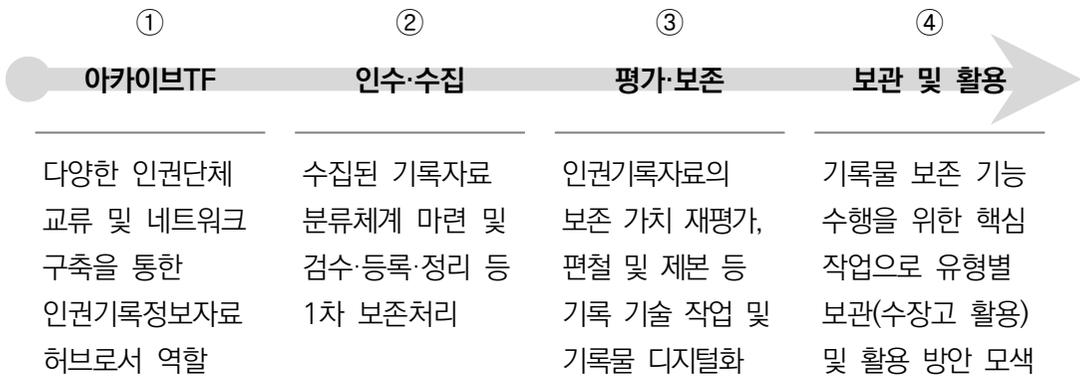
● 아카이브 프로그램

1. 인권 기록자료 수집 및 연구 등 〈아카이브〉 프로세스

- 인권의 광범위하고 중층적인 영역 특성에 따라 인권 관련 아카이브 분류는 특정 분야나 주제로 구분되기보다는 관련 단체나 사안별 컬렉션으로 구성함
- 아울러 인권 전반에 대한 기록정보자료를 수집·보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권 관련 단체와의 소통, 신뢰,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체험관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기초-광역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 이에 지역 내 공공기관, 사회·문화기관,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 연구자 등 인권 아카이브TF 구축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연계 과정이 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자료 기증, 정보 제공 등 상호지원 체계 및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림 4-7〉 아카이브 프로그램 구조도



2. 인권 아카이브 활용 및 서비스

-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 방안으로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장자료 열람〉 기능과 인권 관련 활동가, 연구자 등을 위한 기록물 연구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인권도서관 및 인권교육원 프로그램과 연계 진행이 가능함
- 아울러, 지역·이슈별 〈상설 및 기획 전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기록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 인권 아키비스트14〉 등 지역 내 인권 이슈 확산을 위한 시민 접점 확대를 통해 일반적인 자료보관소와 다른 라키비움 형태의 복합적인 정보자원 제공이 가능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함

14) 아키비스트(archivist)는 본래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역사로부터 인권적인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주체로 활동하며 지역 인권 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 인권 아카이브 프로그램(안)

1. 인권체험관 아카이브 전시

- 인권체험관 내 발굴·수집된 인권기록자료 및 소장품이 결합한 복합형 [상설 전시]와 시대, 이슈에 따른 [기획 전시]로 아카이브 전시가 구분될 수 있음

표 96 인권 아카이브 전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인권체험관 아카이브 전시
운영 시기	연중 상설 전시 및 기획 전시
참여 대상	체험관 방문자, 인권 활동가, 연구자 등
목적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적 공간으로서의 인권체험관을 위한 전시 기획 - 인권의 개념과 범위, 인권정책, 역사,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사회적·학술적 정보 제공 및 인권 기록자료의 의미와 가치 확산
주요 내용	<p>[전시기획 및 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TF를 중심으로 전시 주제 선정 및 기록물 수집, 가공 - 체험관 내 아카이브 전시 전문인력 배치 및 인권교육원에서 양성된 인력 연계 <p>[상설 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수장고 활용, 자료와 소장품이 결합한 복합형 아카이브 전시 - 지역 인권 이슈 등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 지역의 맥락 속에서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상설 아카이브 전시 <p>[기획 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시기/주제/이슈별 스토리텔링 활용한 기획 전시 -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한 해석과 기록을 통한 동시대성 인권 이슈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획형 아카이브 전시
참고사례	<p>〈넥슨 컴퓨터 박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역사 박물관 및 체험관으로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자료 수집 보존 및 정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계기관 교류 협력 기능을 수행함 - 기존의 보는 전시에서 탈피하여 ‘오픈소스’ 개념을 도입, 자유롭게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 기획 형태로 운영됨 - 폐쇄형 수장고가 아닌 개방형 수장고 형태로 전시대 자체를 수장고로 활용하여 일반 관람객들이 더 가깝게 전시품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함
--	---

2. 시민 인권 아키비스트

표 97 시민 인권 아키비스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민 인권 아키비스트
운영 시기	상반기/하반기 공모·교육 과정
참여 대상	체험관 방문자, 인권 활동가, 연구자 등
목적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인권 이슈에 대한 기억 및 스토리 발굴(인터뷰, 구술) 등 인권 주제 기록화 -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인권 활동가 양성
주요 내용	<p>[시민 아키비스트-교육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인권 기록자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구성(인권교육원 연계) - 주요 커리큘럼은 인권 담론 및 인권 운동의 이해, 기록학 구술사의 이해, 구술채록 및 자료조사 등으로 구성 - 지역 내 대학, 교육기관 등을 연계한 양성과정으로 설계 <p>[공모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인권 이슈 수집, 발굴, 보존과 관련된 인권 관련 사례 공모를 통한 지역 인권 이슈 수집 - 이슈별 공모 뿐만 아니라 학생, 주부,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별 공모 프로그램
참고사례	<p><이천문화원의 시민기록자(아키비스트) 양성 과정 : 이천 메모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 문화원은 지역에 관한 시민들의 기억과 시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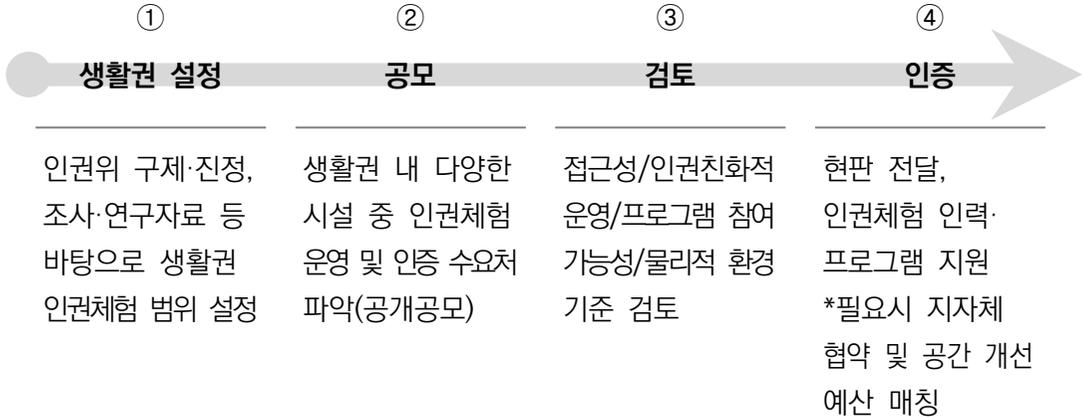
	<p>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역사와 마을 주민의 삶을 기록하는 '시민기록자'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기록자들은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기록학의 관점, 구술채록의 방법, 인터뷰, 구술사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 기록 활동에 필요한 소양 교육을 이수 - 원천콘텐츠발굴사업과 연계하여 이천 곳곳을 찾아다니며 마을답사와 주민인터뷰, 사진찍기, 구술채록, 기록관리 등 이천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맞춤형 아키비스트로 성장함
--	--

● 생활권 인권체험 공간 인증 및 지원

1. <생활권 단위 인권체험>의 프로세스

-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생활권 내 거점 공간에서 인권체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인권체험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지역 사회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며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을 인권체험의 공간으로 인증하는 과정으로서 접근해야 함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공간들 중 1)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고 2) 해당 공간을 운영하는 조직에서 인권적 운영에 관심이 높고 3) 인권체험 프로그램이 기존 공간 운영과 병행 가능하며 4) 인권적 공간으로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한 곳을 대상으로 '인권체험 공간'으로서 검토·인증하는 절차를 경과함
- 생활권 단위 '인권체험 공간'으로 인증된 시설에는, 해당 공간이 인권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시설임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사무소) 인증 현판을 전달함
- 인증 과정에서 각 인권체험관에서 지역 내 시설의 수요를 파악한 후, 인권사무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단위에서 공간 운영하는 기관과 협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며, 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예산 매칭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4-8〉 생활권 인권체험 공간 인증 및 지원 구조도



2. <생활권 인권체험 공간 인증제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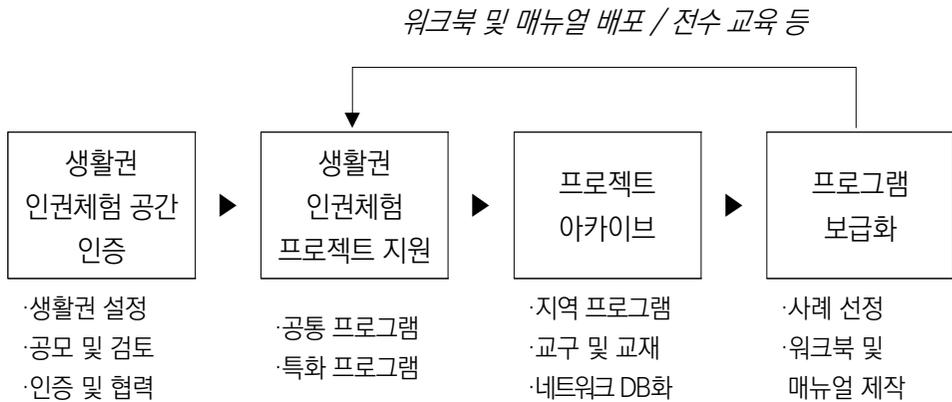
- 생활권 인권체험 공간 인증 및 지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설계 가능함

표 98 생활권 인권체험 공간 인증 및 지원 사업

사업명	- 생활권 인권체험 공간 인증 및 지원 사업
소관부처 (수행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관)
주요 내용	- 인권 감수성 확산을 위한 생활권 내 인권체험공간 선정·인증·지원
지원 대상	- 지역 내 사회문화예술 기관/단체 등
지원 규모	- 연간 20여 개 (점진적 확대)
지원 내용	- 생활권 인권체험 공간 지정 및 현판 수여 - 생활권 인권체험 프로젝트 지원(강사 파견, 공통 프로그램 보급 및 우수 사례 공간 활동비 지원 등) - 통합 홍보 지원

- 인권체험관에서는 생활권 단위 체험 공간 인증·지원을 통해 지역 인권 이슈 수집 및 지역성을 담보한 인권 체험프로그램 개발 경로를 설계할 수 있음
-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권·기초 단위에서 개발된 인권체험 프로그램, 교구, 교재 정보 등을 취합하여 개별 지역성을 담보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함
- 이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보급하는 프로그램 모듈화(생활권 프로젝트 → 광역 프로그램화)를 통해 성과를 확산·보급할 수 있는 경로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그림 4-9〉 생활권 인권체험 공간 인증제도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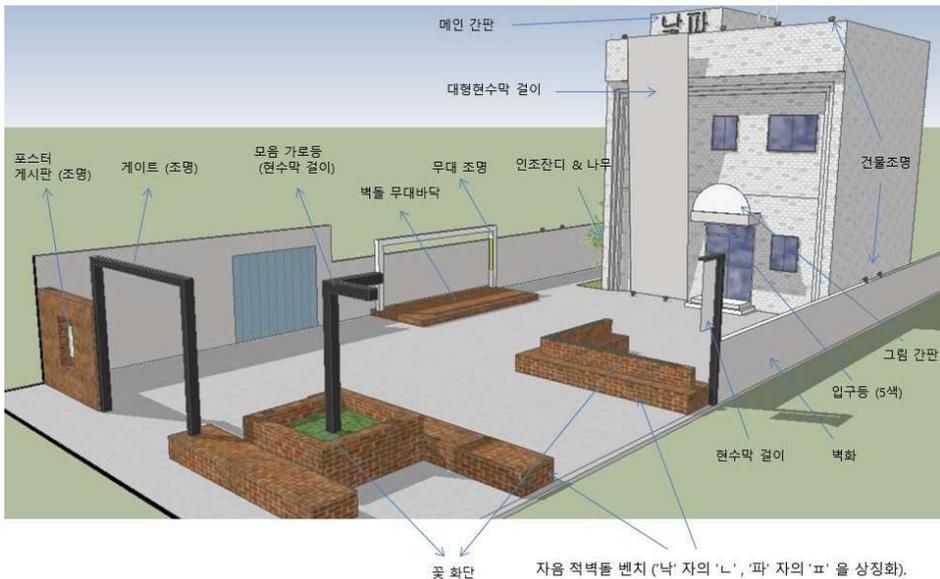


참고 공간실험 프로젝트 : 칠곡군 문화도시지원센터-‘터무니 있는 낙동강파출소’

1. 목적 및 방향

-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던 공간이었지만 그 용도가 다해 현재까지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낙동강파출소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며 운영하는 권역 내 '공유 공간'으로 조성하고 가능성을 실험함
- 칠곡 문화도시에서 공간의 역할 및 활용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도시 의제에 대한 시민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과 공간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유휴공간에 대한 장소 가치를 재구축함
- 설계된 계획보다는 활동과 활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간의 방향을 살피고, 새로운 장소성을 쌓아가고 공간의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권역 내 문화 다거점 공간(문화이음-터)들이 연결되고 각 이음터의 활동들이 안내되고 확산되는 공유의 장을 마련함

2. 개요



- 기간 : 2022년 5월~11월
- 장소 : 낙동강파출소(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9)
- 주체 : 칠곡군문화도시지원센터 주관, 사업 협업 파트너 3인(프로젝트 및 총감독, 사업 PM, 코디네이터 및 건축가)
- 대상 : 칠곡 시민 전체(왜관·기산·지천 권역 내 시민 우선)
- 내용 : 시민참여 공간 기획 및 구성, 전문가 컨설팅, 시민참여 공간 연출 및 운영

3. 과정 및 세부 내용



- 프로젝트의 과정은 총 4개의 단계와 10개의 세부 과정으로 나뉘어 있음
- '알아가기'는 참여자와 서로의 생각을 알고 공유공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유공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임
- '계획하기'는 고민을 통해 만든 생각을 공간으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공간에 상상 과 운영 방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임

- ‘실행하기’는 계획한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제작, 설치하며 앞으로 사용할 공간을 완성하는 과정임
- ‘사용하기’는 만들어진 공간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신이 시도하고자 했던 활동과 공간을 운영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공유하는 과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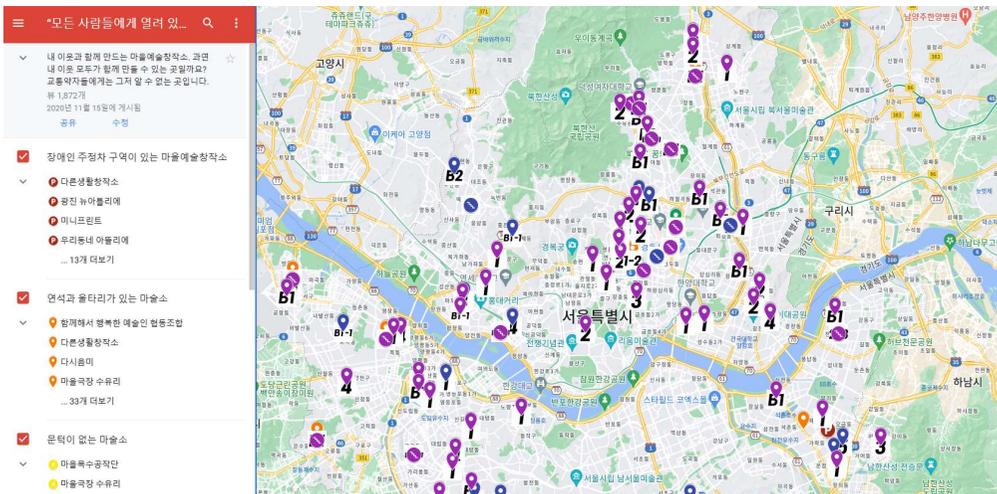
단계		내용
신청 및 접수		
(심사) 선정 및 안내		
알아가기	step1 공간과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참여자 간 생각 공유 공간 해석하기(공간답사)
	step2 공유공간에 대한 이야기	공유공간에 대한 이해 공유공간에 대한 참여자들의 정의 공간실험 컨셉 정하기
	step3 공간의 규칙과 우리의 역할	공간 규칙 설정 참여자들의 역할 설정 및 배치 과제 부여(공간 구상안, 도면 그리기)
계획하기	step4 공간 상상하기	공간에 대한 이미지 구상 및 적용 공간 구상(안) 만들기 과제 부여(최종계획안, 예산계획안)
	step5 공간 계획 완성	계획안 발표 및 피드백 공간구현 실행 준비 물품 주문 및 발주
실행하기	step6 공간 만들기	부분 시공 설치물 설치
	step7 공간 오픈	공간 오픈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간 소개 및 공개발표
사용하기	step8 공간 운영	-직접 운영 및 기록
	step9 우리 공간 돌아보기	-공간 운영 경험 공유 -공간의 향후 방향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참고 공간 인증 제도 : 서울시-‘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1. 목적 및 방향

-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촉진,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예술이 아닌 생활형 문화예술로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창작 활동 또는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함
- '시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예술 거점 공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서울 곳곳의 공간들을 '마술소'로 인증함과 동시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 플랫폼을 제공함
- 마을예술창작소는 '자율성'(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 운영), '공공성'(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적 활용을 원칙으로 운영), '마을성'(단지 문화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 운영), '자생성/지속성'(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지속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원칙으로 해 조성, 운영되고 있음 (지원사업 이후 지속 운영하는 공간 포함, 현재 87개의 마술소가 운영 중)

2. 개요



- 기간 : 상시(지원사업 운영 기간 2월~12월)
- 주체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2년 서울시의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2018년 3월 정식 비영리법인단체 (사)마을예술네트워크가 설립됨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 대상 : 주민이 주도하여 공간 운영 및 사업 만들기가 가능한 3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공간 이용자의 경우 누구나 조건 없이 이용 가능)
- 내용 : 마을예술창작소 신청 공간에 인건비·사무관리비·사업 진행비·시설비 지원, 공간 이용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소/활동 정보 제공

3. 과정 및 세부 내용



- 운영주체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해 공간 인증과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 모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공간소개서를 포함한 지원서를 접수 받음
-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타 유형과 이를 통합한 형태의 시설구성도 가능함

공간형태		개념 및 구성방식
마을문화 공방	생활공예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예로 제작 및 커뮤니티 아트화 공간
	공예교육	생활공예·전통공예 교육 공간
	제작공방	마을 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공간
마을문화 센터	연습실	마을 내 동아리의 연습 공간(밀폐된 스튜디오 형태로 구성)
마을문화 쉼터	사랑방	주민이나 문화 동아리 회원끼리 자유롭게 모여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커뮤니티 공간
마을문화 장터	발표장	마을 문화 활동의 발표 공간(워크숍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
	기획실	축제 등 마을 문화 활동을 위한 기획 공간
	악기은행	악기 등 대여, 문화행사에 필요한 대형 물품 저장 공간

- 사업 타당성과 실행력,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고 6~7개소의 대상지를 확정함
- 대상지 선정 후에는 자치구와 창작소 사이의 협약을 체결하고, 각 공간마다 자유롭게 사업을 실행함

활동유형	내용
일상예술공간	필요한 것과 상상한 것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배움을 나눔함. 같이 모임을 한 사람들과 공연과 전시, 마켓을 기획할 수도 있음
동네 사랑방	지인들과 의미있는 모임을 하고 싶을 때, 동네 파티를 할 수 있음. 활동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되는 다정한 공간, 환대하는 공간임
지역의 예술공간으로 해석하기	전시를 하여 아트스트릿을 만들. 거리 공연, 마을 축제, 골목 시장 등 문화를 같이 만들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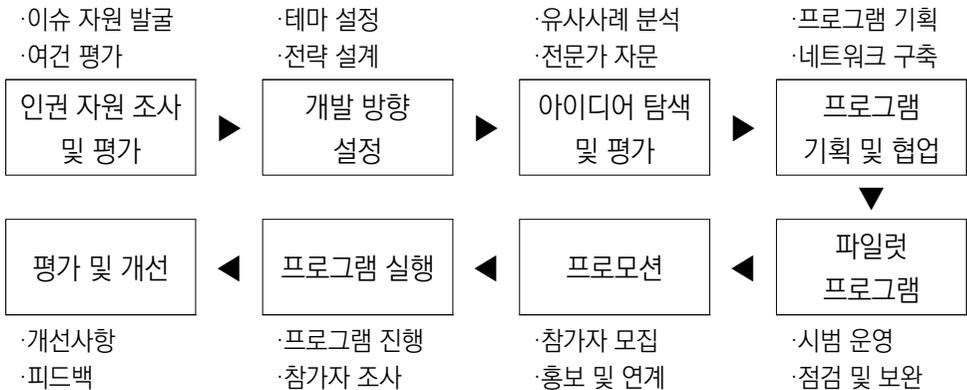
- 확정된 공간은 마을예술창작소 온라인 플랫폼 지도에 게시됨. 지도에서는 공간 명과 주소,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공간에 대한 정보(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문턱 유무, 연석과 울타리 유무, 장애인주정차구역 유무 등)가 함께 제공됨
- 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마을예술창작소에서 진행되는 기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원하는 모임/강좌가 없을 시 공간을 활용해 직접 마을 모임을 진행할 수 있음

● 지역특화 인권 프로그램

1. <지역특화 인권 프로그램> 프로세스

- 지역특화 인권 프로그램은 인권의 보편성과 더불어 지역이 지닌 인권 이슈, 사례 등을 바탕으로 1) 지역의 고유성, 2) 지역 활동과의 연계, 3) 인권체험 및 교육의 가치 확산을 바탕으로 4) 일상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함
- 지역특화 인권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인권 관련 자원 조사 및 평가, 개발 방향 설정, 아이디어 탐색 및 평가, 프로그램 기획, 프로모션, 프로그램 실행 등의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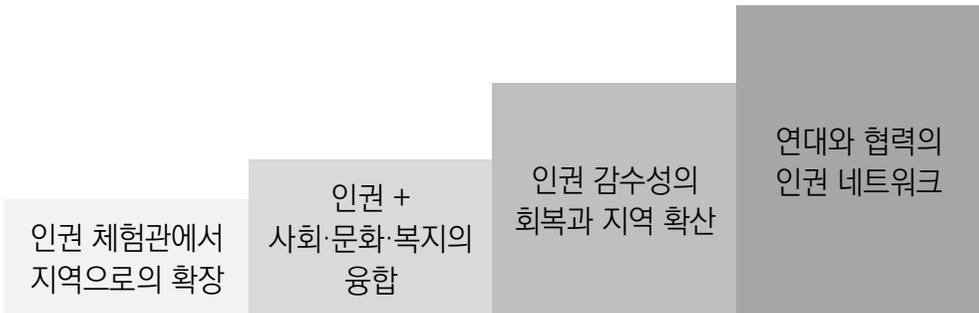
<그림 4-10> 지역특화 인권프로그램 추진 과정



2. 인권 체험 프로그램에서 지역성

- 지역특화 인권 프로그램은 생활권, 기초 단위 내 일상적 사회·문화 환경과, 유관 기관 및 단체/시설과의 협업형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림 4-11〉 인권 체험 프로그램에서 지역성



- 지역사회에서 함께 호흡하는 관계망 내 개별 시민과 유관기관/단체들이 인권 주체로 등장하여 소통하고, 연대·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화 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은 확장될 수 있으며, 인권체험관의 플랫폼 기능을 연결할 수 있는 결절점으로서 인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

3. 〈지역특화 인권 프로그램〉 : 파일럿 프로그램

- 지역특화 프로그램의 경로 탐색 및 적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경북 칠곡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
- 지역 내 타 분야 기관과의 연계지점 도출 및 향후 지속적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모듈을 확인함

표 99 지역특화 인권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 칠곡군 문화도시와 함께하는 ‘청소년 인권 테이블’
목적 및 방향	- 지역 내 문화영역 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관·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시민 일상 속 인권 담론 형성 - 일상에서 접하는 인권적 상황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당 분야 참여자의

	<p>인권 감수성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깃별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향후 인권체험관 프로그램으로 설계 시 보완 및 개선지점 도출
참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곡군문화도시 의제 실천 활동 내 청소년 참여자 50명 중 참여자 모집 - 청소년 이슈 모임 / 10대들의 하루(10대 자립마을) 자치·체류형 / 10대 문화 주체 / 청소년 마을 학교 TF 참여자 등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지원조직의 기존 활동 내용 및 욕구 파악, 연계 가능 지점 모색 - 지역 내 문화 분야 사업 진행 과정 및 자원을 콘텐츠로 활용, 체험 내용으로 연계 - 집담회 진행을 통해 인권적 이슈 발굴, 향후 지역 내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이슈·교보재 도출 - 향후 인권체험관 활동과의 지속적인 연계 방안 모색
실행 방법	<p>[칠곡군 문화도시 지원센터 협조-사전 인터뷰/집담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모집 및 집담회 개최 - 문화영역 활동 인권 이슈 도출 <p>[프로그램 교보재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담회 진행 및 이슈 도출 과정에서 필요한 교보재 제작 <p>[효과성 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성 및 개선지점 분석 <p>[기록 및 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인권체험관에서 운영 가능토록 기록·홍보·메뉴얼 등 제작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문화 분야 기관과의 실효적 연계지점 도출 - 활동 청소년의 일상적 인권 담론 형성 프로그램(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인권체험 효과 사전 점검 매뉴얼 제작

참고 파일럿 프로그램 ‘청소년 인권 테이블’ 진행 결과

1. 프로그램 사전 준비

1) 목적 및 대상 설정

- 기존의 지역 현황(자원·생태계)을 반영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기관·단체·조직들과 협력하고 있는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지역(법정문화도시)을 대상지로 고려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스스로가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가도록 포괄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옴. 2022년 12월 기준 총 24개의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있으며, 각 도시별로 중간지원조직이자 지역 내 다양한 정책의 연계·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전국 24개의 법정문화도시 중 ① 교육·다문화·도시재생·마을·복지산업·예술 등 다양한 생태계와의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② 시민당사자의 논의/협약/실행 구조가 확보된 ③ 추진해온 사업 내용과 문화도시지원센터의 활동을 살폈을 때, 추후 인권체험관(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을 고려했을 때, 대구인권체험관에서 관할하는 경상북도 칠곡군을 대상지로 선정함

*칠곡군은 2022년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되기 전에도 평생학습도시(2001년)와 인문학도시(2012년), 문화특화지역(2019년)으로 선정되며, 시민거버넌스인 ‘칠곡시민회’를 중심으로 도시의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결해옴. 또한 문화도시 예비사업추진 과정(2019년)에서부터 권역별·이슈별 대화모임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삶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세대·영역별 당사자가 연결돼 이슈를 도출하는 ‘이웃모임’과, 등장한 이슈를 도시차원의 의제로 구체화하는 ‘주제모임’을 진행해옴. 5,000여명이 참여한 370개의 주제모임에서는 ‘청소년 인권’, ‘장애당사자 자립’, ‘안전한 도시’, ‘문화적 지역편차 가속’, ‘돌봄과 문화안전망’, ‘외국인 문화관계망’, ‘기후 위기 대처’, ‘성인지 감수성’ 등의 인권 관련 키워드가 등장해 꾸준히 논의·실천되어옴

- 인권체험관의 주요 방문자(방문자 중 66.0%가 미성년자로, 학령별 분포는 초등학생이 60.1%)와 프로그램의 특성(대화형 프로그램으로 주제를 이해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을 고려해, 칠곡군문화도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함

2) 준비과정

- 칠곡군문화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을 발굴하고 관계 맺어온 칠곡시민회,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연결됨. 프로그램 목적과 과정이 담긴 안내문을 공유하고, 참여자를 모집함
- 참여자가 확정된 뒤, 문화도시에서 활동해온 시민들과 당사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함.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진행해온 관련 활동과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을 조율함
- 기존 활동 내용과 참여자 특성 및 요구, 지역 이슈 등을 반영해 최종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참여자에게 세부 일정을 공유함. 계획은 아래와 같음

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당사자가 체감하는 인권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서로의 인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 실효적인 인권체험이 이루어지기 위한 대화형 프로그램 파일럿을 진행해 프로그램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함 													
대상 및 인원	- 초등 5학년(1명), 초등 6학년(4명), 중등 2학년(3명)으로 총 8명이 한 개의 그룹을 만들어 활동함													
담당자	- 프로그램 진행자 2명													
장소	- 칠곡문화도시거점공간 '낙파'(낙동강파출소)													
주요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소요시간</th> <th>활동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0:30~10:40('10)</td> <td>· 참석자 소개 및 안내</td> </tr> <tr> <td>10:40~11:20('40)</td> <td>· [1주제] 청소년으로 지역에 살면서 마주하는 인권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 지역 청소년 인권 이슈 아이디어션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td> </tr> <tr> <td>11:20~11:30('10)</td> <td>· 쉬는시간</td> </tr> <tr> <td>11:30~12:20('50)</td> <td>· [2주제] 인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지역사회/청소년의 방법을 이야기해봅시다. - 지역 청소년 인권 의제 도출-논의 - 향후 활동 방향 논의</td> </tr> <tr> <td>12:20~12:30('10)</td> <td>· 프로그램 평가(워크북 내 참여자 평가표 활용)</td> </tr> </tbody> </table>	소요시간	활동 내용	10:30~10:40('10)	· 참석자 소개 및 안내	10:40~11:20('40)	· [1주제] 청소년으로 지역에 살면서 마주하는 인권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 지역 청소년 인권 이슈 아이디어션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	11:20~11:30('10)	· 쉬는시간	11:30~12:20('50)	· [2주제] 인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지역사회/청소년의 방법을 이야기해봅시다. - 지역 청소년 인권 의제 도출-논의 - 향후 활동 방향 논의	12:20~12:30('10)	· 프로그램 평가(워크북 내 참여자 평가표 활용)	
	소요시간	활동 내용												
	10:30~10:40('10)	· 참석자 소개 및 안내												
	10:40~11:20('40)	· [1주제] 청소년으로 지역에 살면서 마주하는 인권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 지역 청소년 인권 이슈 아이디어션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												
	11:20~11:30('10)	· 쉬는시간												
11:30~12:20('50)	· [2주제] 인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지역사회/청소년의 방법을 이야기해봅시다. - 지역 청소년 인권 의제 도출-논의 - 향후 활동 방향 논의													
12:20~12:30('10)	· 프로그램 평가(워크북 내 참여자 평가표 활용)													
담당자 준비물 및 예산	- 현수막 25,000원, 문구류(명찰, 전지, 포스트잇, 스티커, 필기구) 15,000원, 참여자 간식 20,000원으로 총 60,000원													

2. 프로그램 진행

1) 도입

① 활동 목적 및 과정 설명



-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세스를 설명함
- 활동 시 주의사항과 주제와 관련한 개념, 이론, 배경 등을 설명함

*준비물 : 일정표(프로그램 실행 계획서 내용 중 세부 일정을 출력해 명찰과 함께 제공)

② 자기소개 및 아이스브레이킹



- 참여자 간 소개와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보다 원활한 논의 환경을 조성함

*참여자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어도,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당 과정을 진행하기를 권장함

*준비물 : 명찰, 필기구

③ 규칙 만들기

-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의 연장으로, 라운드테이블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스스로 정해봄
- 청소년 당사자들의 논의 결과 ▲ 서로 존댓말 사용하기 ▲ 다른 사람의 의견을 틀렸다고 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 발표 순서는 랜덤으로 ▲ 발표하는 사람의 왼쪽에 앉은 사람이 대신 메모해주기와 같은 규칙이 만들어짐

*참여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면, 담당자가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존중받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을 샘플로 제시하는 것을 권장함

2) 전개

④ 지역 청소년 인권 이슈 아이디어션



- ‘청소년으로 지역에 살면서 마주하는 인권 이슈’를 주제로 자유롭게 토의를 진행함
- 각자 본인이 경험/목격한 또는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인권 이슈를 발표하고, 발표된 내용을 포스트잇에 기록해 전지에 부착함
- 발표된 내용을 비슷한 주제로 묶어 재배치함. 공유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음

분류(키워드)	내용
수업 시간 이후의 수업으로 쉴 권리가 침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엔 쉬어야 하는데 단어 시험 커트라인을 못 넘겼다고 일요일에 남김 - 선생님이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해요
학교와 집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하거나 사용을 감시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학교는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못합니다. 수업시간은 수업에 방해가 되는 건 알겠는데 쉬는 시간에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핸드폰을 뺏겼다 - 엄마가 게임하지 말라고 핸드폰을 훔쳐본다 - 휴대폰으로 톡하는데 동생이 훔쳐봄 - 엄마가 폰 검사를 했다 - 아빠가 휴대폰을 본다
친구에게는 장난이지만 나에게는 폭력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핫팩을 던지고 놀아서 맞았는데 장난이라고 넘어감 - 입은 패딩이 갈색인데 친구들이 나한테 똥이라고 자꾸 놀린다 - 샤프로 어깨를 찌르는 것을 봤다 - 아무 이유 없이 정강이를 차였다

분류(키워드)	내용
부모님·선생님이 폭행(폭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쌤(선생님)이 딱밤을 때린다 - 유치원 선생님이 싸운 친구랑 화해하라고 서로 박치기를 해서 좀 아픈 거 같았다 - 유치원 선생님이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 쌤이 다른 친구에게 가위를 던지는 걸 봤다 - 실수로 밥을 쏟아서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았다 - 쌤이 펜을 던졌다 - 시험쳤는데 점수 때문에 쌤이 못했다고 시험지 찢었다 - 어린이 집에서 선생님이 우리 할아버지 없다고 그랬다 - 친구랑 싸워서 아바한테 맞았다
성별로 차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문쌤이 장발머리 남학생 보고 '남자가 왜 머리를 기르냐고 머리를 자르라고 혼냄' - 담임쌤이 여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더 잘듣는다고 남학생을 갈굼 - 선생님이 남자는 울지 말래요
가족·친구들이 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망가뜨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이 내 물건을 마음대로 만져요 - 형이 내 침대에 허락없이 마음대로 누워서 침대가 부러졌어요 - 아버지가 핸드폰을 부셨다
하기 싫은 것을 강요당함/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발표하기 싫는데 번호 순이라고 강제로 발표를 시켰다 - 학교 체육복이 초록색이어서 입기 싫는데 입어야함 - 선생님이 급식 먹기 싫은걸 먹여요 - 2학년 체육쌤이 선배들만 체육복 입으라고 허락하고 1학년 중 체육복 입은 애들 불러서 너넨 왜 체육복 입냐고 뭐라함 - 엄마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만 먹으라고 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가 뒤여서 급식을 빨리 못 먹는다 - 급식이 있는데 양 조절을 못해서 뒷사람이 먹지 못할 때가 있다.

*담당자는 참여도가 낮은 참여자를 격려하고 우선으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아이데이션 진행 중 발표 내용을 미리 분류하지 않도록 함. 진행 시간을 단축하고 담당자의 편의를 높이거나, 참여자들이 정리된 키워드의 범위에서만 사례를 덧붙일 가능성이 있음.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프로세스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준비물 : 전지, 포스트잇

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



- 전지에 부착된 포스트잇 중 공감하는·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해결이 시급한 내용에 스티커를 붙여 투표를 진행함

*투표 방식은 그룹 내 참여 인원, 도출된 아이디어 수, 아이디어 간 유사성(분류/키워드 설정의 용이성)에 따라 조정하도록 함. 참여 인원과 아이디어 수가 적고, 아이디어 간 유사성이 낮을 경우 각 의견(포스트잇)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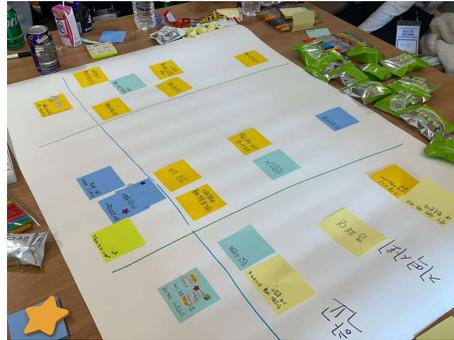
*준비물 : 스티커

⑥ 지역 청소년 인권 의제 도출



- 각자 5개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3개의 내용을 우리 그룹의 핵심 의제로 선정함
- 투표 결과 ▲ 수업 시간 이후의 수업으로 쉴 권리가 침해당함 ▲ 휴대폰을 압수당하거나 사용을 감시당함 ▲ 친구에게는 장난이지만 나에게서는 폭력임이 의제가 선정됨

⑦ 지역 청소년 인권 의제 논의



- 선정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스스로의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해봄

분류(주체)	의제 1. 수업 시간 이후의 수업으로 설 권리가 침해당함	의제 2. 학교와 집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하거나 사용을 감시당함	의제 3. 친구에게는 장난이지만 나에게는 폭력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한다 - 학교위원회에 이야길 해서 고친다 - 학교 규칙을 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뺏는 이유가 우리가 미숙해서 안 좋은걸 많이 보거나 중독될까봐라하면, 학교에서 중독 안 되게 하는(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 방송부 앞 사연함에 넣어서 방송되면 주위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고 장난치는 친구도 심각함을 알 것 같다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아니면 이런 걸(현황을) 잘 모르니, 캠페인을 진행해 이런 일이 있다는 것과 이게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란걸 알리고 공감받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지, 누가 뺏는지, 뺏는 것에 동의하는지, 얼마나 기분 나쁜지를 설문조사를 하고 어른들이 보는 신문에 실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전담 경찰서나 상담소처럼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본다 - 117에 전화해본다 - 칠곡군 청소년 상담소를 만든다
스스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보이콧한다! 수업을 하든말든 저는 설거예요 - 친구들을 모아서 다 같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고 항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 타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다

*논의 전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해 '지역사회'에 대한 세부 설명을 제공할 것을 권장함. 지방자치단체와 조례, 공공기관, 언론,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기관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의견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3) 마무리

⑧ 향후 활동 방향 논의



- 활동 내용을 요약하고 활동 의의를 도출하며 논의과정을 마무리함
- 프로그램 참여 내용이 일회적 체험과 논의 단계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담당자는 신청 접수-사전 인터뷰 진행 단계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참여자의 기존 활동과 논의된 의제가 연결되도록 돕고, 실효적이고도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도출되도록 도와야 함

- 논의 결과 ▲ 학교에서 가까운 친구들이랑 더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모으기 ▲ 칠곡군 문화도시 청소년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는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향후 활동 방향으로 도출됨

⑨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효과 파악과 개선지점 도출을 위해 참여자 평가를 시행함

*담당자는 참여자에게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이 프로그램 개선에 있음을 설명하고, 참여자가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준비물 : 참여자 평가표(워크북 참고)

3. 프로그램 사후 관리

1) 프로그램 평가 결과 정리

- 프로그램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됨

*프로그램 및 평가 참여자 수가 8명인 점을 고려해, 각 항목('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아니다', '전혀 아니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를 빈도표로 작성함. 파일럿 결과를 반영한 본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응답 결과를 토대로 DB를 구축함으로써 유의미한 값을 산출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기획' 만족도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다소 아니다	전혀 아니다
(01)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획 의도에 공감한다	4명	4명	-	-	-
(02) 프로그램의 구성과 짜임새가 좋았다	5명	2명	1명	-	-
(03) 평소에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다	2명	6명	-	-	-
(04) 일정 및 시간대가 적절하다	5명	2명	1명	-	-
(05) 프로그램 진행 시간과 과정별 소요 시간이 적절하다	4명	2명	2명	-	-
(06) 공간·시설이 신체적·물리적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방문하기 용이해보였다	3명	4명	1명	-	-
(07) 심리적인 부담 없이 편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6명	2명	-	-	-
(08)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가 적당하다	5명	2명	-	1명	-
(09) 프로그램 '기획'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6명	2명	-	-	-

□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1)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다소 아니다	전혀 아니다
(01) 일시 및 장소 등 프로그램 방문을 위한 안내가 잘 되었다	4명	3명	1명	-	-
(02) 프로그램 참여 신청 과정이 까다롭거나 복잡하지 않았다	3명	4명	1명	-	-
(03) 프로그램 준비 과정과 진행 및 관리가 잘 되었다	5명	3명	-	-	-

□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2)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다소 아니다	전혀 아니다
(04)	프로그램 진행 시간과 과정별 소요 시간이 적절하다	2명	4명	1명	1명	-
(05)	프로그램 진행 인력이 전문적이었다	5명	2명	1명	-	-
(06)	프로그램 진행 인력이 적극적이고 친절했다	6명	2명	-	-	-
(07)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좋았다	5명	2명	1명	-	-
(08)	프로그램 진행 분위기가 좋았다	4명	4명	-	-	-
(09)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7명	1명	-	-	-

□ 프로그램 '성과' 만족도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다소 아니다	전혀 아니다
(01)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3명	5명	-	-	-
(02)	프로그램에서 접하게 된 내용이 나의 일상에서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5명	3명	-	-	-
(03)	이 프로그램은 나와 우리 단체 지역의 인권감수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명	5명	-	-	-
(04)	심화형 프로그램 및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	6명	2명	-	-	-
(05)	인권체험관 프로그램을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7명	1명	-	-	-
(06)	프로그램 '성과'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6명	2명	-	-	-

□ [프로그램 종합 만족도]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다소 아니다	전혀 아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7명	1명	-	-	-

□ [프로그램 만족 사안]

- 생각보다 재미있다
- 가장 좋았던 건 친절한 것 같다
- 인권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마음껏 말해서 좋다
- 걱정하던걸 도울 수 있다
- 편안한 느낌
-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 인권에 대해 내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시간이 적절했고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즐거웠다

□ [프로그램 개선 안]

- 시간이 길다
- 없음

2) 요약 및 시사점

- 원활한 라운드테이블 진행을 위해선 4~6인이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나,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8명의 초·중학생이 하나의 그룹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해 예정된 ‘그룹별 라운드테이블-그룹별 활동 공유-오픈 라운드테이블’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축약해 준비함
- 나이가 다른 8명이 한 그룹에서 각자의 의견을 도출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당사자 논의과정에 많은 시간을 배분함. 결과적으로 세부 프로세스는 축소 되었으나 프로그램 총 소요시간은 120분으로 기존 계획보다 늘어남. 아이디어선과 투표에는 40분, 해결 방안 모색(청소년 인권 의제 도출-논의)과 향후 활동 방향 논의 과정에는 50분의 시간이 배분됨
- ▷ 프로그램 진행 결과 참여자들은 그룹 내 인원수가 많아 진행 시간이 지체되거나,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학교 수업 시간과 비슷한 것을 부담스러워함.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참여 인원수와 소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남
- ▶ 프로그램 진행 내용과 참여자의 평가 결과를 고려했을 때, 추후 진행될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반영할 수 있음

- 참여자가 초/중/고등학생일 경우, 각 과정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부 프로세스별 소요시간을 학교 수업시간보다 적게 설정함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체 참여 인원수는 30명 내외, 그룹별 참여 인원수는 4~6명으로 설정함
 - 프로그램 진행에 배분된 시간이 짧을 경우, 그룹을 동질 집단으로 구성해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하도록 돕고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도록 함
 - 참여자의 적극성과 흥미, 집중도에 따라 프로그램 세부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함
- 참여자들은 칠곡군문화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지인의 추천으로(칠곡시민회)/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청소년참여위원회) 프로그램을 신청함
 - 참여자들은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지만, 상호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고려해 각자의 이름 또는 닉네임을 적을 수 있는 명찰을 제공함. 또한 누구나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기소개를 포함한 아이스 브레이킹 과정을 간략히 진행함
 -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일정을 함께 공유했으나 충분히 전달·설명되지 않았을 상황을 고려해, 참여자가 프로그램 진행 중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 뒷면에는 세부 일정을 출력해 제공함
- ▷ 참여자 중 일부는 신청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일정에 대한 세부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부 일정을 명찰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음. 아이스브레이킹은 논의 시간 확보를 위해 짧게 진행됐지만, 참여자들이 본인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기에 앞서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편안한 대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 마찬가지로, 추후 진행될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반영할 수 있음
- 참여자가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과정별 내용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명찰 등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 참여자의 적극성을 높이고 원활한 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자 간 면식이 있는 관계에서도 아이스브레이킹 과정을 진행하도록 함 (필요시 기존 인권체험관에서 제작·활용해오던 체험키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네트워크 프로그램

1. 연대와 협력의 인권 네트워크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 차원의 인권 관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나, 개별적·독립적으로 분산된 인권 관련 ‘시설’과 활동가, 연구자 등 인권 관련 ‘인력’, ‘인권 운동 및 활동’을 연결하기 위한 통합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증대됨
- 이에 기능적이고 단편적 교류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양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권 당사자들의 만남과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소통과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필요함

2. 네트워크 프로그램 (안)

1) 인권 네트워크 DB·포털 : 모아진 사람들

표 100 네트워크 프로그램 - 인권 네트워크 DB·포털 : 모아진 사람들

프로그램명	모아진 사람들 (인권 네트워크 DB·포털 제공)
목적 및 방향	- 인권 관련 이슈에 숨어져 있던 사람들을 발굴·연결하는 광역 인권 네트워크 구축 - 파편화된 사건으로 피해를 분노하고 전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연대하는 이야기로 구성
참여 대상	- 인권 관련 헌법 관련 사례 등에 함께 했던 개인, 단체, 기관 등 -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단체/시설 포함
주요 내용	- 지역 인권 활동가, 연구자 등 관련 인력들을 발굴·DB화 - 인권 관련 네트워크 인력 링크 및 매칭 - 개인, 시설, 단체, 기관 등 인권 정책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 기관/단체 간 연대 사례 수집을 통한 오픈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 기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머물지 않고 연대 네트워크를 DB화, 관련 정보를 필요한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참고사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맞서 평등의

	<p>가치가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하는 당사자들의 현장 연대 활동을 주축으로 인권 의제 발굴 및 실태조사 활동과 인권 교육활동 등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함
참고사례	<p>[부산인권플랫폼 파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인권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활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쉼과 교류를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함 - 작은 단체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교류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공동의 의제에 부문별 활동역량을 모아 힘 있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모금캠페인과 기부매칭 플랫폼을 개발하여 현장활동과 연대하려는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함 - 인권연구자와 현장활동가가 그룹을 구성하여, 현장과 이론이 만나 인권활동의 경계가 확장되는 선순환을 만들고, 행정 및 시민사회와 다중으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공론장을 만듦 - 시민들에게 부산지역 인권이슈를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뉴스레터 브리핑, 인권운동현장의 당사자와 부문별 권리주체에게 직접 듣는 인권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와 청년을 위한 인권단체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2) 인권 자원 매핑 : 인권 지도

표 101 인권 자원 매핑 프로그램 - 우리 동네 인권 지도

프로그램명	우리 동네 인권 지도
목적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인권 역사 현장의 기록 및 재조명 - 인권 관련 지역 연관 생태계 구조화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감수성 향상
참여 대상	- 일반 시민, 인권활동가/연구자, 지역·문화·역사·교육 등 관계 전문가
주요 내용	<p>[인권체험관 내 DB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된 자원을 연결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매핑 및 재맥락화를 통한 DB구축 - 개방형 정보 제공을 통해 자유롭게 평등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및 안내 기능 제공

	<p>[지역별 인권 지도만들기 시민 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인권 관련 장소, 역사 등에 대한 시민들의 추천·공모 - 인권, 역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걸쳐 인권 현장으로 선정 - 주제별, 지역별 분류 및 인권 스토리텔링을 통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활용
참고사례	<p>[전라북도 인권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 학계, 교육계, 전북연구원 등이 지역 인권 네트워크 참여 - 전북대 4.4의거, 초남이성지 등 지역 인권 역사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기록화를 위한 세미나 및 학술연구 등 진행 - 지역 인권 역사 현장을 재조명하고 이와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인권 역사 현장 교육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함
참고사례	<p>제주도 [노인인권지도](20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들이 돌봄의 대상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노인인권 지도 - 노인인권지도는 UN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 따라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 다섯 가지 영역별 실현 공간을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와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은 6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인권 옹호자 그룹'을 구성하여 직접 지도에 표시해서 제작함

3) 인권 포럼 및 콜로키움

표 102 인권 포럼 및 콜로키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민 인권 포럼/인권 현장 콜로키움
목적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감수성 확산 및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결고리 마련 - 국내 인권 이슈, 담론 등 정보 제공 및 국내 인권 운동·활동 내용 홍보
운영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포럼 연간 2회 - 주제별 콜로키움 상시 진행
참여 대상	- 인권 활동가, 연구자 + 일반 시민
주요 내용	<p>[포럼 및 콜로키움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제 선정 및 소재 발굴 필요(네트워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및 콜로키움 전담 인력 구성 필요(인권교육원 연계) - 시민 참여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진행 필요 <p>[시민 인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감수성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포럼 - 기존 고 관여자 중심의 참여 형태가 아닌 일반시민 참여를 위한 릴레이식 의제별 포럼을 통한 시민 네트워크 형성 및 소통창구 마련 협치를 위한 [인권 현장 콜로키움] - 인권 활동가 및 연구자, 관계 시설/기관으로 구성된 간담회 형태 - 인권 현장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공동 의제 발굴 및 상생·협력 모델 구축
참고사례	<p>[세계인권도시포럼(광주광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및 3개 기관이 주최하여 열리는 국제 인권 포럼 -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관련 정책 공유, 인권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제도와 장치 재설계 등의 내용을 논의하는 장 -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 형식의 포럼을 비롯하여 인권 탐방, 도시권 의제 관련 교육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반시민 영역까지 수요층을 확장시킴
참고사례	<p>[지역혁신 우수사례 공유확산 포럼(행정안전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는 지역혁신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자체 혁신 담당 공무원, 현장 활동가, 전문가, 주민 등 지역혁신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우수사례 공유 확산 포럼을 매년 개최 - 포럼을 통해 지역혁신사업의 성과를 축적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 구조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계 등 사업성과와 의미를 확산시킴

③ 조직 및 인력

- 인권체험관의 기능 및 역할 수행과 그에 따라 진행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카 이브, 전시·연구·사무 등 인권체험관에 필요한 인력을 산출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체험관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의 크기, 국가인권 위원회(인권사무소)와 인권체험관의 관계, 인권체험관 운용에 필요한 업무, 인권 체험관 개관 후 1년 차 운영비, 인권체험관 개관 전후 필요 용역비 등을 산출함
- 인권체험관 운영 조직은 관장과 직원을 포함 15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대한민국의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 일반을 만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인권체험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인력으로 구성함

● 인권체험관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

- 인권체험관 운영조직에는 최소한의 행정기능만을 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의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의 기능과 업무가 인권체험관으로 확장 연계되는 점을 인력 및 편제에 반영함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에서 수집·분석 및 보존한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 인권도서관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자료를 통해 인권체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력을 인권체험관에 둠
- 인권체험관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할 인력을 둠
- 주5일 개방하고, 퇴근 및 하교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정함
- 인권체험관 시설관리, 방문객 안내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할 인력을 둠
- 방호, 미화, 인권체험 프로그램 진행 업무는 정원 외로 둠

- 인권체험관의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6조(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권체험관 운영에 따른 직제를 사무처 기구에 반영하고, 담당 사무를 정하며 필 요인력을 전보·증원함
- 인권체험관 기능 및 역할 수행,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직무 분석과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103 인권체험관 운영에 따른 인력과 직무 분석

구분	인원		직무
	정원내	공무직	
관장	1	-	인권체험관 총괄
행정	3	-	인권체험관 사업계획·발전계획 수립 서무, 예산, 재산관리 인권강사 운용
전시 및 체험	3	-	인권체험관 각종 전시 기획 및 운영 전시작품 관리 감독 체험 및 전시에 따른 가변 공간 운용 생활권 인권체험 프로그램 제공
아카이브 및 연구	3	-	인권자료 수집 관리 인권자료를 활용한 인권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형 인권프로그램 연구 개발 인권체험 현황 기록 및 아카이브 인권체험 및 방문자 관련 데이터 관리
교류 및 홍보	3	-	생활권 인권체험 공간 발굴·인증 생활권 인권체험 공간 유지 관리 지역 인권사회단체 교류 협력 대시민 세미나 포럼 등 개최 인권체험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시설	2	-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건축, 소방, 편의시설 관리

구분	인원		직무
	정원내	공무직	
			기계, 냉난방, 승강기 시설물 유지관리
방호·미화	-	3	주5일 근무, 주2회 야간근무 (2인 근무 - 1인 휴무 방식)
인권체험 프로그램 진행	-	변동	인권체험관 방문자 고려 한 인권강사 활용
계	15	3	
총계	18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체험관의 관계 및 인권체험관 운영조직 제안
 - 인권체험관 필요성·타당성에서 살펴보았듯,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동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조(정의)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체험관을 운영함
 - 조직의 적정 규모 및 필요 인력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사무소)의 정원·예산·조직·현원·업무분장을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별 실천과제와 2022년도 단위사업 현황을 파악함

〈그림 4-12〉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도(2021년 12월 기준)



출처 :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표 104 국가인권위원회 정원(2021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 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연구사	경감
계	234	4	6	3	19	14	57	57	44	8	20	1	1
본부	190	4	6	3	14	14	47	48	34	3	15	1	1
소속	44	-	-	-	5	-	10	9	10	5	5	-	-

출처 :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표 105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현황(2017~2021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9,289	31,412	36,683	36,669	37,931
인건비	14,147	15,674	17,936	17,885	19,002
기본경비	8,102	8,077	8,152	8,587	8,519
주요사업비	7,040	7,661	10,595	10,197	10,410

표 106 국가인권위원회 현원·업무분장 (2022년 12월 기준)

구분	업무와 인원		(단위 : 명)
	기획조정관		27
(1명)	기획조정관실 업무 총괄		1
	기획재정담당관(과) 업무 총괄		1
기획재정 담당관 (9명)	인권위 조직	1 국회협력관	1
	위원회 업무기획	1 국회, 관서	1
	예산	1 예산편성, 조정	1
	위원회 업무평가, 연간보고서 발간 등	1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관리	1
	행정법무담당관 업무 총괄		1
행정법무 담당관	정보공개	1 행정법무	1
	행정심판, 행정규칙, MOU, 법규집	1 사건기록보존관리	2

구분	업무와 인원		(단위 : 명)	
(13명)	총괄, 감사, 징계	1	정보공개, 행정심판	1
	소송, 법제, 고문변호사	1	행정법무, 비영리법인	1
	기록관리 총괄	1	기타	2
정보화 관리팀 (4명)	정보화관리팀 업무 총괄			1
	정보화 업무총괄	1	정보화기기 담당	1
	인권정보시스템 운영	1		
교육협력심의관			1	
(1명)	기타		1	
정책교육국			55	
(1명)	정책교육국 업무 총괄			
인권 정책과 (9명)	인권정책과 업무 총괄		1	
	북한인권	1	정보인권포럼, 인권 현안과제 등	1
	정보인권	1	자유권	1
	국총괄, 실태조사	1	관서운영경비, 서무	1
	인공지능, 지자체 인권정책	1	기타	1
사회 인권과 (8명)	사회인권과 업무 총괄		1	
	사회권 정책	1	사회인권과 사회권 관련 업무	1
	사회권 정책 검토	1	사회인권정책	1
	사회권, 노인인권	1	사회인권과 총괄 및 사회권 정책	1
	기업과 인권, 인권경영 및 ESG	1		
국제 인권과 (9명)	국제인권과 업무 총괄		1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인권과 부서 총괄	1	노인권리협약 초안 작성	1
	국제인권규약	1	사건조사 등	1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및 국제협력	1	영어 통번역	1
	국제인권	2		
인권 교육 기획과	인권교육기획과 업무 총괄		1	
	인권교육원 설립 총괄	1	아동·노인 인권교육	1
	공공·인권교육전문위	1	간행물·대출·자료회원·정보서비스	1

구분	업무와 인원		(단위 : 명)	
(13명)	도서관·단행본·홈페이지·건축프로그램	1	관서출납, 서무, 콘텐츠	1
	학교영역, 대학 인권센터 협력 등	1	영상자료·연속자료·정보서비스	1
	인권교육원 설립(설계, 공사, 감리 등)	1	지자체·아동·노인분야 등 연수과정 운영	1
	공공·학교 인권교육	1	기타	1
인권 교육 운영과 (8명)	인권교육운영과 총괄			1
	업무총괄, 사이버콘텐츠기획·개발·관리	1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운영 등	1
	사회복지분야, 기업분야 교육운영	1	노숙인 분야 교육과정, 특별인권교육	1
	인권교육	1	기타	1
홍보 협력과 (7명)	홍보협력과 업무 총괄			1
	정책, 캠페인, 영화 제작 및 홍보	1	홍보, 대외 협력	1
	보조금 지원사업, 인권보도준칙 개정	1	언론 홍보	1
	뉴미디어 및 공모전 등	1	홍보협력	1
침해조사국			37	
(1명)	침해조사국 업무 총괄		1	
조사 총괄과 (12명)	조사총괄과 업무 총괄			1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1	진정조사	1
	총괄 및 조사	1	검·경 사건조사	1
	조사	1	진정사건, 관서출납업무	1
	침해1소위, 통계, 조사	1	조사(경찰·사법)	1
	검·경 사건조사 및 기획조사	1	기타	2
인권 침해 조사과 (12명)	인권침해조사과 업무총괄			1
	조사(교정·공공)	1	이주인권	1
	뉴미디어홍보	1	침해사건 조사	1
	인권침해	1	조사	2
	사건조사	1	기타	3
아동 청소년 인권과 (8명)	아동청소년인권과 업무 총괄			1
	조사	2	아동청소년인권 정책 및 조사	1
	진정사건 조사	1	정책, 조사	1
	조사와 구제 및 아동권리위원회 운영 등	1	기타	1

구분	업무와 인원		(단위 : 명)
기획조사팀 (4명)	기획조사팀 업무총괄		1
	방문조사	1 기타	1
	총괄	1	
차별시정국			32
(1명)	기타		1
차별 시정 총괄과 (8명)	차별시정국 및 부서 총괄, 조사		1
	차별사건 조사	1 차별진정사건 조사, 기획조사	1
	차별진정사건 조사	1 진정사건 조사	1
	결재, 일정, 행정	1 기타	1
	관서출납, 조사, 서무	1	
장애 차별 조사1과 (8명)	장애차별조사1과 업무 총괄		1
	장애인차별조사, 정책	1 장애인차별조사 사건	1
	상담 및 진정사건 조사	1 기타	3
	공공, 학교분야 인권교육	1	
장애 차별 조사2과 (8명)	장애차별조사2과 업무 총괄		1
	시설에 대한 정책 및 진정사건 조사	1 장애인/시설관련 인권침해조사	1
	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장애차별조사 및 정책	1
	사건조사	1 조사	1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1	
성차별 시정과 (7명)	성차별시정과 업무 총괄		1
	차별사건 조사	1 서무, 조사	1
	성차별 및 성희롱 진정사건 조사	2 기타	1
	조사업무	1	
인권상담조정센터			23
인권 상담 조정	인권상담조정센터 업무 총괄		1
	과 총괄, 통계	1 인권전문상담	6

구분	업무와 인원		(단위 : 명)	
센터 (23명)	기초조사 및 조정	1	인권전문상담, 진정접수	1
	진정접수, 민원	2	인권전문상담, 진정접수 등	1
	민원 및 진정접수 등	1	전문위원회, 정례간담회, 교류사업	1
	진정사건조사	1	우편, 면전	1
	상담 총괄	1	기타	5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7	
스포츠	스포츠인권팀 업무 총괄		1	
인권팀 (7명)	경기대회 모니터링, 진정사건 조사 등	1	진정사건 조사	1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특별조사팀	1	기타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사무처)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개정 2022. 1. 4.>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조(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심사위원회, 팀장선발위원회, 채용 심사위원회 및 전입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계약직공무원재계약심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대한민국의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 일반을 만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인권체험, 대시민 업무, 지역내 기관 협력, 네트워크, 연구 개발하는 역할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인력을 구상함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직체계와 인력을 구성함

- 인권체험관 운영 조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개 안을 제시함

표 107 인권체험관 운영조직 제안

명칭	장점	단점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사무소의 관할구역과의 정합성 -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비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인권체험관 필요 인력 최소 15명)
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과 인권체험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 - 지자체 내 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형성하기 어려움
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원 설립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음 - 한시정원으로 조직을 실험할 수 있음 - 인권사무소로 업무 이관 시, 지역과의 실효적인 연계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이관 등 절차와 과정

1. 인권체험관 운영 조직 1안

- 지역별 인권체험관의 활동 대상(지역)이 인권사무소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설정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인권체험관은 인권사무소에 소속돼 교육협력팀·조사팀과 유사한 위상을 가짐
- 인권 체험관장은 인권사무소장이 겸하며, 인권체험관 운영에 따른 직제를 인권 사무소에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 인력을 증원함
- 장점 : 인권사 무서의 관할구역과 인권체험관이 담당하는 지역이 동일하여 정합성이 높은 형태이며, 기존 인권체험관 담당자가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인권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과정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음

- 단점 : 인권체험관 운영인력이 인권사무소의 현원보다 큰 규모(15여 명)인바, 조직 비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 4-13〉 인권체험관 운영조직 1안



2. 인권체험관 운영조직 2안

- 대상의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활동(교육/체험)의 목표와 목적이 유사함을 고려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에서 인권체험관을 운영하고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인권체험관장을 겸함
- 장점 : 인권교육과 인권체험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책교육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 내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 단점 : 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지역별 사무소가 아닌, 서울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별 체험관을 담당하며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형성하기가 어려움

〈그림 4-14〉 인권체험관 운영조직 2안



3. 인권체험관 운영조직 3안

〈그림 4-15〉 인권체험관 운영조직 3안



- 1안과 2안의 절충안으로, 한 개의 인권체험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운영 과정을

거침.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권체험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에 소속되며, 조직의 규모와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확인함

- 인권체험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또 다른 체험관을 시범 운영 과정에 포함 시킴. 두 번째 시범 운영이 시작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에서 지역별 인권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함
- 현재 인권체험관 담당자가 시범 운영 기간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반영하고 새롭게 만들어질 체험관의 역할과 기능에 적응하도록 함
- 장점 : 정책교육국에서 인권교육원 설립 과정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암묵지를 인권체험관 조성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한시정원으로 운영조직을 실험하며 조직 비대성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지역별 인권사무소로 업무를 이관 하면 지역과의 실효적인 연계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음
- 단점 : 운영조직과 구조를 이관·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이 복잡함

〈그림 4-16〉 법무부 솔로몬로파크와 인권체험관의 조직(안) 비교



4 공간

● 인권체험관 시설 측면

- 인권체험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은 다음과 같음

표 108 인권체험관 필요 시설 및 공간

구분	명칭	용도
현대 체험	마주침공간	방문자 환대, 인권체험 관련 정보 전달
	세미나실	소규모 집중 논의·체험을 위한 공간
전시	상설전시실	인권체험 및 중소규모 회의 진행을 위한 가변형 공간
	옥외전시실	미디어,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전시에 필요한 공간
자료	영상자료실	인권자료 중 전시와 체험에 활용되는 영상자료를 단체 및 개인적으로 감상·열람 할 수 있는 공간
	인권자료실	자료의 규격, 양, 성질 등을 고려하여 조성
	자료열람실	인권체험과 연계하여 이용자 중심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성
방문자 편의 시설 등	인권강사실	통합 조성 가능
	카페테리아	방문자 편의시설
	수유실·의무실· 안내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비치용품 보관
사무 연구	사무실 및 직원 휴게실	인권체험관 업무 공간, 인권체험 연구 공간 인권체험관 직원 휴게 공간
공용	출입구, 화장실, 기계실 등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제거된 출입구, 유니버설 화장실

- 인권체험관에 필요한 설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09 인권체험관 필요 설비 현황

구분	필요 설비	해당 공간, 관련법 등
기계설비	인권체험관 모든 영역	- 환대·체험·전시·자료 등 인권체험관 전반
에너지 설비	열원설비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대를 위한 건물 전반
	공조 및 환기 설비	- 환대·체험·전시·자료 등 인권체험관 전반
	급배수 위생설비 및 정화조시설	-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우수, 중수 등 「수도법」에 따른 사항
	자동제어설비	- 건축물 내 모든 기계설비의 감시와 제어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가스설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법」 등에 따른 사항
방재·소화설비	자동화재감지기 설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 고감도 연기감지기 시설
	소화설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방화·배연설비	
보안설비	도난경보설비	- 체험관 실내외
	CCTV설비	
	시건설비	
전기통신 설비	전기설비	- 환대·체험·전시·자료 공간별 용도에 적합한 설비
	통신설비	
장애인 편의설비	이동약자를 위한 각종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 인권체험관에 적합한 공간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의 공간에서 연면적

대비 각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10 국내 유사시설의 공간 현황

시설명칭	4·3평화기념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평균
시설 종류	공원·기념관	역사관	기록관	
건축물 구조	지하1층, 지상 4층	지상 3층, 지하 4층	지상 7층, 지하 1층	
대지면적	219,031 m ²	75,465 m ²	1,500 m ²	
건축연면적	11,455 m ² /100.0%	12,062 m ² /100.0%	5,450 m ² /100.0%	
전시실	3,082 m ² /26.9%	3,671 m ² /30.4%	1,616 m ² /29.7%	29.0%
수장고	507 m ² /4.4%	153 m ² /1.3%	582 m ² /10.7%	5.5%
기록관리	528 m ² /4.6%	1,630 m ² /13.5%	527 m ² /9.7%	9.3%
연구 및 교육·관리	593 m ² /5.2%	2,838 m ² /23.5%	100 m ² /1.8%	10.2%
공용시설	6,745 m ² /58.9%	3,770 m ² /31.3%	2,625 m ² /48.2%	46.1%

- 상기 시설들은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요 공간의 평균 면적이 전시 공간 약 29.0%, 수장고 및 기록관리 공간 약 14.8%, 연구 및 교육 공간 약 10.2%, 유지관리·편의·공용시설 약 46.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시설의 공간 현황을 기준으로 인권체험관에 필요한 공간을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표 111 분류별 인권체험관 필요 시설 및 공간

분류	평균 면적 비율	명칭
전시시설	29.0%	세미나실
		상설전시실
		옥외전시실

분류	평균 면적 비율	명칭
		영상자료실
수장고 · 기록관리	14.8%	인권자료실
		자료열람실
연구 및 교육·관리	10.2%	사무실
		직원 휴게실
공용시설	46.1%	마주침공간
		인권강사실
		카페테리아
		수유실·의무실·안내실
		출입구, 화장실, 주차장, 기계실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에 따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무공간의 1인당 면적기준은 최소 7.2㎡임

표 112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

구 분	시장실	부시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직 원
본청	165.3㎡	71.28㎡	56.16㎡	17.92㎡	7.65㎡	7.2㎡

- 2018년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되어 설치해야 하며 규모는 1인당 1㎡ 이상 확보하고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하여 6㎡를 확보해야 함. 단,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 수급인노동자를 포함하여 필요면적을 확보해야 함

-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인권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인력 15명과 방호·미화 인력 3명 총 18명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 사무공간은 108㎡이며, 최소 휴게시설은 15㎡임
- 이를 인권체험관에 필요한 공간에 대입하면 인권체험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면적은 약 1,060㎡임

표 113 분류별 인권체험관 필요 시설 및 공간 (최소면적)

분류	평균 면적 비율	명칭	최소 면적
전시시설	29.0%	세미나실	307㎡
		상설전시실	
		옥외전시실	
		영상자료실	
수장고 · 기록관리	14.7%	인권자료실	157㎡
		자료열람실	
연구 및 교육·관리	10.2%	사무실	108㎡
		직원 휴게실	
공용시설	46.1%	마주침공간	488㎡
		인권강사실	
		카페테리아	
		수유실·의무실·안내실	
		출입구, 화장실, 주차장, 기계실 등	
합계	100.0%		1,060㎡

- 다만, 이러한 산출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유사 시설의 규모와 견주어 적절한 규모를 산출해야 함
- 국내외 유사 시설의 연면적과 정원을 비교했을 때, 1인당 건축 연면적은 다음과 같으며 평균은 약 307㎡임

표 114 국내외 유사시설 건축면적과 정원 비교

시설명칭	4·3평화 기념관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5·18민주 화운동 기록관	민주인권 기념관	[미국] 인권박물관	[이스라엘] 홀로쿠스트 박물관	평균
건축 연면적	11,455㎡	12,062㎡	5,450㎡	7,600㎡	16,800㎡	4,200㎡	9,594㎡
정원	40명	21명	28명	30명	52명	20명	약 32명
1인당 건축 연면적	286㎡	574㎡	194㎡	253㎡	323㎡	210㎡	약 307㎡

- 이 수치를 인권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인 15명에 대입하면 4,605㎡가 도출됨
- 따라서 인권체험관의 역할과 기능,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15명)을 고려했을 때 인권체험관의 필요한 최소한의 연면적은 1,060㎡ 정도, 유사 시설과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연면적은 4,605㎡ 정도임

표 115 국내외 유사시설 건축면적과 정원 비교

구분	비율	공간	연면적 1,060㎡ 기준	연면적 4,605㎡ 기준
전시 체험 시설	29.0%	세미나실	307㎡	1,335㎡
		상설전시실		
		옥외전시실		
		영상자료실		
수장고 · 기록관리	14.8%	인권자료실	157㎡	682㎡
		자료열람실		
연구 및 교육·관리	10.2%	사무실	108㎡	470㎡
		직원 휴게실		
공용 시설	46.1%	마주침공간	488㎡	2,123㎡
		인권강사실		

구분	비율	공간	연면적 1,060㎡ 기준	연면적 4,605㎡ 기준
		카페테리아		
		수유실·의무실·안내실 출입구, 화장실, 주차장, 기계실 등		

● 인권체험관 야외 공간 측면

표 116 인권체험관 야외 공간 구성

구분	공간	활용 및 계획
야외 공간	인권공원	- 인권체험관에 일상적으로 방문토록 유도 - 다목적 야외 활동을 위한 개방적 소통 공간으로 활용
	인권놀이터	- 어린이의 인권체험관 방문을 유도 - 프로그램 대기 장소로 활용 - 놀이를 통해 인권 감수성 습득
	산책로	- 사색의 공간으로 활용 - 인권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체험 효과 제고

- 인권체험관의 프로그램 참여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민들로 하여금 인권체험관에 일상적으로 방문토록 유도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된 소통공간으로서 야외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야외 평탄지를 활용하여 이용객의 커뮤니티와 단체방문객이 집결할 수 있는 인권공원 및 산책로, 인권놀이터를 조성, 이를 통해 인권 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야외 활동 및 이용객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인권공원은 인권체험관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으로,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여가시간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함. 필요시 인권체험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야외 공간으로 활용하며 파티, 집회, 시위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함

〈그림 4-17〉 (사례)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공원



- 인권놀이터는 어린이 친화 공간으로서 인권체험관 주요 방문 타깃인 어린이의 인권체험관 방문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다수의 방문 인원이 예정되어 있을 시 대기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간단한 놀이기구를 배치하여 법 기준에 충족하는 안전한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배리어프리의 관점으로 디자인하여 놀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권적 환경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그림 4-18〉 (사례) 수원시 양지말어린이공원 (BF 인증 최우수 등급)



- 인권체험관을 중심으로 주변부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다양한 시설물과 함께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인권체험 프로그램 이후 개별적인 활동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정보와 역사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체험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함

〈그림 4-19〉 (사례)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 조경시설물 계획 기본방향

- 조경시설물의 배치는 인권체험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각 시설물이 지니는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며, 개성 있는 형태와 외관을 중시하되 각 공간별로 디자인의 조화와 통일성을 고려함
- 각종 조경시설물은 형태와 기능성 등에 대하여 미관성,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함
- 시설물의 이용빈도, 밀도, 물리적/행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 위계를 설정하고, 계획대상지를 통합 배치에 의한 체계적인 공간으로 조성함

● 조경시설물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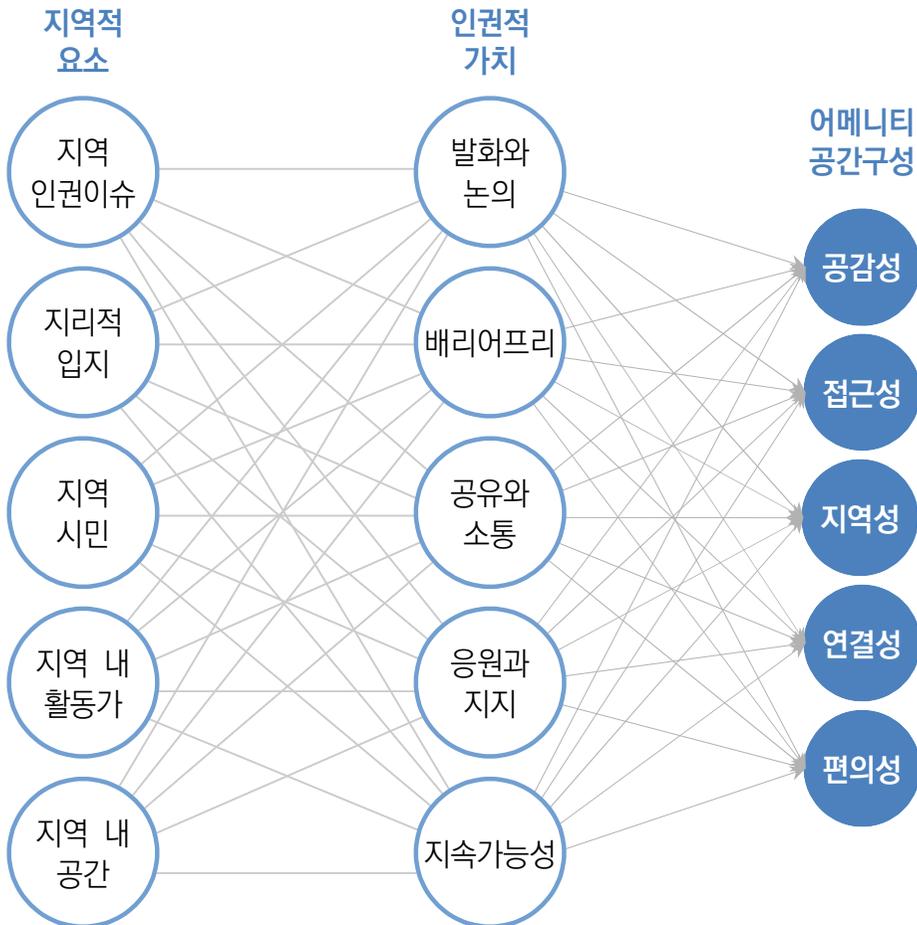
- 파고라 및 정자는 다수의 이용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휴게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비교적 장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지통, 벤치 등과 연계를 고려함
- 벤치는 쾌적한 이용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나무 그늘, 잔디밭, 화단 부근, 파고라 등의 장소에 다른 이용객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함
- 휴지통은 사용이 가장 빈번한 조경시설물로 유지 관리성을 고려하여 튼튼한 구조로 계획하고, 쓰레기나 내용물의 수거가 용이하도록 기능면도 고려하여 계획함
- 안내판은 종합안내판, 시설안내판, 방향 안내판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안내, 유도, 보호, 규제 등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배치함
- 볼라드는 보행자와 차량의 혼재를 구분 짓는 시설물로서 원활한 기능적 역할을 위하여 미적 요인 및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계획함

● 인권체험관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요소

- 해당 지역의 휴먼웨어과 소프트웨어, 사회자원을 고려하여 어메니티¹⁵⁾를 포함한 공간 조성이 필요함
- 인권체험관 공간 조성 시 갖추어야 할 어메니티 요소와 공간 구성의 요소는 시민들이 인권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감할 수 있는 공감성, 누구나 사용이 보장되는 접근성, 그리고 지역의 인권 이슈, 지역 현안에 대해 인권적 관점으로 논의되는 지역성, 인권체험을 둘러싼 사람과 활동의 유기적인 연결성, 효율적 인권체험관 운영을 위한 편의성 등을 확보하는 일임

15) 어메니티(amenity)는 사전적으로 쾌적함, 즐거움, 예의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도시나 주거환경에서는 ‘쾌적한 환경’, ‘매력적인 환경’,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환경, 상태,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종합적인 새로운 개념의 환경을 뜻한다.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 사전) 본 연구에서는 인권체험관 조성 시 도시 환경과 특성, 자원, 문화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그림 4-20〉 인권체험관 조성에 고려되는 요소



1. 공감성

- 지역 시민들이 요구가 반영된, 시민들이 환영하는 공간인가?
- 인권체험관이 입지한 지리적 환경이 기존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가?
- 인권과 관련한 체험과 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나?

2. 접근성

- 해당 도시 및 인근 권역에서 찾아오기 용이한가?

-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배리어프리 디자인인가?
- 폐쇄적인 형태로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지 아니한가?

3. 지역성

- 지역 주민과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쉽게 인지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인가?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는 구조와 형태인가?
- 인권과 관련된 지역 내 상징적 공간들과 배치적으로 유기성을 확보하였는가?

4. 연결성

- 인권체험관 연관 생태계가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용이한가?
- 인권체험 프로그램과 전시-아카이브-사무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실내 동선은 인권체험에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나?

5. 편의성

- 시설이 단순 명료하여 저비용의 관리가 가능한가?
- 유지보수와 환경을 고려한 적정기술의 시설인가?
- 인권체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속 공간과 지원시설은 충분한가?

⑤ 사업비 산정

● 운영비

- 인권체험관의 개관 이후 1년간의 운영비는 2023년 기준 약 807,360,000원으로 산출 및 추정됨. 인권체험관에 필요한 장비 구입, 시설 설치, 공간 구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권체험관 각 부서의 사업비는 제외한 금액임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함)

표 117 인권체험관 개관 후 1년차 운영비 (사업 운영비 제외)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인건비	447,360,000	
관장		
직원	338,400,000	국가인권위원회 인건비 기준
공무직	108,960,000	2020년 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연봉, 3명
행정사무경비	147,500,000	
공공요금 및 세제	10,000,000	인터넷, 전화요금, TV수신료, 기타 수수료 등
소모품비	7,500,000	사무용품 구입, 방문객 응대용품 구입 등
도서인쇄비	7,500,000	각종 구독 요금, 관련 서적 구입 등
임차료	5,000,000	복합기, 정수기, 필터 등 기타 장비 임차료 등
수선유지비	5,000,000	홈페이지 수선 보수 비용 등
보험료 지급수수료	5,000,000	각종 수수료 및 보험료 등
교육훈련비	5,000,000	직원 직무교육비 등
회의비	2,500,000	인권사무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참여 등
연구개발비	100,000,000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비 등
체험장전시장 등 시설운영비	212,500,000	
수도광열비	75,000,000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연료비 등
소모품비	20,000,000	시설안전관리료, 건축, 전기, 통신, 기계자재 재료비, 공조필터, 화장실 비품, 청소용품, 소모품 등
피복비	2,500,000	방호 미화 근무자 작업복, 제복, 피복비 등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수선유지비	25,000,000	체험관 소규모 수선, 전기설비, 승강기, 소방시설,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정기검사, 방역소독, 저수조 청소, 오수정화조 청소, 체험관 정기 청소, 안전진단 등
시설비	75,000,000	건물유지비, 기계·통신·전기·소방설비 유지비, CCTV유지비, 전시장·옥외 시설물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	15,000,000	플랫폼 초기 구축 및 운영비
계	807,360,000	

● 건축공사비

- 건축공사비용은 조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표 118 건축공사비 종류 및 활용

분석항목	주요 내용	활용 대상
단위면적당 공사비	공사유형에 대한 단위당 공사비	사업계획 수립
공종별 공사비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 설비, 전기, 통신, 부대시설 등 공종별 공사비	적정공사비 추정 기본설계 계획
세부공종별 공사비	세부공종(가설공사, 기초공사, 철근 공사, 미장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주계약자공동계약 상세설계 계획
공사원가구성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구성 요소에 대한 공사비	예정가격의 적정성 원가계산제도 개선
관급자재 투입비	철근, 레미콘 등 주요 관급자재에 대한 투입비	관급 소요자재 추정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계획

- 2022년 전시시설 사례로 제시된 3개의 사례의 평균 m²당 공사단가는 2,862,784원임

표 119 건축공사비 사례

(단위 : 원)

구분	OOO복합센터	OOO박물관	OOO과학관	평균
건축	1,854,734	1,461,056	1,400,258	1,572,016
기계	119,847	519,609	431,485	356,980
전기	273,597	326,163	248,624	282,794
통신	44,754	95,861	80,087	73,567
소방	187,463	180,083	134,596	167,380
부대시설 (토목, 조경)	114,395	703,296	412,445	410,045
합계	2,594,790	3,286,068	2,707,495	2,862,784

- 상기 사례 평균단가(2022년)에 적용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음

표 120 건축공사비 산출

구분	연면적(m ²)	m ² 당 공사비(원/m ²)	공사비(원)
건축공사비	1,060	2,862,784	3,034,551,040
	4,605		11,622,903,040

● 설계·감리비

- 설계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였고, 국토교통부

「공공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함

- 설계비 산정을 위한 공사·종별 구분은 문화 및 집회시설(복잡)으로 구분되고, 도서의 양은 복잡(중급)을 기준으로 공사비 대비 직선보간법을 활용한 요율을 적용함

1. 건축설계비

- 공사비 대비 직선보간법 적용 시 설계비 요율은 다음과 같음

표 12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건축설계 대가요율)

구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공사비	도서의 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20억 원		6.22	5.19	4.15	5.66	4.72	3.77	5.09	4.24	3.40
30억 원		5.91	4.93	3.94	5.38	4.48	3.58	4.84	4.03	3.23
50억 원		5.72	4.76	3.81	5.20	4.33	3.46	4.68	3.90	3.12
100억 원		5.58	4.65	3.72	5.07	4.22	3.38	4.56	3.80	3.04

- 공사비 대비 직선보간법 적용 시 설계비 요율을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음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 x=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당해공사비요율, y1: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 설계비 효율에 따른 설계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VAT 별도)

표 122 건축설계비 산출

구분	연면적(m ²)	공사비 (원)	적용 효율	건축설계비 (원)
건축설계비	1,060	3,034,551,040	약 4.80%	145,611,269
	4,605	11,622,903,040	약 4.57%	530,661,823

2. 설계 감리비

- 공사비에 따른 효율을 적용한 설계 감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VAT 별도)

표 123 설계 감리비 산출

구분	연면적(m ²)	공사비 (원)	적용 효율	설계 감리비 (원)
설계감리비	1,060	3,034,551,040	약 1.20%	36,372,734
	4,605	11,622,903,040	약 1.14%	132,343,537

3. 시설부대비

- 부대비는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하여 공사비의 0.23% 수준으로 산정함

표 124 시설부대비 산출

구분	연면적(m ²)	공사비 (원)	적용 비율	시설부대비 (원)
시설부대비	1,060	3,034,551,040	0.23%	6,979,467
	4,605	11,622,903,040		26,732,677

● **공종별 투자비**

- 인권체험관 건립에 소요되는 연면적(1안: 1,060㎡, 2안: 4,605㎡)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됨

표 125 공종별 투자비 산출

구분	건축공사비(원)	건축 설계비(원)	설계 감리비(원)	시설부대비(원)	총계(원)
1안	3,034,551,040	145,611,269	36,372,734	6,979,467	3,223,514,510
2안	11,622,903,040	530,661,823	132,343,537	26,732,677	12,312,641,077

- 다만 본 연구에서 산출한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연면적 5,000㎡가 넘지 않으므로 공사 감리 비용은 산출하지 않았으며, 토지 매입비 등 보상비는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산출하지 않음
- 향후 필요한 전시·체험시설의 경우 전시 및 체험과 관련한 세부계획이 수립됨에 따른 별도의 연구 및 계획수립이 필요한 바, 전시·체험 설계 및 연출은 투자비에 포함하지 않음

V. 인권체험관 종합발전 로드맵

1 기대효과

- 인권위원회 및 인권체험관 위상 제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어우러져 2001년 탄생하여 22년 이상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보호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보호 등 국내 인권 과제들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개선하였으며 국제 인권사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다만 규모와 활동 영역의 한계 등으로 그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법률, 국가기관, 국제사회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국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각 인권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5개 인권체험관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열악한 시설, 운영 예산의 부족, 예산 및 조직 확대의 어려움,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명확한 기본계획의 부재 등 인권 체험관을 둘러싼 내적·외적 위기 요인의 상황에 놓여있음
 - 본 기본계획에 따라 인권체험관이 신설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타깃별 인권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기존 인권체험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인권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인권체험관을 방문하는 일반시민 개인들과의 접점이 늘어나 시민으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는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종합적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신설을 통한 종합적 인권체험**

- 규모 면에서 기존 인권체험관은 122.3㎡~335㎡로 설치되어 제한적인 인권체험만 가능한 정도의 작은 규모였으며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 통상적으로 유추되는 관(館)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였음
- 시설 면에서도 광주, 부산, 대전 인권체험관의 경우 지하철 역사를 활용하였고 대구별별인권체험관의 경우 체육체험학습장 일부를 할애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등 인권체험 전용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분진, 소음, 습기, 냉난방 등 인권체험관 운영에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본 기본계획에서는 인권체험 프로그램, 인력 운영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소 1,060㎡, 적정 4,605㎡로 연면적을 제시한바, 종합적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권체험관으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내 공간의 경우, 전시시설(세미나실, 상설·옥외전시실, 영상 자료실), 수장고·기록관리, 연구 및 교육·관리, 공용시설(마주 침공간, 인권강사실,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되어 기존 인권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활용 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함
- 인권공원, 인권 놀이터, 산책로를 조성하여 실내 인권체험 시설과 더불어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놀이를 통한 인권 감수성 습득이 가능하며 인권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색의 장소를 제공하는 종합적·복합적 인권체험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인권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한 체험 가능**

- 기존 5개 인권체험관의 인권체험 프로그램은 각 인권사무소 담당자들이 연구와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적은 예산과 제한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

그램이 인권체험관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기존 인권체험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방문객 특성을 파악한 후 연령, 장애 여부, 재방문 여부 등에 따라 학습, 그룹 활동, 만들기, VR 활용, 게임 등의 구성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주로 인권과 관련한 개념과 사례를 학습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 전달을 위주로 프로그램과 전시가 운영되고 있음
- 다만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인권체험 프로그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2년간 활동하며 축적한 인권 관련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소극적이었으며 인권체험관 담당자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온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카이브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원천 콘텐츠의 지속적인 공급과 축적,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활용한 참여·활동 영역의 확대와 지역사회의 응원·지지·연대의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권체험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지속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인권체험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는 다양한 타깃에 맞는 프로그램을 쌍방향 소통구조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므로 향후 사회가 마주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인권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인권체험관 운영 방안 마련

- 본 기본계획에 따라 신설 인권체험관이 준공·운영되는 시기는 2025년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시기까지 현재 운영 중인 5개 인권체험관에서 진행될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
- 예산이 마련되어 신설 인권체험관의 본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수준의 예산(연평균 309백만 원)과 인력(각 인권체험관 1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권체험 프로그램을 본 연구 보고서의 부록으로서 프로그램 북 형태로 제시한 바, 인권체험관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프로그램 북에 수록된 인권체험 프로그램 역시 지속가능성과 쌍방향 소통을 염두에 두어 개발하였으며 인권체험관 운영 담당자가 실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양식과 더불어 파일럿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본 보고서에 수록한바, 실효성 및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 종합발전 로드맵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을 현재 인권체험관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과정 공론화 과정은 시기적으로 (단기) 공론화 및 기반 마련 → (중기) 시범적 운영 시기 → (장기) 안정화 및 확장으로 이어진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권체험관에 부여된 비전과 미션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준비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 시범 인권체험관 건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

-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던 배경과 인권사무소가 개소하여 지역에 존재하게 된 배경을 반추해 보았을 때 민간영역과 지역사회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오랜 시간 이어짐
- 인권과 관련한 수많은 생태계가 참여한 복합적인 논의가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가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지지 기반으로 작용했음
- 인권체험관이 현재의 기능과 입지를 넘어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여 효과적인 인권과 시민이 만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지속적인 논의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인권체험관을 둘러싼 생태계의 활발한 논의는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한 인권체험관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더욱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향후 인권체험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정치적 설득력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됨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임시 TF를 조직해 지역 시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건축 등의 연관 생태계의 인권체험과 관련한 담론과 의견을 축적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렇게 축적된 결과물로서 예산 및 정원 확보에 필요한 타 부처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함

● 계획 구체화 및 공간 조성 과정

- 본 연구에서는 인권체험관 운영환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론과 법률을 비롯해 국내외 유사 시설을 검토하였으며, 인권체험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담당자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인권체험관 개선 방향을 진단함
- 이러한 연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인권체험관의 향후 비전과 미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입지·프로그램·조직과 인력·공간 규모 등 부문별 계획을 제시하였음
- 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지 및 부지, 설계와 실행계획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과정을 통해 공간 조성 단계에 반영해야 함
- 인권체험관 공간을 조성하는 단계에있어서도 인권체험관이 지역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간 조성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당사자들과 공간에 대해 논의하는 참여의 과정을 확보해야 함
- 인권체험관의 물리적 ‘공간’이 사람과 경험, 공감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 ‘장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단계를 고려해야 함

1. 기획 단계

- 기획 단계는 인권체험관을 준비하는 단계로 인권체험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및 부지확보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전문가, 건축가,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 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준비위원회(TF)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간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향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함
- ① 전문가 의견수렴 : 공간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대상 인권체험 수요조사, 적정한 공간의 탐색 (부지 매입 및 대부, 임대 방식 결정), 건축물 안전진단 시행 (리모델링 시), 입지성 접근성 검토, 건축법 등 관계법 확인
 - ② 지자체 의견수렴 :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인권관련 정책 수립과 동조·호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모색과 예산 매칭 등 논의
 - ③ 시민·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 주민 필요 공간 수렴, 필요 프로그램 조사

2. 설계단계

- 설계단계는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한 단계로 건축가,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의 인권체험관에 대한 수요를 설계에 반영함
 - 설계자로 지정된 건축가가 인권체험관의 조성 방향에 부합되는 창의적인 단위 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
 - 또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 보강과 단열, 누수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 단계에서는 특히 계획안이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설계가 필요함
- ① 건축물 어메니티 반영 검토

- ② 공간의 유기적 구성 모색
- ③ 인지성, 접근성 확보
- ④ 공간 사용의 전문성, 편의성, 개방성 검토

3. 시공 전 단계

- 인권체험관의 신축 등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전문가의 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가 설계도에 잘 반영 되었는지 검토해야 함
 - ① 시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반영 여부 검토
 - ② 적절한 시공사의 선택, 공사 감리 준비
 - ③ 공간 사용에 대한 편의성 평가, 필요한 부가 기능의 요구

● 인권체험관 운영 과정

- 개선 방향 도출과 종합 발전 전략 수립단계에서 논의한 것처럼 1개 인권체험관에 대해 시범운영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여, 인권체험관 운영 시기에 따라 다음 각 단계를 고려해야 함

3. 건축공사 이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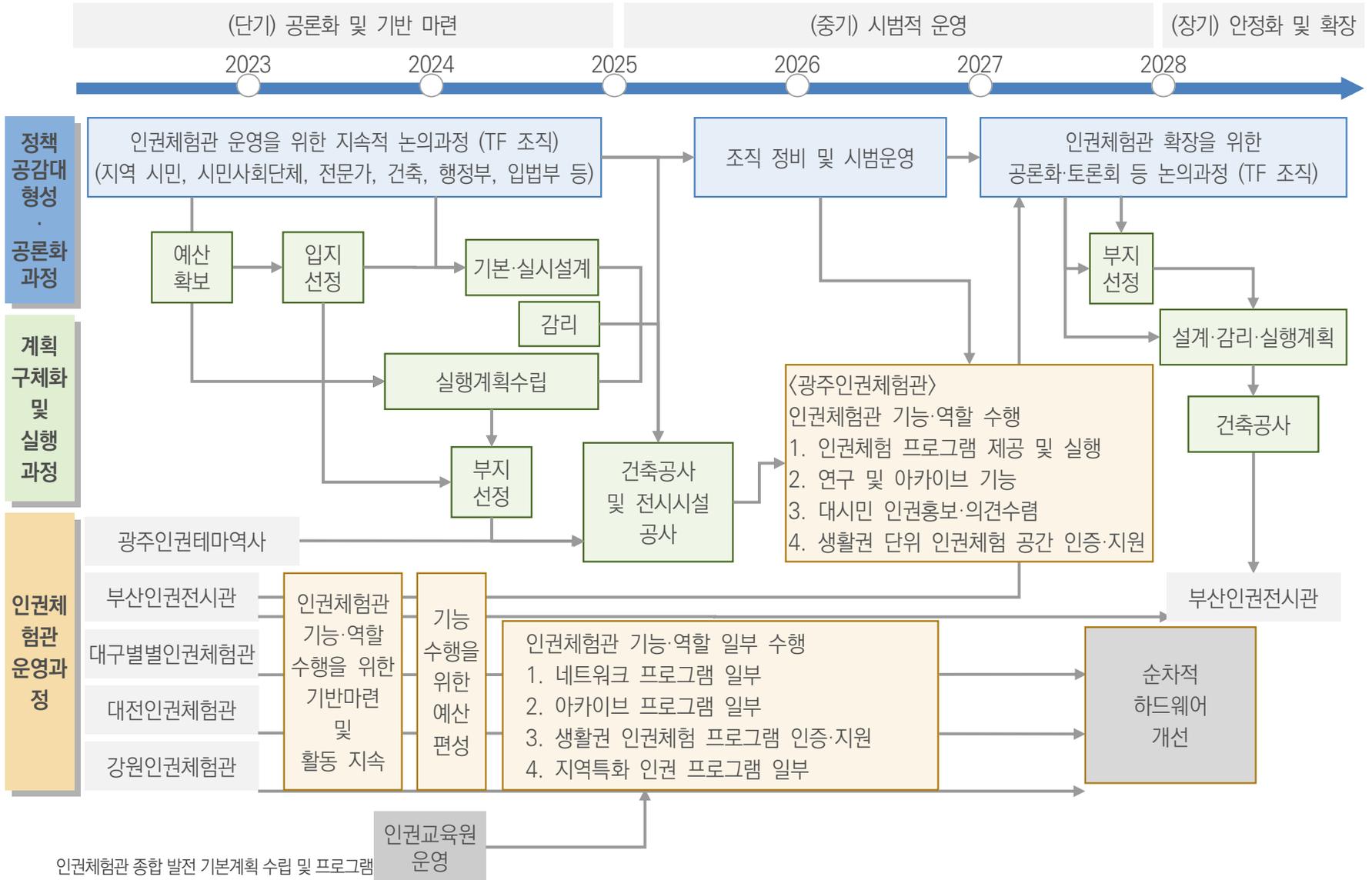
- 건축공사에 이르기까지 예산확보, 입지 및 부지 선정, 기본·실시설계 및 감리 등 시간이 소요됨
- 건축공사 예산과는 별도로 인권체험관에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기반을 다지는 시기를 경과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건축공사 이후 개선된 인권체험관이 처음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나머지 인권체험관에서도 현재의 자원을 활용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 특히 이 단계에서 생활권 단위에서 인권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체험 공간’의 발굴과 인증을 위해서 지역 내 기관 및 조직과의 활발한 네트워킹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각 인권체험관의 사업 추진비를 현실화하여 배정해야 함

4. 시범적 운영 단계

- 건축공사 및 전시·체험시설에 대한 하드웨어 조성이 마무리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을 정비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그동안의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의 내용을 반영한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함
- 하드웨어 개선이 이루어진 인권체험관의 경우 약 2년 정도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고유의 인권체험관 프로그램 수행 과정속에서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과정을 기록해야 함
- 노하우와 활동 경과를 반영하여 나머지 인권체험관에서는 현시점의 자원을 활용, 각 인권체험관 및 인권교육센터(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인권체험공간(생활권 인권체험 프로그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함
- 약 2년 정도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인권체험관 공간 및 조직 개선의 효과를 측정하여 운영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나머지 인권체험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인권체험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드웨어 및 조직을 개선함



부록

참고문헌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참고문헌

〈논문〉

- Eisenmann, T. R., Parker, G., & Van Alstyne, M. (2009). Opening platforms: How, when and why. *Platforms, markets and innovation*, 6, 131-162.
- McFarland, S., Mathews, M.. (2005). Who cares about human rights?. *Political Psychology*, 26(3), 365-385.
- 강수택. (2011). 시민주의 사회정책의 토대로서 인권과 연대. *사회이론*, (39), 75-114.
- 강은영, 김영순.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분석. *중등교육연구*, 61(1), 83-109.
- 강재원, 조진희, 심용주, 박선옥, 윤성민. (2022). 중심지위계별 통행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한 지방중소도시 생활권 설정 연구: 나주시를 사례로. *국토계획*, 57(3), 38-51.
- 고미숙. (2006). 체험교육의 의미. *아시아교육연구*, 7(1), 133-162.
- 구정화, 박새롬, 정수진. (2019). 2015 개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인권 단원 내용 구성 분석. *교육문화연구*, 25(5), 853-874.
- 김경래, 박성혁. (2016).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이 법적관용성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11(2), 35-63.
- 김근혜, 강성권. (2014).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과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419-440.
- 김미선. (2021). 하이퍼로컬 시대의 지역 콘텐츠. *대한토목학회지*, 69(10), 79-81.
- 김선민, 민예은, 박상호, 이승연, 정서윤. (2021). 우리동네 10분 ‘슬세권’ 만들기-동대문구(회기·이문) 생활SOC 현황 및 주민 인식 분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2-172.
- 김선영, 안혜정, 김영환. (2018). 체험학습의 재개념화를 위한 비판적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31-54.
- 김숙자, 김현정, 변선주. (2008).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서 나타난 인권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4.

- 유아교육학논집, 12(6), 5-29.
- 김숙자, 김현정, 장윤정. (2008). 경험 학습 중심의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6-1. 유아교육학논집, 12(5), 205-228.
- 김신영, 최선미, 민순홍. (2012). 체험관 경험의 정의와 체험관 경험이 고객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13(5), 177-202.
- 김지자, 정지웅. (2001). 경험학습의 개념 및 이론과 발전방향. 평생교육학연구, 7, 1-15.
- 김철홍. (2018). 한국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과 과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8 춘계 정기 학술발표회, 1-42.
- 김허경. (2021). 기억기념과 집단기억의 예술, 모뉴먼트와 메모리얼. 감성연구, (22), 145-175.
- 박구용. (2007). 문화, 인권 그리고 광주정신. 민주주의와 인권, 7(1), 147-175.
- 박선영, 유순화, 김예린. (2017). 인권기반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학교폭력태도와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9(4), 1259-1276.
- 변해원, 조성현. (2015). 인공지능망 기법을 이용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결정 요인.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15(3), 109-118.
- 송민정. (2010). IPTV 의 오픈형 플랫폼 전략에 대한 연구: 플랫폼 유형화 이론을 기반으로. 방송문화연구, 22(1), 173-203.
- 신강협. (2019). 인권운동의 지역화와 연대 모색.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161-162.
- 신두섭, 박승규. (2012).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문화경제연구, 15(3), 139-159.
- 심혜련. (2003).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서의 대도시와 새로운 예술 체험-발터 벤야민 이론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4(1), 225-250.
- 안숙영. (2014). 젠더와 국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의 건립과정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4(2), 41-68.
- 양은주, 김지영, 오창식, 차창훈, 최정, 최진실, 김재영. (2021). 동네의 재발견: 하이퍼로컬리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언론정보학보, 109, 153-184.

- 오병록.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4), 1-20.
- 오병록.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4), 1-20.
- 윤지현. (2020). 아카이브 중심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237-243.
- 이광원. (2021). 학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인권 교육과정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525-545.
- 이나영. (2014). 대안적 이야기 '들'로 역사 다시 쓰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서울: 한울, 2014). 페미니즘 연구, 14(2), 337-342.
- 이명원. (2008). 공감능력과 인권: 문학, 윤리, 타자. 문화과학, 55, 303-322.
- 이소희, 황재원. (2022). 고등학생을 위한 활동중심 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23(3), 447-474.
- 이일주, 이신경. (2013). 유아체험교육기관의 효과적인 체험교육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27, 1-38.
- 임혜선, 한상미, 신나라, 신지영. (2019). 대학생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영화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법과인권교육연구, 12(3), 159-191.
- 장기성. (2006). 노숙인의 인권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도시와 빈곤, 78, 5-37.
- 장인경. (2007). 박물관 마케팅 전략 개발-"Knock, Knock"/Samp/ALAS 프로젝트. 박물관학보, 355-372.
- 정상희, 정병규.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비교 연구-야놀자, 배달의 민족, 카카오 T 를 중심으로. 한국물류학회지, 29(4), 61-72.
- 조영달, 박성혁, 김정은. (2016). 중등 '인권'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사회지식 공동구성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1(3), 127-158.
- 허종렬, 나달숙, 이대성. (2013).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외국의 인권교육 제도화 사례와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1), 171-202.
- 허종렬. (2008). 필리핀 학교 인권교육의 동향 분석-필리핀 인권위원회의 초등학교

- 인권교육 사례집 분석을 포함하여. 한국초등교육, 18(2), 17-34.
- 허종렬. (2016). 글로벌 인권교육의 전개 과정 분석-유엔과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7(1), 289-310.
- 홍성수. (2014).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안암법학, (43), 31-75.
- 홍성수. (2019).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법과 사회, 60, 197-230.
- 홍혜경. (2016). 유아와 부모의 체험관 경험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6(4), 29-50.

〈보고서〉

-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2010). 강제동원역사관 건립사업.
- 광주광역시. (2017).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
- 광주광역시. (2017).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2018).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12). 국가인권위원회 2012 연간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201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2021). 2020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국가인권위원회. (2021).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2020).
- 국가인권위원회. (2021). 인권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김예성, 하혜영. (202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NARS 입법·정책 제105호.
- 문화체육관광부.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기본계획(안)수립 연구용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20).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2차 모니터링.
- 부산광역시. (2017).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 부산광역시. (2020).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2013).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매뉴얼 연구.
- 충남발전연구원. (2012).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확산 전략.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기초생활권 형성 및 발전촉진 연구.

〈자료집〉

- 광주광역시. (2017).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 설계를 위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워크숍 자료.
- 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2).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1판].
- 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2).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판].
- 교육부. (2017). '17년 정부부처 연계 진로체험 운영계획(안).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2022).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과. (2021). 2021년도 인권교육 과정운영 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2003).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 (2021). 2021년도 인권교육 운영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2022). 2022년도 업무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2022). 국제 인권 동향 2022년 5월호.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이행상황(요약).
- 법무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부산광역시. (2020).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
-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2018).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2020). 2020년 정부조직 관련 법령집.

〈홍보 및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기술심사과. (2016). 건설정보 통권 제154호(2016년 1호).
통계청. (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2022). 2021년 지역소득(잠정).
한국잡월드. (2022). 한국잡월드 리플릿.

| 인쇄일 | 2022년 12월

| 발행일 | 2022년 12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교육기획과 02-2125-9898

| F A X | 02)2125-0917

| 제작 | 코뮤니타스 053)746-0021

ISBN : 978-89-6114-957-0 94370

〈세트번호〉 978-89-6114-956-3 94370 (전2권)